

면지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귀 통계청과 체결한 연구용역사업 계약에 의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심층분석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총 연구기간	2011년 8월 14일 ~ 2011년 12월 15일
연구과제명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심층분석		
연구책임자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주관연구기관명 (소속부서명)	한국인구학회		
요 약			
<p>○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로서 우리나라 공식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항목을 중심으로 인구, 가구, 주택, 그리고 지역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 전반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심층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과제는 지정과제 11개와 이슈과제 10개로 나뉜다.</p> <p>○ 필수과제를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인구분야에 총 3개의 연구과제:초혼연령의 변화, 독신자, 이혼의 증가 등 혼인상태의 변화(이성용교수), 부처별 외국인통계 차이점 분석 및 원인 규명(이상림박사, 이혜경교수), 베이비 붐 및 에코세대의 특성 분석(은기수교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나타난 다양한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p> <p>－ 가구분야는 총 3개의 주제(1인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의 변화분석, 김정석교수;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및 교육상태 분석(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가구를 중심으로, 김석호교수, 황명진교수; 다문화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조성남교수)를 통해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현상을 심층분석하였다.</p> <p>－ 주택분야는 아파트 증가 등 주택형태의 변화분석(이재훈교수)와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 보급 방향(박신영박사) 두 가지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택 및 주거형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까운 장래의 주거형태의 변화를 예측하였다.</p> <p>－ 마지막으로 점차 증가하는 지역별 인구주택자료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고품격통계자료 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3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먼저 염지혜교수는 지역별 고령화, 저출산, 연령 구조의 변화를 소득과 교육 그리고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에서 대비과 되는 서울시 강남구와 전라북도 진안군 두 곳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승욱교수는 부산시의 연도별, 도시별 인구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의 인구구조를 시계열적으로 그리고 권역별로 변화 추세를 보여주었다. 지역분과의 마지막 주제는 김한곤교수의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미혼 실태연구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결혼이주자의 증가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분석이다.</p>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인구, 주택, 총조사, 가구, 지역, 외국인, 통계, 출산, 고령화	
	영 어	Population, housing, census, household, region, statistics, fertility, ageing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심층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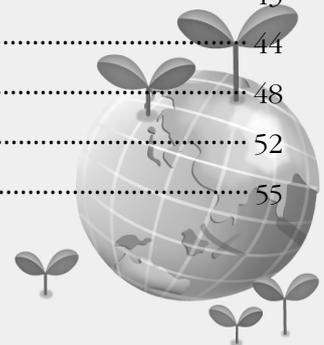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성용(강남대학교 부교수)
	이상림(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경(배재대학교 교수)
	은기수(서울대학교 교수)
	김정석(동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석호(성균관대학교 조교수)
	황명진(고려대학교 부교수)
	조성남(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재훈(단국대학교 교수)
	박신영(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염지혜(중원대학교 조교수)
	김한곤(영남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목 차

제 1주제 : 초혼연령의 변화, 독신자, 이혼의 증가 등 혼인상태의 변화	1
이성용(강남대학교 부교수)	
I. 머리말	1
II. 미혼상태의 변동	2
III. 유배우상태의 변동	5
IV. 사별상태의 변동	8
V. 이혼상태의 변동	9
VI. 주요발견들	12
 제 2주제 : 부처별 외국인통계 차이점 분석 및 원인 규명	15
이상림(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혜경(배재대학교 교수)	
I. 서론	15
II. 우리나라 이민통계의 현황	16
III. 분석방법	22
IV. 분석결과	23
V. 결론 및 제언	28
 제 3주제 : 베이비 붐 및 에코세대의 특성 분석	31
은기수(서울대학교 교수)	
I. 연구목적	31
II. 2010년 한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인구분포	33
III. 2010년 한국의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	37
IV. 2010년 한국의 베이비부머	41
V. 2010년 한국의 에코부머	43
VI. 베이비부머의 가구구성	44
VII. 에코부머의 가구구성	48
VIII. 요약 및 맺음말	52
<부표>	55



제 4주제 : 1인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의 변화분석 59

김정석(동국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59
- II. 가구변화의 전반적 추세와 쟁점 60
- III. 일반가구원의 가구형태변화 63
- IV. 특정 연령층의 거주형태 70
- V. 성별 가구주 비율과 특성 74
- VI. 요약 및 정리 77

제 5주제 :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및 교육상태 분석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가구를 중심으로) 81

김석호(성균관대학교 조교수) · 황명진(고려대학교 부교수)

- I. 서론 81
- II. 가족해체와 삶의 질: 단독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가구 83
- III. 결과분석 88
- VI. 요약 및 정리 98

제 6주제 : 다문화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103

조성남(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I. 서론 103
- II. 다문화가구의 가구유형과 특성 104
- III. 다문화가구의 주택환경과 주거문화 115

제 7주제 : 아파트 증가 등 주택형태의 변화분석 127

이재훈(단국대학교 교수)

- I. 서론 127
- II. 주택의 유형변화 127
- III. 주택유형별 기본특성분석 130
- IV. 주택유형별 주거환경분석 134
- V. 주택유형별 가구특성분석 136
- VI. 지역별 주거환경분석 137



제 8주제 :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 보급 방향 141

박신영(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141
II. 가구원수의 감소 경향 141
III. 가구원수별 가구특성 143
IV. 가구원수별 주거특성 148
V. 주택보급 방향 156

**제 9주제 : 지역별 고령화, 저출산, 연령 구조의 변화
(서울시 강남구와 전라북도 진안군을 중심으로) 161**

염지혜(중원대학교 조교수)

I. 서론 161
II. 연구방법 162
III. 연구결과 163
IV. 결론 및 함의 173

제10주제 : 부산시의 연도별, 도시별 인구구조 변화 분석 177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I. 부산의 인구동향 177
II. 인구감소의 원인추정 방법 179
III. 출생율 179
IV. 사망율 181
V. 인구이동 183

제 11주제 :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미혼 실태 191

김한곤(영남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191
II.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미혼실태 192
III.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사회·경제적 특징 196
IV.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원인 및 해결방안 205
V. 맺음말 208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심층분석 연구

- 제 1주제 : 초혼연령의 변화, 독신자, 이혼의 증가 등 혼인상태의 변화
- 제 2주제 : 부처별 외국인통계 차이점 분석 및 원인 규명
- 제 3주제 : 베이비 붐 및 에코세대의 특성 분석
- 제 4주제 : 1인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의 변화분석
- 제 5주제 :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및 교육상태 분석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가구를 중심으로)
- 제 6주제 : 다문화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 제 7주제 : 아파트 증가 등 주택형태의 변화분석
- 제 8주제 :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 보급 방향
- 제 9주제 : 지역별 고령화, 저출산, 연령 구조의 변화
(서울시 강남구와 전라북도 진안군을 중심으로)
- 제10주제 : 부산시의 연도별, 도시별 인구구조 변화 분석
- 제11주제 :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미혼 실태



제1주제 : 초혼연령의 변화, 독신자, 이혼의 증가 등 혼인상태의 변화

| 이 성 용 |

I. 머리말

합계출산율이 1.3이하이면 초저출산이라 규정되며, 이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감소를 초래한다(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¹⁾ 한국은 2001년 초저출산 시대에 도입했다. 만일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한국의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현재의 10%에서 2030년 23%, 2050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율은 초혼연령의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미혼율의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20세기 들어 계속 증가되어 왔지만, 외환위기 직후 그 증가폭이 커졌다. 1990년대 이후를 볼 때,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5.7세로 1990년 24.8세에 비해 7년 동안 0.9세가 증가된 반면,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난 2004년에는 27.5세로 약 2년이 증가되었다. 또한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또 1.4년이 증가하였다. 외환위기를 전후 7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 평균초혼연령의 증가폭은 그 이전에 비해 2배가 넘었고, 그 이후에서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초혼연령도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0.7년이 증가한 반면, 1997년에서 2004년 2년이, 그리고 2004년에서 2010년 1.2년이 증가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남성의 초혼연령은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급증은 1995년 이후 40세 미만의 유배우구성비 감소현상을 설명한다.

〈표 1〉 초혼연령의 변동

	1990	1995	1997	2000	2004	2005	2007	2009	2010
남	27.9	28.4	28.6	29.3	30.6	30.9	31.1	31.6	31.8
여	24.8	25.4	25.7	26.5	27.5	27.7	28.1	28.7	28.9

초저출산율, 독신율, 초혼연령, 평균출산연령의 상승은 또한 1990년 이후 급격히 변화한 혼인상태의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의 혼인상태 변동을 추적하면 미래의 출산율 추세도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1990대 이후 혼인상태의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Kohler, H.-P., Billari, F. C. and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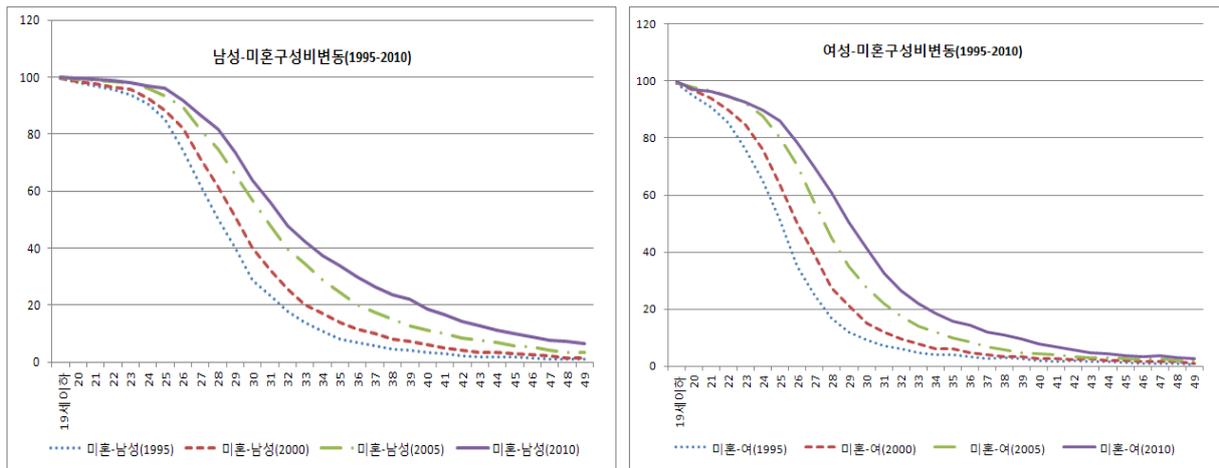
II. 미혼상태의 변동

최근 결혼이 보편적 현상인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인지에 대한 논쟁을 신문 등과 같은 매스컴에서 자주 접한다. 이는 세대에 따라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혼인은 개인이 당연히 통과해야 할 경로로 인식했던 전통이 있었지만, 근대화 그리고 대중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개인주의의 확산은 결혼을 보편적 행위에서 선택적 행위로 인식을 전환시키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조사에 따르면, 혼인의 필요성에 묻는 질문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00년 26.2%에서 2009년 13.8%로 감소한 반면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9.4%에서 48.7%로,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에서 30.5%로 줄어들었다. 이는 결혼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선택성을 인정하는 비율은 증가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연령별 미혼 구성비의 변동추세에서 읽을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 미혼 구성비는 남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미혼 구성비가 60%미만으로 떨어진 연령은 1995년 25세(51.2%), 2000년 26세(44.9%), 2005년 26세(50.3%), 2010년 29세(50.4%)이다. 20%이하로 하강한 연령도 1995년 28세(16.7%), 2000년 30세(15.2%), 2005년 32세(17.6%), 2010년 34세(18.5%)로 상승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결혼이 급격이 이루어지는 최적혼인연령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미혼 구성비가 80%대에서 20%대로 약 60%가 감소한 연령기간은 1995년 22세(85.2%)에서 27세(24.9%), 2000년 22세(89.9%)에서 28세(27.5%), 2005년 24세(87.8%)에서 30세(27.3%), 그리고 2010년 24세(89.9%)에서 32세(26.4%)이다. 최적 혼인연령 간격은 1995년 5년, 2000년 6년, 2005년 6년, 그리고 2010년 8년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 대들어 최적혼인연령 기간이 점차 증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만49세까지 독신으로 남는 비율은 1995년 0.6%, 2000년 1.1%, 2005년 2.1%, 그리고 2010년 2.8%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미혼 구성비가 60%미만으로 떨어진 연령은 1995년 28세(50%), 2000년 29세(50.8%), 2005년 31세(56.7%), 2010년 31세(55.7%)이다. 20%이하로 하강한 연령도 1995년 32세(17.7%), 2000년 33세(20%), 2005 37세(17.3%), 2010년 40세(18.5%)로 상승하였다. 미혼 구성비가 80%대에서 20%대로 60% 정도 감소한 연령기간은 1995년 25세-31세로 6년, 2000년 25-32세로 7년, 2000년 26-34세로 8년, 그리고 2010년 27-37세로 10년이 걸렸다. 최적 혼인연령 간격은 여성과 남성 모두 최근에 올수록 증가했지만, 그 증가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크다. 게다가 만49세까지 독신으로 남는 비율도 1995년 0.9%, 200년 1.4%, 2005년 3.6%, 그리고 2010년 6.7%로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혼인상태보다 남성의 혼인상태가 1995년 이후 더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림 1〉 20-49세 인구의 연령별 미혼구성비 변동: 1995-2010

먼저 결혼의 보편적 현상이 변화를 겪고 있다. 여성의 경우 가임연령이 끝나는 만 49세에 미혼구성비는 2010년에도 2.8%에 불과하다. 하지만 남성의 미혼구성비는 2005년 3.6%에서 6.7%로 상승했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의 혼인상태에서의 변동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미혼구성비의 상승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세 이후의 미혼구성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45-49세 미혼구성비는 2010년 여성 3.3%, 남성 8.2%이다. 45-49세 사람들 가운데 혼인을 하지 않았던 여성은 3.3%에 불과하지만 남성은 8.2%로 여성의 2.5배 수준이다. 45-49세 미혼구성비는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0-45세 미혼구성비는 여성 5.9% 남성은 14.8%이다. 2010년 현재 40-44세 남성 7명 중 1명이 미혼이다. 35-39세 미혼구성비는 1995년과 2010년 사이 남녀 모두 약 4배로 증가하였고, 그 구성비는 남성이 여성의 두 배이다. 이러한 발견은 혼인이 최근으로 올수록, 그리고 미래에,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게, 보편적 행위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2010년 미혼으로 남아있는 35-44세 사람들이 10년 후에도 미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면, 2020년에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미혼구성비를 보일 것이다.

〈표 2〉 35세 이상 남녀 미혼율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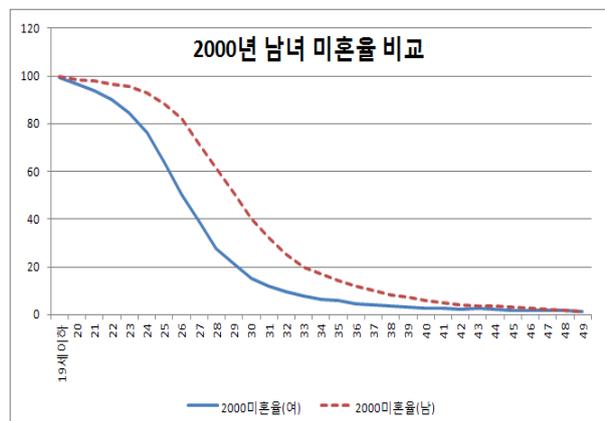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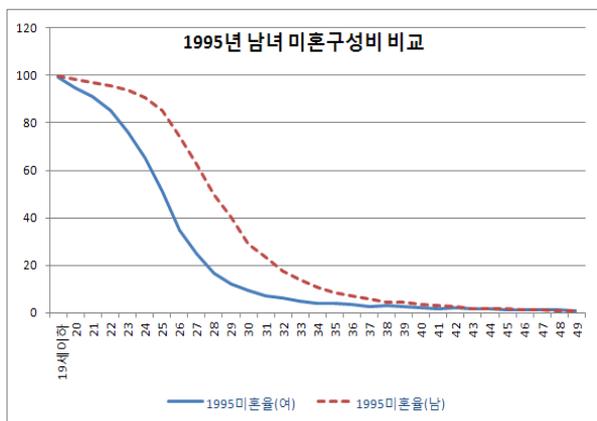
	여성				남성			
	1995	2000	2005	2010	1995	2000	2005	2010
35-39세	3.1	4.3	7.3	12.4	6.1	10.2	18.1	26.9
40-44세	1.8	2.5	3.5	5.9	2.6	4.5	8.8	14.8
45-49세	1.1	1.6	2.3	3.3	1.2	2.2	4.6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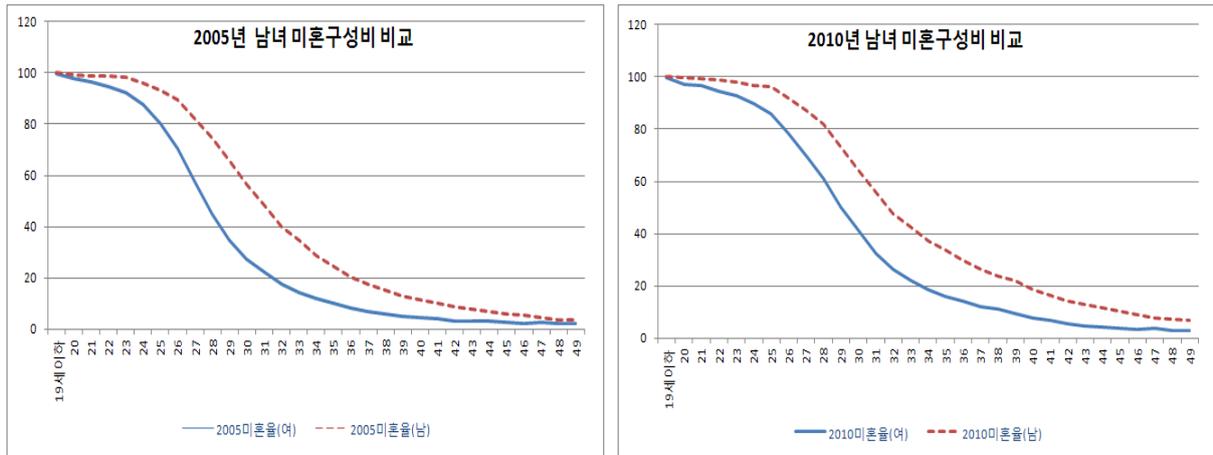
〈그림 2〉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시기마다 남녀의 연령별 미혼 구성비를 대조시켜 보여 준다. 미혼 구성비는 모든 연령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높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남녀 모두 미혼 구성비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혼 구성비의 증가 현상은 성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증가폭도 다르다. 그 결과 남녀의 미혼구성비 차이도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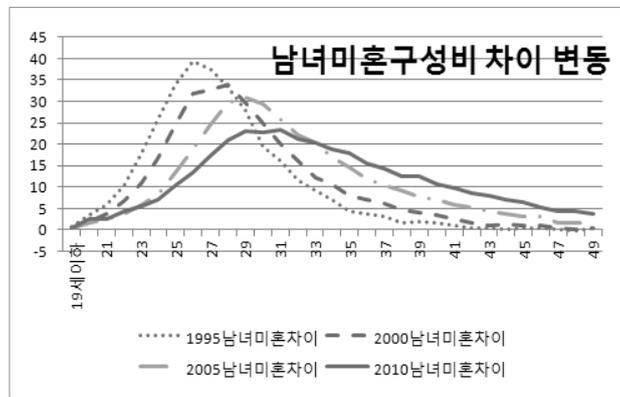
이러하면 25-29세 미혼 구성비의 변동을 살펴보면, 여성은 1995년 28.5%, 2000년 39.4%, 2005년 58.1%, 2010년 67.8%로 증가하였다. 한편 남성은 1995년 62.6%, 2000년 69.9%, 2005년 81.3%, 2010년 85.2%로 증가하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미혼구성비 수준이 1995년에 이미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고,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의 증가폭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크다. 여성의 증가폭은 1995-2000년 10.9%, 2000-2005년 18.7%, 2005-2010년 9.7%이다, 남성의 증가폭은 1995-2000년 7.3%, 2000-2005년 11.4%, 2005-2010년 3.9%이다. 25-29세 미혼 구성비는 모든 기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30-34세 미혼구성비의 변동은 이와는 다르다. 여성은 1995년 6.2%, 2000년 10.2%, 2005년 18.3%, 그리고 2010년 28.5%로 증가하였다. 남성은 1995년 18.6%, 2000년 27.1%, 2005년 40.9%, 2010년 49.8%로 증가하였다. 25-29세와 달리, 30-34세 미혼 구성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혼 구성비의 증가폭 차이는 30-34세보다 25-29세가 더 크다. 한편 미혼 구성비의 증가폭을 보면, 여성은 1995-2000년 4%, 2000-2005년 8.1%, 2005-2010년 10.2%가 증가하였다. 남성은 1995-2000년 사이 8.5%, 2000-2005년 13.8%, 2005-2010년 8.9%가 증가하였다. 25-29세와 달리, 30-34세 미혼 구성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혼 구성비의 증가폭 차이는 30-34세보다 25-29세가 더 크다.

이상과 같은 미혼구성비의 변동은 아래 <그림 3>에서 보듯이 각 시기별 미혼구성비의 남녀 차이도 변화시켰다. 남녀 미혼구성비의 차이가 가장 큰 연령이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하고 있다. 그 연령은 1995년 26세(39.5%), 2000년 28세(33.9%), 2005년 29세(30.8%), 2010년 31세(23.3%)이다. 남녀의 미혼구성비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 남녀의 미혼구성비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 가능성이 모두 높아지거나 혹은 모두 낮아지면 그 차이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는 후자이다. 한편 40세 이후의 미혼구성비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커진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40세 이후에 미혼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림 2〉 남녀 연령별 미혼구성비 비교: 199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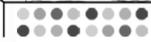


〈그림 3〉 남녀 미혼구성비 차이의 변동

Ⅲ. 유배우상태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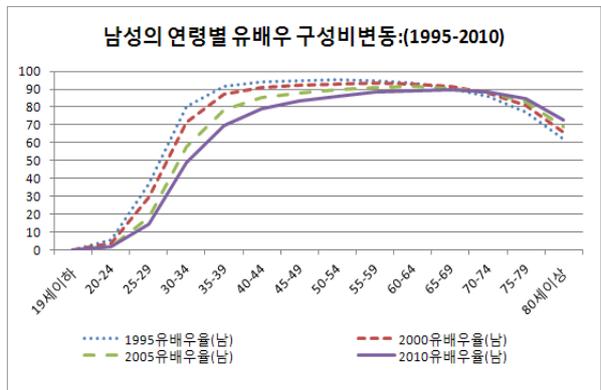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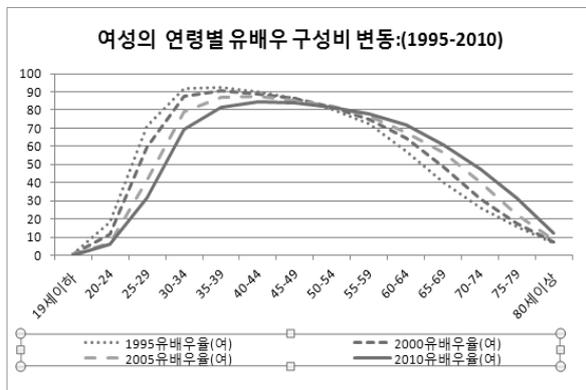
〈그림 4〉를 통해,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구성비가 1995년과 2010년 사이에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살펴보자.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남녀 상관없이, 유배우구성비가 최근으로 갈수록 젊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높은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유배우구성비는 최근으로 갈수록 40세 미만에서 감소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성은 그 전환 연령이 여성보다 훨씬 늦다.

먼저 만 40세 이전의 유배우구성비 변동을 살펴보자. 여자는 25-29세 유배우구성비가 1995년 71%, 2000년 59.7%, 2005년 41.1%, 2010년 31.4%로, 30-34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91.9%, 2000년 87.4%, 2005년 78.8%, 2010년 69.1%, 그리고 35-39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92.3%, 2000년 90.9%, 2005년 86.9%, 2010년 81.6%로 감소하였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하락폭은 25-29세 39.6%, 30-34세 22.8%, 35-39세 10.7%이다. 25-29세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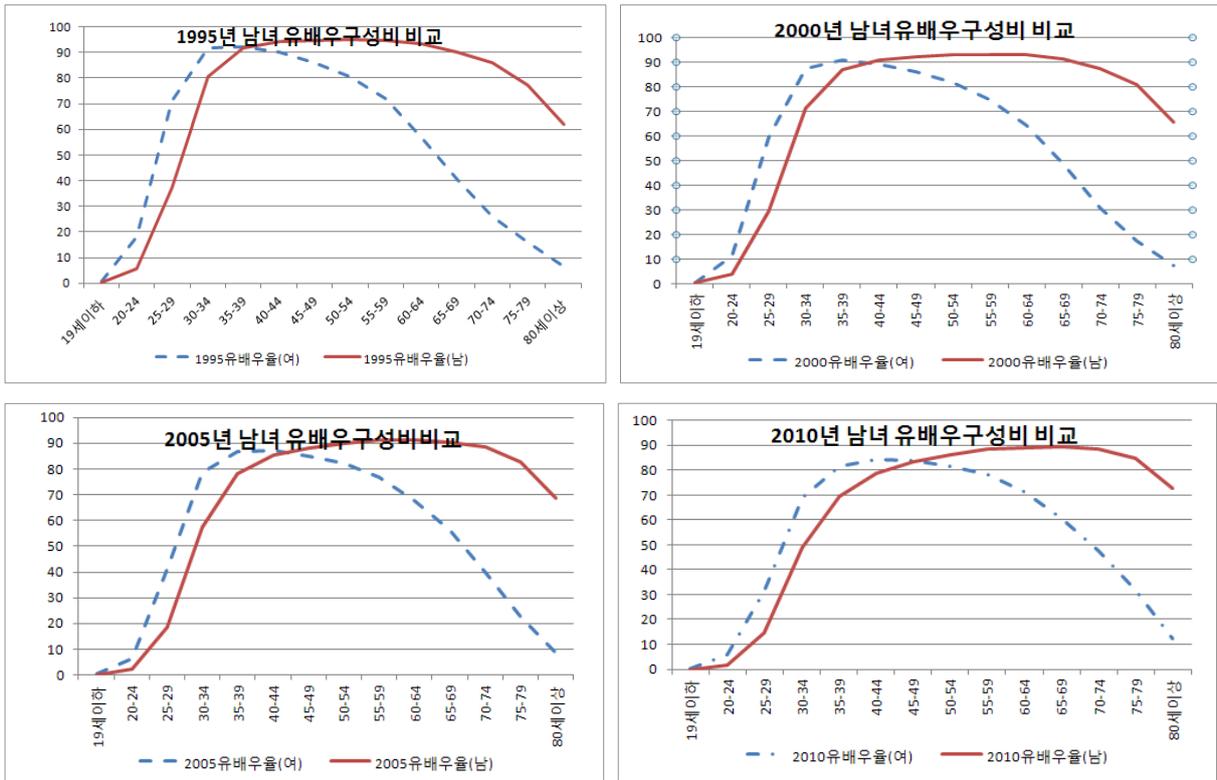
남성의 유배우구성비는 25-29세가 1995년 37.1%, 2000년 29.6%, 2005년 18.4%, 2010년 14.5%로, 30-34세가 1995년 80.4%, 2000년 71.5%, 2005년 57.5%, 2010년 49%, 그리고 35-39세가 1995년 91.8%, 2000년 87%, 2005년 78.1%, 2010년 69.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40세 미만의 남녀 유배우구성비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전개된 혼인연령의 상승 및 그로 인한 미혼율의 증가가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노년기의 유배우구성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특히 60세 이후에서 유배우구성비의 증가를 볼 수 있다. 60-64세의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57.2%에서, 2000년 64.4%, 2005년 67.6%, 2010년 71.5%로, 65-69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40.4%에서, 2000년 48.8%, 2005년 56.4%, 2010년 60.8%로, 70-74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26.1%에서, 2000년 31.1%, 2005년 39.9%, 2010년 47.5%로, 75-79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15.9%에서, 2000년 17.5%, 2005년 22.4%, 2010년 31.6%로,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의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6.6%에서, 2000년 7.6%, 2005년 8.8%, 2010년 12.2%로 증가하였다. 남성은 70세 이상에서 그 현상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70-74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86.1%에서, 2000년 87.6%, 2005년 88.4%, 2010년 88.5%로, 75-79세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77.3%에서, 2000년 80.9%, 2005년 82.5%, 2010년 84.9%로,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의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61.8%에서, 2000년 65.8%, 2005년 68.8%, 2010년 72.7%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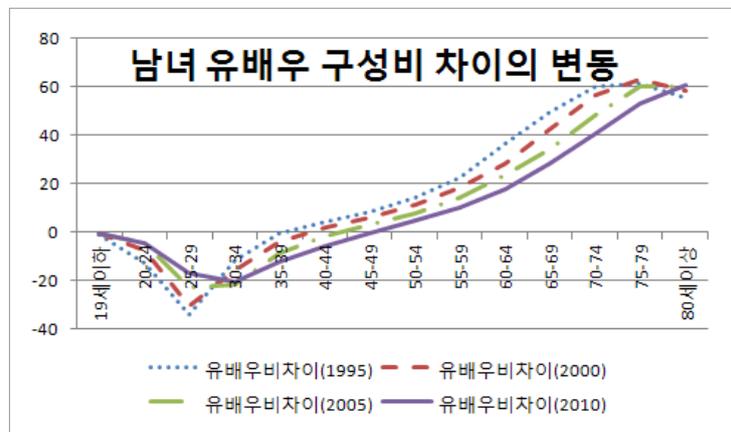
〈그림 4〉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 구성비 변동: 1995-2010

〈그림 5〉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구성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1995년 남녀의 연령별 유배우구성비를 살펴보면, 35-39세까지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구성비를 보이지만, 40세 이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유배우구성비를 보이는 전환기점은 2000년 40-44세, 2005년 45-49세, 2010년 50-54세로 증가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유배우구성비를 보이는 연령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기에 있어, 만 50세 이후 여성의 유배우구성비는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남성의 유배우구성비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보다 높은 남성의 사망률 및 그로 인한 높은 여성의 배우자 사별구성비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5〉 남녀 연령별 유배우 구성비 비교: 1995-2010년

〈그림 6〉은 남녀 연령별 유배우구성비의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배우구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은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하고 있고, 또 그 차이도 감소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유배우구성비를 보이는 연령이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50세 이후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75-79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가 있을 가능성이 무려 60%나 높다. 흥미로운 발견은 80세 이상이 되면 남녀의 유배우구성비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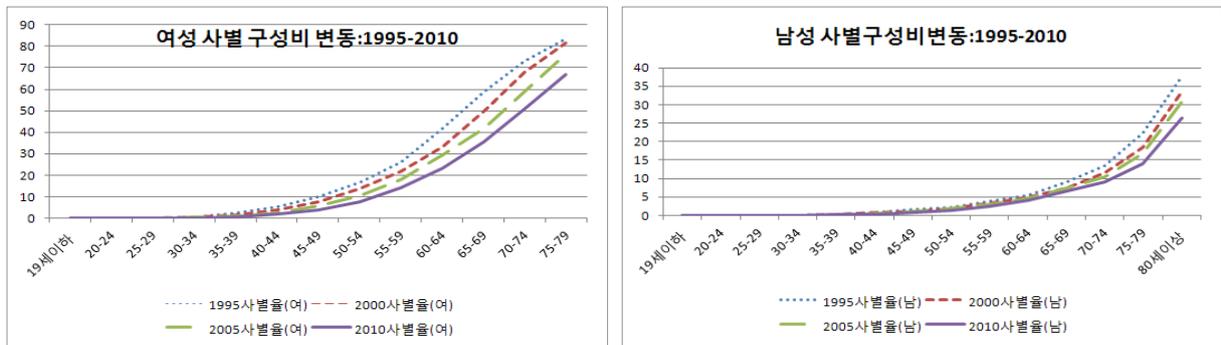


〈그림 6〉 남녀 유배우 구성비 차이의 추세: 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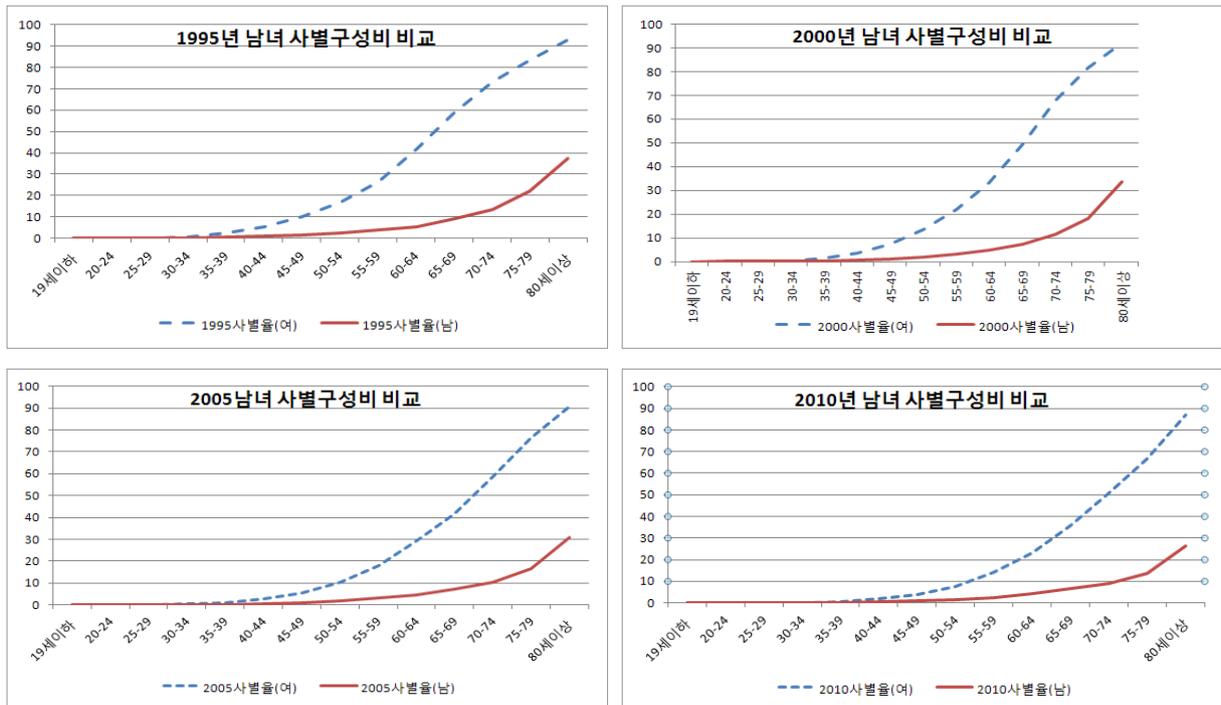


IV. 사별상태의 변동

〈그림 7〉과 〈그림 8〉은 남녀의 연령별 사별구성비가 최근으로 올수록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사별구성비가 각 시기마다 어떤 공통성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1995년 남녀의 연령별 사별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의 사별구성비는 40-44세-(5.2%)부터 증가하여 80세 이상에서는 93%에 도달하며, 남성의 사별구성비는 60-64세-(5.5%)부터 여성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여 80세 이상에서 그 비율은 37.6%에 도달한다. 사별구성비가 5%가 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최근으로 올수록 올라간다. 여성은 2000년 45-49세(7.5%), 2005년 45-49세(5.6%), 2010년 50-54세(7.6%)에, 남성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5-69세이지만 그 비율은 2000년 7.5%, 2005년 7.4%, 2010년 6.6%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80세 이상에서의 사별구성비도 1995년 37.6%, 2000년 33.5%, 2005년 30.8%, 2010년 26.5%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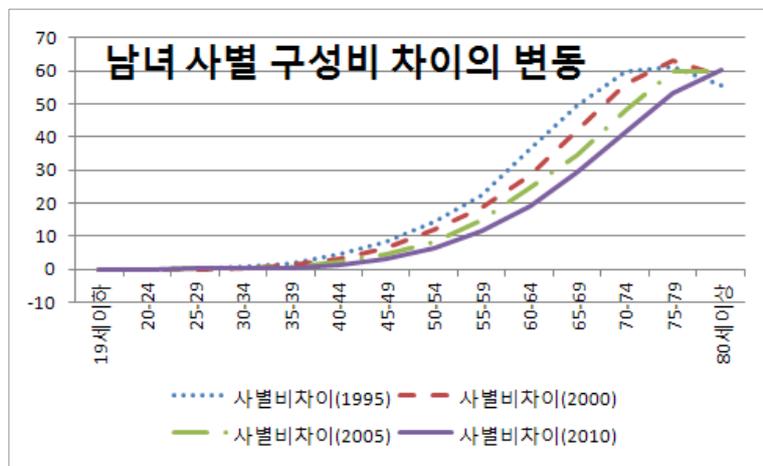
〈그림 7〉 남녀의 연령별 사별 구성비 변동: 1995-2010



〈그림 8〉 남녀 연령별 사별 구성비 비교: 199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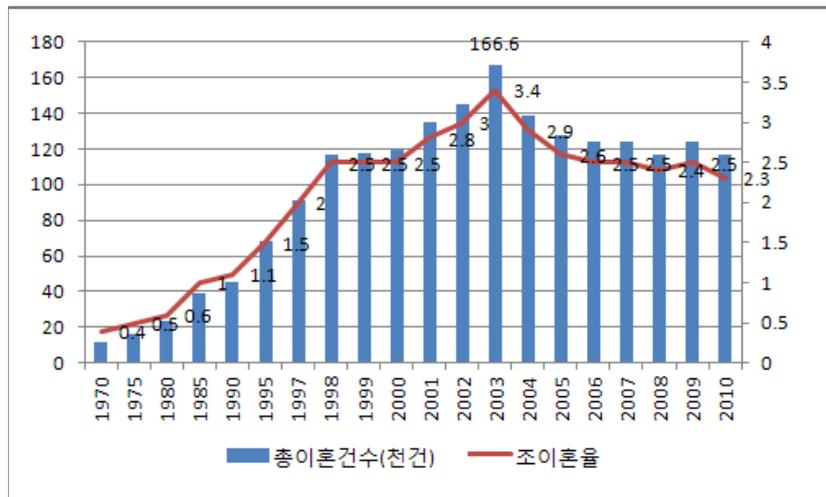
〈그림 9〉은 남녀 사별구성비 차이를 각 시기별로 보여준다. 모든 시기에서 남녀 사별구성비 차이는 40대 이후 급증하고 있다. 40대 이후의 남녀 사별구성비의 증가는 남성의 높은 사망률을 반영한다. 한편 흥미로운 발견은 배우자 사망률 차이가 80세 이상의 노인이 75-79세 노인보다 낮다는 점이다. 그것은 여성은 이미 70대 후반이 되면 배우자 사별구성비가 75-90%로 높아져 더 이상 상승할 폭이 줄어들지만 남성은 80세 이후에 배우자사별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여성은 50대 후반 이후 그리고 남성은 80세 이후부터 배우자가 사별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수록 남녀 사별구성비 차이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림 9〉 남녀 사별 구성비 차이의 추세: 1995-2010

V. 이혼상태의 변동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이혼율은 1970년 0.4에서 1980년 0.6, 1990년 1.1, 1997년 2, 2000년 2.5, 2003년 3.4로 정점을 이룬 뒤 2005년 2.6, 2010년 2.3으로 감소하였다. 조이혼율은 1970년부터 2003년이란 33년 사이에 8.5배로 급격히 상승한 뒤 그 후 7년 뒤 2003년의 68% 수준으로 떨어졌다. 총이혼건수도 1970년 11,600건에서 1980년 16,500건, 1990년 45,700건, 1997년 91,200건, 2000년 119,500건, 2003년 166,600건으로 정점을 이룬 뒤 2005년 124,500건, 2010년 116,900건으로 감소하였다. 총이혼건수도 1970-2003년의 33년 사이에 14.4배로 급격히 상승한 뒤 그 후 7년 뒤 2003년의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균 이혼연령은 여성의 경우 2000년 36.5세, 2005년 38.6세, 2010년 41.1세로, 그리고 남성은 2000년 40.1세, 2005년 42.1세, 2010년 45세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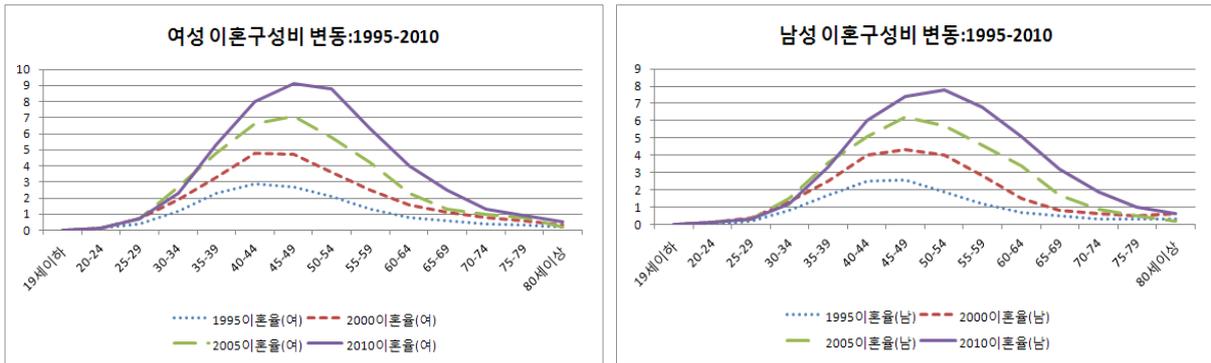


〈그림 10〉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1970-2010

이러한 이혼율의 급격한 변동은 1970년대 이래 한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변동은 너무 급속한 속도로 발생했기 때문에, 각 세대 각기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은 각 세대의 이혼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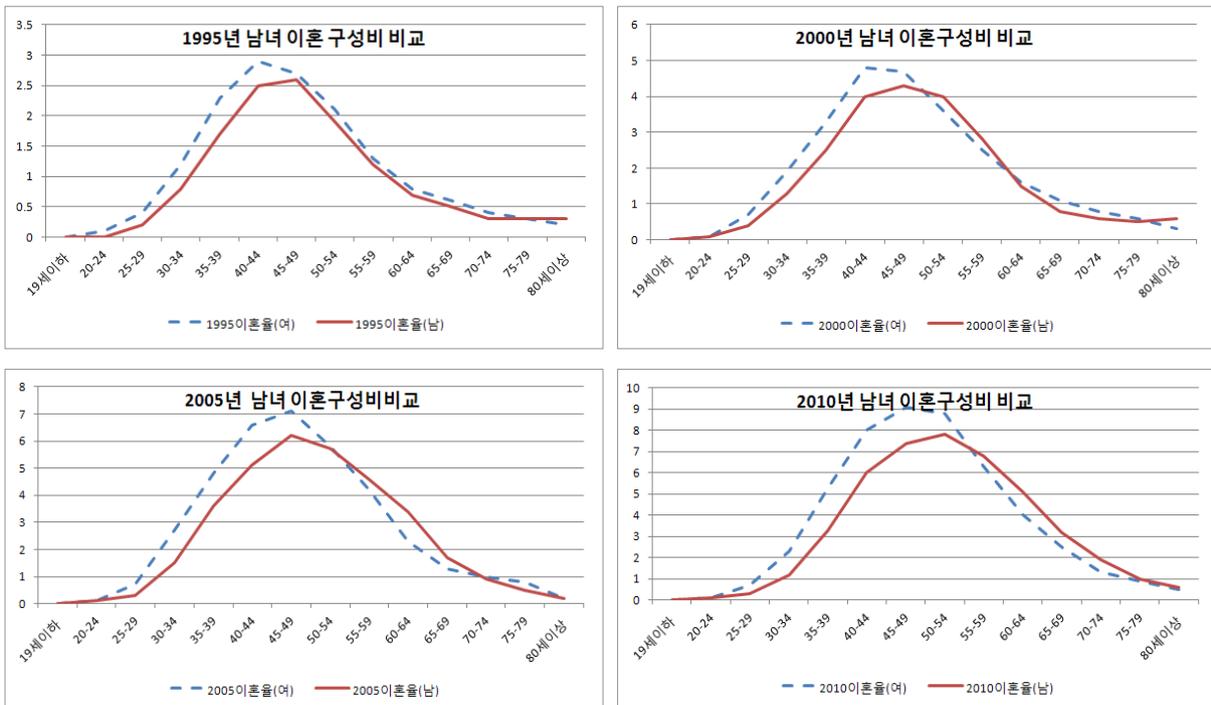
〈그림 11〉은 남녀의 연령별 이혼구성비가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나타낸다. 먼저 여성의 연령별 이혼구성비 변동을 살펴보자. 조이혼율이 1.1로 비교적 이혼율이 높지 않았던 1995년에는 모든 연령에서 이혼구성비가 3% 미만이다.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44세도 2.9%에 불과하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연령대들은 45-49세, 40-44세, 그리고 50-54세이다. 45-49세의 이혼구성비는 1995년 2.9%에서 2000년 4.8%, 2005년 6.6%, 2010년 8%로 15년 사이 5.1%, 40-44세의 이혼구성비는 1995년 2.7%에서 2000년 4.7%, 2005년 7.1%, 2010년 9.1%로 15년 사이 6.4%, 그리고 50-54세의 이혼구성비는 1995년 2.1%에서 2000년 3.6%, 2005년 5.8%, 2010년 8.8%로 15년 사이 6.7%가 증가하였다. 50-54세 여성의 이혼구성비는 15년 동안 4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60-64세는 이 연령대보다 증가폭은 작지만 증가율은 더 높다. 60-64세 여성의 이혼구성비는 1995년 0.8에서 2010년 4로 증가하여 5배로 증가하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 이혼구성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도 여성과 비슷한 연령별 이혼구성비 추세를 보인다. 1995년에는 모든 연령에서 비교적 낮은 이혼구성비를 보이며, 가장 높은 연령대인 45-49세의 이혼구성비도 2.6%에 불과하다. 1995년과 2010년 사이 남성의 이혼구성비는 50-54세와 55-59세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다. 50-54세의 이혼구성비는 1995년 1.9%에서 2000년 4%, 2005년 5.7%, 2010년 7.8%로 15년 사이 5.9%, 54-59세의 이혼구성비는 1995년 1.2%에서 2000년 2.8%, 2005년 4.6%, 2010년 6.8%로 15년 사이 5.6% 증가하였다. 이는 50대 남성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40대와 50대 초반 여성의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 남녀의 연령별 이혼 구성비 변동: 1995-2010

〈그림 12〉은 각 시기에 남녀의 이혼구성비를 비교한 것이다. 흥미로운 발견은 모든 시점에서 어느 연령대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이혼 구성비를 보인다는 것이다. 1995년의 경우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2000년 센서스에서는 45-49세 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다가, 50-64세는 다시 남성이 그 후에는 여성이 높아지는 반복 현상을 보인다. 2005년도 2000년과 마찬가지로 반복현상을 보이나, 50-54세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2010년도 50-54세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이혼 구성비를 나타낸다. 즉, 모든 시기에 있어 50세 미만의 경우 이혼구성비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그 이후의 연령에서는, 특히 2000년 이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림 12〉 남녀 연령별 이혼 구성비 비교: 1995-2010년



VI. 주요발견들

이상과 같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센서스표본 자료를 사용하여 최근 15년 동안의 혼인상태 변동을 추적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혼인상태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였다.

세계의 최저수준 출산율을 반영하듯이, 1995년과 2010년 사이 남녀 모두 전국보다 높은 연령별 미혼구성비를 보여준다. 최근으로 올수록 20~49세의 연령별 미혼구성비는 증가하고, 최적혼인연령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1997년 25.7세, 2004년 27.4세, 2010년 28.9세로 상승했다. 혼인연령의 상승은 미혼구성비가 60%이하로 떨어지는 연령을 여성은 1995년 25세에서 2010년 29세로, 남성은 1995년 29세에서 2010년 33세로 상승시켰다. 미혼구성비가 80%대에서 20%대로 하강하는 연령기간은 1995년 22~27세에서 2010년 24~32세로 연령을 끌어 올리면서 그 기간도 늘렸다. 남성도 미혼구성비가 60%이하로 떨어지는 연령이 1995년 28세에서 2010년 31세로 증가했다. 남성의 최적혼인연령기간도 1995년 25~31세에서 2010년 27~37세로 연령을 끌어 올리면서 그 기간도 늘렸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35세 이후 미혼상태로 남는 비율의 증가하는 추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35~49세 사이의 남녀 모두에게서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구성비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다. 여성의 미혼구성비는 45~49세가 1995년 1.1%에서 2010년 3.3%로, 40~44세는 1995년 1.8%에서 2010년 5.9%로, 그리고 35~39세는 1995년 3.1%에서 2010년 12.4%로 상승했다. 남성은 45~49세가 1995년 1.2%에서 2010년 8.2%로, 40~44세는 1995년 2.6%에서 2010년 14.8%로, 그리고 35~39세는 1995년 6.1%에서 2010년 26.9%로 상승했다. 확실히 지난 15년 내내 미혼구성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을 뿐 아니라 그 증가폭도 더 컸다. 2010년 현재 한국남성은 45~49세 12명 중 한명, 40~44세 6명 중 1명, 35~39세 4명 중 1명이 미혼상태로 있다. 요컨대 남성은 여성보다 미혼상태로 남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고 또 그 가능성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5~49세 한국남성 12명 가운데 1명이 미혼이다. 이는 여성과 달리 45~49세 남성에게 혼인은 더 이상 당연히 거처야 할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축할 수 있다. 게다가 2010년 35~44세의 높은 미혼구성비는 미래에 45~49세가 될 남성의 미혼구성비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분명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남성의 높은 미혼구성비가 자발적인 선택인지 혹은 부득이한 결과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남성의 높은 미혼구성비는 혼인 및 출산과 같은 가족관련 연구들이 페미니스트적 여성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함축한다(이성용, 2006; 이성용·이정환, 2011). 혼인 혹은 미혼이 최근 들어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에게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는 밝혀준다. 지난 15년간의 연령별 미혼구성비 변동은 유배우 구성비, 특히 젊은 연령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미혼구성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25~29세 여성의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71%에서 2010년 31.4%로, 30~34세 남성의 유배우구성비는 1995년 80.4%에서 2010년 49%로 하락했다. 남성과 여성의 혼인연령이 올라가고 20대와 30대의 미혼구성비가 증가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미혼구성비를 보이는 연령도 점차 상승하였다.

한편 기대수명이 증가되면서 60세 이상 남녀 노인인구의 유배우구성비는 점점 증가하였다. 이를테면 70~74세 유배우구성비의 경우 여성은 1995년 26.1%에서 2010년 47.5%로, 남성은 1995년 86.1%에서 2010년 88.5%로 증가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또한 남녀 유배우구성비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50세 이후 남녀의 유배우구성비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남녀 모두에게 사별구성비를 감소시켰다. 남녀의 사별구성비 차이를 본격적으로 보이는 연령은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40대 이후에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조이혼율이 낮았던 1995년에는 비교적 낮은 연령별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이러한 연령별 이혼구성비는 2000년 이후 급상승했다. 여성은 40대에서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이며, 남성은 여성보다 넓은 연령층 즉 45~64세에서 높은 이혼구성비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 부부는 결혼생활의 불화가 시작되는 결혼초창기보다 불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시기 결혼생활이 10여년 지난 뒤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제2주제 : 부처별 외국인통계 차이점 분석 및 원인 규명

| 이상림 · 이해경 |

I. 서론

우리사회는 현재 외국인 이주자의 빠른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는 백만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노동인구의 감소와 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는 이러한 이민 인구 유입경향을 앞으로 가속화하여 우리사회의 인구지형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환경의 변화는 이주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 질적 구성에서도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이렇게 이민사회로 우리사회적 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좀 더 발전되고 세분화된 이민정책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이민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노동구조, 사회보장체제, 출입국관리, 인구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주자들의 관리 및 이민 정책 개발에 근간이 되는 이민통계 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출입국관리 정책 행정 과정에서 생성 및 관리하고 있는 국내의 이주자 통계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의 오차 발생 가능성은 포함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정보를 발전된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고, 비교적 빠르게 통계정보를 집계하고 있다. 이는 분단으로 격리된 반도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이주자들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된 이민통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민통계에 실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민통계의 정책지원은 단순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에 대한 숫자 제공을 넘어, 이민정책에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게 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또한 실행된 정책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의 이주자 관련 자료는 행정과정이 아닌 실제 시점으로 수집되고, 실제 체류 및 생활 현황을 반영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행정통계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주자 인구에 대한 센서스 자료의 차별적 특성은 사회인구적 현황 연구 및 다양한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센서스 자료는 높은 누락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주자들에 대한 센서스 자료의 정확성과 정책 활용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센서스 이주자 통계의 정확성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른 이민 행정통계들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10년 실시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수집된 이주자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해보고, 오차 발생 이주인구의 특성들을 파악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센서스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 조사 자료의 결과를 법무부의 〈체류등록 외국인 통계〉와 행정안전부의 〈외국계주민 통계〉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이민통계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들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이민 통계의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분석결과들을 나타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이민통계의 현황

1. 이민통계의 정의

이민통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제이주의 전체 규모와 흐름(stocks and flows), 그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구조와 구성의 변동, 노동시장의 상황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반 이민정책, 다시 말해 이주관리와 이주자 통합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통계는 단순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혹은 이민자들의 총인구 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이민통계는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행정통계와 조사통계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통계는 이민 혹은 이주자 관련 행정업무 과정 속에서 기록되어 누적되는 통계를 의미하며, 조사통계는 대상을 설정하여 따로 서베이 등의 과정을 거쳐 조사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집된다. 그러므로 행정통계는 정책 대상이 되는 모든 이주와 이주자가 통계 수집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전체 인구가 아닌 일부를 표집하여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통계의 경우에도 대상되는 이주자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외국인 부문 조사이다.

2. 이민통계의 필요조건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이민통계의 최종목적은 정책 지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민 통계란 단순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적 요구에 반영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이민통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포괄성(모든 이주자들을 포함)

이민통계는 모든 이주자들을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통계에서 이주자들의 누락은 대부분의 경우 공항, 항만 혹은 육상 출입소 등에서의 국경관리나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에서처럼 체류관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의 포괄성은 이주자 인구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통계의 대상 인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괄성의 문제는 때로는 대상의 부정확한 정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고용허가제 통계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 이주 피고용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고용 통계로써는 사용될 수 없다. 이민통계의 포괄성 요건은 샘플조사 통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가 목표로 하는 대상 이주자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주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이다. UN의 이주 통계 국제권고에 따르면 이주자는 1년 이상의 거주자를 의미하는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민정책의 목표에 따라 이주자의 정의도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서는 많은 이주자 관련 통계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귀화한 이주자나 혼인이주자의 자녀(다문화 가정 자녀)까지도 이주자의 범주에 포함한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체류 외국인 통계와는 다른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이주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이민(자)정책의 목표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통계의 목적이 단순히 국내 체류 이주자 혹은 외국인 인구의 파악이 아닌 정책의 지원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 가용성(정보의 풍부함)

이민통계가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주자의 인구수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정보의 내용은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 이주통계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달라진다. 만약 인구균형이 주요 목적이라면, 이주통계는 성별과 연령으로 나누어 이입자와 이출자의 수를 매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수립을 위한 이주흐름 데이터를 생산할 경우 이입자와 이출자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애주기는 물론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혼인이주 여성의 거주지, 연령, 결혼 시기, 자녀의 유무, 자녀의 연령, 동거 가족, 그리고 이들 가정의 소득 등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통계는 그 정보 수집의 속성상 행정적 필요 사항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과정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이민통계들은 아직 인구학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집 발표하고 있는 ‘외국계 주민 통계’에는 지역별로 이주



자 유형(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성별, 외국계 주민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들 역시 집합적 수준에서의 합계만을 보여주므로, 제공되는 정보들의 조합마저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민통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세부적이지 않을수록, 추진되는 이민행정도 포괄적이고 때로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민통계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대상 이주자들의 인구 숫자(총계)에만 초점을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민 혹은 이민자 관련 정책들이 아직까지 이주관리의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이주자 지원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이주자지원 정책들이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져 왔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주자 유입의 경향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 수적 증가와 이주배경의 질적 다양성의 확대는 앞으로 이주통계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신뢰성/정확성(정확한 사실을 반영)

이민통계가 제공하는 정보들은 그 내용이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 통계에서 신뢰성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자기기입식 조사통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민자들 중에서 일반적인 집단에서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신뢰성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문항이 이들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경우에도 과거 정보와의 차이가 이러한 신뢰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행정통계에 있어서는 허위 기재에 의한 신뢰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행정통계들이 의무 사항으로 다른 통계들(예를 들어 출입국 신고와 체류 외국인 신고, 고용 허가제 자료와 체류 외국인 신고 등)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입해야 하는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 이미 작성된 내용들에 대해 굳이 허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자료의 업데이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체류외국인 등록통계에서 실재 거주지에 대한 문제이다. 외국인 등록에 포함되어 있는 거주지 주소가 실재와는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이주자들이 거주지 변경 시 다시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일 것이다. 또한 체류기간 초과나 지정 사업장 이탈과 같이 비정규화된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행정통계에서 제공하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접근성(통계 자료 이용의 용의성)

축적된 자료는 정책 입안 및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



다. 그러나 행정자료는 원칙적으로 자료 대상의 사생활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축적된 정보의 전체 공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행정 자료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다른 요인은 자료의 구성에 있다.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분석이 필수적인데 많은 이민통계들이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은 집합적 수준의 총량 혹은 집단별 총합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의 이용은 월보나 연보 형태로 제공되는 인구 수의 파악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제공되는 자료들은 지역별 수준에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는 정책 수행에서 필수적인 정책대상자의 현황 파악 (예를 들어 국적, 성별, 연령 자료가 조합된 형태)을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구성은 이미 누적되어 있는 자료들이,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상당부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불어 이민통계 데이터의 활용은 새로운 정책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며, 또한 자료의 활용은 역으로 자료의 오류들을 교정하게 만들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3. 국내 이민 통계 현황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통계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통계에 대한 중앙관리 방식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국경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관련 사건들을 모두 관리 및 집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과정을 진행하고 각자의 이민통계 자료들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출입국 통계와 체류 외국인 등록통계가 국가이민통계의 기본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이민통계는 총 11개 부처에서 각종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이민통계들 중에서 명목상으로 전체 외국인을 포괄하며 모든 체류 이주자의 체류 현황을 제공하는 통계는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등록통계와 행정안전부의 외국계 주민조사통계, 그리고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다. 이들 세 가지 중요 이민통계의 특성과 단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체류 외국인 등록통계 및 출입국 통계(법무부)

체류 외국인 등록통계는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전체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체류 등록 단계에서 얻어진 자료들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정보의 수집은 지방에 있는 각 출입국 사무소에서 수집되며, 이들을 취합하여 법무부에서는 연, 분기, 월별로 연보 등과 같은 자료형식으로 공개한다. 이 통계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출입국 통계, 비자관련 정보, 국적통계 등을 포괄하며, 추가로 재외국민통계, 난민통계, 미등록 체류자 통계, 이민법 위반에 관



한 통계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는 모든 출입국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확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체류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이민통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통계에서는 많은 한계점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보고서 혹은 통계집의 형식으로 제공되면서 실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단위의 통계 원자료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이주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들은 실제 자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적, 연령, 성별, 주소지 등과 같은 개인 정보들의 조합을 통한 자세한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통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자료들을 해당 부처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지만, 국가 통계정보의 특성 상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시점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특정 시점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활용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기준일인 11월 1일의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면, 법무부에서는 그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총량 보고서 및 통계집(연보, 월보) 형태로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불어 총량 통계(stock data)만을 제공하므로 시계열적 자료의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정확한 정보들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지원에서 한계를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한계는 적극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해줄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출입국 관련 통계가 업무 상에서 관리되는 정보들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이민정책 입안이나 연구에서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직업, 급여, 보건, 생활 등의 정보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중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주인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귀화 외국인이나 혼인이주자의 자녀들에 대한 자료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주의 지형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체류 외국인 등록통계가 갖고 있는 중요한 통계적 위상은 향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 외국계 주민 현황 통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외국계 주민조사통계는 명목상 조사통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통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자료를 수집한 행정통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통계는 연보 형식으로 각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총량 통계(stock data)로 발표된다.

외국계 주민현황 조사 통계에는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과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계 주민 자녀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구분과 국적, 성별, 시도단위 지역별 체류자 수 현황을 담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으로 분류된 통계 수치



도 함께 제공된다.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앞서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등록통계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 귀화자 정보와 다문화 가족 자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자료의 수집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자료를 근간으로 귀화자 정보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등록정보를 법무부로부터 받고,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귀화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 단위에서 기초 정보를 작성하면 이를 시군구, 시도 단위에서 자료를 검증하고 이를 현황집계하여 행안부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외국인의 구분은 법무부 자료가 가지고 있는 비자 정보를 활용한다.

주민등록시스템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명단 추출은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적취득일, 출신국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외국인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신원보증인' 정보를 추출, 신원보증인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인지 여부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국적취득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적취득자의 자녀 정보 추출 및 시스템 입력, 자료 검증 후 현황 집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추출 및 수집에 대해서 자료 작성 당사자인 시군구, 시도 지방 자치단체 외에는 구체적 과정의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 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 통계의 가장 큰 단점은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령별 자료만 제공된다고 하여도 지역별 정책에서 그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집계과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공개되는 정보의 폭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통계는 그 수집과정 상 개인단위의 정보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황 제시 외에는 정책 지원의 효용성에 제약이 따른다.

3)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는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정보와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유일한 전수 조사이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90일 이상의 국내 상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구 센서스라고도 불리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 및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 외에도 국가 통계의 표집틀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국인 통계에서 센서스가 갖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개인 및 가구 단위의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내국인과 같은 틀로 이뤄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행정통계들에 비해 현시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 등록정보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거주관계 및 현재 거주 상황 등을 센서스 문항에서는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센서스는 행정적 관점에서 작성되어 실제와는 유리될 위험이 있는 행정 정보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장점들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외국인의 경우 그 응답률이 현저히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외국인 응답자 수는 외국인 등록자료와 비교해 볼 때 불과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주자의 특성 상 이동성이 높고 행정 등록 상의 오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응답률은 그 통계적 가치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더불어 응답에서 누락된 이들이 불법체류자나 농촌지역에 극히 고립된 지역의 결혼이민자와 같이 어떠한 특수한 경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응답자들이 과연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솔직한 사실을 답변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센서스 자료의 활용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 하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분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주자는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이들의 이주과정에 따라 전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요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센서스 질문 문항에는 비자종류나 불/합법 체류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 요청이 응답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면 외국계 주민조사통계에서 사용된 분류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외국인 분류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은 센서스 문항을 내국인에 대한 질문과 대칭으로 구성하면서 이주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표 1〉 3대 국가 이민통계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인구센서스 (인구주택 총조사)	다양한 정보 포함 국내 인구와 비교 가능 현재성의 반영 국가 인구통계로써의 활용	높은 무응답 비율 미등록 체류자 등 특수집단 배제 가능성 허위 정보 포함 가능 외국인 분류 정보(비자 형태 등) 부족
외국계주민 통계	높은 포괄성 (귀화자 포함) 지역별 현황 자료의 제공 외국인 자녀들을 포함	포함 정보의 부족 외국인 분류 정보 부족 작성과정의 표준화/투명성 부족
체류외국인 등록통계	외국인들에 대한 정확성 다른 이주 통계들의 근간	귀화 인구 현황 전무 포함 정보의 부족

Ⅲ.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센서스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지난 2010 센서스에서 조사된 이주자 통계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자료의 정확성 분석과 오차 발생 인구집단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0 센서스 조사결과를 법무부의 〈체류등록 외국인 통계〉와 행정안전부의 〈외국계주민 통계〉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센서스 자료와 체류등록 외국인 통계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분석 대상 설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체류등록 외국인 통계는 외국인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자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센서스 자료의 외국인 통계 분석에서는 ‘출생 당시 국적이 외국인 경우’를 사용한다. 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의 경우에는 외국계주민 통계에서의 ‘한국 국적 취득자’와 센서스의 출생 당시 외국국적이었지만,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조사시점의 차이이다. 센서스의 경우에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지만,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 연보>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행안부의 경우에는 다음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하루 차이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무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의 자료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법무부 자료의 조사시점이 센서스 기준일과 가장 일치하는 2010년 10월 월보 자료를 사용한다. 10월 월보의 경우에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체류자격(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센서스 조사 외국인수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월보에서 체류외국인 통계와 불법체류자 통계의 합을 외국인 인구의 수로 정의한다. 하지만 귀화자의 경우에는 2개월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센서스 자료를 2011년 1월 1일 기준 외국계주민통계 자료와 비교하고자 한다.

앞서 국가 이민통계에 대한 설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체류등록 외국인 통계와 외국계주민 통계는 포함하고 있는 변수가 총인구와 성별, 국적, 체류자격(비자종류/미등록여부)을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총 조사 외국인수를 비교하고, 귀화자의 경우에는 총인구 외에 시도별 자료를 추가로 비교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우선 센서스 조사결과에서 집계된 이주인구는 <표 2>로 나타내었다. 출생시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는 총 671,67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589,532명으로 전체 이주인구 중에서 87.7%를 차지하였으며, 현재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귀화자는 82,142명으로 12.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이주자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1.1%)이 여성(48.9%)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 이주자가 남성보다 다소 높은 세계적인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의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한국적 현상이다. 한국의 이주자 많은 부분 노동력 이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허가제에서 제공하는 직업군이 육체노동 중심의 남성 중심 영역이라는 것이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센서스 이주자 조사 결과

	이주자	외국인	귀화자
계	671,674(100.0%)	589,532(87.8%)	82,142(12.2%)
남	343,533(100.0%)	326,202(95.0%)	17,331(5.0%)
녀	328,141(100.0%)	263,330(80.2%)	64,811(19.8%)

그리고 남성의 경우 외국인이 95.0%(326,202명)인 반면, 귀화자는 불과 5.0%(17,331명)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82.0%(263,330명)를 차지하였고, 귀화자는 19.8%(64,811명)로 나타났다. 여성 귀화자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많은 경우가 혼인 귀화이기 때문이다. 혼인귀화는 우리나라 귀화 인구의 다수(62.8%)를 차지하는데(행안부 2011), 우리나라 혼인이주자 중 절대 다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이번 이주 인구에 대한 센서스 결과는 성비와 귀화경로 등에 대한 대략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주인구 중에서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등록 통계〉와 비교하여 보면, 법무부 자료는 2010년 10월 31일 현재 총 외국인 수를 대략 90만 명 정도로 나타났다(표 3). 이를 2010년 센서스에서 조사된 외국인 인구와 비교해보면 그 대비비가 0.654로 나타난다. 법무부 행정자료에 비해 센서스 외국인 인구는 약 34.6% 정도 작게 집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대비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0.647, 여성은 0.664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대비비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여성 이주자 중에서 혼인이주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들의 응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표 3〉 외국인에 대한 센서스와 외국인 체류등록통계 비교 결과

	센서스(a)	법무부(b)	대비비(a/b)
계	589,532 (100.0%)	900,973 (100.0%)	0.654
남성	326,202 (55.3%)	504,500 (56.0%)	0.647
여성	263,330 (44.7%)	396,473 (44.0%)	0.664

한편, 출생 국적이 한국이 아니었지만,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귀화자의 경우에는 2010년 센서스에서는 82,124명으로 집계되어, 행안부의 2011년 1월 1일 현재 외국계 주민 자료와 비교할 때 26.1%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며, 약 0.739의 대비비를 보였다(표 4). 그러나 자료의 시차와 규정 범위의 한계 차이 가능성, 조사 방법의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수치를 귀화인구의 센서스 응답률이라고 그대로 해석하는 데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주인구 중에서도 귀화자가 외국인들에 비해 높은 센서스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잠정적으로 해석 할 수는 있다. 한편 남성 귀화자의 대비비(0.815)가 여성(0.721)에 비해 비교적 높은 대



비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외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상당 부분 선진국 출신과 이뤄진다는 특성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4〉 귀화자에 대한 센서스와 외국계 주민통계 비교 결과

	센서스(a)	행안부(b)	대비비(a/b)
전체 인구	82,124 (100.0%)	111,110(100.0%)	0.739
남성	17,331(21.1%)	21,264(19.1%)	0.815
여성	64,811(78.9%)	89,846(80.9%)	0.721

센서스 자료와 행안부 자료 사이에는 약 두 달 가량의 집계시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자료들을 합하여 센서스 자료와 비교해보면 그 대비비는 약 0.664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2010년 센서스의 이주자 집계의 응답률이 지난 2005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2005년 이주자 인구의 응답률은 40% 가량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10년 센서스 조사 기간 동안 G20 행사로 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불체자 단속이 있을 경우 전체 이주인구의 응답률이 현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0년 센서스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일정 정도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이주자 전체에 대한 센서스와 국가통계 비교 결과

	센서스(a)	법무부+행안부(b)	대비비(a/b)
전체 인구	671,674	1,012,083	0.664
남성	343,533	525,764	0.653
여성	328,141	486,319	0.675

한편 외국인 인구의 경우 국가별 응답률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6). 조사된 외국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적은 중국 조선족(35.0%)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중국 비조선족(15.8%), 베트남(10.1%)과 미국(7.1%)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조선족과 비조선족을 합하여 보면 약 40.8%에 이르는데,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상당수가 중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적에 따라 성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대부분 노동이주를 제공하는 국가들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여성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외국인인 현재 국적 응답 결과

국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589,532	100.0%	326,202	100.0%	263,330	100.0%
중국 조선족	206,049	35.0%	105,334	32.3%	100,715	38.2%
중국	93,272	15.8%	43,240	13.3%	50,032	19.0%
베트남	59,339	10.1%	30,888	9.5%	28,451	10.8%
미국	41,766	7.1%	22,943	7.0%	18,823	7.1%
필리핀	24,782	4.2%	14,759	4.5%	10,023	3.8%
인도네시아	17,371	2.9%	15,418	4.7%	1,953	0.7%
일본	17,073	2.9%	5,250	1.6%	11,823	4.5%
태국	15,633	2.7%	11,792	3.6%	3,841	1.5%
몽골	13,954	2.4%	7,880	2.4%	6,074	2.3%
우즈베키스탄	11,204	1.9%	8,585	2.6%	2,619	1.0%
중국_대만	11,111	1.9%	5,851	1.8%	5,260	2.0%
러시아	5,230	0.9%	2,163	0.7%	3,067	1.2%
파키스탄	4,986	0.8%	4,570	1.4%	416	0.2%
기타	63,169	10.7%	43,295	13.3%	19,874	7.5%

다음으로 센서스의 국적분포를 법무부의 자료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표 7〉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비비를 구해 그 차이 정도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국적의 대비비가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미국의 대비비가 가장 높았는데, 이들은 센서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또한 국적을 감추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외국인인 국적에 대한 센서스와 외국인 체류등록통계 비교 결과

국적	센서스(a)	법무부(b)	대비비(a/b)
전체	671,674	900,973	0.745
중국 조선족	206,049	355,516	0.580
중국	93,272	135,781	0.687
베트남	59,339	94,509	0.628
미국	41,766	31,080	1.344
필리핀	24,782	39,116	0.634
인도네시아	17,371	27,422	0.633
일본	17,073	19,691	0.867
태국	15,633	27,928	0.560
몽골	13,957	21,461	0.650
우즈베키스탄	11,240	19,015	0.591
대만	11,111	21,620	0.514
러시아	5,230	6,080	0.860
파키스탄	4,986	8,412	0.593



그런데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센서스의 국적 대비비가 법무부 자료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법무부에 집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이 센서스에 상당수 포함되었을 경우이다. 법무부의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한 불체자 집계는 입국 시 부여 받은 체류기간을 넘어서는 경우로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와 집계 사이에는 상당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센서스 조사에 이들이 포함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센서스 집계에서 외국인들이 미국인으로 과대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적을 숨기려는 경우나 혹은 조사자의 실수가 누적되어 나타났을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분포를 행안부 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표 8). 여기서의 차이의 해석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행안부의 자료가 행정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현재성)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 평가 기준 자료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누락률은 자료 간 결과의 차이정도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야 하며, 응답 누락으로 해석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8〉 귀화자의 거주 지역 비교 결과

	센서스	행안부	누락률
합계	82,142	111,110	26.1%
서울	23,699	37,781	37.3%
부산	3,247	3,330	2.5%
대구	1,954	2,084	6.2%
인천	4,932	6,992	29.5%
광주	1,251	1,423	12.1%
대전	1,541	1,488	-3.6%
울산	1,246	1,614	22.8%
경기	22,890	33,633	31.9%
강원	2,006	2,053	2.3%
충북	2,222	2,585	14.0%
충남	3,653	4,283	14.7%
전북	2,594	2,723	4.7%
전남	2,707	2,832	4.4%
경북	3,269	3,469	5.8%
경남	4,222	4,184	-0.9%
제주	709	636	-11.5%

비교 분석 결과는 다른 분석들에 비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났는데, 누락률의 편차가 지역별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행안부 자료에 비해 더 높은 거주자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누락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이렇게 지역 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지역 별로 귀화자들의 이동성이 다르거나, 혹



은 지역별 센서스 조사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센서스의 조사 자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출생시 국적과 현재 국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자 통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이주자 관련 국가 통계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이주자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데, 이는 출생 당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이다.

이들은 총 15,558명에 이르는데, 이중에서 남성은 7,091명으로 45.6%, 여성은 8,467명으로 54.4%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남아 국적 소유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외국 국적 취득 경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중국적자의 국내 국적 포기나 외국인과의 혼인 등을 통한 외국국적 취득 등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

〈표 9〉 외국국적 귀화 한국인의 분포

	전체	비율	남성	여성
계	15,558	100.0%	45.6%	54.4%
미국	7,255	46.6%	46.1%	53.9%
중국대만	1,001	6.4%	62.2%	37.8%
중국	966	6.2%	37.1%	62.9%
일본	747	4.8%	40.2%	59.8%
베트남	216	1.4%	16.7%	83.3%
필리핀	151	1.0%	33.1%	66.9%
기타	4,479	28.8%	43.1%	56.9%

이들은 전체 인구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학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초국가(transnational) 경향과 세계화 및 이주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분류의 외국인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주자 통합 정책과 관련해서도 독특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주자 및 외국인에 해당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 2010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및 귀화자를 포함하는 이주자



인구를 구분한 통계 결과를,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및 불체자 통계와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와 비교하였다. 센서스 자료가 갖는 응답률의 문제와 우리나라의 지리적 행정적 특성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주자 관련 통계의 포괄성을 비교해 볼 때 여기서 제시한 차이들은 센서스 외국인 통계의 한계를 노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된 외국인 통계 결과 및 추출 과정의 정확성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 결과 간의 차이를 누락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으며, 또한 통계 대상의 정의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단순 비교 차원을 넘어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센서스 외국인 통계는 그것만의 고유한 활용성을 갖는다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이 단순히 '전체 인구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학술적 정책적 목표에 맞게 추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센서스 통계자료는 앞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 경제적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개인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변수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장점은 다른 국가 통계들이 따를 수 없는 차별적 장점이며, 그 센서스 외국인 통계의 활용성에 대한 의의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주자의 체류지에 대한 비교와 외국국적 취득 한국출생자에 대한 결과는 센서스 외국인 통계가 다른 자료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접근을 확대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센서스 통계 자료의 대표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이 연구에서 제시된 향후 연구 과제들을 적절히 결합하게 된다면 센서스 이주자 통계는 앞으로 사회 인구학적 연구나 정책 활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자료 기반 센서스(이하 등록 센서스) 실시와 관련하여 센서스 이주자 통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주자 및 외국인 통계와 관련하여 등록 센서스는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등록통계'와 '불법체류자 통계'를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귀화자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들 통계는 모든 이주자들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포괄성과 이들의 총 인구 수에 대한 정확성에 있어서 기존의 센서스 결과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 상의 필요에 의해 수집된 정보들 외에 다른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센서스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 외국인 및 이주자 대상 사회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의 실시는 센서스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제공된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통계는 방법론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 센서스를 보완하기 위한 외국인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등의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나,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실태 조사 등과 같이 이주자 대상을 구분한 기존 통계조사에 표준화된 문항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조사비용 절감이나 정확성,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무부와 행안부의 국가 통계 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행정적 제도적 특성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들 국가 통계의 경우 통계 조사 시점이 센서스와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법무부의 종합적 체류외국인 통계는 12월 31일 기준이며,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는 1월 1일 기준이다. 통계청과 관련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부처에 따른 통계의 조사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귀화자 정보는 2002년 이후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들에 대한 정보이며, 사망이나 인구이동 등의 퇴출 정보를 반영한 체류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귀화자와 자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행안부의 자료는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산 자료를 통해 취합되기 때문에 그 정보 수집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지역 간의 기준일 및 방법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 통계의 정확성이나 조사 과정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 부처들이 제공하는 통계의 목적이 행정절차의 수행에 있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 최고 통계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수행하여야 더 나은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유입 이주자의 증가와 세계화 그리고 이주 형태의 초국가화는 앞으로 외국인 및 이주자 통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주자 유입 경로의 다양화와 내국인과의 접촉 증가는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계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및 이주자 대상 센서스는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함께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주제 : 베이비 붐 및 에코세대의 특성 분석

| 은 기 수 |

I. 연구목적

한국에서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가리킨다. 1950년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나고, 사회가 조금씩 안정되며, 이산가족이 다시 결합하면서 지체되었던 출산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미국의 베이비부머에 비하면 너무 기간이 짧게 정의되어 있고, 또 한국에서 베이비부머를 꼭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만 한정할 수 있을지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기존의 관행에 따라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른 한 편 최근 에코부머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및 그 이후 높았던 출산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출산력은 일관성있게 낮아진 것이 아니고, 조금씩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이런 과정에서 1979년부터 1984년 사이에는 출생아의 수가 1979년 이전이나 1984년 이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혹자는 1979년부터 1984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베이비부머의 자식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1984년에 가까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부머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고 1979년에 가까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베이비부머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세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표 1>은 소위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를 교차시켜 에코부머와 베이비부머의 연령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연령차

에코부머 베이비부머	1979년생	1980	1981	1982	1983	1984
1955년생	24	25	26	27	28	29
1956	23	24	25	26	27	28
1957	22	23	24	25	26	27
1958	21	22	23	24	25	26
1959	20	21	22	23	24	25
1960	19	20	21	22	23	24
1961	18	19	20	21	22	23
1962	17	18	19	20	21	22
1963	16	17	18	19	20	21



베이비부머의 정의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더구나 에코부머라는 용어는 아직 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정식 개념이 아니다. 그렇지만 2010년에 베이비부머 가운데 195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은퇴가 시작되는 연령인 55세에 이르르면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이들의 노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다른 한 편 베이비부머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그 자녀세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라고 부를 수 있으면서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생아의 수가 많았던 1979년부터 198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에코부머라고 부르는 것도 일견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 및 그 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에코부머가 어떤 인구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2010년에 실시된 인구총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인구총조사는 전수조사 및 경제활동 등을 담고 있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총조사 분석 용역은 기본적으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변수가 매우 적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수조사의 인구부문에 포함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성/연령/가구주와의 관계/교육수준/국적/혼인상태. 전수조사의 가구부문에 주택에 관한 여러 변수가 있고, 가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있다: 가구유형/세대유형/세대가구유형.

매우 제한된 변수를 통해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서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는 개인적 수준에서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고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인구, 즉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났으면서 2010년 인구총조사에 기록된 개인들을 뽑아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베이비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다른 한 편, 위와 마찬가지로 1979년부터 1984년 사이에 태어났으면서 2010년 인구총조사에 기록된 개인을 뽑아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에코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는 가구수준에서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가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된 가구를 베이비부머 가구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베이비부머에 속하는 경우 베이비부머 가구라고 부를 것인가. 마찬가지로 에코부머 가구는 어떤 가구일까. 에코부머 가운데는 2010년 현재 결혼해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사는 경우도 있다. 혹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여전히 부모와 함께 부모의 자녀로서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어떤 가구를 에코부머 가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가구수준에서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특성을 밝힐 때 먼저 각각의 가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관해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각 부머에 해당하는 개인이 속해 있는 가구를 모두 베이비부머 가구 혹은 에코부머 가구라고 할지 아니면 각 개인의 가구내 지위 혹은 가구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베이비부머 가구 및 에코부머 가구를 정의해야 할지 좀더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가구나 에코부머 가구의 정의가 연구 목적이 아니라 2010년



인구및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부머 및 에코부머,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가구에 대한 분석이 연구 목적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가구나 에코부머 가구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시도하지 않고, 베이비부머 및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개인적인 수준에서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에 관해 이해해보자.

II. 2010년 한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인구분포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기 전에 먼저 2010년 현재 한국의 인구는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간단히 이해해보자. 다음 <표 2>는 2010년 한국 인구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2010년 한국의 인구구조

(단위 : %)

성별	남자	48.52
	여자	51.48
연령별	0-9세	9.51
	10-19세	12.79
	20-29세	11.73
	30-39세	15.56
	40-49세	16.94
	50-59세	14.31
	60-69세	9.65
	70-79세	7.02
	80-89세	2.26
	90세이상	0.23
혼인상태	미혼	38.60
	유배우	50.65
	사별	7.39
	이혼	3.35
교육수준	안받았음(미취학포함)	18.61
	초등학교	14.18
	중학교	11.77
	고등학교	26.72
	대학교(4년제 미만)	12.47
	대학교(4년제 이상)	13.85
	대학원 석사	2.00
	대학원 박사	0.39



전체적으로 남자는 48.5%, 여자는 51.5%로 남자보다 여자가 좀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간격으로 인구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40-49세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1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39세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50-59세가 14.3%를 차지하고 있다. 20-29세 연령층은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여 50대 뒤를 잇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여 전 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2010년 현재 47세부터 55세까지인데, 전체 인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집단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코부머는 2010년 현재 26세부터 31세까지의 연령층에 속한다. 20대 연령층은 전체 인구 가운데 11.7%를 차지하는데 에코부머는 20대 연령층 가운데 후반에 속하고 있고, 30대 초반에 걸쳐 있다. 이 연령층은 베이비부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2010년 한국의 전체 인구는 50.6%가 유배우 상태에 있고, 전체 인구의 38.6%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별상태에 있는 인구도 전체 인구의 7.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상태에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3%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 인구를 대표하는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학력이다. 교육수준을 분류할 때, 졸업하지 않았으면, 해당 학력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를테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휴학을 했거나 혹은 중퇴를 한 경우 고등학교 학력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했고,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대학교 학력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정의했을 때 2010년 현재 전 국민의 교육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교육수준이 바로 고등학교 교육수준이다. 전 국민의 26.7%가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 미취학을 포함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층이 전 인구 가운데 18.6%를 기록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력도 14.2%로 높은 편이다. 2010년 현재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12.5%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율은 13.8%에 이르고 있다. 아직은 무학, 초등, 중학교 학력 소지자가 많지만, 한국의 인구는 고등학교 학력을 중심으로 그 이하 및 그 이상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한국의 인구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3>은 2010년 현재 한국의 인구가 시도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은 경기지역이다. 전 인구의 20.4%가 경기도에 거주한다. 그 다음은 서울로 전 인구의 18.6%가 살고 있다. 경기 지역에 비해서는 약 1.8% 포인트 정도 적게 거주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인구는 한국 전 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44.45%를 차지하고 있다. 50%에는 5.5% 포인트 모자라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전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에는 전인구의 7%가 살고 있다. 아울러 경남 6.8%, 경북 6.3% 등으로 경상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에 비해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적다. 제주에 살고 있는 인구는 전 인구의 1.2%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는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과 경상도에 많은 인구가 몰려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표 3〉 2010년 한국 인구의 시도별 분포

지역별	%	지역별	%
서울	18.57	강원	3.92
부산	6.98	충북	3.69
대구	4.57	충남	4.67
인천	5.43	전북	4.67
광주	2.84	전남	4.90
대전	3.02	경북	6.33
울산	2.05	경남	6.76
경기	20.45	제주	1.16

이번에는 전체 인구를 성별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자. 다음 〈표 4〉는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2010년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 %)

연령별	남자	여자
0-9세	10.19	8.87
10-19세	13.70	11.93
20-29세	11.49	11.95
30~39세	16.05	15.11
40~49세	17.40	16.51
50~59세	14.45	14.19
60~69세	9.27	10.01
70~79세	5.90	8.07
80~89세	1.45	3.02
90세이상	0.11	0.34

남자 인구는 40-49세에서 1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39세로 남자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50-59세로 14.4%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29세 연령층은 남자 전체 인구의 11.5%로 10-19세의 13.7%에 비해 크게 적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 인구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40-49세에 1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0-39세가 15.1%, 그 다음 50-59세로 14.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남자의 분포와 비슷하다. 여자는 20-29세가 11.95%, 10-19세가 11.93%로 큰 차이없이 분포하고 있다.



고연령층은 남자보다 여자의 인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70-79세의 연령집단의 경우 여자는 이 연령층이 전체 여자 인구의 8.1%를 차지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전체 남자 인구의 5.9%만 차지하고 있다.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결국 남자 고령층이 전체 남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자 고령층이 전체 여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적어, 고령화의 문제가 여자 인구의 문제의 성격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조를 보여준다.

<표 5> 2010년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구조

(단위 : %)

혼인상태별	남자	여자
미혼	42.97	34.48
유배우	51.96	49.42
사별	1.96	12.52
이혼	3.12	3.58

남자 인구 가운데 52%는 유배우 상태에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49%로 약간 낮다. 남자는 유배우 비율도 높지만 미혼상태에 있는 비율도 전체 남자 인구의 43%일 정도로 높다. 그러나 여자 인구 가운데 미혼 비율은 34.5%로 남자의 미혼 비율에 비해 8% 포인트 이상 낮다. 반면에 여자 인구 가운데는 사별상태로 지내는 인구가 12.5%나 된다. 남자의 경우 사별 상태는 2%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남자는 미혼이거나 유배우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미혼의 비율은 남자보다 적지만, 결혼한 후 한번 사별을 하면 사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고령층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교육수준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다음 <표 6>은 성별, 교육수준별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나 여자 모두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지닌 비율이 각각 27.3%, 26.2%로 가장 높다.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중학교 학력을 지닌 비율로 남자나 여자 모두 비슷하다. 남자의 경우 11.8%, 여자의 경우 11.1%가 각각 중학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초등학교(15.9%), 무학(20.8%)로 아직 저 학력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높다. 남자는 초등학교(12.3%), 무학(16.3%)로 여자에 비해 저학력자의 비율이 낮다. 반면에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층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남자의 경우 4년제 미만 대학교의 학력을 지닌 비율이 13.3%인데 반해 여자는 11.7%이고, 4년제 이상 대학교의 학력의 경우에도 남자는 15.8%인데 여자는 12%에 머물러 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2010년 성별, 교육수준별 인구구조

(단위 : %)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안받았음(미취학포함)	16.28	20.80
초등학교	12.31	15.94
중학교	11.82	11.73
고등학교	27.26	26.21
대학교(4년제 미만)	13.30	11.69
대학교(4년제 이상)	15.80	12.02
대학원 석사	2.60	1.44
대학원 박사	0.63	0.17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여자의 교육수준이 남자의 교육수준보다 낮다. 그러나 여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는 성별 교육수준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별 교육수준을 볼 때는 연령을 통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2010년 한국의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

이 절에서는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특성을 살펴보자. 이 절에서는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을 다른 연령계층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즉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만 따로 떼어서 두 부머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베이비부머 및 에코부머를 다른 연령층과 함께 고려하면서 그 특성을 비교해본다.

다음 〈표 7〉은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를 포함한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 %)

연령별	남자	여자
0-9세	10.19	8.87
10-19세	13.70	11.93
20-25세	5.70	6.38
26-31세	8.95	8.59
32-39세	12.90	12.09
40-46세	12.05	11.38
47-55세	15.07	14.57
56-59세	4.73	4.75
60-69세	9.27	10.01
70-79세	5.90	8.07
80세이상	1.56	3.36



남자의 경우 베이비부머가 전체 남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5.1%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14.6%이다. 베이비부머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에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에코부머의 경우에는 남자 에코부머가 전체 남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8.95%인데 반해 여자 에코부머가 전체 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8.59%로 0.36% 포인트 차이가 난다.

베이비부머는 9세 연령집단인데 반해 에코부머는 6세 연령집단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 각 집단에서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에코부머의 비율보다는 당연히 높다.

다음 <표 8>은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혼인상태를 다른 연령층의 혼인상태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표 8>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혼인상태 구조

(단위 : %)

연령별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0-9세	100.00	0.00	0.00	0.00
10-19세	99.92	0.08	0.00	0.00
20-25세	94.99	4.89	0.01	0.12
26-31세	64.63	34.52	0.06	0.79
32-39세	23.99	72.15	0.34	3.53
40-46세	9.30	82.09	1.33	7.28
47-55세	3.93	83.73	4.08	8.27
56-59세	1.85	82.94	8.93	6.27
60-69세	1.13	77.04	18.10	3.74
70-79세	0.47	59.58	38.65	1.30
80세이상	0.36	30.54	68.61	0.50

베이비부머인 47-55세 연령집단은 83.7%가 혼인을 해서 유배우 상태에 있다. 베이비부머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상태는 3.9%이다. 흥미롭게도 베이비부머는 이혼의 비율이 높다. 베이비부머 가운데 8.27%가 이혼상태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혼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에 에코부머는 64.6%가 미혼상태에 있다. 혼인을 해서 유배우상태인 비율은 34.5%이다. 이혼이나 사별은 매우 적다.

대개 20세부터 40세 사이에 혼인상태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에코부머는 바로 위 연령층인 32-39세 연령층 및 바로 아래 연령층인 20-25세 연령층과 비교하면 혼인상태의 변화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32-39세 연령층에서는 유배우 비율이 72.1%로 에코부머보다 훨씬 높다. 반면에 20-25세 연령층에서는 유배우 비율이 4.9%로 매우 낮고 95%가 미혼 상태에 놓여 있다.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는 교육수준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음 <표 9>는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교육수준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보여준다.

〈표 9〉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교육수준 구조

(단위 : %)

연령별	교육수준							
	안받았음 (미취학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0-9세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19세	26.85	31.93	30.72	6.01	4.49	0.00	0.00	0.00
20-25세	0.14	0.38	1.62	30.39	52.61	14.54	0.31	0.00
26-31세	0.18	0.37	1.68	26.97	30.65	36.68	3.34	0.13
32-39세	0.23	0.60	2.29	40.31	22.10	29.04	4.82	0.61
40-46세	0.50	2.26	6.43	49.39	13.46	23.44	3.64	0.89
47-55세	1.64	11.89	18.24	43.27	7.44	13.86	2.84	0.82
56-59세	3.65	25.19	23.50	32.37	4.10	8.67	1.94	0.58
60-69세	12.80	35.59	19.45	21.69	2.62	6.38	1.13	0.33
70-79세	34.57	37.52	10.49	11.19	1.68	3.84	0.49	0.21
80세이상	59.35	27.14	5.30	4.86	1.17	1.79	0.28	0.10

베이비부머의 평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이다. 베이비부머의 43.3%가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 중학교 교육수준을 지닌 베이비부머도 18.2%에 달한다. 베이비부머 가운데 4년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지닌 비율은 13.9%이고, 4년제 미만의 대학교 학력을 지닌 비율은 7.4%이다.

그러나 에코부머의 교육수준은 평균 교육수준이 대학 학력이다. 에코부머 가운데 4년제 대학의 학력을 지닌 비율은 36.7%이고, 4년제 미만 대학의 학력을 지닌 비율도 26.97%이다. 교육수준을 측정할 때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면 그보다 한단계 낮은 학력으로 간주하였는데, 26-31세의 에코부머 가운데는 아직도 재학 중인 사람도 많다. 이들이 모두 학교를 졸업하면, 특히 4년제 미만 대학의 교육수준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의 교육수준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에코부머의 평균 교육수준이 대학 학력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에코부머에서는 1/3 미만만이 고등학교 및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 〈표 10〉은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성비는 거의 비슷하다. 혼인상태를 보면 사별 등의 비율이 달라 성비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49.3%이고 여자의 비율은 50.6%인데, 에코부머의 경우에도 남자의 비율이 49.5%, 여자의 비율이 50.5%로 두 집단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각 집단별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매우 비슷하다.



〈표 10〉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가구주와의 관계 구조

(단위 : %)

베이비부머			에코부머		
성별	남자	49.35	성별	남자	49.52
	여자	50.65		여자	50.48
연령별	47세	11.15	연령별	26세	14.30
	48세	12.09		27세	15.59
	49세	12.15		28세	16.99
	50세	12.41		29세	17.96
	51세	11.37		30세	17.91
	52세	10.74		31세	17.24
	53세	10.69			
	54세	9.54			
	55세	9.86			
혼인상태	미혼	3.93	혼인상태	미혼	64.63
	유배우	83.73		유배우	34.52
	사별	4.08		사별	0.06
	이혼	8.27		이혼	0.79
교육수준	안받았음(미취학포함)	1.64	교육수준	안받았음(미취학포함)	0.18
	초등학교	11.89		초등학교	0.37
	중학교	18.24		중학교	1.68
	고등학교	43.27		고등학교	26.97
	대학교(4년제 미만)	7.44		대학교(4년제 미만)	30.65
	대학교(4년제 이상)	13.86		대학교(4년제 이상)	36.68
	대학원 석사과정	2.84		대학원 석사과정	3.34
	대학원 박사과정	0.82		대학원 박사과정	0.13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6.79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0.31
	가구주의 배우자	37.54		가구주의 배우자	19.03
	자녀	1.98		자녀	41.88
	자녀의 배우자	0.42		자녀의 배우자	1.46
	가구주의 부모	1.10		--	--
	배우자의 부모	0.13		--	--
	손자녀, 그 배우자	0.00		손자녀, 그 배우자	0.62
	형제자매, 그 배우자	0.87		형제자매, 그 배우자	3.35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0.04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0.32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0.06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0.03
	기타 친인척	0.40		기타 친인척	1.01
	그외 같이 사는 사람(고용인, 하숙인 등)	0.66		그외 같이 사는 사람(고용인, 하숙인 등)	1.98



베이비부머의 내적 연령구조는 50세를 정점으로 50세에서 나이가 적어질수록, 그리고 다시 50세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여준다. 베이비부머 내에서 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2.4%이고, 47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1.1%이다. 반면에 54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인데, 55세 연령층은 이보다 약간 높은 9.9%를 기록하고 있다.

에코부머의 경우에는 29세 연령층이 정점을 이룬다. 그래서 29세부터 젊어질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또 29세보다 연령이 증가해도 비율이 역시 낮아진다. 에코부머 가운데 29세 연령층의 비율은 18%이고, 30세 연령층의 비율은 17.9%이다. 28세 연령층은 17%이다. 에코부머 내에서 가장 비율이 작은 연령층은 26세 연령층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은 이미 살펴보았다. 두 집단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가구주와의 관계이다. 베이비부머는 주로 가구주나 가주주의 배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에코부머는 가구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베이비부머는 대부분이 유배우 상태이지만, 에코부머는 유배우 비율도 비교적 높지만, 대다수는 아직 미혼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의 56.8%는 가구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37.5%는 가주주의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가구 내에서 자녀로, 즉 나이 든 부모와 동거하면서 나이 든 부모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반면에 에코부머는 대다수인 41.9%가 자녀로 기록되어 있다. 즉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그렇지만 에코부머 가운데에서도 30%는 가구주로 살아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19%는 가구주의 배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비율을 합하면 49.3%이다. 이 비율은 에코부머의 혼인상태에서 파악한 유배우 상태의 비율인 34.5%보다 훨씬 높다. 이는 에코부머 가운데 결혼을 한 대부분의 에코부머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에코부머 가운데에서도 1인가구 등으로 부모와 독립하여 새로운 가구를 이루고 가구주로 살아가는 에코부머가 상당수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다.

또 에코부머 가운데는 자신의 형제가 가구주인 상황에서 함께 동거하는 비율도 3.3%나 되고 있다.

IV. 2010년 한국의 베이비부머

이 절에서는 베이비부머를 성별로 나누어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을 살펴본다.

다음 <표 11>은 베이비부머의 성별 혼인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베이비부머의 성별 혼인상태

(단위 : %)

혼인상태	남자	여자
미혼	5.40	2.50
유배우	85.58	81.92
사별	1.32	6.77
이혼	7.71	8.81

베이비부머 가운데 남자는 85.6%가 유배우이고, 여자는 81.9%가 유배우이다. 여자보다 남자의 유배우 비율이 더 높다. 그런데 베이비부머의 남자 가운데 5.4%는 여전히 미혼 상태이다. 여자 가운데 미혼 비율은 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5%이다. 반면에 베이비부머 가운데에서도 여자는 사별상태에 있는 비율이 6.8%인데 반해 남자가 사별상태로 있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혼 상태는 베이비부머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여자의 8.8%에 비해 남자는 7.7%로 이혼상태에 있는 비율이 약간 낮다. 사별과 이혼의 비율을 통해 우리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남자는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 다시 재혼 등을 통해 유배우 상태로 살아가는 비율이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베이비부머 남자 가운데 미혼의 비율이 5.4%나 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베이비부머의 성별 교육수준은 다음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베이비부머의 성별 교육수준

(단위 : %)

교육수준	남자	여자
안받았음(미취학포함)	1.32	1.95
초등학교	8.66	15.04
중학교	14.69	21.70
고등학교	42.19	44.32
대학교(4년제 미만)	9.24	5.69
대학교(4년제 이상)	18.33	9.50
대학원 석사	4.19	1.54
대학원 박사	1.38	0.27

베이비부머에서 성별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의 하나는 교육수준이다. 베이비부머만 해도 어린 시절 가족의 자원이 충분해서 남자와 여자 구별하지 않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비교적 가족의 자원이 여유가 있는 가족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가족 자원이 부족한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현실이 〈표 12〉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평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교육이다. 이는 남자나 여자 모두 동일하다. 베이비부머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의 비율이 42.2%이고 여자의 경우 44.3%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여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고, 반대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남자의 경우 4년제 대학교육을 마친 비율은 18.3%로 거의 1/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학원 석사 및 박사까지 합하면 베이비부머 남자의 거의 1/4 수준에 이르고 있다. 4년제 미만 대학교 교육까지 합하면 베이비부머 남자의 1/3이 최소 2년제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여자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 교육의 학력을 지닌 비율이 9.5%에 불과하다. 그래서 2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자의 비율이 17%로 1/5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에 베이비부머 여자의 경우 중학교 교육만 받은 비율은 21.7%, 초등학교 교육만 받은 비율도 15%에 달한다. 남자의 경우에는 각각 14.7%, 8.7%에 불과하다. 이처럼 베이비부머는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V. 2010년 한국의 에코부머

이 절에서는 한국의 에코부머는 성별로 혼인상태와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 <표 13>은 에코부머의 성별 혼인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3> 에코부머의 성별 혼인상태

(단위 : %)

혼인상태	남자	여자
미혼	74.91	54.56
유배우	24.61	44.25
사별	0.02	0.10
이혼	0.47	1.10

에코부머의 남자 가운데 3/4은 미혼상태로 머물고 있다. 에코부머 가운데 결혼을 해서 유배우 상태에 있는 비율은 24.6%이다. 에코부머 남자 가운데도 결혼을 했다가 재혼 등을 하지 않고 이혼 상태에 있는 비율이 0.5%를 이루고 있다.

에코부머의 여자는 혼인을 해서 유배우 상태에 있는 비율이 44.2%에 달한다. 남자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다. 미혼상태에 머물고 있는 에코부머 여자는 54.6%이다. 이혼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 에코부머 여자도 1.1%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에코부머의 경우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여자의 혼인연령이 남자



보다 낮기 때문에 2010년 현재 26세부터 31세까지의 에코부머 가운데 남자는 대부분이 미혼상태에 있지만, 여자는 44% 이상이 혼인을 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코부머의 성별 교육수준은 어떨까. 다음 <표 14>는 에코부머의 성별 교육수준을 보여준다.

에코부머의 성별 교육수준은 베이비부머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에코부머의 평균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교육이다. 베이비부머의 남자 가운데 36.4%가 4년제 대학교 교육을 받았고, 여자도 37.1%가 대학교 교육을 받았다. 남자의 31.4%는 2년제 대학교 교육을 받았고, 여자의 29.9%가 2년제 대학교 교육을 받았다.

<표 14> 에코부머의 성별 교육수준

(단위 : %)

교육수준	남자	여자
안받았음(미취학포함)	0.18	0.19
초등학교	0.35	0.39
중학교	1.79	1.57
고등학교	27.01	26.94
대학교(4년제 미만)	31.41	29.91
대학교(4년제 이상)	36.40	36.96
대학원 석사	2.75	3.92
대학원 박사	0.13	0.12

베이비부머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비율은 남자나 여자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대학교 이상의 대학원 교육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받았다. 에코부머 여자의 3.9%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 비해 남자는 2.7% 만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4년제 대학교 교육 이상만을 보면 에코부머의 남자보다 여자의 교육수준이 더 높다.

베이비부머는 남자의 교육성취를 여자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 자녀세대라고 볼 수 있는 에코부머는 이제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의 교육성취가 더 높다. 성별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여자의 교육성취는 눈부셔서 여자의 교육수준이 남자의 교육수준을 앞지르는 상황이 되었다.

VI. 베이비부머의 가구구성

이 절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가구구성을 살펴본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가구와 베이비부머가 없는 가구를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가 다음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국의 전 가구 가운데 한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가구의 비율은 28.9%이다. 네 가구당 한 가구 이상의 가구에 베이비부머가 최소한 한 명씩은 포함되어 있다.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울산은 전체 가구 가운데 33.1%의 가구에 베이비부머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울산 다음으로 가구에 베이비부머를 한 명 이상 포함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으로 32.9%의 부산 가구에 베이비부머가 포함되어 있다. 울산, 부산을 이어 인천 32.3%, 대구 31.1%, 경기 30.4%, 강원 29.9%, 서울 29.4% 순으로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24.6%의 가구만이 베이비부머를 포함하고 있다. 전남 다음으로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낮은 시도는 충남으로 25.2%에 가구에 한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뒤를 이어 경북 25.7%, 전북 25.8%, 충북 27.1%의 순으로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낮은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5〉 각 시도내에서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 (행비율)

지역	베이비부머 포함 가구	베이비부머가 없는 가구	가구수
서울	29.39	70.61	64235
부산	32.86	67.14	24732
대구	31.15	68.85	15670
인천	32.32	67.68	18298
광주	28.64	71.36	9717
대전	28.74	71.26	10412
울산	33.14	66.86	6956
경기	30.37	69.63	67538
강원	29.95	70.05	15142
충북	27.13	72.87	13843
충남	25.25	74.75	17808
전북	25.80	74.20	18103
전남	24.58	75.42	20169
경북	25.71	74.29	25676
경남	27.23	72.77	25559
제주	27.83	72.17	4075
전체	28.92	71.08	357,933

〈표 15〉는 각 시도별로 시도내에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가구와 베이비부머가 포함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별로 작게는 전남 24.6%의 가구, 많게는 울산 33.1%의 가구가 한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느 시도에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가구가 가장 많을까. 다음 〈표 16〉은 시도별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가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각 시도 내에서는 울산의 전체 가구 가운데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제 전국의 전체 가구 가운데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가구의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가장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의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 가운데 19.8%의 가구가 경기도에 있다. 그 다음은 서울로 전국의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에는 전국의 베이비부머 가구 가운데 5.7%의 베이비부머 가구가 존재한다. 서울, 인천과 경기를 합하면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43.7%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존재한다.

서울, 경기를 이어 부산에 전국 베이비부머 가구 가운데 7.8%의 베이비부머가 한 명 이상이 포함된 가구가 존재한다. 그 다음은 경남으로 6.7%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 경남 다음으로는 경북으로 전국의 베이비부머 가구 가운데 6.4%의 베이비부머 가구가 경북지역에 존재한다. 대구에는 전국의 베이비부머 가구 가운데 4.7%의 베이비부머 가구가 있다. 부산, 경북, 경남, 대구를 합하면 전국의 베이비부머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전체 가구 가운데 25.7%의 베이비부머 가구가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베이비부머 가구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부산, 대구를 포함한 경상도 지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시도별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

(단위 : %)

지역	베이비부머 포함 가구	베이비부머가 없는 가구
서울	18.24	17.83
부산	7.85	6.53
대구	4.72	4.24
인천	5.71	4.87
광주	2.69	2.73
대전	2.89	2.92
울산	2.23	1.83
경기	19.82	18.48
강원	4.38	4.17
충북	3.63	3.96
충남	4.34	5.23
전북	4.51	5.28
전남	4.79	5.98
경북	6.38	7.50
경남	6.72	7.31
제주	1.10	1.16
합	100.0	100.0

〈표 16〉을 통해 전국의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는 첫 번째, 서울 및 경기로 표현되는 소위 수도권 문제이고, 그 다음은 부산, 대구를 포함한 경상지역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가구를 “베이비부머 가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표 15>와 <표 16>에 제시된대로 베이비부머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가구를 “베이비부머 가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베이비부머가 공식적인 은퇴 연령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가 베이비부머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는 아직도 노부모의 가구에서 가구주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가구의 가구주나 배우자가 베이비부머인지 아니면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베이비부머 인지에 더 관심이 쏠릴 수 있다. 가구주가 베이비부머인지를 살펴본다면 이런 가구에는 가구주가 배우자없이 남자나 여자 가구주의 가구도 포함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베이비부머인 가구에는 가구주가 존재하고, 이 때 가구주가 베이비부머일 수도 있고, 베이비부머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베이비부머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베이비부머이고, 가구주도 베이비부머인 가구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는 베이비부머인데 가구주는 베이비부머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가 은퇴연령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구주만 베이비부머인 경우, 배우자만 베이비부머인 경우, 그리고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베이비부머인 경우로 베이비부머의 가구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17> 시도 및 가구유형별 베이비부머 가구 분포

(단위 : %)

지역	가구주만 베이비부머	배우자만 베이비부머	가구주, 배우자 모두 베이비부머	가구주나 배우자가 베이비부머 아닌 가구
서울	12.64	5.41	9.50	72.45
부산	14.40	6.63	10.26	68.70
대구	14.35	5.30	10.13	70.22
인천	15.08	5.35	9.93	69.64
광주	13.68	4.95	8.85	72.52
대전	13.06	4.81	9.48	72.65
울산	14.82	5.97	11.33	67.88
경기	13.77	4.93	10.03	71.27
강원	13.03	5.80	9.33	71.85
충북	11.97	5.12	8.42	74.49
충남	10.90	4.76	8.05	76.29
전북	11.17	5.61	7.36	75.85
전남	10.35	5.84	6.80	77.02
경북	10.71	5.22	8.26	75.80
경남	12.03	4.98	8.69	74.31
제주	12.44	4.93	9.08	73.55

주: 맨 마지막 열의 가구주나 배우자가 베이비부머가 아닌 가구의 비율은 <표 15>의 베이비부머가 포함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과 다르다. 이는 이 <표 17>에서는 가구의 가구주나 배우자가 베이비부머인지 아닌지를 다루고 있고, <표 15>는 가구내에서 가구주와의 관계와무관하게 각 가구에 베이비부머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다.



먼저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베이비부머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역시 울산이다. 울산의 전 가구 가운데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베이비부머인 가구는 울산 전체 가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부산, 대구, 경기의 순으로 각각 10.3%, 10.1%, 10.0% 등 전체 가구 10% 이상의 가구에서 가구주와 배우자가 베이비부머로 이루어져 있다. 인천 9.9%, 서울 9.5%의 순으로 서울과 인천에서도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베이비부머인 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시도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베이비부머인 경우가 전체 가구의 6.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 7.4%로 전북의 전체 가구 가운데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베이비부머인 가구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가구주나 배우자 등이 베이비부머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부산, 인천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전남, 충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가구주나 배우자 등이 베이비부머가 아닌 가구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Ⅶ. 에코부머의 가구구성

이 절에서는 에코부머의 가구 구성을 살펴본다. 먼저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분포를 살펴본다. 다음 <표 18>은 각 시도내에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와 에코부머가 포함되지 않은 가구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18> 각 시도내에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

(단위 : %)

지역	에코부머 포함 가구	에코부머가 없는 가구	가구수
서울	24.90	75.10	64235
부산	20.04	79.96	24732
대구	19.76	80.24	15670
인천	20.32	79.68	18298
광주	21.37	78.63	9717
대전	20.88	79.12	10412
울산	20.04	79.96	6956
경기	20.84	79.16	67538
강원	12.28	87.72	15142
충북	14.67	85.33	13843
충남	14.06	85.94	17808
전북	12.46	87.54	18103
전남	9.57	90.43	20169
경북	12.36	87.64	25676
경남	14.53	85.47	25559
제주	17.10	82.90	4075
총가구수	18.34	81.66	357933



우선 전체 가구 가운데 18.3%의 가구에 에코부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81.7%의 가구에는 에코부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각 시도내에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각 시도내에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작게는 9.6%(전남)에서 24.9%(서울)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크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서울에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가 많다. 서울의 전체 가구 가운데 24.9%의 가구에 에코부머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 다음으로는 기타 광역시들이 모두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높다. 예를 들어 광주(21.4%), 대전(20.9%), 인천(20.4%), 부산(20.3%) 등에서 비슷한 정도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높다. 경기도도 전체 가구 가운데 20.8%의 가구에 에코부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남 지역의 가구 가운데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도 역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낮다. 즉 젊은이가 적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에서 에코부머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도 서울과 전남의 예를 들면 이 지역 사이에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의 차이가 14 퍼센트 포인트나 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1인가구의 분포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전국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지역으로 전체 가구의 32.4%가 1인가구이다. 경북, 전북, 충남 등 기타 다른 지방도 1인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 서울의 1인가구의 비율은 2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1인가구의 분포 때문에 서울에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¹⁾ 더 자세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서울이 교육, 노동 등 여러 면에서 젊은이를 가장 강력하게 유인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 구성에서 에코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전남 등 지방에서는 젊은이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이는 곧 전체 가구에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낮은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다음 <표 19>는 전국적으로 에코부머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분포를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전국의 가구 가운데 서울의 에코부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의 가구 가운데 에코부머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전국의 에코부머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가구의 24.4%를 차지한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가 전체 에코부머 가구의 21.4%를 차지한다. 인천의 5.7%까지 함께 고려하면 역시 전체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50%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은 역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 지역에 에코부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인구 및 가구가 수도권, 영남권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

1) 1인가구의 분포는 이 연구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자세한 분석은 다른 연구자의 가구분석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차이가 지역별로 큰지를 이해하기 위해, 가능성이 있는 이유의 하나로 1인가구의 분포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1인가구의 분포 분석은 본 연구자가 계산한 결과이다.



하고 있다.

〈표 19〉 시도별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

(단위 : %)

지역	에코부머 포함 가구	에코부머가 없는 가구
서울	24.37	16.50
부산	7.55	6.77
대구	4.72	4.30
인천	5.66	4.99
광주	3.16	2.61
대전	3.31	2.82
울산	2.12	1.90
경기	21.44	18.29
강원	2.83	4.54
충북	3.09	4.04
충남	3.81	5.24
전북	3.43	5.42
전남	2.94	6.24
경북	4.83	7.70
경남	5.66	7.47
제주	1.06	1.16
합	100.0	100.0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코부머는 아직 미혼인 경우가 많다. 2010년 현재 에코부머의 64.6%는 미혼상태이다. 그러나 에코부머도 34.5%는 2010년 현재 유배우 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베이비부머의 가구유형을 가구주만 베이비부머, 배우자만 베이비부머,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베이비부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듯이 에코부머의 경우에도 가구주가 에코부머, 배우자가 에코부머,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에코부머 등의 식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에코부머 가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20〉은 시도별로 에코부머 가구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20〉을 보면 먼저 각 시도내에서 에코부머가 가구주 혹은 배우자 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에코부머의 연령층이 불과 6개년에 불과하고 미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에코부머가 가구주 혹은 배우자 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로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서울은 전체 시도 가운데 에코부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가구의 12.3%가 에코부머가 가구주이거나 배우자 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를 이루고 있는 가구이다. 광주, 대전, 경기 등의 지역에서도 에코부머가 가구주, 배우자 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로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1%가 넘는다. 그러나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비율이 불과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방에서 에



코부머가 가구주, 배우자 등으로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낮다.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부산지역에서 에코부머의 가구가 전체 가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에코부머의 가구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표 20〉 시도 및 가구유형별 에코부머 가구 분포

(단위 : %)

지역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배우자	가구주, 배우자 에코부머 아님
서울	7.97	2.39	1.94	87.70
부산	4.08	2.09	1.54	92.29
대구	4.48	2.47	1.81	91.24
인천	5.14	2.90	2.37	89.59
광주	6.55	2.79	2.17	88.49
대전	6.41	2.86	2.17	88.56
울산	4.44	2.95	2.83	89.78
경기	5.57	3.12	2.61	88.70
강원	3.16	1.92	1.58	93.33
충북	3.97	2.12	1.89	92.03
충남	4.13	2.31	1.97	91.59
전북	2.96	1.88	1.31	93.85
전남	2.15	1.58	0.94	95.33
경북	3.42	1.66	1.44	93.47
경남	3.72	2.36	1.90	92.03
제주	3.83	2.31	2.23	91.63

베이비부머 가구의 경우 가구주만 베이비부머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베이비부머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에코부머 가구에도 적용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에코부머인 가구의 비율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서울 전체 가구의 8%가 에코부머가 가구주인 가구로 나타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에코부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다. 광주(6.5%), 대전(6.4%)도 상대적으로 에코부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에 전남(2.1%)은 에코부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다. 전남의 뒤를 이어 전북(3.0%), 강원(3.2%), 경북(3.4%) 등으로 에코부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낮은 지역을 이루고 있다.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에코부머인 가구의 비율은 매우 낮다. 울산(2.8%), 경기(2.6%) 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에코부머 가구의 경우에도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래도 에코부머 가구주 가구 혹은 배우자 가구, 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 가구를 찾아볼 수 있지만 전남 등 젊은 층이 적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에코부머 가구는 매우 낮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III. 요약 및 맺음말

이 연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가지고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를 개인적인 수준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가구의 수준에서 베이비부머 가구와 에코부머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베이비부머는 2010년 현재 47세에서 55세까지의 인구집단이고, 에코부머는 26세부터 31세까지의 인구집단이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1. 남자 베이비부머가 전체 남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5.1%이다. 여자 베이비부머가 전체 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4.6%이다.
2. 남자 에코부머가 전체 남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8.95%이다. 반면에 여자 에코부머가 전체 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8.59%이다. 남자 에코부머와 여자 에코부머 사이에 0.36% 포인트 차이가 있다.
3. 베이비부머는 9세 연령집단인데 반해 에코부머는 6세 연령집단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 각 집단에서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에코부머의 비율보다는 높다.
4. 베이비부머는 83.7%가 혼인을 해서 유배우 상태에 있다. 미혼 상태에 있는 베이비부머는 3.9%이다.
5. 베이비부머는 그 위의 나이든 연령집단이나 아래의 연령집단에 비해 이혼의 비율이 높다. 베이비부머 가운데 8.27%가 이혼상태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혼 비율이 가장 높다.
6. 에코부머는 64.6%가 미혼상태에 있다. 혼인을 해서 유배우상태인 에코부머의 비율은 34.5%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혼이나 사별 상태의 에코부머는 매우 적다.
7. 20세부터 40세 사이에 혼인상태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에코부머는 바로 위 연령층인 32-39세 연령층 및 바로 아래 연령층인 20-25세 연령층과 비교하면 혼인상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32-39세 연령층에서는 유배우 비율이 72.1%로 에코부머보다 훨씬 높다. 반면에 20-25세 연령층에서는 유배우 비율이 4.9%로 매우 낮고 95%가 미혼 상태에 놓여 있다.
8. 베이비부머의 평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이다. 베이비부머의 43.3%가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 중학교 교육수준을 지닌 베이비부머는 18.2%, 4년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지닌 비율은 13.9%, 4년제 미만의 대학교 학력을 지닌 비율은 7.4%이다.
9. 에코부머의 평균 교육수준은 대학 학력이다. 에코부머 가운데 4년제 대학의 학력을 지닌 비율은 36.7%이고, 4년제 미만 대학의 학력을 지닌 비율도 26.97%이다. 26-31세의 에코부머 가운데는 아직도 재학 중인 사람도 많다. 이들이 모두 학교를 졸업하면, 특히 4년제 미만 대학의 교육수준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의 교육수준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에코부머의 평균 교육수준이 대학 학력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에코부머에서는 1/3 미만만이 고등학교 및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0. 전국의 전 가구 가운데 한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가구의 비율은 28.9%이다. 네 가구당 한 가구 이상의 가구에 베이비부머가 최소한 한 명씩은 포함되어 있다.
11.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울산은 전체 가구 가운데 33.1%의 가구에 베이비부머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 32.9%의 부산의 가구에 베이비부머가 포함되어 있다. 울산, 부산을 이어 인천 32.3%, 대구 31.1%, 경기 30.4%, 강원 29.9%, 서울 29.4% 순으로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12.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24.6%의 가구만이 베이비부머를 포함하고 있다. 전남 다음으로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낮은 시도는 충남으로 25.2%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에서는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낮다.
13.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베이비부머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다. 울산의 전 가구 가운데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베이비부머인 가구는 울산 전체 가구의 11.3%이다. 울산 다음은 부산, 대구, 경기의 순으로 각각 10.3%, 10.1%, 10.0% 등이 가구주와 배우자가 베이비부머로 이루어져 있다. 인천(9.9%), 서울(9.5%)에서도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베이비부머인 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14. 전체 가구 가운데 18.3%의 가구에 에코부머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81.7%의 가구에는 에코부머가 존재하지 않는다.
15. 각 시도내에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 각 시도내에서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작게는 9.6%(전남)에서 24.9%(서울)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크다.
16. 젊은이가 적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에서 에코부머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서울과 전남의 예를 들면 이 지역 사이에 에코부머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의 차이가 14 퍼센트 포인트나 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17. 에코부머 가구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는 에코부머 가구주 가구 혹은 배우자 가구, 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 가구를 찾아볼 수 있지만 전남 등 젊은 층이 적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에코부머 가구는 매우 낮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총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를 살펴보았다. 전수조사 자료에 포함된 변수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성, 연령,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의 변수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가구수준에서 베이비부머 및 에코부머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베이비부머가 새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이들이 2010년 현재 55세로 공식적인 은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베이비부머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있는 가구를 다시 분류해내어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에코부머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 가운데에서도 직업, 산업, 경제활동상태 변수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자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베이비부머나 에코부머에 대한 관심은 베이비부머가 은퇴기로 접어드는 연령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클 수밖에 없다. 또 에코부머의 경우에도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극심한 실업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에코부머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베이비부머는 자신들이 은퇴하면서 여전히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집단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면서 베이비부머 및 그 자녀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에코부머 사이의 동적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인총 자료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이 연구단계에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할 수 없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측면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가 한국에서 왜 주목의 대상이 되는지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연구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가 종료된 후 2010 인총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에 대한 더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부표〉

〈부표 1〉 베이비부머의 성별 세대유형

(단위 : %)

세대유형	남자	여자
부부	14.20	19.64
부부 + 미혼형제자매	0.12	0.07
부부 + 기타 친인척	0.20	0.21
가구주 + 미혼형제자매	0.23	0.16
가구주 + 기타 친인척	0.24	0.26
1세대 기타	11.06	9.02
부부 + 미혼자녀	53.40	44.66
부 + 미혼자녀	3.63	0.03
모 + 미혼자녀	1.09	11.48
부부 + 양친	0.29	0.33
부부 + 한부모	1.54	1.96
부부 + 미혼자녀 + 부부미혼형제자매	0.28	0.21
조부모 + 미혼손자녀	0.07	0.17
한조부모 + 미혼손자녀	0.02	0.05
2세대 기타	4.48	3.78
부부 + 미혼자녀 + 양친	0.92	0.82
부부 + 미혼자녀 + 부	0.70	0.45
부부 + 미혼자녀 + 모	4.88	4.04
3세대 기타	2.46	2.50
4세대	0.08	0.13
5세대 이상가구	0.10	0.05

〈부표 2〉 베이비부머의 성별 1인가구 비중

(단위 : %)

가구유형	남자	여자
1인가구	9.59	7.98
비1인가구	90.41	92.02



〈부표 3〉 에코부머의 성별 세대유형

(단위 : %)

세대유형	남자	여자
부부	8.44	11.86
부부 + 미혼형제자매	0.27	0.29
부부 + 기타 친인척	0.15	0.14
가구주 + 미혼형제자매	3.05	3.83
가구주 + 기타 친인척	0.58	0.51
1세대 기타	20.50	13.10
부부 + 미혼자녀	41.37	45.78
부 + 미혼자녀	2.68	1.59
모 + 미혼자녀	9.68	7.78
부부 + 양친	0.27	0.37
부부 + 한부모	0.27	0.46
부부 + 미혼자녀 + 부부미혼형제자매	0.76	0.99
조부모 + 미혼손자녀	0.06	0.06
한조부모 + 미혼손자녀	0.42	0.20
2세대 기타	3.95	4.12
부부 + 미혼자녀 + 양친	0.81	1.44
부부 + 미혼자녀 + 부	0.37	0.48
부부 + 미혼자녀 + 모	2.62	3.14
3세대 기타	3.37	3.50
4세대	0.20	0.25
5세대 이상가구	0.18	0.11

〈부표 4〉 에코부머의 성별 1인가구 분포

(단위 : %)

가구유형	남자	여자
1인가구	16.50	10.95
비1인가구	83.50	89.05



〈부표 5〉 전국 가구의 세대가구유형 분포

(단위 : %)

지역	세대유형가구	비혈연가구	1인가구	기타
서울	74.45	1.05	24.49	0.02
부산	75.82	0.77	23.41	0.01
대구	76.35	0.77	22.85	0.03
인천	77.06	0.90	22.01	0.02
광주	74.71	0.84	24.43	0.01
대전	74.09	0.95	24.93	0.03
울산	78.22	0.69	21.09	0.00
경기	78.14	1.03	20.80	0.03
강원	70.26	1.22	28.50	0.02
충북	71.13	1.35	27.51	0.01
충남	70.08	1.83	28.07	0.02
전북	69.68	0.62	29.66	0.04
전남	66.84	0.75	32.38	0.03
경북	67.55	1.30	31.12	0.03
경남	70.24	1.20	28.53	0.03
제주	73.18	1.13	25.67	0.02



제4주제 : 1인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의 변화분석

| 김정석 |

I. 머리말

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삶과 행위의 준거로서, 그리고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족은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그 형태와 구조 및 가치의식면에서 심대한 변화를 겪어 왔다(김유순과 김정석, 2001; 안병철, 1997; 한남제, 1999). 이러한 가족변화의 속도와 양상은 많은 사회적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이영분과 양심영, 1999; 임돈희와 자넬리, 2002; 전영자, 2000).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연구와 가족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흔히 가족(family)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형성된 관계로서 주거단위를 넘어서 유지되는 반면, 가구는 물리적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동체로 그 구성원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권태환과 박영진, 1995). 따라서 가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원들간의 관계 분석은 가족생활의 많은 측면들을 고찰할 수 있는 작업이 된다. 이와 같은 작업에 특히 유용한 자료로는 가구별로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가 파악되어 있는 인구센서스를 들 수 있다(권태환과 김두섭, 2002). 이 연구에서는 2000년도와 2010년도 사이의 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형태(household type)와 거주형태(living arrangements)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분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분석상의 단위이다. 가구 및 가족변화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나 발표는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져왔다. 이에는 전체 가구수 중에 특정형태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한 예로, 2010년도 총 가구 중 단독가구 비율이 23.9%)이나 가구수의 증가 등을 보여주는 보고서 등이 속하며, 가족 혹은 가구형태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가족 혹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구의 가족 및 가구는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최근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불거지고 있는 노인문제를 한 예로 들어 가구와 가구원이 분석단위로서 갖는 유용성의 일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분석단위를 가구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노인단독가구수의 증가는 신체적으로 쇠약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개량과 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노인개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자녀동거비율의 감소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 혹은 별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노인부양문제의 심



각성을 시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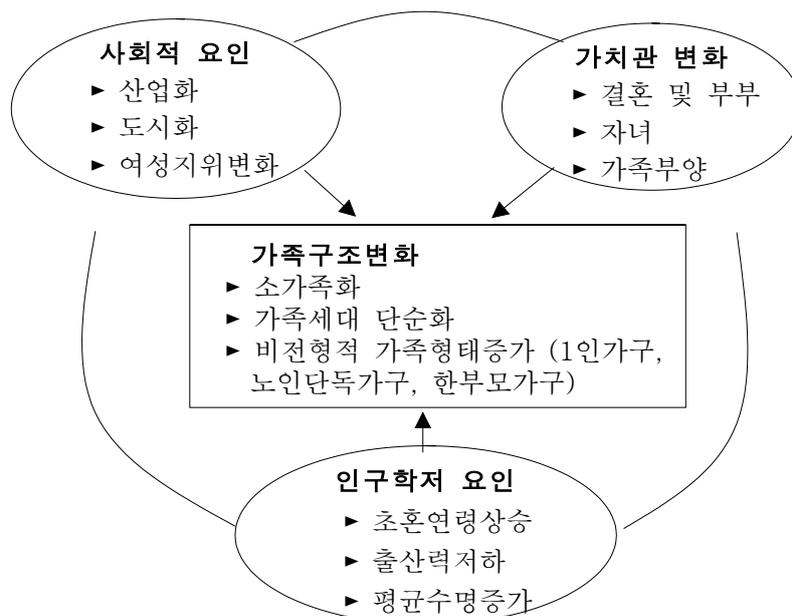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한국 통계청에서 가구를 분석단위로 발표한 기존의 가구 및 가족관련 통계표를 정리하는 한편, 가구의 관점에서 가구형태 및 거주형태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1인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 노인들의 거주형태의 변화, 여성가구의 증가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가구변화의 전반적 추세와 쟁점

특정 가구형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앞서 가구 및 가족 변화의 주요요인과 전반적인 추세를 간략히 정리하고 주요쟁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50년 간 한국 사회의 가구 및 가족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한편 학제간 연구를 통해 가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김승권과 송인수, 2000a). 이러한 학문적 동향은 그간 사회변동으로 인해 가족관련 문제가 누적되는 한편 기존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의 가족형태가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다.

가족연구나 논의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주제나 영역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가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가족기능, 가족성원간의 내면적 관계, 가치관 등의 영역에 비해 가족구조는 경험적인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가족구조는 여타의 다른 영역과 매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하고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구조를 통해 가족의 여러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대체적으로 가족구조는 크게 사회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및 가족가치관적 요인 등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김승권, 2000a). 다음의 <그림 1>은 이러한 요인들과 그 구성요소들이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가족구조변화와 요인들간의 관계



이 그림에서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은 독자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한편 그 구성요소들도 거시적 요인들 안팎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상호영향력을 가진다. 가령, 사회적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라는 요소는 결혼이나 부부관계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과 같은 인구학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같은 요인들에 의한 가족구조는 가족규모가 작아지며 가족세대는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오는 한편, 1인가구, 노인단독가구, 한부모가족가구, 여성가구주가구와 같은 비전형적인 모습의 가족형태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 변화의 몇 가지 모습은 가구형태의 구성변화에 관한 기존의 통계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1980년과 2000년 사이의 가구수, 가구규모, 가구구조, 가족구조 및 여성가구주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980년의 총가구수가 약 797만 가구이었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431만 가구, 2010년에는 1,734만 가구에 이르렀다. 한편, 이 기간에 평균 가구원수는 한 가구당 4.5명에서 3.1명, 2.7명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이는 한 가구내 구성원 수는 감소하는 한편, 이들이 개별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 및 가구수의 증가는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설명된다.

소가족화 경향과 함께 세대구성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세대관계의 단순화와 핵가족의 증대로 특징 지워진다. <표 1>에 의하면, 세대별 구성으로 살펴본 가구분포에서 1980년과 2010년 사이에 1세대가구는 8.8%에서 23.3%로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17.6%에서 8.2%로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1세대가구의 증가에는 무엇보다도 성인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노인부부만이 남게 되는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권태환과 박영진, 1995).

가구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구를 이루는 세대구성이 단순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에 의하면 1980년에 여성가구주 가구는 14.7%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25.9%에 이르고 있다. 가구주란 통상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혈연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거나 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가구원을 뜻한다(권태환과 박영진, 1995). 남자가 가구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가족제도 변화의 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는 주로 집을 떠난 미혼여성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하거나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현상으로 설명되는데, 많은 경우 이들 가구는 불안정한 가족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 가구 및 가족구조 관련 변화추세: 1980-2010

(단위: 천 가구, 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일반가구							
일반가구 가구수(1,000가구)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혈연가구수(1,000가구)	7,469	8,750	10,166	11,132	11,928	12,490	12,994
비혈연가구수(5인이하, 1,000가구)	116	159	166	182	159	225	202
1인가구수(1,000가구)	382	660	1,021	1,642	2,224	3,170	4,142
일반가구 평균가구원수(명)	4.5	4.1	3.7	3.3	3.1	2.9	2.7
일반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0.0	23.9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5인가구	20.0	19.5	18.8	12.9	10.1	7.7	6.2
6인 이상 가구	29.9	19.5	9.8	5.5	3.3	2.3	1.8
일반가구 성별가구주(%)							
남성가구주 가구	85.3	84.3	84.3	83.4	81.5	78.1	74.1
여성가구주 가구	14.7	15.7	15.7	16.6	18.5	21.9	25.9
혈연가구 세대구성(%)*							
1세대 가구	8.8	10.5	12.0	14.7	17.1	20.6	23.3
2세대 가구	73.1	73.3	74.1	73.7	72.9	70.5	68.4
3세대 가구	17.6	15.8	13.6	11.4	9.9	8.7	8.2
4세대 이상 가구	0.6	0.5	0.3	0.2	0.2	0.1	0.1

자료: 통계청 KOSIS(해당 연도 한국의 사회지표, 2010년 자료는 인구센서스 결과)

주: * 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

이상의 통계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이 분명함을 확인시켜준다. 가족의 소가족화, 핵가족화가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즉 다양해지는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가족관련 사회정책에 대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질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의 초석이 된다.

1인가구, 노인단독 혹은 노인부부가구, 한부모가족 등과 같이 비전형적인 가족구조의 증가현상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김승권과 송인수, 2000b, 2000c). 우선, 이러한 가족형태를 정상적인 가족유형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적인 가족유형으로 규정하고 가족해체론적 관점에서 이들 가족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가족의 다양화현상을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단기간 내에 외생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장경섭, 2000), 가족은 가족해체적인 모습과 새로이 등장하는 대안가족의 모습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가족변화의 양상을 이 두 가지 축 위에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변화의 세부 요인들과 그것이 개인들에게 갖는 의미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노인부부가구의 증가를 한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자녀에게 주로 의존하는 우리 사회의 경우,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의 증가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부양이 약화되었다는 지표로 흔히 제시된다. 특히 이러한 점은 노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세대 측에서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나 대중매체 등의 보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고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스스로 자녀와의 별거를 선택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위치, 건강상태 혹은 선호도에 따라 노인부부가구를 형성하는 이유는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Kim and Rhee, 1997, 1999, 2000). 특히 능동적으로 성인자녀와 별거하면서 노인부부끼리 살고자 하는 비율은, 앞으로 노인이 될 중고령층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점차 높아지리라 전망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노년기에 부부끼리 사는 형태는 점차 일반화될 것이며 이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노년기의 대안적인 가족형태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적 대안들은 자녀로부터 외면당한 노인뿐 아니라 노년기에 독자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차별적이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 장래를 예측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에 앞서 기존의 인구센서스 원자료를 이용해 변화의 실태와 양상을 좀 더 엄밀히 분석해 보고자 하는 탐색적 작업의 결과이다. 우리 사회 가족구조변화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증가, 사회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노인들의 거주형태, 학문적 실천적 함의가 강한 여성가구의 증가현상에 주목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특정 가족형태에 속해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변화

여기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하, 가구원)이 어떠한 가구형태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가구는 주로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가구로 이루어지며, 5인이하의 비친족가구도 포함된다. 한편 집단가구는 집단시설가구와 6인이상의 비친족가구가 포함된다. 인구비율로 볼 때 집단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일반가구에 속하는 인구만을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 제시하는 가구형태는 1인가구(1인만이 거주하는 가구), 부부가구(직계가족이 없이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 2세대가구(직계관계에 있는 두 세대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3세대이상가구(직계관계에 있는 3세대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및 기타일반가구(앞의 네 가지 형태를 제외한 가구)로 정의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형태의 가구 중에서 특히 1인가구와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까지의 가구유형변화에서 전체가구 중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과연 이러한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관심을 근거로 한다. 또한, 다섯 가지 유형의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들의 상대적 비율을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개별 가구 유형에 관한 설명은 중첩된다. 따라서 기술상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들의 비율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되 필요한 경우는 다른 형태의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배우자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원들이 속한 가구유형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이어 일정연령에 한정해서 배우자유무별로 1인가구 및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미혼,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하 무배우자)는 부부가구 자체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결혼한 사람(이하 유배우자)인 경우,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1인가구와 부부가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15세 이상의 연령층에 한정해서 무배우자 및 유배우자로 나누어 1인가구 및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전체가구원의 가구구성비율

다음의 <표 2>는 다섯 가지의 가구형태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을 성과 거주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체 가구원을 보았을 때 지난 10년 동안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3세대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령, 2000년에는 1인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비율은 5.1%로 전체 가구원 100명당 5명 정도가 1인가구에 거주하였지만 2010년에는 해당 가구원 비율이 9.3%로 상승하여 전체 가구원 100명당 9명의 꼴로 1인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 또한 2000년에 8.8%에서 2010년 12.7%로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각 연도에 있어서 1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여성들에게서 약간 높은 반면,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남성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가구원의 성 및 거주지역별 가구형태 비율: 2000-2010

		전체	남성	여성	도시	농촌
2000	1인가구	5.1%	4.2%	5.9%	4.6%	6.8%
	부부가구	8.8%	9.0%	8.6%	6.8%	16.4%
	2세대가구	70.4%	71.9%	68.9%	73.9%	56.8%
	3세대이상가구	13.6%	12.8%	14.5%	12.4%	18.5%
	기타일반가구	2.1%	2.1%	2.1%	2.3%	1.4%
2005	1인가구	7.3%	6.3%	8.2%	6.5%	10.0%
	부부가구	11.8%	12.2%	11.5%	8.7%	22.6%
	2세대가구	66.6%	67.9%	65.3%	71.3%	50.4%
	3세대이상가구	11.9%	11.2%	12.6%	10.9%	15.2%
	기타일반가구	2.4%	2.5%	2.3%	2.6%	1.8%
2010	1인가구	9.3%	8.6%	9.9%	8.6%	12.1%
	부부가구	12.7%	13.0%	12.3%	10.4%	22.8%
	2세대가구	64.5%	65.5%	63.6%	67.7%	50.3%
	3세대이상가구	11.0%	10.3%	11.7%	10.6%	12.9%
	기타일반가구	2.5%	2.6%	2.4%	2.6%	1.9%

자료: 통계청, 2000, 2005 인구센서스 원시자료, 2010년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1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을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농촌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비율도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시보다 농촌에서 1인가구 및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질 뿐 아니라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온 현상은 농촌에서 자녀를 도시로 보내고 홀로 남거나 부부끼리 남은 노인들이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태환과 박영진, 1995; 김태현, 2001).

가구원의 연령별로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대체적으로 각 연령에서 1인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5~24세, 45~54세, 55~64세 연령층에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15~24세층의 비율이 2000년 1.9%에서 2010년 0.7%로 감소한 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기인한다. 또한 45~54세 연령층의 경우 2005년 14.6%에서 2010년 13.8%로, 55~64세 연령층도 2005년 32.5%에서 2010년 31.7%로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3〉 가구원의 연령별 가구형태 비율: 2000-2010

		전체	15세미만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2000	1인가구	5.1%	0.0%	3.7%	7.0%	4.1%	4.8%	8.2%	16.8%
	부부가구	8.8%	0.1%	1.9%	9.6%	3.9%	11.6%	28.6%	29.2%
	2세대가구	70.4%	85.2%	76.7%	68.5%	79.4%	71.8%	47.4%	23.3%
	3세대이상가구	13.6%	14.4%	11.1%	10.6%	11.6%	11.1%	15.2%	29.9%
	기타일반가구	2.1%	0.2%	6.5%	4.3%	0.9%	0.7%	0.6%	0.7%
2005	1인가구	7.3%	0.0%	5.3%	9.8%	5.9%	6.3%	9.5%	19.8%
	부부가구	11.8%	0.1%	1.1%	10.2%	4.6%	14.6%	32.5%	35.5%
	2세대가구	66.6%	85.5%	76.9%	64.5%	77.4%	68.7%	45.9%	23.8%
	3세대이상가구	11.9%	14.2%	10.1%	9.2%	10.5%	9.3%	11.2%	20.0%
	기타일반가구	2.4%	0.3%	6.6%	6.3%	1.5%	1.1%	0.8%	0.8%
2010	1인가구	9.3%	0.0%	5.8%	13.0%	8.3%	8.4%	11.0%	21.5%
	부부가구	12.7%	0.1%	0.7%	10.2%	5.4%	13.8%	31.7%	35.9%
	2세대가구	64.5%	85.2%	78.6%	62.3%	73.9%	67.9%	46.6%	24.1%
	3세대이상가구	11.0%	14.3%	9.8%	8.0%	10.2%	8.4%	9.3%	17.6%
	기타일반가구	2.5%	0.4%	5.1%	6.5%	2.1%	1.5%	1.3%	1.0%

자료: 통계청, 2000, 2005 인구센서스 원시자료, 2010년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령별로 가구원들이 속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조애저, 2000). 2010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15세 미만인 아동들의 대부분은 2세대 혹은 3세대 가구에 속하면서 부모와 조부모의 집에서 생활한다. 15~24세에 이르면 일부는 가족을 떠나 단독가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미혼의 젊은이들이다. 부모를 떠나는 비율은 그 다음 연령인 25~34세에서 더 많아지는 동시에 결혼을 통해 부부가족을 형성하는 비율 또한 많아진다.

미혼자들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구를 형성한 다음 연령인 35~44세에서는 미혼독신가구가 줄어드는 한편, 이혼이나 사별에 의해 1인가구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 전의 연령에 비해서는 적어진다. 한편 이 연령에서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2세대이상의 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45~54세에 이르러서는 자녀들이 장성함에 따라 분가하면서 다시 부부가구로 복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추세는 65세 이상 연령까지 지속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별로 인해 배우자를 잃고 혼자서 살아가는 비율이 높아진다.

가구원의 연령별로 나타나는 1인가구 및 부부가구 구성비율은 대체로 젊은층과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확연해진다. 이 중에서 1인가구 형성비율을 주목해서 볼 때 연령층에 따라 상당히 다른 함의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농촌으로부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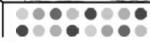
시로의 이동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의 1인가구형성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속적인 혼인연령의 상승과 도시간 혹은 도시내에서의 이동성이 커진 탓으로 대부분 설명이 된다(권태환과 박영진, 1995).

젊은층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정도는 이들이 결혼의 필요성이나 필수성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 사회조사에 의하면 각 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젊은층일수록 결혼을 개인적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김승권, 2000b). 따라서 앞으로 결혼이 과연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만약 결혼의 보편성이 없어진다면 젊은층의 1인가구는 생애주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태도 변화와는 별도로 대부분이 일정연령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관찰되는 젊은층의 1인가구는 대부분 일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고령층에서 보이는 1인가구는 연령증가와 함께 그 비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최근으로 올수록 보다 많이 관찰되고 있다. 고령층에서 보이는 1인가구 형성경향이 생애주기상 일시적 현상이 아닐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오랜 노후기간을 혼자 지내게 된다는 뜻이 된다. 이는 곧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젊은층의 대규모 진출을 경험한 농촌 노인들, 그리고 배우자를 잃고 살아가는 기간이 긴 여성노인들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 요구된다.

2. 15세 이상 무배우자들의 1인가구 형성비율

배우자가 없는 15세 이상 가구원들이 다른 가족성원들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사는 비율을 살펴보자. 다음의 <표 4>는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무배우자 중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성, 거주지역, 결혼상태 및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다. 결혼상태와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던 앞의 <표 2>와 <표 3>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 거주지역, 연령별 차이는 보다 분명해진다. 성의 경우, 15세 이상 무배우자들 중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남녀간의 비율차이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율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15세 이상 무배우자들의 성,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별 일인가구 거주비율: 2000-2010

		2000년	2005년	2010년
성	합계	15.6%	21.0%	24.1%
	남성	13.2%	18.3%	22.5%
	여성	17.5%	23.2%	25.4%
거주지역	도시	14.0%	18.3%	22.0%
	농촌	22.2%	31.3%	34.8%
혼인상태	미혼	10.1%	13.6%	16.9%
	사별	30.6%	39.1%	43.2%
	이혼	32.2%	34.0%	36.0%
연령	15-24세	3.9%	5.4%	5.9%
	25-34세	17.5%	18.8%	21.0%
	35-44세	30.4%	31.7%	33.4%
	45-54세	29.0%	33.2%	37.4%
	55-64세	36.2%	42.0%	45.0%
	65세 이상	33.7%	43.4%	47.9%

자료: 통계청, 2000, 2005 인구센서스 원시자료, 2010년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무배우자들 내에서의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의 차이는 농촌거주자들에게서 1인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15세 이상 무배우자들 중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인가구에 속할 비율은 22%에 이르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인가구에 거주할 비율은 34.8%로 나타난다. 이는 농촌에서 홀로 남은 노인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인데, 결혼상태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적은 미혼보다는 연령이 많은 사별자들에게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데서도 확인된다.

무배우자들의 결혼상태별 1인가구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각 연도별로 1인가구 거주비율이 2000년에는 이혼한 사람에게서, 2005년과 2010년에는 사별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2000년에 이혼한 사람들의 32.2%, 사별한 사람들의 30.6%, 그리고 미혼자들의 10.1%가 1인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후 이 비율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10년에는 이혼한 사람들의 36.0%, 사별한 사람들의 43.2%, 미혼자들의 16.9%가 1인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별한 사람들에게서 1인가구 거주비율이 높아진 현상은 고령자수의 증가와 함께 가족생애사적 사건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점차 혼자 살아가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여유가 있음을 뜻할 수도 있으나, 다른 가족원에게 의지할 형편이 못됨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홀로된 노인들의 경우 자녀가족과의 결합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미혼자들에게서 1인가구 거



주비율이 높아진 현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는 한편,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은 젊은층들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혼자들의 1인가구 거주비율의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의 <표 4>에서 연도별 1인가구에 속하는 무배우자들의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가면서 높아지다가 55~64세를 정점으로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유형은 2005년과 201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1인가구 거주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25~34세 중 1인가구에 속하는 무배우자 비율은 21.0%, 다음 연령층인 35~44세, 55~64세에서도 해당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47.9%로 증가 현상을 나타냈다.

저연령층 무배우자들의 1인가구 거주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증가하는 현상은 주로 미혼인 사람들 내에서의 1인가구 거주 경향이 늘어났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연령층에서의 1인가구 거주 무배우자들의 증가는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들에게서의 1인가구 거주 경향이 높아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 15세 이상 유배우자들의 부부가구 형성비율

15세 이상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유배우자내에서 성별로 살피는 작업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성별 비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 표에 의하면 유배우자들이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거주지역의 경우 각 연도별로 도시에서나 농촌에서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유배우자들에게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성인자녀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에 남은 고연령층 부모들이 부부가구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해석은 유배우자의 연령별 부부가구거주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표 5> 15세 이상 유배우자들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부부가구 거주비율: 2000-2010

		2000년	2005년	2010년
거주지역	전체	17.5%	23.5%	25.1%
	도시	13.7%	17.7%	21.1%
	농촌	30.4%	40.5%	40.6%
연령	15-24세	37.3%	37.6%	27.6%
	25-34세	15.0%	19.8%	23.8%
	35-44세	4.3%	5.4%	6.7%
	45-54세	13.1%	16.8%	16.4%
	55-64세	35.2%	39.9%	38.9%
	65세 이상	55.8%	62.9%	60.7%

자료: 통계청, 2000, 2005 인구센서스 원시자료, 2010년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유배우자 중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5~24세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25~34세부터 낮아지면서 45~54세부터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젊은 부부가 자녀 없이 부부가구를 형성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부부가구를 벗어났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떠나면서 다시 부부가구로 돌아오는 현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부부가구의 형성은 2010년으로 올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가 장성한 이후 노부모 둘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한편, 그 기간 또한 길어짐을 의미한다.

IV. 특정 연령층의 거주형태

연령별 인구를 고려할 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계층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거주형태(living arrangements)를 살펴본다.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가구 뿐 아니라 집단시설가구를 비롯한 집단가구까지 분석에 포함시켜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일반가구에 한정해서 분석을 실시한다.

1. 노인들의 거주형태

노인층에서는 이들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가, 같이 산다면 동거자녀는 기혼자녀인가 미혼자녀인가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 만약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이들은 혼자 1인가구를 형성하는가 혹은 부부단독가구를 형성하는가 등도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노인층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Kim & Rhee (1997, 1999, 2000), 유성호 (2000), 원영희 (1995) 등이 그 몇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의 <표 6>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노인들의 성, 혼인상태 및 거주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거주형태 중에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 및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에 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



〈표 6〉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 혼인상태 및 거주지역별 거주형태: 2000-2010

		전체	남성	여성	무배우	유배우	도시	농촌
2000	자녀없이 사는 비율	50.9%	58.1%	46.6%	39.0%	61.9%	42.5%	62.6%
	일인가구 거주비율	16.8%	5.9%	23.5%	33.7%	1.4%	13.8%	21.0%
	부부가구 거주비율	29.2%	47.5%	18.0%	0.2%	55.8%	23.5%	37.1%
	기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35.7%	24.3%	42.7%	50.6%	22.0%	41.0%	28.3%
	미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13.4%	17.6%	10.8%	10.4%	16.1%	16.5%	9.1%
	가구주비율	51.1%	82.9%	31.6%	45.7%	56.1%	47.3%	56.3%
	가구주 배우자 비율	16.0%	0.9%	25.2%	0.0%	30.6%	13.8%	19.0%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31.1%	15.5%	40.7%	50.8%	13.0%	36.7%	23.4%
2005	자녀없이 사는 비율	60.0%	66.0%	56.0%	48.2%	69.1%	49.2%	71.6%
	일인가구 거주비율	19.8%	7.9%	27.6%	43.4%	1.5%	15.8%	24.1%
	부부가구 거주비율	35.5%	53.3%	23.9%	0.2%	62.9%	28.6%	43.0%
	기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33.1%	25.5%	38.1%	47.2%	22.2%	42.8%	22.7%
	미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6.9%	8.5%	5.9%	4.6%	8.7%	8.0%	5.7%
	가구주비율	57.1%	88.5%	36.6%	57.5%	56.8%	53.4%	61.1%
	가구주 배우자 비율	19.7%	0.9%	32.0%	0.0%	35.0%	17.4%	22.1%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22.3%	10.0%	30.3%	40.8%	7.9%	28.0%	16.0%
2010	자녀없이 사는 비율	61.8%	66.4%	58.7%	53.4%	67.7%	54.8%	74.2%
	일인가구 거주비율	21.5%	10.3%	29.1%	47.9%	3.0%	18.4%	26.8%
	부부가구 거주비율	35.9%	51.9%	24.9%	0.3%	60.7%	31.5%	43.6%
	기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23.5%	15.8%	28.8%	34.9%	15.6%	26.7%	17.8%
	미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14.7%	17.8%	12.5%	11.8%	16.7%	18.5%	8.0%
	가구주비율	59.5%	88.7%	39.5%	63.7%	56.6%	57.2%	63.5%
	가구주 배우자 비율	20.5%	1.8%	33.4%	0.0%	34.9%	19.3%	22.8%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18.4%	8.5%	25.1%	33.3%	8.0%	21.6%	12.7%

자료: 통계청, 2000, 2005 인구센서스 원시자료, 2010년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먼저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노인들이 사는 가구 내에 적어도 1인이상의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미혼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로 정의하였고,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가구내에 기혼자녀가 없이 미혼자녀가 적어도 1인이상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합계는 전체경우가 된다. 한편, 자녀 없이 사는 비율 속에는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과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 등이 포함되며, 자녀이외의 친족이나 비친족과 함께 사는 비율도 포함된다.



앞의 <표 6>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한편,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에 비해,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부모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혼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사는 경향은 강하게 남아있지만, 일단 결혼한 자녀들은 분가해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증가, 즉 자녀와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노인들의 증가는 이들이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되는 비율의 증가에도 반영된다.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이 50.9%인 2000년에는, 노인들의 67.1%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인 한편, 31.1%가 가구주의 부모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이 61.8%이고, 노인들의 80%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이고, 18.4%가 가구주의 부모로 나타났다.

자녀, 특히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의 감소는 노인들이 가구주의 위치를 자녀에게 줄 기회가 없이 그대로 지속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거주지역, 성 및 혼인상태별로 거주형태의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2000년과 2010년 동안에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도시보다는 농촌에게서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의 성인자녀들이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에 노부모들만 남게 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자녀(기혼 및 미혼)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 노인들이 가구주의 부모가 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 없이 사는 노인의 비율을 성별로 보면, 이 비율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1인가구 거주비율과 부부가구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연도에 있어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그러나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성노인들은 홀로 사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사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여성노인에게서 가구주의 배우자가 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부부가구 노인비율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무배우자와 유배우자로 나누어 거주형태를 보면,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은 연도에 상관없이 유배우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능력이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별거하면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잃고 난 후에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배우자들의 자녀별거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음의 <표 7>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별로 거주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연



도에 관계없이 노인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기혼자녀와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주 혹은 가구주 배우자의 비율도 대체로 기혼자녀와의 동거비율 상승과 함께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65~69세 연령층의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동시에 8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그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난 10년간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자신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고령층에서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고 하겠다.

〈표 7〉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별 거주형태: 2000-2010

	전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2000 자녀없이 사는 비율	50.9%	56.0%	54.7%	47.8%	37.1%	23.9%
일인가구 거주비율	16.8%	14.3%	19.2%	20.2%	17.2%	12.2%
부부가구 거주비율	29.2%	36.4%	30.6%	23.2%	16.0%	7.3%
기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35.7%	24.6%	34.0%	44.3%	56.3%	69.3%
미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13.4%	19.4%	11.3%	7.9%	6.6%	6.8%
가구주비율	51.1%	56.6%	53.9%	48.6%	38.3%	22.9%
가구주 배우자 비율	16.0%	23.9%	15.6%	8.3%	4.1%	1.6%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31.1%	18.6%	29.3%	41.0%	53.8%	68.3%
2005 자녀없이 사는 비율	60.0%	63.4%	64.5%	59.8%	48.5%	31.9%
일인가구 거주비율	19.8%	15.0%	20.5%	26.4%	25.0%	18.4%
부부가구 거주비율	35.5%	42.9%	39.2%	29.5%	20.2%	11.3%
기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6.9%	8.0%	7.4%	5.8%	5.0%	3.8%
미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33.1%	28.5%	28.1%	34.3%	46.5%	64.3%
가구주비율	57.1%	59.3%	60.0%	58.3%	50.3%	34.8%
가구주 배우자 비율	19.7%	28.4%	20.8%	12.1%	5.7%	2.3%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22.3%	11.3%	18.4%	28.6%	43.0%	61.4%
2010 자녀없이 사는 비율	61.8%	62.2%	65.8%	64.5%	56.4%	41.7%
일인가구 거주비율	21.5%	15.9%	20.6%	26.7%	30.0%	24.0%
부부가구 거주비율	35.9%	41.5%	40.8%	33.7%	22.3%	12.8%
기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23.5%	15.5%	20.0%	26.0%	36.4%	52.1%
미혼자녀와 함께사는 비율	14.7%	22.2%	14.2%	9.4%	7.2%	6.3%
가구주비율	59.5%	60.0%	61.6%	61.8%	57.7%	43.0%
가구주 배우자 비율	20.5%	28.8%	23.0%	15.6%	7.7%	2.7%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18.4%	9.9%	14.3%	21.1%	32.2%	49.7%

자료: 통계청, 2000, 2005 인구센서스 원시자료, 2010년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V. 성별 가구주 비율과 특성

여성가구주 가구 혹은 여성가구주에 대한 연구사례로는 이성림과 김민정(2001)을 들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은 아직 부진한 실정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후, 각 성별로 가구주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이어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다.

1. 성별 가구주 비율

남성가구원과 여성가구원중에서 가구주 비율을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남성가구주; 비율은 2000년에 69.9%, 2005년에는 71.2%로 상승하다가, 2010년에는 69.3%로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15%에서 22.8%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남녀모두에게서 가구주비율이 증가한 것은 1인가구나 소규모가구수의 증가로 전체 가구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여기서 우선 주목할 점은 성인 남성들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자신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로 인정되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에 비해 가구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는 성인남녀가 동일 가구에 속해 있을 경우 남성이 대부분 가구주로 지목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여성들 중에서 가구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미혼여성이 단독가구를 형성하거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 빈번해짐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성들 내 가구주 비율을 거주지역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10년 시기 동안 해당 비율이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여성들 내 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고령층의 여성들이 많고 이들 중 사별한 여성들이 자녀와 별거하면서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에서도 관찰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여성들 내 가구주 비율은 사별이나 이혼한 여성들에서 가장 높으며,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음으로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가구주는 거의 남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미혼여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혼여성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결혼한 남성의 대부분이 가구주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15세 이상 남성과 여성들의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별 가구주 비율: 2000-2010

		2000		2005		2010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69.9%	15.0%	71.2%	19.0%	69.3%	22.8%
거주지역	도시	69.2%	14.4%	69.8%	18.0%	67.9%	22.3%
	농촌	72.7%	17.2%	75.7%	22.2%	75.3%	25.3%
혼인상태	미혼	17.5%	13.5%	21.9%	17.3%	25.0%	20.3%
	유배우	94.4%	4.3%	94.3%	5.4%	91.4%	9.1%
	사별	66.7%	56.7%	73.9%	63.5%	78.5%	67.3%
	이혼	79.6%	82.4%	79.8%	83.6%	79.0%	82.1%
연령	15-24세	6.9%	6.8%	8.0%	8.5%	7.8%	8.4%
	25-34세	60.7%	9.2%	53.1%	13.4%	48.5%	18.2%
	35-44세	92.3%	12.2%	88.1%	14.4%	81.5%	19.1%
	45-54세	96.5%	18.6%	94.5%	19.6%	90.4%	23.9%
	55-64세	95.0%	23.6%	95.2%	24.6%	92.9%	26.8%
	65세 이상	82.9%	31.6%	88.5%	36.6%	88.7%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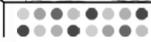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0, 2005 인구센서스 원시자료, 2010년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연령별 여성 가구주 비율 또한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가구주 비율의 경우에는 2000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주가 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다가 55~64세를 정점으로 해서 6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편, 2005년과 2010년에는 55~64세 연령층까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기혼자녀의 가구에 합류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연령별 유형이 발견되고 있으나 2000년, 2005년, 2010년 모두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여성 가구주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서보다도 65세 이상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65세 이상 여성의 29.5%가 자신의 가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여성들이 자녀와 별거하면서 자신이 단독가구를 이끌어 가는 경향이 강해짐을 반영한다.

2. 가구주의 성에 따른 특성

앞에서는 1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별 가구주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15세 이상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의 거주지역별 연령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9〉 15세 이상 가구주의 거주지역별 연령분포: 2000-2010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2000	15-24세	1.9%	1.3%	1.8%	10.2%	3.0%	8.4%
	25-34세	21.9%	14.1%	20.2%	16.5%	4.6%	13.6%
	35-44세	34.3%	25.2%	32.3%	21.3%	8.5%	18.1%
	45-54세	22.4%	19.9%	21.8%	19.7%	12.3%	17.9%
	55-64세	13.1%	20.3%	14.7%	15.3%	23.6%	17.3%
	65세 이상	6.5%	19.2%	9.3%	17.1%	48.0%	2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5	15-24세	1.9%	1.0%	1.7%	8.5%	1.9%	6.7%
	25-34세	17.1%	9.1%	15.1%	17.0%	3.7%	13.3%
	35-44세	30.5%	19.0%	27.7%	19.0%	6.7%	15.6%
	45-54세	26.2%	22.1%	25.2%	21.3%	10.6%	18.3%
	55-64세	14.8%	20.3%	16.2%	14.7%	17.8%	15.6%
	65세 이상	9.5%	28.5%	14.2%	19.6%	59.2%	3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0	15-24세	1.7%	1.0%	1.6%	5.8%	2.0%	5.0%
	25-34세	13.9%	8.5%	12.8%	16.1%	4.9%	13.7%
	35-44세	26.8%	18.3%	25.1%	19.0%	8.4%	16.8%
	45-54세	27.9%	23.0%	27.0%	22.5%	12.4%	20.4%
	55-64세	17.0%	20.0%	17.6%	15.4%	14.4%	15.2%
	65세 이상	12.6%	29.1%	15.9%	21.3%	57.9%	28.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00, 2005 인구센서스 원시자료, 2010년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다음의 〈표 9〉에 의하면, 남성가구주들과 여성가구주들은 연령분포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남성가구주들에 비해 여성가구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가구주들이 고령층에 속한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가구주들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도시여성가구주들과 농촌여성가구주들의 연령분포에서는 농촌여성가구주들이 도시여성가구주들에 비해 높은 연령층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농촌여성가구주들이 고령층에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요약 및 정리

이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센서스 자료 분석을 통해 일반 가구원들이 속한 가구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구를 단위로 한 가구 및 가족형태변화에 관련된 기존의 통계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인구들은 그 가구형태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한 일반가구원의 비율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가구원들의 배우자유무에 따라 1인가구와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무배우자 중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미혼보다는 이혼이나 사별자들에게서,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비율에서는 무배우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별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무배우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때 두드러진 현상은 지난 10년간 도시와 농촌 간에 1인가구를 거주하는 비율 차이가 확대되었다는 점, 사별자 및 미혼자들의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점, 다른 연령에 비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유배우자 중에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비율에서는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인 34세 이하와 성인자녀가 출가한 이후시점인 55세 이상에서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유배우자들이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높아지고 있다.

둘째, 노인들의 거주형태에서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그리고 무배우자보다는 유배우자에게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노인들은 대체로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들은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셋째, 지난 10년간 남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에 비해 여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에서도 발견된다.

결혼상태별로는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이혼, 사별, 미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들의 경우에 유배우자가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여성들이 1인가구를 형성함으로써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볼 때,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연령이 증가함과 동시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그 이전 연령층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결혼상태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별과 미혼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이 나타난다. 연령분포에서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들의 고령화현상은 도시보다는 특히 농촌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변화는 도시-농촌, 연령, 성 등에 따라 가족구조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차별적 작용과 그 기제는 가족구조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족의 변화와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할 때 농촌-여성-고령이라는 축이 가장 시급하고도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이 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 권태환·박영진. 1995. “제3부. 가구 및 가족유형”.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공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2002. 『한국의 인구』. 통계청.
- 김승권. 2000a. “제3장. 한국가족변화의 주요요인”.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7.
- 김승권. 2000b. “제5장. 가족구조의 변화”.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7.
- 김승권·송인수. 2000a. “제2장. 가족관련 제 이론 및 연구동향”.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7.
- 김승권·송인수. 2000b. “제10장. 가족해체와 결손가족의 문제”.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7.
- 김승권·송인수. 2000c. “제11장. 다양한 가족의 출현”.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7.
- 김유순·김정석. 2001.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 이영환(편).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과 사회문제』 서울: 나눔의 집
- 김태현. 2001.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5-40.
- 안병철. 1997. 『사회변동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 유성호. 2000.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노인복지연구』 8: 169-175.
- 이성림·김민정. 2001. “여성가구주 가구의 인구학적 동향과 경제적 복지 상태”. 『소비자학연구』 12(1): 17-30.
- 이영분·양심영. 1999.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3: 117-148.



- 임돈희·로저 L. 자넬리. 2002. “한국 가족 변화의 의미”. 『비교민속학』 22: 321-336.
- 월영희. 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97-116.
- 장경섭. 2000. “제4장. 가족가치관의 특성과 변화”.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7.
- 전영자. 2000. “가족의 변화와 가족학의 과제”. 『한구생활과학회지』 9(22): 177-187.
- 조애저. 2000. “제7장. 가족형성 및 주기의 변화”.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7.
- 한남제. 1999. 『현대가족의 이해』 일지사.
- Kim, Cheong-Seok and Ka-Oak Rhee. 1997. “Variations in Living Arrangements among Korean Elderly Par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2(2): 189-202.
- Kim, Cheong-Seok and Ka-Oak Rhee. 1999. “Living Arrangements in Old Age: Views of Korean Elderly and Middle Aged Adults”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2): 94-111
- Kim, Cheong-Seok and Ka-Oak Rhee. 2000. “Correspondence between actual coresidence and desire for coresidence among the elderly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2(1):36-48.



제5주제 :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및 교육상태 분석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를 중심으로)

| 김석호 · 황명진 |

I. 서 론

한국 사회는 가족구조와 가족규모에 있어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핵가족에서 1인 가구와 분거가족과 같은 비전형적인 가구로 전형(protocol)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규모의 감소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찰된 현상이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지난 1980년 조사에서는 가구당 평균가구원수가 4.5명이었던 것이 지난 2000년 조사에서는 3.1명, 그리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10년 센서스에는 2.7명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가족구조의 전형이 축소·변형되고 가구(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면서 가계를 책임지는 양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의 신화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와 같은 사회의 양적 팽창과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대가족 위주의 전형적인 가족구조는 핵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다시 최근에는 핵가족에서 분화하여 단독가구 및 1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구원의 수가 감소하고 1인 가구와 같은 비전형가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한편으로 자녀에 대한 육아와 교육, 그리고 노인부양 책임을 맡았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는 곧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족이나 계층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구구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와 함께 노인 1세대 가구(노인부부세대) 및 독거노인이 늘어가는 한편, 같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의식주를 따로 하는 분거가족과 같은 '변형'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구조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한경혜외, 2010).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족구조 변화나 가구규모의 축소와 같은 사회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와 함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면서 혼인이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커지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였다. 아울러 여성의 혼인연기 및 혼인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이성용, 2011). 한편,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허용적으로 변하면서 이혼을 인생의 실패나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정서(sentiment)에서 벗어나 이혼을 새로운 인생이나 더 나은 행복을 찾기 위한 피치 못할 과정이나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혈연부모의 자녀양육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가족가치의 변화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입양가족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가족구조와 규모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부모가구, 1인 가구, 조손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와 가족정책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두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2세대 가족에 비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과연 가족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보살핌과 정서적 만족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김혜영 외, 2008). 최근의 실증연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이 같은 비전형 가구들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가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질 악화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강욱모, 2004; 김수정, 2007; 문은영, 2011; 서성만·이미숙, 2009; 송유진, 2007; 신상영, 2010; 신은진·안건혁, 2010; 이윤진 외, 2010; 최혜지, 2006).

기존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현상과 관련이 있는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의 증가가 가구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의 상승과 함께 사회적 비용의 증대라는 직간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송유진, 2007; 최혜지, 2006). 많은 연구에서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의 불행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령, 이혼은 경제적 상태를 악화시키고 정신 건강을 비롯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이혼으로 인한 우울감,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긴장상태 등이 정신 건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는 경제적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Turner and Avison, 1989, 전신현, 2007).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혼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윤홍식, 2003, 김혜영 외, 2008), 이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로 인해 형성되는 한부모가구의 구성원들은 삶의 기회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빈곤 속에서 살게 될 위험이 크다. 가구주가 대부분 여성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장이 직장과 자녀 부양의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곤란과 함께 육아와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홍식, 2003, 김혜영 외, 2008). 한부모가구의 자녀들은 부모의 지지가 미약한 열악한 환경에 놓이기 쉽고 그들의 교육성취는 일반가구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불리한 성장환경과 낮은 교육성취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국 사회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외 정신건강, 신체건강, 삶의 기회, 물질적 조건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노인단독가구(독거노인)와 조손가구도 한부모가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택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단면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의 네 시기에 수집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진행된 가족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는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파악하고, 이들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 지역별 및 거주지 규모별 차이도 파악할 것이다. 특히 세 가지 가구형태의 증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따져봄으로써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적절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들의 증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가족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 가구형태별 지역적 차이와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가족해체와 삶의 질: 단독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가구

최근 두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해체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구형태로는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을 들 수 있다.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가 가장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들 가족이 구조적 결손(deficit)으로 인한 기능적 결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결손 가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등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 가구 구성원들은 생계, 가사, 정서적 지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강옥모 외, 2002). 특히 이러한 구조적 결손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다. 빈곤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생존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서, 빈곤은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경제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없게 한다. 또한 부적절한 영양상태와 의료혜택의 부재로 인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도 없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항상 굴욕과 열등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사회의 도덕과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김혜란 외, 2004). <표 1>은 요보호 아동의 발생현황과 그 원인을 보여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모 아동, 부모의 이혼, 부모빈곤실직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표 1〉 요보호아동의 발생현황

구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계	기아	미혼모아 등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이혼 등
201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2009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2008	9,284	202	2,349	151	706	891	1,036	732	274	2,943

자료: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결국, 가족해체는 개별 가구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동거형태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지지 수준이 다를 수 있다(Dean et al., 1992).

단독가구(또는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는 독신가구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통칭하므로 독신가구와 구분되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형성요인은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하지 않는 결혼유예 현상, 사별이나 이혼에 의한 배우자와의 결별, 교육 및 취업, 경제적 이유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형성요인에 따라 집단별로 사회경제적 속성 면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인다(신은진, 안건혁, 2010). 일반적으로 단독가구와 노인독거가구를 구분하는데, 단독가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를 보통 노인독거가구로 부른다. 한부모가구는 부모 중 어느 쪽이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해 모자·부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영유아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조손가구는 부모가 ‘건강하게’ 생존해 있더라도, 이혼이나 별거로 조모나 조부가 실제로 영유아 손자녀의 육아를 전담해서 키우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난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들이 출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혼이다. 통계청의 『2010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증가한 이혼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다가 2003년을 정점으로 최근 들어 다시 감소세에 있다(그림 1). 그러나 2010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만 6천 9백 건으로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3건이며, 유배우 이혼율(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4.7건으로 부부 1천쌍 당 약 9.5쌍(4.7×2)이 이혼한 셈이다.



자료: 통계청(2011), 『2010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그림 1〉 조(粗)이혼율, 유배우 이혼율 추이

한부모가구의 주요 특성은 학력이 낮고 그로 인하여 정규직을 구하기 힘들고 소득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도 많아 생계와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소득이며 생계와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여성 한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지원 또는 자립을 위한 정보 및 기회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남성 한부모의 경우는 가장 큰 어려움이 직장과 가정의 병행과 자녀 양육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보육시설 이용, 보육시설 우선 입소 등 자녀 양육을 장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이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필요하다. 그 외에 저소득인 남성 한부모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모두 크므로 불가피하게 자신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김으로써 조손 가구가 형성되고 있다. 즉 이들에게는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것이다.

단독가구의 추세 변화 중에서 단연 관심을 끄는 것은 독거노인가구의 증가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독거노인가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가구형태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가족가치관과 노인부양 규범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노인 1인 가구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취약계층과 동질적 특성을 지닌다는 기존의 전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부양 규범이 약화된 현실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건강자원 등을 지닌 노인들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자발적으로 독립가구를 형성할 수도 있다. 앞으로 새롭게 노인층으로 진입할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할 때 독거노인가구가 다양한 자원을 소유한 수요창출 집단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독거노인가구의 특성과 거주형태 결정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송유진, 2007).

이미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전체 생애과정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대가족 문화는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자녀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가구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민아 외, 2011). 비록 과거에 비해 가치관의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노인의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태현 외, 1998).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동거형태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지지 수준이 다를 수 있다(Dean et al., 1992). 독거는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주어 혼자 사는 노인들은 우울, 고독, 스트레스 정도는 물론, 자살 충동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linenberg, 2001; 이봉재·오윤지, 2008; 최영, 2005; 한혜경·이유리, 2009). 이러한 정신적 차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하지 못하고, 음주·흡연 등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가족성원의 부재로 인해 신체건강이 악화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표2〉 아동 및 노인복지 시설 현황

연도	아동복지 ¹⁾		노인복지 ²⁾	
	시설수	평균생활인원	시설수	평균생활인원
1999	271	66	229	56
2000	269	66	250	56
2001	274	69	288	58
2002	274	68	299	60
2003	279	67	351	57
2004	275	69	341	59
2005	282	68	825	41
2006	282	67	1 181	36
2007	282	65	1 498	33
2008	285	63	2 081	33
2009	280	63	2 992	2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주 : 1)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제외

2) 노인복지주택 제외

3) 2004년 이후 여성복지시설 제외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 또는 완충적으로 개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Cohen & Syme, 1985; Murell, Morris, and Chipley, 1992).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 친구, 친인척 그리고 지역공동체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친인척과 얼마나 접촉하고 있으며, 그 수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 역시 일련의 사회적 지지로서 기능할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해체와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지지로서 아동복지시설수와 정원을 그리고 요양시설수와 정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앞의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록 노인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온 반면, 아동복지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두 시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조손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가 동거하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보다 사별이나 별거 등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의 경우보다 조모의 경우가 현저히 높다. 즉 손자녀 양육이 주로 조모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거노인가구와 조손가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사한 삶의 환경과 제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때문에 조손가구가 만들어진다. 즉 조손가구는 주로 손자녀의 친부모가 이혼이나 재혼을 하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친부모의 가출 및 실종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면서 형성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대개 양육비 부담과 양육에 따른 노동의 증가, 그리고 자신이 양육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과 두려움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노화에 따른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나, 자신들이 손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유를 지니지 못한다. 한국의 조손가족은 가족해체적 과정에서 야기된 병리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가족해체의 대안으로 대두된 차선택이란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07). 복지의 효율성이나 형식적 합리성에 치우쳐 조손가족을 사회병리로 바라보는 것은 정책 소비자인 조손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손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며, 이들이 바라는 첫 번째 요구는 금전적 지원이다. 한편, 금전적 지원 이외에 이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손자녀의 교육서비스 확대이다. 즉 조손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활비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적 어려움과 손자녀 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조부모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손자녀의 교육 문제로 압축된다. 조손가족 손자녀는 일반 핵가족 자녀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낮고 스트레스는 더 높은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결과적으로 손자녀의 우울과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서성만 외, 2009). 조손가구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부담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이는 손자·녀 양육부담이 심리적 스트레스로써 조부모의 신체·심리·사회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최혜지, 2007).



Ⅲ. 결과 분석

1. 가구구조의 변화: 1995-2010년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모습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이 출현하고 있다. <표 3>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구형태별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나타난 가구형태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가파른 감소 추세이다. 가령, 자녀 없이 사는 부부들의 비율은 1995년 11.25%이던 것이 2010년에는 17.79%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젊은 부부들이 높은 물가와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1995년 과반을 넘어 56.51%이던 것이 2010년에는 37.59%로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2005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관의 약화와 노인세대의 경제력 상승으로 인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가구형태의 변화 추이: 1995-2010년

	1995	2000	2005	2010
1인 가구	12.74	15.89	20.77	25.42
한부모가구	7.55	8.14	8.75	8.72
조손가구	0.28	0.35	0.44	0.79
1세대(부부)	11.25	13.08	16.34	17.79
2세대(부부-자녀)	49.83	47.84	40.45	33.79
3세대(부모-부부-자녀) 이상	6.68	5.77	4.52	3.80
기타	11.66	8.93	8.72	9.67
합계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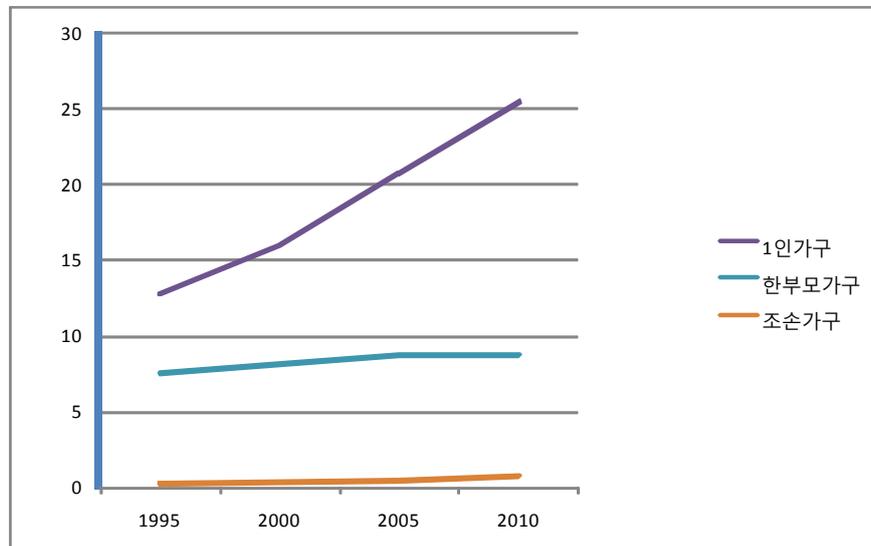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둘째,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1995년 12.74%에서 2010년 25.42%로 약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결혼을 늦추는 현상이 심화되고 노년 세대에서는 독거노인가구가 많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더하여 초혼연령 상승으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증가한 것도 1인 가구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95년에 7.55%이던 것이 2010년에는 8.72%로 높아졌다. 물론 2005년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조손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는 0.28%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0년에는 0.79%까지 상승하였다. 노인이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조손가구의 절대적인 비율은 높지 않지만, 그 증가세는 무척 가파른 편이다. 1995년에 비해 2010년의 조손가구 비율은 약 세배 높아졌다. 이러한 조손가구의 증가는 최근 한국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가족구조의 변화 양상 중 하나인데, 이 또한 이혼과 재혼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가족부가 200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손가족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의 이혼 및 재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할 경우 자녀 양육이 부담스럽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더욱이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를 시골의 노부모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촌의 조손가구가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가구의 변화 추이

〈그림 2〉는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 변화추세를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가구형태 모두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 증가가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아마도 전통적 규범과 가족제도의 해체나 약화를 의미하고 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가족의 재구조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들이 증가하는 원인을 자료를 통해 따져보고 앞으로의 변화 추세를 예측해 봄으로써 적절한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가진 문제점들과 복지적 측면에서의 수요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가족복지 정책의 과제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의 증가가 지역별이나 거주지 규모별로, 그리고 소득 및 지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지역특성별 차별적인 가족복지 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의할 것이다.



2.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분포의 지역특성별 차이

1) 시도별 분포

〈표 4〉는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 분포를 16개 시도별로 보여준다. 먼저 1인 가구를 살펴보자. 1인 가구는 젊은 연령층에서의 미혼율 증가, 노년층에서의 독거노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독신자 가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어느 정도 사실임을 보여준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도시의 이혼자 및 독신자의 증가보다는 농촌에서의 독거노인가구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즉 서울(24.49%), 부산(23.41%), 대구(22.86%), 인천(22.02%), 광주(15.68%), 대전(24.94%), 울산(21.10%) 등 대도시보다 전남(32.39%), 경북(31.13%), 전북(29.67%) 등 지방에서의 1인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다.

〈표 4〉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 가구의 시도별 분포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총 가구 수
서울	24.49	10.23	0.59	64222
부산	23.41	11.29	0.75	24730
대구	22.86	10.64	0.75	15665
인천	22.02	10.40	0.78	18294
광주	15.68	7.08	1.16	15139
대전	24.94	10.41	0.64	10409
울산	21.10	8.76	0.56	6953
경기	20.81	9.05	0.62	67521
강원	28.50	7.33	1.16	15139
충북	27.51	7.51	0.87	13841
충남	28.08	6.27	0.85	17804
전북	29.67	6.94	1.11	18096
전남	32.39	5.71	1.16	20163
경북	31.13	6.13	0.97	25669
경남	28.54	7.07	0.91	25551
제주	25.68	9.25	1.45	4074

자료: 통계청.201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이는 한국의 가족 내 세대관계가 크게 변했음을 의미한다. 젊은 층은 더 이상 노부모와의 동거를 선호하지 않으며, 노인들 또한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독립주거를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독립주거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상당수의 노인들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자녀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식들과 가까이 살면서 잦은 왕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구의 시도별 분포는 1인 가구의 그것과 비교해 정반대의 경향이 존재한다. 즉 서울(10.23%), 부산(11.29%), 대구(10.64%), 인천(10.40%), 대전(10.41%) 등 젊은 세대의 미혼출산과 이혼이 많은 대도시에서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가족사회학자들은 이혼에 대한 시각이 불행한 결혼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선택으로 바뀌었음을



지적이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혼이 당사자들에게는 행복을 위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도 자명해 보인다. 이혼가정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사회심리적 적응에 문제를 보이며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도 뒤처지는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손가구의 시도별 분포는 1인 가구의 경우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제주(1.45%), 전남(1.16%), 강원(1.16%), 광주(1.16%), 전북(1.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손가구의 형성은 자녀세대의 가족해체로 인해 그 부모세대가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게 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남, 광주, 전북 등 호남 지역의 조손가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 도농별 분포

〈표 5〉는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 분포를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으로 보여준다. 위의 시도별 특성에서 드러난 것처럼, 1인 가구의 비율은 농촌(30.31%)에서 도시(23.51%)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한부모가구는 도시(10.04%)에서 농촌(5.35%)보다 높다. 그리고 조손 가구는 농촌(1.11%)에서 도시(0.67%)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 가구의 도농별 분포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 가구	총 가구 수
농촌(읍면)	30.31	5.35	1.11	100577
도시(동)	23.51	10.04	0.67	257273

자료: 통계청.201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3. 단독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전체 인구의 특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세 가지 형태의 가구들의 특성을 기술함에 있어서 전체 인구와의 비교를 통해 각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별로 각 가구형태의 상대적인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6〉은 전체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전체 인구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성(51.5%)이 남성(48.5%)보다 약간 많다. 19세 이하(22.3%)가 가장 많으며, 40대(16.9%), 30대(15.6%), 50대(14.3)의 순이다. 고 연령층인 60대, 70대, 80대 이상(19.3%)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가구점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62.1%)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18.4%), 월세(14.6%)의 순이다. 전 인구의 43.3%가 최소 1개의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 중 친목단체(41.2%), 종교단체(24.1%), 문화단체(12.6%)에 대한 참여가 가장 높다.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꾸린 사람은 0.5%로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



량(28.6%)이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녔으며,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졸업한 경우(31.3%)도 많은 편이다. 통근 또는 통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39.0%)은 많은 편이며, 통근/통학 수단은 승용차(32.7%)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걸어서(25.4%), 시내버스(19.7%) 전철(8.9%), 통근버스(4.9%)의 순이다.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미만(52.4%), 30분 이상 한 시간 미만(28.3%), 한 시간 이상(19.3%)의 순이다.

〈표 6〉 2010년 센서스 표본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수	%			수	%
성별	남성	453,445	48.5	국적	대한민국	929,910	99.5
	여성	481,148	51.5		외국	4,683	0.5
	합계	934,593	100.0		합계	934,593	100.0
연령	19세미만	208,393	22.3	교육수준	안받았음	101,667	10.9
	20-29세	109,618	11.7		초등학교	161,061	17.2
	30-39세	145,455	15.6		중학교	110,977	11.9
	40-49세	158,330	16.9		고등학교	267,335	28.6
	50-59세	133,771	14.3		전문대학	101,680	10.9
	60-69세	90,202	9.7		대학교	162,112	17.3
	70-79세	65,596	7.0		석사과정	23,730	2.5
	80세이상	23,228	2.5		박사과정	6,031	0.6
	합계	934,593	100.0		합계	934,593	100.0
점유형태	자기집	580,109	62.1	통근/통학 교통수단 *복수	통근/통학유	364,981	39.0
	전세	172,068	18.4		통근/통학무	569,612	61.0
	월세	136,394	14.6		합계	934,593	100.0
	사글세	8,677	0.9		걸어서	153,984	25.4
	무상	37,345	4.0		승용차	198,190	32.7
	합계	934,593	100.0		시내버스	119,267	19.7
사회활동 *복수	활동함	404,676	43.3	통근버스	29,666	4.9	
	활동안함	529,917	56.7	고속버스	5,000	0.8	
	합계	934,593	100.0	전철	53,987	8.9	
	사회단체	21,998	6.6	기차	1,253	0.2	
	경제단체	15,760	4.8	택시	4,624	0.8	
	문화단체	41,888	12.6	자전거	11,187	1.8	
	정치단체	2,399	0.7	기타	28,162	4.7	
	종교단체	79,709	24.1	합계	605,320	100.0	
	지역단체	15,786	4.8	통근/통학 소요시간	30분미만	191,180	52.4
	친목단체	136,492	41.2		30~59분	103,314	28.3
	교육단체	15,706	4.7		60~89분	46,894	12.8
	기타	1,662	0.5		90분이상	23,593	6.5
	합계	331,400	100.0		합계	364,981	10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통학 특성을 통학유무 통학수단, 소요 시간에 따라 정리해보면, 중학생(74.2%)과 고등학생(71.8%)이 초등학생(9.7%)과 비교해 통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수단은 초등학생(80.3%)과 중학생(63.2%)은 대부분 걸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반해, 고등학생은 시내버스(41.1%)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걸어서(32.4%)와 통근버스(10.8%)의 순이다. 통학소요시간은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각각 34.8%, 12.7%, 4.6% 였다(표 7).

〈표 7〉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통학 특성

(단위: %,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	%	수	%	수	%
통학수단	통학유	6,158	9.7	28,023	74.2	25,690	71.8
	통학무	56,840	90.3	9,742	25.8	10,082	28.2
	합계	62,998	100.0	37,765	100.0	35,772	100.0
	걸어서	7,122	80.3	24,138	63.0	12,080	32.4
	승용차	557	6.3	2,756	7.2	3,239	8.7
	시내버스	443	5.0	7,701	20.1	15,345	41.1
	통근버스	525	5.9	1,864	4.9	4,018	10.8
	고속버스	9	0.1	74	0.2	218	0.6
	전철	37	0.4	298	0.8	1,490	4.0
	기차	1	0.0	8	0.0	27	0.1
	택시	10	0.1	96	0.3	170	0.5
	자전거	138	1.6	1,296	3.4	660	1.8
	기타	24	0.3	92	0.2	91	0.2
	합계	8,866	100.0	38,323	100.0	37,338	100.0
소요시간	30분미만	5,868	95.2	24,481	87.3	16,752	65.2
	30-59분	255	4.1	3,302	11.7	7,396	28.7
	60-89분	22	0.3	195	0.7	1,256	4.9
	90분이상	13	0.2	45	0.3	286	1.2
	합계	6,158	100.0	28,023	100.0	25,690	100.0

자료: 통계청.201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1) 단독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특성

〈표 8〉은 단독가구의 특성을 보여준다. 단독가구 가구원의 56.8%가 여성이고 43.2%는 남성으로 여성이 약간 많으며, 연령은 전세대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가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70대(17.5%)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단독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40.9%)가 가장 많고 월세(33.2%)와 전세(17.0%)가 그 뒤를 잇는다.



〈표 8〉 단독가구의 특성

(단위: %, 명)

		수	%			수	%	
성별	남성	39,314	43.2	국적	대한민국	90,815	99.8	
	여성	51,650	56.8		외국	149	0.1	
	합계	90,964	100.0		합계	90,964	100.0	
연령	19세미만	911	1.0	교육수준	안받았음	15,162	16.6	
	20-29세	14,185	15.6		초등학교	16,567	18.2	
	30-39세	14,669	16.1		중학교	8,407	9.2	
	40-49세	12,557	13.8		고등학교	21,310	23.4	
	50-59세	12,729	14.0		전문대학	8,998	9.9	
	60-69세	12,978	14.2		대학교	17,235	18.9	
	70-79세	15,934	17.5		석사과정	2,608	2.8	
	80세이상	7,001	7.7		박사과정	677	0.7	
	합계	90,964	100.0		합계	90,964	100.0	
점유형태	자기집	37,219	40.9	통근/통학 교통수단 *복수	통근/통학유	27,897	30.7	
	전세	15,450	17.0		통근/통학무	63,067	69.3	
	월세	30,185	33.2		합계	90,964	100.0	
	사글세	2,175	1.4		걸어서	19,609	33.7	
	무상	5,935	6.5		승용차	16,129	27.7	
	합계	90,964	100.0		시내버스	9,969	17.1	
사회활동 *복수	활동함	23,398	25.7	통근/통학 소요시간	통근버스	2,715	4.7	
	활동안함	67,566	74.3		고속버스	336	0.6	
	합계	90,964	100.0		전철	4,944	8.5	
	사회단체	1,934	6.7		기차	62	0.1	
	경제단체	1,539	5.3		택시	746	1.3	
	문화단체	4,351	15.0		자전거	1,201	2.0	
	정치단체	216	0.7		기타	2,389	4.1	
	종교단체	7,743	26.8		합계	58,100	100.0	
	지역단체	1,130	3.9		통근/통학 소요시간	30분미만	16,174	58.0
	친목단체	10,698	37.0			30~59분	7,302	26.1
	교육단체	1,074	3.7			60~89분	3,125	11.2
	기타	215	0.7			90분이상	1,296	4.7
	합계	28,900	100.0			합계	27,897	10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단독가구 가구원의 사회활동 수준을 분석한 결과, 25.7%만이 최소 하나 이상의 단체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해 낮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는 친목단체(37.0%), 종교단체(26.8%), 문화단체(15.0%)의 순이고 가장 적게 참여하는 단체는 정치단체(0.7%), 교육단체(3.7%), 지역단체(3.9%)의 순이다. 단독가구 중 다문화가정은 0.1%로 전체 인구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



교 중퇴 및 졸업(23.4%)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대학교 중퇴 및 졸업(18.9%)도 높은 편이다. 통근/통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걸어서 다니는 경우(33.9%)가 가장 많고 승용차와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 27.7%와 17.1%이다.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30분 미만인 경우(58.0%)가 가장 많았다.

〈표 9〉 독거노인가구의 특성

(단위: %, 명)

		수	%			수	%	
성별	남성	5,594	18.7	국적	대한민국	29,890	99.9	
	여성	24,299	81.3		외국	3	0.0	
	합계	29,893	100.0		합계	29,893	100.0	
연령	65-69세	6,958	23.3	교육수준	안받았음	13,935	46.6	
	70-74세	8,250	27.6		초등학교	10,687	35.7	
	75-79세	7,684	25.7		중학교	2,287	7.6	
	80-84세	4,751	15.9		고등학교	1,964	6.6	
	85-89세	1,845	6.1		전문대학	282	0.9	
	90-94세	357	1.2		대학교	618	2.0	
	95-99세	45	0.1		석사과정	75	0.3	
	100세이상	3	0.0		박사과정	45	0.2	
	합계	29,893	100.0		합계	29,893	100.0	
점유형태	자기집	21,825	73.0	통근/통학 교통수단 *복수	통근/통학유	2,949	9.9	
	전세	2,980	10.0		통근/통학무	26,944	90.1	
	월세	3,247	10.9		합계	29,893	100.0	
	사글세	407	1.4		걸어서	5,122	66.8	
	무상	1,434	4.8		승용차	662	8.6	
	합계	29,893	100.0		시내버스	643	8.4	
사회활동 *복수	활동함	5,923	19.8	통근/통학 소요시간	통근버스	147	1.9	
	활동안함	23,970	80.2		고속버스	23	0.3	
	합계	29,893	100.0		전철	188	2.4	
	사회단체	270	4.0		기차	2	0.0	
	경제단체	24	0.3		택시	24	0.3	
	문화단체	495	7.3		자전거	287	3.7	
	정치단체	23	0.3		기타	565	7.4	
	종교단체	3,203	47.1		합계	7,663	100.0	
	지역단체	469	6.9		통근/통학 소요시간	30분미만	2,248	76.2
	친목단체	2,179	32.0			30~59분	508	17.2
	교육단체	45	0.6			60~89분	122	4.1
	기타	90	1.3			90분이상	71	2.4
	합계	6,798	100.0			합계	2,949	10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표 9〉는 단독가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가구의 특성을 보여준다. 독거노인의 81.3%가 여성이고 18.7%는 남성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독거노인은 65세부터 80세 초반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85세 이상인 경우는 7.5%이다. 독거노인들은 주로 자기가 소유한 집(73.0%)에서 살고 있으며, 전세와 월세인 경우가 각각 10.0%와 10.9%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활동 참여는 다른 가구형태의 구성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으로 하나 이상의 단체에 가입한 경우가 19.8%이다. 참여하는 독거노인들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는 종교단체(47.1.0%)와 친목단체(32.0%)이다. 특히 종교단체 참여율이 전체 인구집단이나 다른 가구형태의 구성원들에 비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거노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3명 뿐이다. 독거노인의 교육수준은 무학(46.6%)과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35.7%)로 대부분의 학력이 낮은 편이다. 통근/통학을 하는 독거노인은 9.9%밖에 되지 않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걸어서 다닌다(66.8%).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30분 미만인 경우(76.2%)가 가장 많았다.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통해 단독가구 전체와 독거노인가구를 비교해 보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그보다 낮은 연령 집단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부모가구의 특성

〈표 10〉은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보여준다. 한부모의 71%가 여성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은 30대가 15.5%, 40대가 35.6%, 50대가 28.1%로 나타나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로 인해 한부모가구가 주로 형성되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부모가구 부모의 사회활동 수준을 분석한 결과, 29.3%만이 최소 하나 이상의 단체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해 낮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는 친목단체(37.1%), 종교단체(27.6%), 문화단체(11.4%)의 순이고 가장 적게 참여하는 단체는 정치단체(0.8%), 지역단체(4.5%), 경제단체(5.2%)의 순이다. 한부모가구 중 다문화가정은 0.3%로 전체 인구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41.9%)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다. 통근/통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통근을 하는 사람의 32.9%가 승용차를 이용하며 24.0%는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30분 미만(48.3%)인 경우가 가장 많다.



〈표 10〉 한부모가구 부모의 특성

(단위: %, 명)

		수	%			수	%	
성별	남성	9,046	29.0	국적	대한민국	31,125	99.7	
	여성	22,176	71.0		외국	97	0.3	
	합계	31,222	100.0		합계	31,222	100.0	
연령	19세미만	15	0.0	교육수준	안받았음	1,447	4.6	
	20-29세	1,056	3.4		초등학교	4,479	14.3	
	30-39세	4,852	15.5		중학교	4,118	13.2	
	40-49세	11,116	35.6		고등학교	13,099	41.9	
	50-59세	8,766	28.1		전문대학	3,009	9.6	
	60-69세	3,588	11.5		대학교	4,233	13.5	
	70-79세	1,516	4.8		석사과정	677	2.2	
	80세이상	313	1.0		박사과정	160	0.5	
	합계	31,222	100.0		합계	31,222	100.0	
점유형태	자기집	14,916	47.8	통근/통학 교통수단 *복수	통근/통학유	12,468	39.9	
	전세	6,687	21.4		통근/통학무	18,754	60.1	
	월세	7,941	25.4		합계	31,222	100.0	
	사글세	429	1.4		걸어서	4,912	22.8	
	무상	1,249	4.0		승용차	7,105	32.9	
	합계	31,222	100.0		시내버스	5,173	24.0	
사회활동 *복수	활동함	9,156	29.3		통근버스	1,005	4.6	
	활동안함	22,066	70.7		고속버스	145	0.6	
	합계	31,222	100.0		전철	1,891	8.7	
	사회단체	865	7.4		기차	28	0.1	
	경제단체	609	5.2		택시	246	1.1	
	문화단체	1,326	11.4		자전거	364	1.7	
	정치단체	89	0.8		기타	697	3.2	
	종교단체	3,204	27.6		합계	21,566	100.0	
	지역단체	524	4.5		통근/통학 소요시간	30분미만	6,028	48.3
	친목단체	4,317	37.1			30~59분	4,098	32.9
	교육단체	632	5.4			60~89분	1,670	13.4
	기타	54	0.4			90분이상	672	5.4
	합계	11,620	100.0	합계		12,468		

자료: 통계청.201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3) 조손가구의 특성

〈표 11〉은 조손가구의 특성을 보여준다. 조모와 조부 그리고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의 56.0%이고, 조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경우는 39.0%이며, 조부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5%이다. 손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63.9%이며, 2명인 경우가 29.8%였다. 조손가구는 그들의 생활비를 일을 해서 얻는 경우가 23.0%이며, 그 외의 생활비 원천은 공공보조(21.8%), 비동거 자녀(19.5%), 기관연금(10.5%) 등 이었다. 조손가구의 대부분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70.4%), 전세와 월세인 경우는 12.5%와 10.6%였다.



〈표 11〉 조손가구의 특성

(단위: %, 명)

		수	%			수	%	
조부모 구성	조모	663	39.0	점유형태	자기집	1,197	70.4	
	조부	85	5.0		전세	180	10.6	
	조부모	952	56.0		월세	213	12.5	
	합계	1,700	100.0		사글세	33	1.9	
손자녀수	1명	1,087	63.9		무상	77	4.5	
	2명	507	29.8		합계	1,700	100.0	
	3명	94	5.5		중학생 통학 교통수단	통학유	275	45.3
	4명이상	12	0.8			통학무	332	54.7
	합계	1,700	100.0			합계	607	100.0
생활비 원천	수입없음	14	0.8			걸어서	300	49.1
	수입있음	1,686	99.2	승용차		20	3.3	
	합계	1,700	100.0	시내버스		218	35.7	
	일,직업	517	23.0	통학버스		42	6.9	
	예금,적금	143	6.4	고속버스		1	0.1	
	기관연금	235	10.5	전철		1	0.1	
	개인연금	51	2.2	기차		1	0.1	
	부동산	78	3.5	택시	2	0.3		
	주식,펀드	1	0.0	자전거	25	4.1		
	동거자녀	1	0.0	기타	1	0.2		
	비동거자녀	662	19.5	합계	611	100.0		
	친/인척	33	1.4	중학생 통학 소요시간	30분미만	227	82.5	
	공공보조	489	21.8		60분미만	44	16.0	
	사적보조	19	0.8		90분미만	3	1.1	
	기타	13	0.5		90분이상	1	0.4	
합계	2,242	100.0	합계		275	100.0		
초등학생 통학 교통수단	통학유	56	6.4	고등학생 통학 교통수단	통학유	298	53.8	
	통학무	813	93.6		통학무	256	46.2	
	합계	869	100.0		합계	554	100.0	
	걸어서	105	66.0		걸어서	161	27.8	
	승용차	6	3.8		승용차	9	1.5	
	시내버스	12	7.5		시내버스	298	51.5	
	통학버스	30	18.9		통학버스	57	9.9	
	고속버스	0	0.0		고속버스	7	1.2	
	전철	0	0.0		전철	23	4.0	
	기차	0	0.0		기차	2	0.3	
택시	0	0.0	택시	1	0.2			
자전거	6	3.8	자전거	17	2.9			
기타	0	0.0	기타	3	0.5			
합계	159	100.0	합계	578	100.0			
초등학생 통학 소요시간	30분미만	50	89.29	고등학생 통학 소요시간	30분미만	148	49.7	
	60분미만	6	10.71		60분미만	114	38.3	
	90분미만	0	0.0		90분미만	29	9.7	
	90분이상	0	0.0		90분이상	7	2.3	
	합계	56	100.0		합계	298	10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원시자료



Ⅵ.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본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의 네 시기에 수집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두드러진 가족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는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 가구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파악하고, 이들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구형태별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1세대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가파른 감소 추세이다. 가령, 자녀 없이 사는 부부들의 비율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약 6%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반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약 20%포인트 감소하였다. 둘째, 단독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과 2010년 사이에 약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셋째,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1995년, 7.55%→2010년, 8.72%). 넷째, 조손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전체가구에 대한 비율이 절대적으로는 높지 않지만, 그 증가세는 무척 가파른 편이다(15년간 세배 증가).

1인 가구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도시의 이혼자 및 독신자의 증가보다는 농촌에서의 독거노인가구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지방에서의 단독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혼자 사는 노인이 농촌지역에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단독가구의 그것과 비교해 정반대의 경향이 존재하였다. 조손가구의 시도별 분포는 단독가구의 경우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제주(1.45%), 전남(1.16%), 강원(1.16%), 광주(1.16%), 전북(1.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의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단독가구는 농촌이 도시보다 많았으며, 한부모가구 구성 비율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았다. 그리고 조손 가구는 농촌이 도시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71%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생계를 위해 여성이 취업과 경제활동이 용이한 도시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환경이 낮고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아비 없는 자식을 키운다는 사회적 비난“이 적은) 정서로 인해 도시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우선 한부모가정에 대한 취업이나 교육비지원 정책도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출산친화(혹은 출산장려)정책이 출산률의 증가라는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는데 만족하지 말고 우리사회 전반의 양성평등과 함께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지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구의 사회활동 수준이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해 낮은 참여율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비난으로 인해 자칫 위축되고 고립될 수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가 함께 지역사회 문화·종교·체육·친목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의 수가 약간 많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가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70대(17.5%) 경우 유독 우세하다. 노인단독가구(독거노인)의 경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월세나 전세보다 높다하더라도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70%이상이 월50만원 미만으로 생활, 노인실태조사, 2010)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원(노령기초생활비)보다는 실제 가용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독거노인은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사회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참여는 교육수준이나 건강, 그리고 이동능력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졸업자인 독거노인의 경우 이동수단으로 도보(걸어서 다니는 경우:33.9%)가 가장 많았고 이동시간은 30분 미만인 경우(58.0%)이었다.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시설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와 함께 이동수단이 지원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자들은 위한 이동벤(택시)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 이 같은 이동수단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손가구의 경우, 조부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보다는 조부모나 조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95%였다. 독거노인과 마찬가지로 조손가구의 대부분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70.4%), 문제는 손자녀의 양육을 맡은 노인들이 생활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자녀양육에 전념하기 보다는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원 외에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19.5%)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조손가구 조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을 역기능적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의 변화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면서 가치중립적인 접근을 견지하려 하였으나,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혼이나 그에 따른 조손가구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지 사회병리나 사회문제적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후속연구는 본 연구의 이 같은 한계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육모(2004), 한부모 가족과 빈곤: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한국사회복지학 56(1): 127-153.
- 강육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수정(2007), 사회권, 배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7(1): 93-133.
- 김태현 외(1998). _____
- 김혜란, 박은미, 오정수, 정익중, 허남순, 홍순혜(2004), 가족형태에 따른 빈곤아동의 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동광 100: 3-44.
- 김혜영, 변화순, 윤홍식(2008). 여성의이혼과빈곤: 직업과소득의변화를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37-63.
- 문은영(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135-174
- 보건복지부.(2010). 노인실태조사.
- 서성만, 이미숙(2009), 조손가족 손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송유진(2007),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의 특성,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147-160
- 신상영(2010),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4): 81-95.
- 신은진, 안건혁(2010), 소득별 1인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45(4): 69-79
- 윤홍식(2003)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51-63.
- 안상훈·정해식. 2010. 복지지위와 '사회의 질(SQ)', 한국사회정책 17(3): 93-121
- 여성가족부(2007). 조손가족실태조사.
- 이민아, 김지범, 강정한(2011), “동거형태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보건과 사회과학 29: 41-67.
- 이봉재, 오윤진(2008),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10): 49-57.
- 이성용(2011). 초혼연령의 변화, 독신자, 이혼의 증가 등 혼인상태의 변화. 인구주택총조사심층분석연구. 통계청
-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황은숙(2010),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정책방안 연구: 맞벌이·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0-03
- 전신현(2007). 이혼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차이. 보건과 사회과학 20: 5-27.
- 최영(2005),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 123-149.



최혜지(2006), 저소득층 조손가구의 조부모-손자,녀 관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3): 641-655

한혜경, 이유리(2009),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수준과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29(3): 805-822.

Cohen, S. & Syme, S.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3-22.

Dean, A., B. Kolody, P. Wood and M. George, The influence of living alone on depression in elderly person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4 (1992) (1), pp. 3-18 .

Lin, Nan, Xiaolan Ye, and Walter M. Ensel. 1999.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 Structural Approac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344- 359.

Helgeson, V. S. (1993). Two important distinctions in social support: Kind of support and perceived versus receive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825-845.

Klinenberg, E. (2001) Dying Alone: The Social Production of Urban Isolation, Ethnography, 2: 501-532.

Murrell, S. A., Morris, F. H., & Chipley, Q. T. (1992). Functional versus structural social support, desirable events, and positive affect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7: 562-570.

Turner, R. J. & W. R. Avison. (1989). Gender and Depression: Assessing Exposure and Vulnerability to Life Events in a Chronically Strained Popul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pp.443-455.

Walker, A. C. and L. Van der Maesen. 2004.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13~31. in W. Glatzer, V. Below and M. Stoffregen (Eds.). Challenges for Quality of Life in the Comtemporary World.



제6주제 : 다문화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 조 성 남 |

I. 서 론

우리 사회는 단일 언어와 고유한 문화, 그리고 단일 혈통을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이민자와 결혼이주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인해 인구구성 및 언어와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이 이미 2007년에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09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7개국 출신사람들이 우리 국민으로 함께 살고 있고 이중 우리와 혼인으로 인연을 맺은 대한민국 사돈국가만도 127개국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이후 급증한 다문화 가정과 그 2세대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을 경험케 해 줄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서 이제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 1단계 막바지 내지는 2단계 초입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이 전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가시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다문화 가족이 형성되고 출신국별 이주민 집단 거주지가 출현하는 과정이다.

인구 총조사에서 조사된 외국인의 63.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 31.1%, 서울 27.6%, 경남 6.9% 순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계(한국계 및 대만 포함) 국적의 외국인이 5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69.2%), 중국 (53.6%)은 여성비율이, 인도네시아(88.8%), 우즈베키스탄(76.6%)은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전체 232개 자치구 중 22개에 달하며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이 5% 이상인 곳도 11개에 이른다. 외국인 증가세는 인위적인 억제책이 없다면 가속화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유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는 이민자 1159만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때가 되면 이민자와 그 자녀 숫자가 전체 인구 가운데 2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교육자료집 2009년: 매일경제 칼럼. 2009년 1월 1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고, 학교와 직장에 언어와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센서스 조사표나 정부문서에 기표해야할 인구 집단의 선택유형이 늘어남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 특히 신경을 쓰면서 새로이 추가된 대표적인 항목이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문화사회 문턱을 넘어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고, 순혈주의에서 벗어난 다문화 사회가 국가와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지에 대한 관심으로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의 이름하에 법률과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인 다문화정책의 틀을 짜고 세세한 부분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자료가 기본이 된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구나 가족에 대한 통계는 산발적인데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진행하는 본 연구의 <제6주제: 다문화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환경 분석>에서는 2010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적과 입국연월 문항을 이용하여 다문화가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부분의 조사항목 중에서 사용 방수, 주거시설형태, 주택유형, 세대유형 등의 내용과 거주기간 및 거주지역과 같은 항목은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구의 주거환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타 해당부처 및 지자체는 다문화가정의 유형별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 놓인 다문화인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Ⅱ. 다문화가구의 가구유형과 특성

1. 시도별 다문화가구 분포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다문화가구는 386,977가구로 다문화가구원은 939,379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의 심층분석에 활용된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의 다문화 가구 수는 13,903가구이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다문화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 20.4% (2837가구)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은 20.2%(2807가구), 경남 7.3%(1015가구), 그리고 전남(964 가구)과 전북(957가구)이 각각 6.9%이고, 충남 5.9%(822가구)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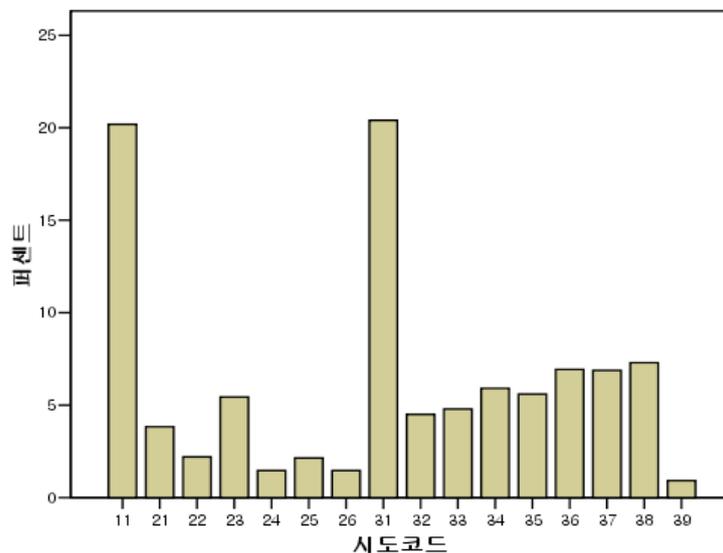


〈표 1〉 시도별 다문화가구 분포

코드	행정구역명	빈도	퍼센트(%)
11	서울특별시	2807	20.2
21	부산광역시	533	3.8
22	대구광역시	307	2.2
23	인천광역시	757	5.4
24	광주광역시	204	1.5
25	대전광역시	298	2.1
26	울산광역시	204	1.5
31	경기도	2837	20.4
32	강원도	626	4.5
33	충청북도	666	4.8
34	충청남도	822	5.9
35	전라북도	778	5.6
36	전라남도	964	6.9
37	경상북도	957	6.9
38	경상남도	1015	7.3
39	제주특별자치도	128	0.9
	합계	13903	10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시도코드



〈그림 1〉 시도별 다문화가구 분포

시도별로 다문화가구의 출생국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서울에는 조선족중국인의 32.2%, 중국 출신의 29.2%가 거주하고 있고 또한 중국대만도 36.4%의 비율이 서울에 거주하나 비율적으로는 주로 미국(52.9%), 캐나다(36.4%), 독일(25%), 영국(50%), 프랑스(62.5%) 등 유럽과 북미 출신국가의 배경과 일본 출생국적(24.7%) 다문화가구가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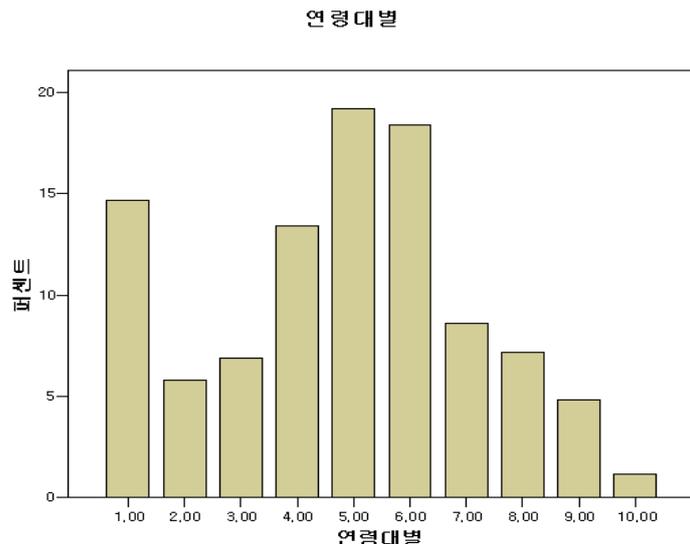


한편 다문화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조선족 중국인이 30.1%로 가장 높고, 중국인(25.2%), 베트남(13.2%), 일본인(19.5%), 필리핀(12.4%)으로 나타나고 있고, 태국(34.0%), 몽골(27.9%), 방글라데시(61.5%), 우즈베키스탄(20.5%) 러시아(30.6%) 인도네시아(18.8%) 등 주로 중국과 동남아 출신이 많아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와는 그 출신배경에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인의 경우 전체 826가구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은 5.9%(49가구)에 불과하다. 반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13.2%) 이들은 주로 전남(10.2%) 경북(13.1%), 경남(12.8%)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그 외에도 전북, 충북, 충남 등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 출신 다문화가족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30.6%로 비교적 높으나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은 12.2%로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이들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20.4%)으로 나타난다.

2. 다문화가구의 인구학적 배경: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구성

다문화가구 구성원들의 성별구성은 남성이 47.5%(6601가구)이고 여성은 52.5%(7302가구)로 여성비율이 약간 높다. 또한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평균연령은 만나이로 34.4세이고 중위나이가 36세로 나타난다. 이들의 연령구성비를 보면 30대(19.2%)와 40대(18.4%)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그 다음이 50대(8.6%)의 순이다. 또한 0-5세사이의 아동의 비율도 높아 14.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6세-10세의 어린이는 5.8%의 비율이다. 이는 다문화가구가 2000년도 이후 급격히 증대되면서 어린 자녀들의 출산 비율 또한 다문화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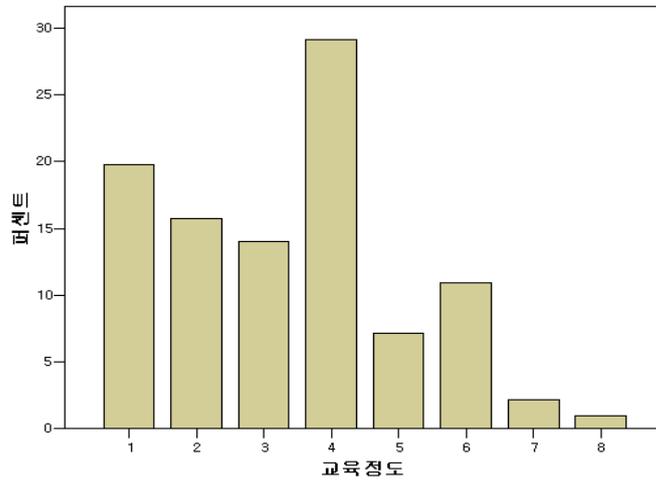
주) 1) 0-5세 2) 6-10세 3) 11-20세 4) 21-30세 5)31-40세
 6) 41-50세 7) 51-60세 8) 61-70세 9)71-80세 10)81-100세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그림 2>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연령대별 분포



한편 이들의 교육배경을 살펴보면 19.8%가 교육을 받지 않았고 15.8%는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9.1%가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대학교 10.9%를 비롯하여 대학 이상의 교육정도는 21.3%로 나타난다.

교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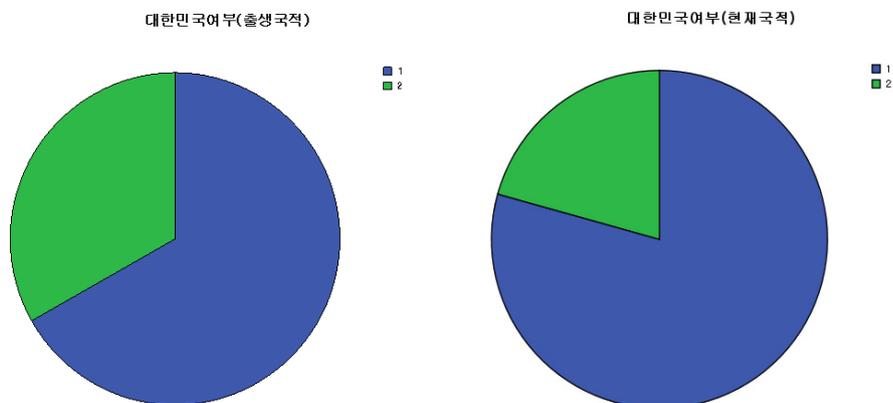
주) 1)안받았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 6)대학교7)대학원 석사과정/ 8)대학원 박사과정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그림 3>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교육정도별 분포

3. 다문화 가구 구성원의 출생국적 및 현재국적

다문화 가구 구성원의 출생국적별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66.8%이고 외국이 33.2%이다. 반면에 현재국적은 대한민국이 79.3%이고 여전히 외국국적인 경우도 20.7%이다. 이들의 출생국적과 현재국적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와 같다.

다문화가구의 출생국적별 구성비가 가장 높은 것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9.6%이고 그 다음은 중국(7.1%), 베트남(5.9%), 필리핀(2.1%)의 순이다. 그 외에 일본 1.7%와 미국 1.4%가 차지하고 있고 기타 캄보디아(0.8%), 러시아(0.4%), 우즈베키스탄(0.3%)와 몽골(0.3%)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4>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대한민국 출생국적 및 현재국적 여부



〈표 2〉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국가별 출생국적 및 현재국적

	출생국적	현재국적
조선족(중국)	1334 (9.6%)	728 (5.2%)
중국	984 (7.1%)	361 (2.6%)
베트남	826 (5.9%)	589 (4.2%)
필리핀	290 (2.1%)	141 (1.0%)
일본	231 (1.7%)	234 (1.7%)
미국	191 (1.4%)	324 (2.3%)
캄보디아	116 (0.8%)	88 (0.6%)
러시아	49 (0.4%)	26 (0.2%)
우즈베키스탄	44 (0.3%)	35 (0.3%)
몽골	43 (0.3%)	33 (0.2%)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한편 이들의 현재국적과 비교해 보면 모두 약간씩 줄어들어 한국에 거주한 이후 그 사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구의 구성원 중 출생국적이 외국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을 엿볼 수 있다. 즉 이들 다문화가구의 경우 혼인 이민자들이 많아 이들이 혼인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뀐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 출생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오히려 일본국적이거나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짐작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출생국가가 일본의 경우, 비율은 변함없이 1.7%로 같다고 하나 오히려 숫자는 231가구에서 234가구로 늘어남을 알 수 있고, 미국의 경우는 1.4%에서 (191명) 현재국적이 2.3%(324가구)로 늘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과의 혼인 이후는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향임을 엿볼 수 있다.

4. 다문화 가구 구분과 입국년도

이들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입국연도는 2000년도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2004년 이후 2008년 정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국 연도별로 보면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가구의 5.5%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도까지 입국한 다문화가구는 25.3%를 차지하게 된다. 그 이후 2004년까지 매해 1.3-2.4%씩 증가하다 2005년부터는 전체 다문화가구의 비율이 매해 3.1%~4%로 그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5년까지 전체 다문화가구의 52.1%가 입국한 것으로 누적퍼센트에 나타나는데 2007년 4.0%(550가구)와 2008년의 4.0%(552가구)를 정점으로 그 이후는 약간씩 감소되어 2009년에 2.8%, 2010년에 3.1%가 입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구의 구성을 보면 주로 <(출생)내국인+외국인> 으로 구성된 경우가 56%로 가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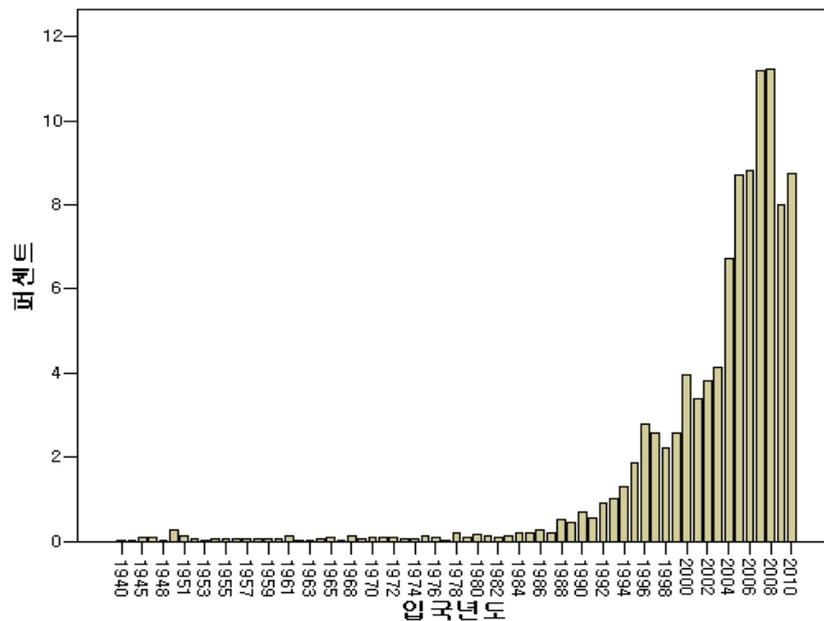
이 높다. 또한 33.7%가 <(출생)내국인+(귀화)내국인>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출생내국인+귀화 등을 통한 내국인+외국인>으로 구성된 비율이 3.3%이다. <귀화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율도 2.2%에 속하고 그 외의 비친족가구가 있다.

〈표 3〉 다문화가구 구성 구분

	빈도	퍼센트
1) 내국인	149	1.1
2)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등)	4691	33.7
22)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등)+외국인	458	3.3
23) 내국인(출생)+외국인	7788	56.0
24) 내국인(귀화등)+내국인(귀화등)	218	1.6
25) 내국인(귀화등)+외국인	302	2.2
30) 비친족가구	297	2.1
합 계	13903	1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입국년도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그림 5〉 다문화가구 입국연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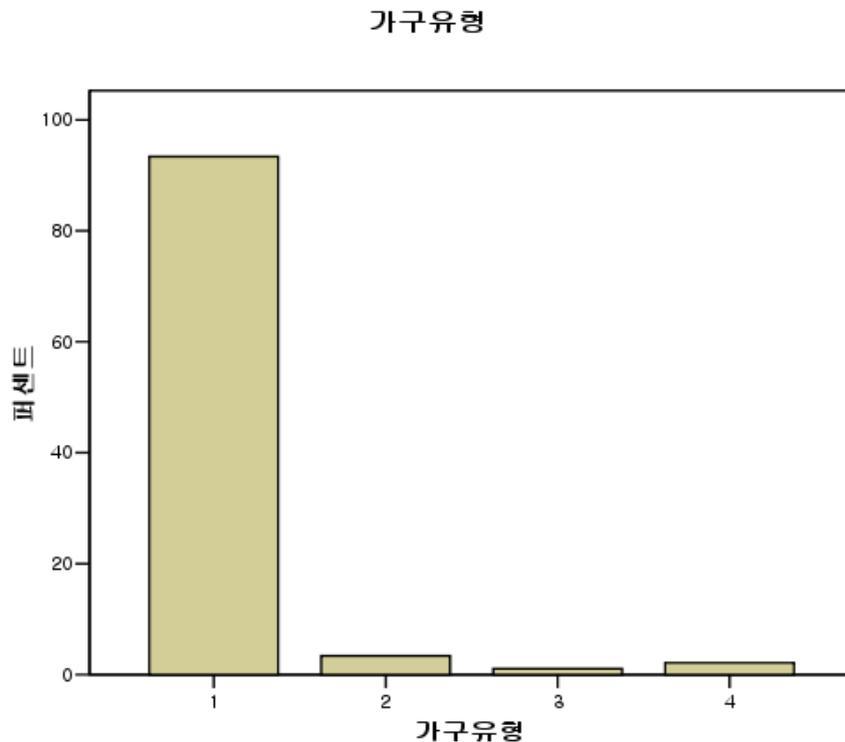
5. 다문화 가구의 가구유형과 특징

이들 다문화가구의 가구유형은 대부분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이고(93.4%),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를 포함하여 96.8%가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유형이나 전체 다문화가구의 1.1%는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다문화 가구의 가구유형

	빈도	퍼센트
1)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12984	93.4%
2)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473	3.4%
3) 1인 가구	149	1.1%
4)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297	2.1%
5)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합계	139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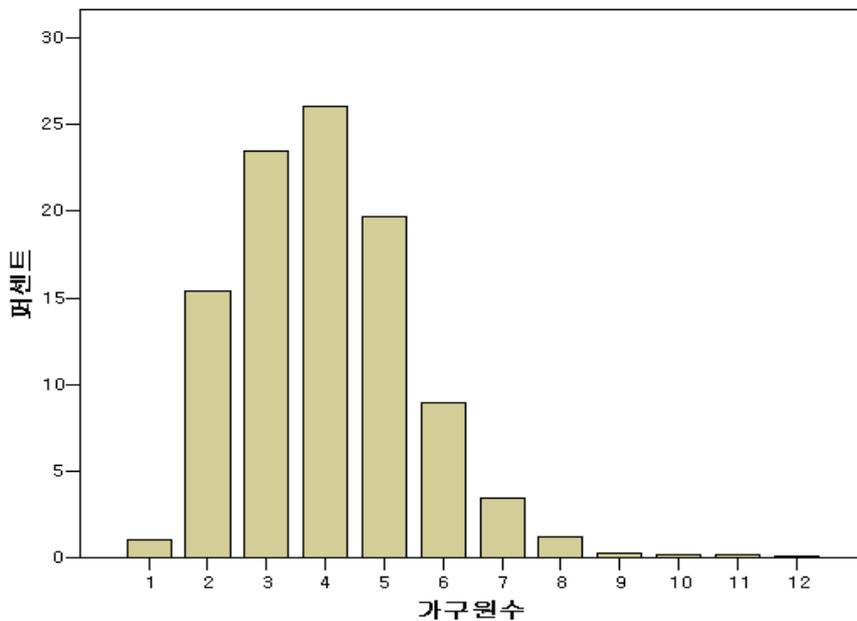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그림 6〉 다문화 가구의 가구유형



가구원수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그림 7〉 다문화 가구의 가구원 수

다문화가구의 가구원수 평균은 4명이고 최소 1명 최대 12명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박신영(2011)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1인가구와 2인 가구가 급등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평균가구원수의 변화는 획기적임을 알 수 있다. 가구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1980년 4.62인이었던 평균가구원수가 30년이 지난 2010년에는 2.69인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2010년 다문화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4명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원수의 변화추세를 보면, 1980년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비율로 주로 4인가구 → 5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 → 1인가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 체제는 1985년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이 되면 4인가구 → 3인가구 → 5인 가구가 주를 이루다가 2000년이 되면 4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 → 1인가구의 순서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2005년에도 4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나, 4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인가구 → 5인가구의 순서가 되면서 2인 가구가 3인 가구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2010년 자료에 의하면, 2인가구 → 1인가구 → 4인가구 → 3인가구 → 5인가구의 순서로 변화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박신영, 2011:1-2). 이처럼 인구 센서스에 나타난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가구원수의 감소 경향을 보여주는 추세에 비해 본 연구의 다문화 가구의 가구원 수는 여전히 4인가구(26%)의 비율이 가장 높아 4인가구(26%) → 3인가구(23.4%) → 5인가구(19.7%) → 2인가구(15.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6인가구(9.0%), 7인가구(3.4%), 8인가구(1.2%) 등의 친족가족이 함께 사는 대가족가구의 비율도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인가구의 비율은 1.1%로 다문화가구의 가구원수와 그 순서에서 일반가구와 확연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5〉 일반가구의 가구 수 및 평균 가구원 수 (1980~2010년)

(단위 : 천가구, 명)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A)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일반가구원(B)	36,843	39,773	42,783	44,028	44,712	45,737	46,651	
평균 가구원수	전국(B/A)	4.62	4.16	3.77	3.40	3.12	2.88	2.69

출처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가구주택)결과 보도자료

출처 : 박신영, 2011,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보급”, 한국인구학회 발표자료

〈표 6〉 다문화 가구의 세대유형 가구

	빈도	퍼센트
세대유형가구	13457	96.8
비혈연가구	297	2.1
1인 가구	149	1.1
합계	13903	1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6. 다문화가구의 세대유형과 가구구성형태

일반 가구의 경우 1980년 이후 2010년 사이에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친족가구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가족 구성에서는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김정석, 2011; 박신영, 2011). 특히 주로 부부인 1세대 가구의 비율이 1980년 8.3%에서 2010년 17.5%로 증가하였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비율이 크게 줄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빨리 진행됨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세대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다문화가구의 경우 29.2%가 가구주로, 그리고 23.7%가 가구주와 그 배우자로 구성되어 전체의 53%가 가구주 및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비율은 28.4%를 차지하여 다문화가구의 경우는 전체의 81.3%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라 할 것이다. 여기에 자녀의 배우자의 비율 4.1%를 추가하면 85.4%가 부부와 자녀세대로 구성된 2세대가구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도 4.4%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를 포함하여 3세대가 살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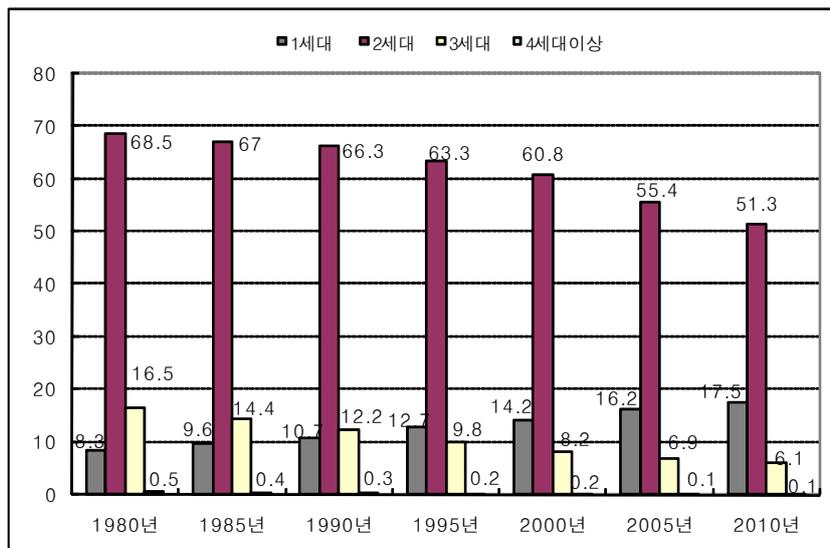


〈표 7〉 다문화 가구 구성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빈도	퍼센트
1) 가구주	4065	29.2
2) 가구주의 배우자	3301	23.7
3) 자녀	3942	28.4
4) 자녀의 배우자	564	4.1
5) 가구주의 부모	606	4.4
6) 배우자의 부모	84	0.6
7) 손자녀, 그 배우자	657	4.7
8) 증손자녀, 그 배우자	2	0
9) 조부모	6	0
10) 형제자매, 그 배우자	187	1.3
11)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52	0.4
12)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10	0.1
13) 기타 친인척	101	0.7
14) 그 외 같이사는 사람	326	2.3
합 계	13903	1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다문화가구의 세대유형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대유형가구가 96.8%이고 2.1%는 비혈연가구, 1.1%는 1인가구의 유형이다. 이 가운데서도 다문화 가구의 세대구성 유형을 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구성 비율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부와 양친(2.8%),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까지 포함한 모든 2세대가구가 50.2%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한편 부부로 구성된 세대는 12.2%이고 부부와 미혼형제와 기타 친인척으로 구성된 세대를 포함하여 1세대 가구는 17.6%로 나타난다.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와 양친 부모 중의 한분을 모시는 등 3세대 가구는 31.8%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구의 경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많음을 비추어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출처: 박신영, 2011,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보급”, 한국인구학회 발표자료

〈그림 8〉 일반가구의 세대유형 변화



이는 박신영(2011)의 일반가구의 세대유형 분석 자료에서도 그 변화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1세대와 1인 가구의 비율이 증대되는 반면에 3세대 이상 가구와 친족가구는 괄목할만하게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표 8〉 일반 가구의 세대구성 변화 (1980~2010) (단위 : 천가구,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친족가구	7,470 (93.7)	8,751 (91.4)	10,167 (89.5)	11,133 (85.9)	11,928 (83.3)	12,491 (78.6)	12,995 (74.9)
1세대	658 (8.3)	916 (9.6)	1,220 (10.7)	1,640 (12.7)	2,034 (14.2)	2,575 (16.2)	3,027 (17.5)
2세대	5,457 (68.5)	6,412 (67.0)	7,529 (66.3)	8,200 (63.3)	8,696 (60.8)	8,807 (55.4)	8,892 (51.3)
3세대	1,312 (16.5)	1,383 (14.4)	1,383 (12.2)	1,266 (9.8)	1,176 (8.2)	1,093 (6.9)	1,063 (6.1)
4세대이상	42 (0.5)	40 (0.4)	35 (0.3)	26 (0.2)	22 (0.2)	16 (0.1)	13 (0.1)
1인 가구	383 (4.8)	661 (6.9)	1,021 (9.0)	1,642 (12.7)	2,224 (15.5)	3,171 (20.0)	4,142 (23.9)
비친족가구	117 (1.5)	160 (1.7)	166 (1.5)	183 (1.4)	159 (1.1)	226 (1.4)	202 (1.2)

출처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가구주택)결과 보도자료, 2011.7

출처 : 박신영, 2011,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보급”, 한국인구학회 발표자료

〈표 9〉 다문화 가구의 세대유형

	빈도	퍼센트
11) 부부	1696	12.2
12) 부부 + 미혼형제자매	25	0.2
13) 부부 + 기타친인척	48	0.3
14) 가구주 + 미혼형제자매	19	0.1
15) 가구주 + 기타친인척	45	0.3
19) 1세대기타	607	4.4
21) 부부 + 미혼자녀	4786	34.4
22) 부 + 미혼자녀	42	0.3
23) 모 + 미혼자녀	328	2.4
24) 부부 + 양친	386	2.8
25) 부부 + 한부모	381	2.7
26) 부부 + 미혼자녀 + 부부미혼형제자매	92	0.7
27) 조부모 + 미혼손자녀	45	0.3
28) 한조부모 + 미혼손자녀	13	0.1
29) 2세대기타	915	6.6
31) 부부 + 미혼자녀 + 양친	1264	9.1
32) 부부 + 미혼자녀 + 부	243	1.7
33) 부부 + 미혼	1702	12.2
39) 3세대기타	1207	8.7
49) 4세대	59	0.4
합 계	13903	10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Ⅲ. 다문화가구의 주택환경과 주거문화

1. 다문화가구와 일반가구의 주택유형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 거처의 종류를 1995년과 2010년 2% 표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1995년에 비해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오피스텔과 기타(고시원, 기숙사 등) 거주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 현재 1인 가구가 접하는 비율이 25.3%가 되는 60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이 단독에서 아파트로 감소된 것과 준 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이 최근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박신영, 2011)

〈표 10〉 일반 가구의 거처종류의 변화와 2010년 다문화 가구의 거처종류

거처종류	일반 가구				다문화 가구
	1995	2000	2005	2010	2010년
단독주택	4,337,105(47.1)	4,069,463(37.1)	7,064,128(44.4)	6,859,694(39.6)	7588 (54.6)
아파트	3,454,508(37.5)	5,231,319(47.7)	6,628,993(41.7)	8,169,349(47.1)	4633 (33.3)
연립주택	734,172(8.0)	812,872(7.4)	526,948(3.3)	502,488(2.9)	391 (2.8)
다세대주택	336,356(3.7)	453,117(4.1)	1,168,481(7.4)	1,241,590(7.2)	932 (6.7)
비거주용건물내주택	342,788(3.7)	392,571(3.6)	281,721(1.8)	212,359(1.2)	167 ((.2)
주택이외의 거처	-	-	216,857(1.4)	353,942(2.0)	154 (1.1)
기타	(0.3)			(0.8)	40 (0.3)

일반가구 자료 출처: 박신영, 2011,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보급”, 한국인구학회 발표자료

다문화가구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그런데 본 연구의 다문화가구 자료에서는 거처의 종류로 54.6%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33.3%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거주비율이 6.7%이고 연립주택(2.8%)의 순으로 전체 거처 종류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1.2%)과 오피스텔(0.7%)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이외의 거처로는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비율도 0.2%를 차지하고,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0.2%)과 여관 등의 숙박업소(0.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구의 거처의 종류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은 일반가구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거주지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 기인하는 점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이들 단독주택에 사는 다문화가구의 32%는 일반단독주택에 거주하고, 18.3%가 다가구단독주택에, 그리고 4.3%는 영업겸용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표 11〉 다문화 가구의 단독주택 유형

	빈도	퍼센트
1) 일반단독주택	4453	32.0
2) 다가구단독주택	2539	18.3
3) 영업겸용단독주택	596	4.3
9) 기타	6315	45.4
합 계	13903	10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2. 다문화가구와 일반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박신영(2011)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일반가구의 주택환경 분석에서 점유형태의 변화를 1980년 이후 5년간 간격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가율이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의 경우도 자가율이 증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가율 증가가 높은 것은 2인 가구의 자가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1인 가구의 경우는 월세 거주가구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2인 이상 4인 이하 가구의 경우는 1995년에 비해 2010년 월세 거주가구의 비율이 오히려 약간 감소했다는 것이다(2011:9-10).

〈표 12〉 주택점유 형태: 일반가구의 변화(1980~2010년)와 2010년 다문화가구

(단위 : 천 가구, %)

구 분	일반 가 구							다문화가구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0년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3,903 (100.0)
자 가	4,672 (58.6)	5,127 (53.6)	5,667 (49.9)	6,910 (53.3)	7,753 (54.2)	8,828 (55.6)	9,390 (54.2)	7,950 (57.2)
전 세	1,904 (23.9)	2,202 (23.0)	3,157 (27.8)	3,845 (29.7)	4,040 (28.2)	3,557 (22.4)	3,766 (21.7)	2,667 (19.2)
월 세	1,231 (15.5)	1,893 (19.8)	2,173 (19.1)	1,536 (11.9)	1,803 (12.6)	2,728 (17.2)	3,490 (20.1)	2,622 (18.9)
사글세	-	-	-	339 (2.6)	310 (2.2)	284 (1.8)	230 (1.3)	0.119 (0.9)
무 상	162 (2.0)	350 (3.7)	358 (3.1)	328 (2.5)	406 (2.8)	490 (3.1)	464 (2.7)	0.545 (3.9)

일반가구 자료 출처: 박신영, 2011,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보급”, 한국인구학회 발표자료
 다문화가구 자료: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 자료의 다문화가구를 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자가 비율이 57.2%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가구(54.2%)보다 다문화가구의 자가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의 비율은 19.2%로 일반가구의 전세비율인 21.7%보다는 약간 낮다. 월세와 사글세의 비율도 일반가구(월세 20.1%/사글세 1.3%)에 비해 다문화가구(월세 18.9%/사글세 :0.9%)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구가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들의 주택은 거의 대다수(99.7%)가 지상층이나 4.1%는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고 0.3%의 다문화가구는 옥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은 96.1%가 주거전용의 공간을 사용하나 3.9%는 영업겸용의 주거공간에 살고 있다.

또한 주인가구인 경우가 57.2%이나 25.5%는 대표가구에 살고 있고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가구도 17.3%이다. 또한 타지 주택소유 여부를 묻은 결과 12.5%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3〉 거주 조건

〈거주층 구분〉		
	빈도	퍼센트
1) 지하	570	4.1%
2) 지상층	13292	99.7%
3) 옥상	41	0.3%
합 계	13903	100.0

〈주거전용여부〉		
	빈도	퍼센트
1) 주거 전용	13360	96.1%
2) 영업	543	3.9%
합 계	13903	100.0

〈주인가구 여부〉		
	빈도	퍼센트
1) 주인 가구	7950	57.2
2) 대표 가구	3549	25.5
3)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가구	2404	17.3
합 계	13903	100.0

〈타지 주택 소유〉		
	빈도	퍼센트
1) 다른 곳에 주택 소유	1735	12.5
2) 다른 곳에 주택 미소유	12168	87.5
합 계	139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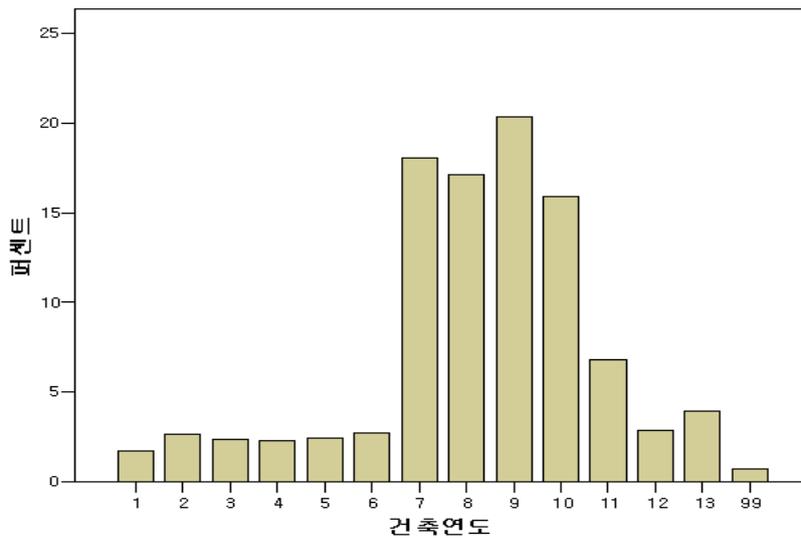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3. 다문화가구의 주택 건축연도

한편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연도는 주로 1990년에서 '94년에 건축된 것이 20.3%로 가장 많고 2000년에서 2004년에 건축된 건물이 18.1%,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에 지은 건축이 17.1%의 순이다. 반면 2005년 이후부터 최근 2010년까지 건축된 건물은 14.3%이고 1989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은 30.2%이다. 즉, 다문화 가구의 주택 중 거의 3분의 1 정도는 1980년 이전에 건립된 매우 낙후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연도



<그림 9> 다문화 가구의 건축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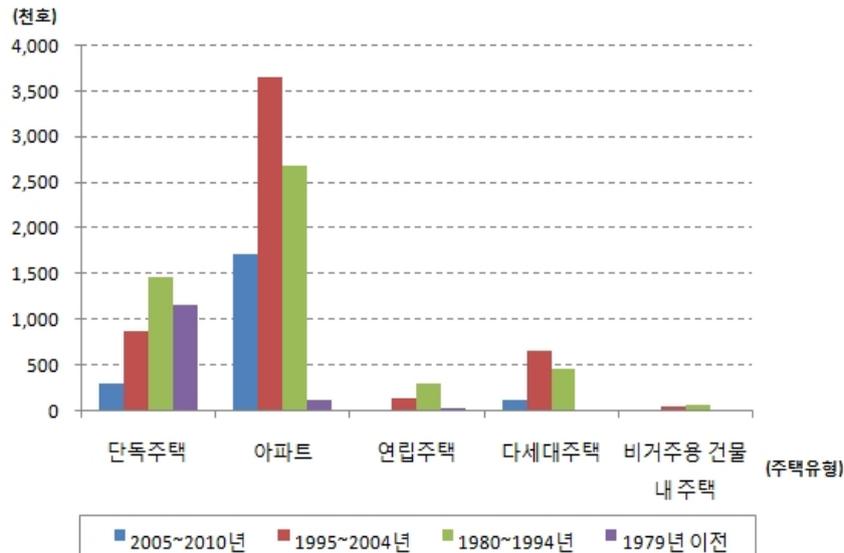
<표 14> 건축연도

〈건축연도〉		
	빈도	퍼센트
1) 2010년	238	1.7
2) 2009년	368	2.6
3) 2008년	328	2.4
4) 2007년	325	2.3
5) 2006년	344	2.5
6) 2005년	383	2.8
7) 2000-2004년	2512	18.1
8) 1995-1999년	2383	17.1
9) 1990-1994년	2823	20.3
10) 1980-1989년	2212	15.9
11) 1970-1979년	943	6.8
12) 1960-1969년	396	2.8
13) 1959년 이전	548	3.9
99)	100	0.7
합계	13903	100.0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이는 이재훈(2011)의 주택형태변화 분석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택유형별 건축연도별 주택수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1995년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 건축된 주택유형은 주로 아파트임을 알수 있다. 다문화가구의 거주종류의 분석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일반가구와 대조적으로 다문화가구의 경우 대다수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이재훈(2011), “아파트 증가 등 주택형태의 변화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그림 10〉 일반가구의 주택유형별 건축연도별 주택수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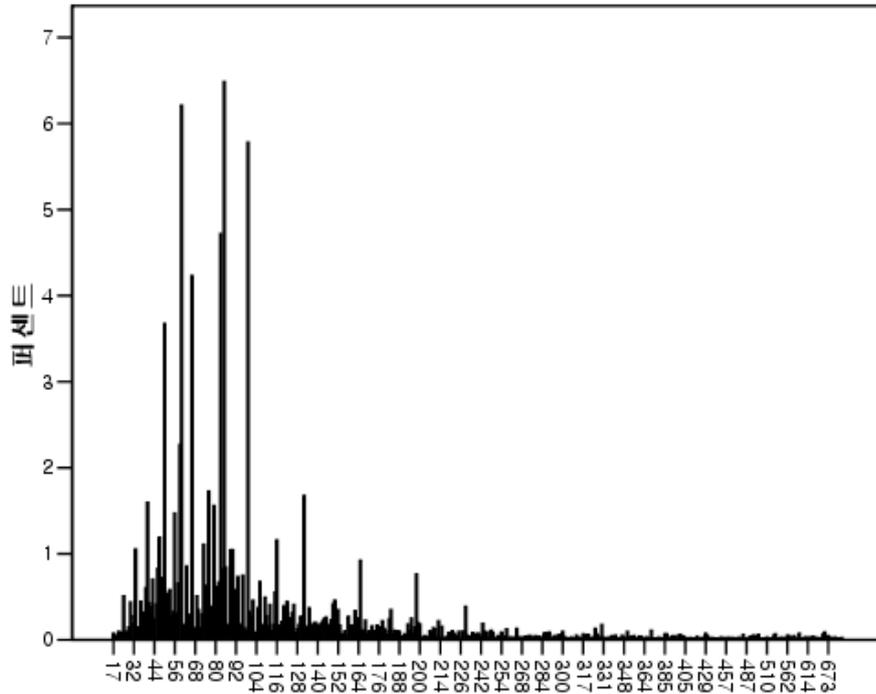
3. 다문화가구의 주택 사용면적과 방수

박신영(2011)의 일반주택 분석에서도 특히 1인가구의 경우 '95년도에 비해 2010년의 주택사용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을수록 주거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다문화가구의 주택면적의 평균은 111.55평방미터로 이는 2010년 일반가구의 주택면적인 111.86 평방미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1995년의 일반가구의 주택면적 79.79평방미터에 비해서는 매우 넓어진 것이라 하겠다. 또한 다문화가구의 주택면적의 중위면적은 85 평방미터로 대략 84-85 평방미터의 면적이 50%에 해당된다. 가장 적은 면적은 17평방미터인데 대체로 100평방미터에 해당되는 비율이 67.7%로 나타났다.



주택면적(평방미터)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그림 11〉 다문화 가구의 주택 면적

다문화가구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의 총 방수는 평균 6.99개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위수는 5개 방이고 최소 0에서 최대값 65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건물이 아파트인 경우 복합주거 등이 총 방수로 계산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빈도로 보면 이들이 거주하는 방 수가 4개인 비율이 32.1%로 가장 높고, 5개방(22.4%), 3개방(11.4%), 6개방(7.7%)의 순이다.

한편, 다문화가구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평균 방의 수는 4개로 나타나고 있고 최소 1개에서 최대 11개 방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중위수 또한 4개방이다. 빈도분포를 보면 4개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38.3%이고, 그 다음은 3개방(21.9%), 5개방(21.5%)의 순이다. 2개방을 쓴다는 비율과 6개방을 쓴다는 비율은 각각 6.4%로 동일하고 1개방을 쓰는 경우는 3.0%이다.

이들이 잠을 자는 방수의 평균은 2개인데 그 비율에서도 가장 높아 42.0%를 차지하고 있다. 잠자는 방이 3개의 경우는 33.1%이다. 그리고 잠자는 방이 1개인 경우도 19.4%에 달하고 있는 반면 4.7%는 잠자는 방이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거실(대청마루)이 있는 경우 36.1%인데 이 중 거실이 2개라는 비율도 0.3%이다. 반면에 거실이나 대청마루가 없다는 가구도 63.9%에 달한다.

한편 식사용 방은 따로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아 60.9%를 차지하고 있고, 1개방이라는 대답이 29.5%이다. 식사용 방이 2개라는 대답도 8.8%에 달하고, 3개 이상도 0.9%를 넘고 있다. 이재훈(2011)의 일반가구의 주택유형 분석에서도 2000년, 2005년, 2010년의 식사용 방수별 가구수를 살



해보면 전국적으로 주거내 식사용 방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별로는 면부의 경우 식사용방 없음보다 식사용방 1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해석한 식사용방이 “식사를 하기 위한 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 일반주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실과 연결된 식사공간은 식사용 방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식사용방 없음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문화가구의 경우도 일반가구의 경우와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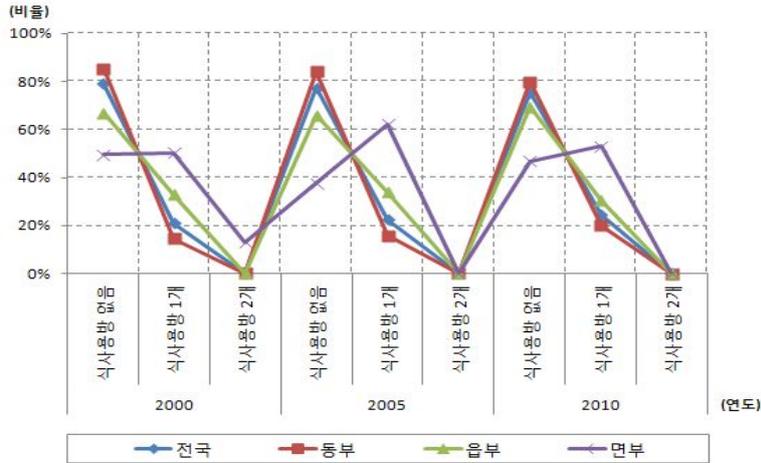
주택의 독립된 출입구 수는 평균 2.12개인데 다문화가구의 74.4%는 1개의 출입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 7.2%는 2개의 출입구, 3.8%가 3개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4개의 독립된 출입구를 보유한 경우도 2.5%로 나타났고 5개의 독립된 출입구가 있다는 가구도 3.6%이다.

기타용도의 방도 평균 0.88개로 전체 다문화 가구의 86.3%가 1개의 기타용도 방이 있다고 한다. 기타용도의 방이 없다는 가구는 12.8% 정도이다.

〈표 15〉 다문화가구의 용도별 방수 (2010년 기준)

	총 방수	사용방수	잠자는 방수	식사용 방수	거실 (대청마루)수	기타용도방수	독립된 출입구수
0	100(0.7)			8469(60.9)	8884(63.9)	1784(12.8)	
1	58(0.4)	414(3.0)	2704(19.4)	4098(29.5)	4974(35.8)	11998(86.3)	10346(74.4)
2	171(1.2)	892(6.4)	5844(42.0)	1205(8.7)	45(0.3)	45(0.3)	1000(7.2)
3	1590(11.4)	3047(21.9)	4597(33.1)	120(0.9)			526(3.8)
4	4458(32.1)	5322(38.3)	656(4.7)	11(0.1)			353(2.5)
5	3113(22.4)	2990(21.5)	89(0.6)				497(3.6)
6	1067(7.7)	896(6.4)	13(0.1)				223(1.6)
7	379(2.7)	232(1.7)					210(1.5)
8	227(1.6)	57(0.4)					107(0.8)
9	283(1.6)	27(0.2)					110(0.8)
10	210(1.5)	16(0.1)					68(0.5)
11	200(1.4)	10(0.1)					55(0.4)
12	193(1.4)						
13	172(1.2)						
14	155(1.1)						
15	187(1.3)						
16	189(1.4)						
...	...						
평균	6.99	4.0	2.25	0.58	0.36	0.88	2.12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출처: 이재훈(2011), “아파트 증가 등 주택형태의 변화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그림 12〉 다문화 가구의 식사용 방수별 가구률

4. 다문화가구의 주거 시설 형태

다문화가구의 주택에서 부엌은 99% 이상이 단독으로 사용하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0.7%를 차지한다. 이들 부엌은 98%이상이 현대식이다. 그러나 1.7%는 재래식 부엌이고 0.3%는 부엌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표 16〉 다문화 가구의 부엌수와 화장실 수

	부엌수	화장실수
0		
1	10562 (76.0)	7574 (54.5)
2	700 (5.0)	3509 (25.2)
3	533 (3.8)	661 (4.8)
4	348 (2.5)	393 (2.8)
5	509 (3.7)	494 (3.6)
6	255 (1.8)	267 (1.9)
7	195 (1.4)	195 (1.4)
8	100 (0.7)	109 (0.8)
9	113 (0.8)	108 (0.8)
10	84 (0.6)	75 (0.5)
11	50 (0.4)	50 (0.4)
12
13
평균	2.25	2.44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이는 2010년 일반 가구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가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주택의 현대식 부엌의 보급비율은 98%이고 전용비율이 99.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신영, 2011). 또한 '95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수세식 화장실 사용비율도 2010년에 크게 개선되어 특히 공동사용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가구의 경우도 평균 화장실수 2.44개인데 이들의 54.5%는 화장실이 1개이고 25.2%는 2개의 화장실이 있다. 또한 화장실이 3개 이상인 경우도 1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도 수세식 화장실 사용비율이 1995년도에 비해 2010년에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문화가구의 주거시설에서 화장실도 95.9%는 수세식이고 4.0%만이 재래식이다. 반면 화장실 시설이 없다는 경우도 0.1%로 7사례였다.

일반가구에서의 온수 목욕시설 설치 여부는 현대식 부엌, 수세식화장실 설치여부에 비해 가장 큰 개선이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박신영, 2011). 본 다문화가구 주택환경 분석에서도 98.6%가 온수목욕시설을 갖추고 있고, 0.3%만이 비온수 목욕시설이라고 한다. 반면, 1.1%의 가구는 목욕시설이 없다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목욕시설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가 98.6%이고 단지 0.2%만이 공동사용이라고 한다.

온수목욕시설 설치, 현대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은 일반가구의 경우 2000년 자료와 비교할 때 2010년 가장 개선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지적된다 (박신영, 2011).

〈표 17〉 일반가구와 다문화가구의 주거시설 형태 및 공동이용 비율

(단위: %)

	일반 가구			다문화 가구
	2000	2005	2010	2010년
부엌 시설 및 사용형태	입식(93.9)/ 재래식(5.7)/ 없음(0.4) 공동사용(0.8)	입식(97.9)/ 재래식(1.7)/ 없음(0.4) 공동사용(0.3)	입식(98.4)/ 재래식(1.2)/ 없음(0.3) 공동사용(0.7)	현대식(98.3%)/ 재래식 (1.5%)/ 없음 (0.2%) 공동사용 ((0.5%)
화장실 시설 및 사용형태	수세식(87.0)/ 재래식(12.8)/ 없음(0.2) 공동사용(6.8)	수세식(94.0)/ 재래식(5.8)/ 없음(0.2) 공동사용(2.4)	수세식(97.0)/ 재래식(3.0)/ 없음(0.0) 공동사용(1.5)	수세식 (95.6%)/ 재래식 (4.0%)/ 없음 (0.1%) 공동사용 (0.9%)
목욕 시설 및 사용형태	온수(87.4)/ 비온수(1.7)/ 없음(10.9) 공동사용(0.9)	온수(95.8)/ 비온수(0.3)/ 없음(3.8) 공동사용(0.5)	온수(97.6)/ 비온수(0.7)/ 없음(1.6) 공동사용(0.6)	온수 (98.6%)/ 비온수 (0.3%) 없음 (1.1%) 공동사용 (0.2%)

일반가구 자료 출처: 박신영, 2011,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보급”, 한국인구학회 발표자료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수도시설의 형태도 또한 상수도가 81.5%이고 마을 상수도 12.7%와 전용상수도 5.6%를 포함하여 94.4%가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고 5.6%만이 수도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다문화 가구의 수도시설 형태

〈수도시설 형태〉	
1) 상수도	11328 (81.5%)
2) 마을상수도	1762 (12.7%)
3) 전용상수도	35 (0.3%)
4) 없음	778 (5.6%)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시자료

이상과 같이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나타난 다문화가구의 주택환경과 주거문화는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다문화가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농촌가구들의 단독주택 환경의 개선을 통해 도시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과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오남 (2008), 『결혼이민자 가족의 이해』, 집문당.

김정석 (2011) “한국의 가구형태변화”, 『2011년 12월 한국인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국회 정책토론회(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국회.

박신영 (2011)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보급”, 『2011년 12월 한국인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양애경 외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동녘』,

이재훈 (2011), “아파트 증가 등 주택형태의 변화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인구교육학회(2011), “통계로 본 세상: 한국사회의 외국인”, 『인구교육자료집』 (2011-6월호)

전숙자 외 (2009),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그린.

정기선 외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조성남 (2009) “다문화 사회와 가족”,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전숙자외), 도서출판 그린, pp. 157-174.



- 조성남 (2010) 『다문화 사회와 가족 : 차이와 공존 · 변화의 방향』 법무부 다문화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자료.
- 조성남 (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적 차별경험과 인식”, 『한국사회 다문화 친화성 심포지엄』 발표, 전남대학교, 2008.10
- 통계청 (2011), 201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한국이민학회 (2008),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 200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Lee Y.J, Seoul, D.H, Cho, S.N. (2007), “INTERNATIONAL MARRIAGES IN SOUTH KOREA: The Significance of Nationality and Ethnic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007):165-182.
- Doo-Sub Kim (ed.) (2008), *Cross-Border Marriage--Process and Dynamics*, Inst.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
- Global Migration and the Household in East Asia (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제7주제 : 아파트 증가 등 주택형태의 변화분석

| 이재훈 |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규모, 저출산, 고령화, 주택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사항, 정책시사점 등을 발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수립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분석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 중 이 장에서는 주택유형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주택의 유형변화

1. 주택유형별 주택수

1970년 이후 지난 40년간 주택수의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내용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으나¹⁾ 호수만을 보면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 415만 5천호였던 단독주택은 1990년 472만 7천호로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406만 9천까지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408만 9천호로 조금 증가하였다. 반면에 1970년 전체주택수 436만호의 0.8%, 3만 3천호에 불과했던 아파트²⁾는 2010년 전체 주택수의 58.4%를 차지하는 857만 6천호로 급증하였다. 1987년 이후 아파트 재건축이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공급된 아파트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비해서 주택의 질이 뛰어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화된 주택으로서 아파트가 공급된 점에서 아파트는

본 장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 (WWW.KOSIS.CO.KR)을 참고하였으며, 각 절별 분석내용에 따라 인구/주거부문의 통계자료와 주택/건설 부문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자료 하단에 별도 표기하여 통계자료를 읽음에 있어 혼돈이 없도록 하였다.

- 1) 단독주택의 경우 내용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단독주택을 개조하거나 신축하면서 한 가구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 용자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단독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 1호로 계산한 주택수는 1445만 6천호이지만, 다가구주택에서 개별 가구가 거주하는 부분을 1호의 주택으로 계산한 주택수는 1707만 1천호이다.
- 2) 당시 기준으로 아파트란 층수의 구분 없이 하나의 건물 내에 다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분획되고 각 출입구가 공용의 복도나 층계로 통하는 건물이었다. 오늘날 아파트를 정의하는 기준인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은 1995년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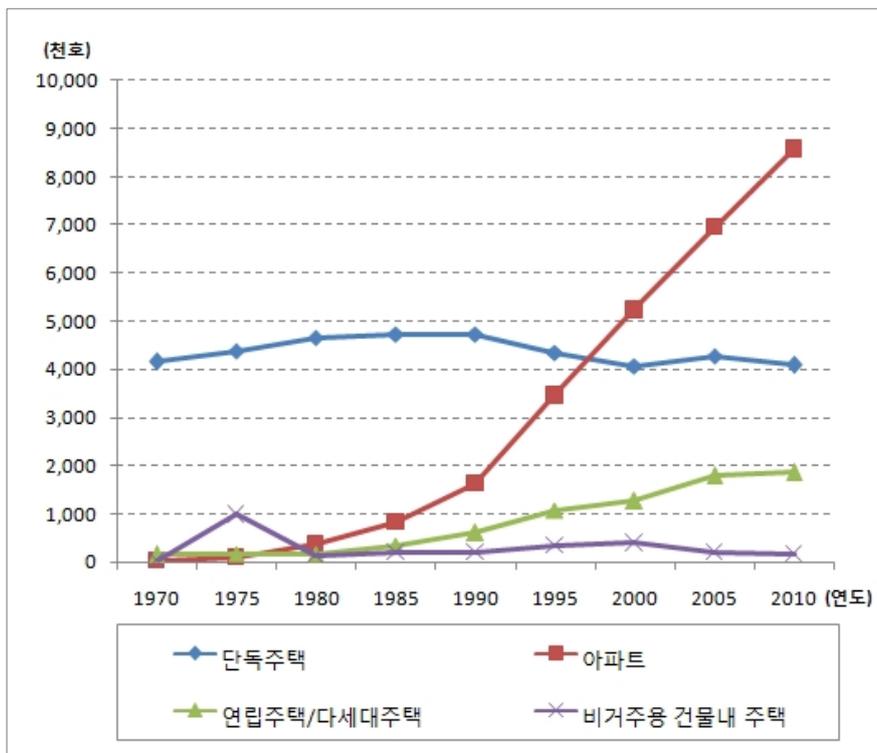
주로 1가구만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의 침실 분리가 보장되고, 실내화장실, 온수욕실, 입식부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주택유형보다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유형별 주택수 변화

(단위: 천호)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단독주택	4,155 (95.3%)	4,382 (92.6%)	4,652 (87.5%)	4,719 (77.3%)	4,727 (66.0%)	4,337 (47.1%)	4,069 (37.1%)	4,264 (32.2%)	4,089 (27.9%)
아파트	33 (0.8%)	89 (1.9%)	374 (7.0%)	822 (13.5%)	1,628 (22.7%)	3,455 (37.5%)	5,231 (47.7%)	6,963 (52.7%)	8,576 (58.4%)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46 (3.4%)	165 (3.5%)	162 (3.0%)	350 (5.7%)	603 (8.4%)	1,071 (11.6%)	1,266 (11.6%)	1,788 (13.5%)	1,850 (12.6%)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25 (0.6%)	981 (2.1%)	131 (2.5%)	213 (3.5%)	202 (2.8%)	343 (3.7%)	393 (3.6%)	209 (1.6%)	161 (1.1%)
평균	4,360 (100.0%)	4,734 (100.0%)	5,319 (100.0%)	6,104 (100.0%)	7,160 (100.0%)	9,205 (100.0%)	10,959 (100.0%)	13,223 (100.0%)	14,677 (100.0%)

* 통계청_주택/건설부문_주택의 종류별 주택(공가포함)



〈그림 1〉 유형별 주택수 변화



2. 아파트의 주택수 변화(시부/동부, 읍부, 면부)

우리나라 아파트는 IMF를 지나던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의 5년간 물량이 백 사십만호로 준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 꾸준히 년 40만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현재 아파트의 87.3%인 7,487,900호가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나머지 12.7%인 1,088,113호가 읍, 면지역에 위치한다. 초기에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1,995년부터는 읍, 면지역에도 많이 지어지기 시작하여 최근 전체 아파트의 약 15%에 이르는 물량이 읍면 지역에 지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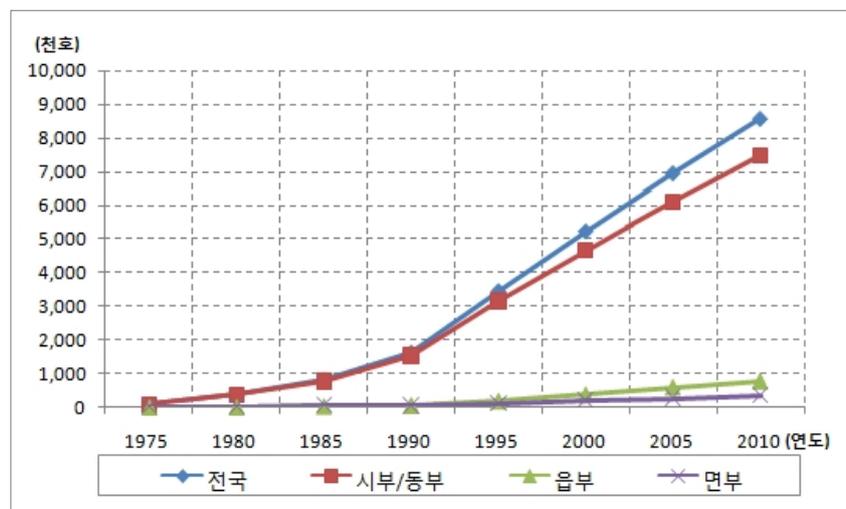
〈표 2〉 연도별 아파트 수

(단위: 호)

년도	전국		시부/동부		읍부		면부	
	조사량	증감	조사량	증감	조사량	증감	조사량	증감
1975	89,248		84,177		1,192		3,879	
1980	373,710	284,462	355,608	271,431	7,516	6,324	10,586	6,707
1985	821,606	447,896	765,289	409,681	25,680	18,164	30,637	20,051
1990	1,628,117	806,511	1,541,881	776,592	58,526	32,846	27,710	-2,927
1995	3,454,508	1,826,391	3,163,939	1,622,058	184,431	125,905	106,138	78,428
2000	5,231,319	1,776,811	4,671,005	1,507,066	369,728	185,297	190,586	84,448
2005	6,962,689	1,731,370	6,122,716	1,451,711	585,636	215,908	254,337	63,751
2010	8,576,013	1,613,324	7,487,900	1,365,184	765,456	179,820	322,657	68,320

※ 통계청_주택/건설부문_주택의 종류별 주택(공가포함)

※ 1975년~1990년까지는 시부였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동부로 변경



〈그림 2〉 연도별 아파트 수



Ⅲ. 주택유형별 기본특성분석

1. 주택유형별 면적 분석

주택유형별 주거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거면적이 커졌으나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하고는 10년간 면적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단독주택의 경우를 보면 2000년 57.09㎡였던 것이 2010년 59.8㎡로 2.71㎡ 늘어났고, 아파트는 2000년 69.63㎡가 2010년 75.1㎡로 5.47㎡ 늘어났다. 아파트에 비해서는 연립주택이 조금 더 늘어 2000년에 비해 2010년 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중의 소득증가³⁾를 감안하면 주택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나, 가구원수가 평균 3.31인에서 2.7인으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1인당 주거사용면적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 주택유형별 주거면적

(단위: ㎡)

	2000	2005	2010
단독주택	57.09(19.8)	60.39(23.76)	59.8(26.2)
아파트	69.63(20.46)	73.26(22.77)	75.1(24.6)
연립주택	66.00(19.47)	70.62(22.44)	72.3(25.1)
다세대주택	58.74(17.49)	61.38(20.13)	60.9(21.6)
비거주용	66.33(21.45)	67.65(25.08)	64.7(26.5)
오피스텔	-	-	46.6(30.4)
주택이외의 거처	-	31.68(19.47)	-
평균	62.37(19.8)	66.00(22.77)	67.4(25.0)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_주택의 종류 및 주거면적별 가구(1995년에는 계산되지 않았음)

※ 괄호안은 1인당 주거사용면적

2. 주택유형별 사용방수

주택유형별 사용방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에 비해 2010년 사용방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1995년 평균 2.8개인 사용방수가 2010년 3.3개, 연립주택의 경우 1995년 3.5개인 사용방수가 2010년 4.0개로 다른 주택유형의 사용방수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아파트의 경우도 1995년 3.8개였던 사용방수가 2010년 4.1개로 늘어났다. 10년간 5.47㎡의 면적이 증가했고 15년간 방수는 0.3개 늘어났음을 고려하면 방의 크기는 커진 것으로 짐작된다.

1995년과 비교하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사용방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3) 1995년 1인당 GNI는 11,735불에서 2010년 20,759불로 늘어났다.



〈표 4〉 주택유형별 사용방수

(단위: %)

	1995	2000	2005	2010
단독주택	1(17.3) 2(26.4) 3(30.1) 4(17.3) 5(6.7) 6개 이상(2.2)/평균(2.8개)	1(12.9) 2(17.3) 3(31.0) 4(23.1) 5(12.4) 6개 이상(3.4)/평균(3.2개)	1(10.6) 2(14.3) 3(28.7) 4(25.2) 5(16.1) 6개 이상(5.0)/평균(3.4개)	1(14.4) 2(14.1) 3(26.4) 4(25.1) 5(14.9) 6개 이상(5.1)/평균(3.3개)
아파트	1(0.8) 2(2.8) 3(30.5) 4(53.4) 5(8.2) 6개 이상(4.3)/평균(3.8개)	1(0.6) 2(4.9) 3(30.7) 4(52.8) 5(7.5) 6개 이상(3.6)/평균(3.7개)	1(0.7) 2(2.6) 3(23.0) 4(59.9) 5(9.7) 6개 이상(4.1)/평균(3.9개)	1(0.3) 2(1.2) 3(17.3) 4(57.0) 5(18.9) 6개 이상(5.4)/평균(4.1개)
연립주택	1(5.4) 2(5.6) 3(29.2) 4(54.5) 5(4.0) 6개 이상(1.3)/평균(3.5개)	1(2.7) 2(4.2) 3(27.1) 4(58.3) 5(5.9) 6개 이상(1.8)/평균(3.7개)	1(1.5) 2(2.4) 3(23.5) 4(61.5) 5(8.4) 6개 이상(2.7)/평균(3.8개)	1(0.8) 2(1.9) 3(21.0) 4(56.9) 5(15.6) 6개 이상(3.8)/평균(4.0개)
다세대주택	1(3.1) 2(6.3) 3(36.9) 4(51.3) 5(2.0) 6개 이상(0.4)/평균(3.4개)	1(2.5) 2(4.5) 3(32.6) 4(55.5) 5(4.2) 6개 이상(0.7)/평균(3.6개)	1(3.1) 2(3.4) 3(26.1) 4(62.4) 5(4.4) 6개 이상(0.6)/평균(3.6개)	1(2.6) 2(3.7) 3(23.5) 4(58.5) 5(10.8) 6개 이상(0.9)/평균(3.7개)
비거주용	1(25.2) 2(28.8) 3(23.3) 4(14.5) 5(5.8) 6개 이상(2.4)/평균(2.5개)	1(16.3) 2(19.5) 3(25.8) 4(22.0) 5(12.0) 6개 이상(4.4)/평균(3.1개)	1(16.1) 2(16.6) 3(23.0) 4(24.1) 5(14.0) 6개 이상(6.3)/평균(3.3개)	1(20.2) 2(13.6) 3(21.2) 4(24.9) 5(13.6) 6개 이상(6.6)/평균(3.2개)
주거이외의 거처	1(49.6) 2(29.4) 3(15.3) 4(4.3) 5(0.9) 6개 이상(0.5)/평균(1.8)	1(52.6) 2(21.1) 3(15.3) 4(7.8) 5(2.2) 6개 이상(1.0)/평균(1.9개)	1(63.7) 2(17.4) 3(9.4) 4(6.3) 5(2.0) 6개 이상(1.3)/평균(1.7개)	1(62.8) 2(14.7) 3(9.0) 4(8.9) 5(2.8) 6개 이상(1.7)/평균(1.8개)
평균	1(12.3) 2(18.4) 3(30.0) 4(30.0) 5(6.7) 6개 이상(2.7)/평균(3.1개)	1(7.9) 2(11.7) 3(30.4) 4(36.9) 5(9.9) 6개 이상(3.3)/평균(3.4개)	1(6.5) 2(8.3) 3(25.6) 4(43.4) 5(12.1) 6개 이상(4.2)/평균(3.6개)	1(7.6) 2(6.9) 3(21.3) 4(43.1) 5(16.2) 6개 이상(4.9)/평균(3.7개)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_가구원,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별 가구

※ 2000년도의 경우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비거주용으로 산입함.

3. 주택유형별 주택점유형태(자가/전세/월세/무상)

주택유형별로 점유형태의 변화를 보면 1995년과 2010년 사이에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세대주택과 주거이외의 거처는 자가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1995년에 비해 2010년 자가점유율이 48.3%에서 44.6%로 감소하였고, 아파트는 64.1%에서 63.4%로 조금 감소하였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67.1%에서 62.5%로 감소하는 반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1995년 31.9%에서 2010년 38.7%로 조금 증가하였다. 월세의 평균 비중의 1995년 5.2%에서 2010년 20.1%로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전세의 월세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5〉 주택유형별 주택점유형태

(단위: %)

	1995	2000	2005	2010
단독주택	A(48.3) B(33.0) C(12.8) D(5.9)	A(48.1) B(30.1) C(15.1) D(6.3)	A(46.5) B(23.5) C(23.2) D(6.8)	A(44.6) B(20.5) C(29.4) D(5.5)
아파트	A(64.1) B(22.8) C(10.0) D(3.0)	A(61.8) B(26.1) C(9.3) D(2.7)	A(64.8) B(20.7) C(11.7) D(2.7)	A(63.4) B(21.6) C(12.3) D(2.7)
연립주택	A(67.1) B(25.5) C(3.8) D(3.6)	A(66.8) B(25.5) C(4.2) D(3.6)	A(66.9) B(22.5) C(6.3) D(4.4)	A(62.5) B(24.0) C(9.5) D(4.0)
다세대주택	A(64.9) B(30.6) C(2.6) D(1.9)	A(63.5) B(30.2) C(3.9) D(2.4)	A(64.0) B(25.2) C(8.3) D(2.4)	A(56.1) B(28.3) C(13.4) D(2.2)
비거주용	A(31.9) B(32.2) C(25.8) D(10.1)	A(39.0) B(28.4) C(23.2) D(9.4)	A(38.8) B(19.4) C(27.6) D(14.2)	A(38.7) B(19.0) C(31.5) D(10.8)
주택이외의 거처	A(34.0) B(14.5) C(24.3) D(27.2)	A(21.9) B(18.8) C(29.0) D(30.3)	A(16.6) B(26.6) C(46.4) D(10.4)	A(16.1) B(22.3) C(53.7) D(7.9)
평균	A(53.3) B(29.7) C(11.9) D(5.2)	A(54.2) B(28.2) C(12.6) D(5.0)	A(55.6) B(22.4) C(17.2) D(4.9)	A(54.2) B(21.7) C(20.1) D(4.0)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_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

※ A : 자가, B : 전세, C : 월세, D : 기타 (인구자료기준)

※ 2000년도의 경우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비거주용으로 산입함.

4. 주택유형별 건축연도

우리나라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연간 평균 공급건수는 3,652,353여 건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을 보면 2008년에 우리나라에 공급된 아파트 숫자는 313,593호였으나, 2009년에는 271,236호, 2010년에는 155,385호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 시기에는 비단 아파트 공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주택의 공급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공급된 주택수는 년 평균 5,383,734여 호이며, 최근 3년간을 볼 때, 2008년에는 407,692호, 2009년 347,381호, 2010년 205,476호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결과일수도 있으나, 통상 주택을 공급하는데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11년과 2012년에도 주택공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신규주택을 필요로 하는 신혼가구(매년 약 33만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없어, 전세물량의 부족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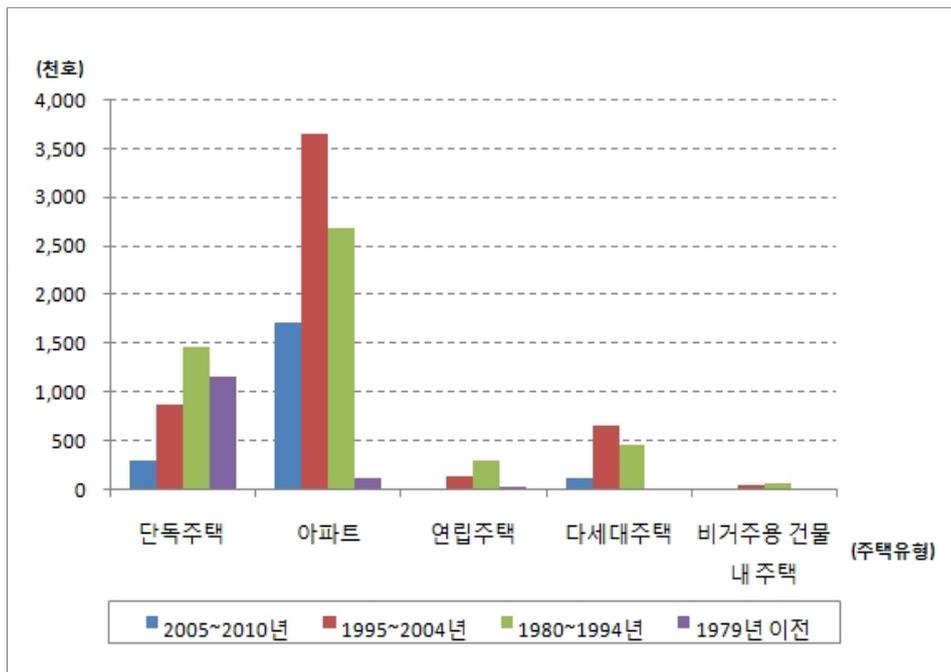


〈표 6〉 주택유형별 건축연도 (2010년 기준)

(단위: %)

	1979년 이전	1980~ 1994년	1995~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단독주택	1,163,435 (30.6%)	1,455,633 (38.3%)	876,094 (23.1%)	72,049 (1.9%)	44,699 (1.2%)	51,667 (1.4%)	51,969 (1.4%)	46,175 (1.2%)	35,391 (0.9%)	3797112 (100.0%)
아파트	123,323 (1.5%)	2,690,159 (32.9%)	3,652,353 (44.6%)	347,061 (4.2%)	320,070 (3.9%)	311,883 (3.8%)	313,593 (3.8%)	271,236 (3.3%)	155,385 (1.9%)	8185063 (100.0%)
연립주택	33,361 (6.6%)	303,181 (60.2%)	146,533 (29.1%)	3,947 (0.8%)	2,649 (0.5%)	2,895 (0.6%)	4,970 (1.0%)	4,332 (0.9%)	1,762 (0.3%)	503630 (100.0%)
다세대주택	7,977 (0.6%)	462,913 (37.1%)	658,668 (52.8%)	17,734 (1.4%)	13,020 (1.0%)	16,633 (1.3%)	34,431 (2.8%)	23,583 (1.9%)	11,527 (0.9%)	1246486 (100.0%)
비거주용	20,985 (13.9%)	64,710 (42.8%)	50,086 (33.1%)	4,208 (2.8%)	2,441 (1.6%)	2,655 (1.8%)	2,729 (1.8%)	2,055 (1.4%)	1,411 (0.9%)	151280 (100.0%)
총 합	1,349,081 (9.7%)	4,976,596 (35.8%)	5,383,734 (38.8%)	444,999 (3.2%)	382,879 (2.8%)	385,733 (2.8%)	407,692 (2.9%)	347,381 (2.5%)	205,476 (1.5%)	13883571 (100.0%)

*통계청_주택/건설부문_주택의 종류 및 연면적 및 건축연도별 주택



〈그림 3〉 주택유형별 건축연도별 주택수 (2010년 기준)



IV. 주택유형별 주거환경분석

1. 주택유형별 시설상태(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주택유형별로 부엌시설 설치여부를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부엌시설이 1995년에 비해서 2010년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대식 부엌이 설치된 비율이 100%이다. 다만 가구의 단독 사용여부와 관련해서는 아파트조차 공동사용비율이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부엌 공동사용비율이 4.6%로 높게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7〉 주택유형별 부엌시설 상태

(단위: %)

	1995	2000	2005	2010
단독주택	현대식(75.0) 없음(1.0)/공동(1.0)	현대식(88.9) 없음(0.5)/공동(0.7)	현대식(95.8) 없음(0.4)/공동(0.4)	현대식(96.5) 없음(0.5)/공동(0.9)
아파트	현대식(100) 없음(-)/공동(1.0)	현대식(100) 없음(-)/공동(0.3)	현대식(100) 없음(-)/공동(0.1)	현대식(100) 없음(-)/공동(0.1)
연립주택	현대식(98.0) 없음(-)/공동(3.0)	현대식(99.4) 없음(-)/공동(1.8)	현대식(99.8) 없음(0.1)/공동(0.3)	현대식(100) 없음(-)/공동(0.3)
다세대주택	현대식(99.0) 없음(-)/공동(3.0)	현대식(99.8) 없음(-)/공동(1.5)	현대식(99.9) 없음(-)/공동(0.2)	현대식(100) 없음(-)/공동(0.2)
비거주용	현대식(80.0) 없음(3.0)/공동(2.0)	현대식(91.2) 없음(1.5)/공동(1.6)	현대식(93.9) 없음(4.1)/공동(3.3)	현대식(96.3) 없음(2.0)/공동(4.6)
주택이외의 거처	현대식(55.0) 없음(18)/공동(1.0)	현대식(69.2) 없음(17.4)/공동(1.7)	현대식(91.0) 없음(6.8)/공동(2.0)	현대식(93.7) 없음(4.8)/공동(6.8)
총 합	현대식(84.1) 없음(0.7)/공동(1.2)	현대식(93.9) 없음(0.4)/공동(0.7)	현대식(97.9) 없음(0.4)/공동(0.3)	현대식(98.4) 없음(0.3)/공동(0.6)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_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

※ 2000년도의 경우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비거주용으로 산입함.

주택유형별로 화장실 설치여부를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의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율이 1995년에 비해서 2010년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단독주택의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비율이 92.6%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1000가구 중 한 가구로 나타났지만 공급측면에서 100%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면 사용측면에서 부엌과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세식 화장실이 100% 설치된 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으로 나타났다.



〈표 8〉 주택유형별 화장실 시설 상태

(단위: %)

	1995	2000	2005	2010
단독주택	수세식(60.0) 공중(1.0)/공동(8.0)	수세식(75.1)공중(0.3)/공 동(5.7)	수세식(87.0) 공중(0.2)/공동(2.7)	수세식(92.6) 공중(0.1)/공동(2.1)
아파트	수세식(100) 공중(-)/공동(1.0)	수세식(100) 공중(-)/공동(0.3)	수세식(100) 공중(-)/공동(0.1)	수세식(100) 공중(-)/공동(0.1)
연립주택	수세식(98.0) 공중(1.0)/공동(5.0)	수세식(99.3)공중(0.1)/공 동(3.0)	수세식(99.5) 공중(0.2)/공동(0.7)	수세식(99.9) 공중(-)/공동(0.6)
다세대주택	수세식(99.0) 공중(-)/공동(4.0)	수세식(99.7)공중(0.1)/공 동(1.6)	수세식(99.9) 공중(-)/공동(0.2)	수세식(100) 공중(-)/공동(0.2)
비거주용	수세식(81.0) 공중(3.0)/공동(17.0)	수세식(89.9)공중(0.7)/공 동(8.3)	수세식(95.7) 공중(1.1)/공동(6.5)	수세식(97.4) 공중(0.2)/공동(5.9)
주택이외의 거처	수세식(41.0) 공중(10.0)/공동(9.0)	수세식(66.2)공중(5.6)/공 동(6.8)	수세식(91.2) 공중(2.2)/공동(4.1)	수세식(96.3) 공중(0.4)/공동(7.8)
총 합	수세식(75.1) 공중(0.6)/공동(6.5)	수세식(87.0)공중(0.2)/공 동(3.5)	수세식(94.0) 공중(0.2)/공동(1.5)	수세식(97.0) 공중(-)/공동(1.1)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_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

※ 2000년도의 경우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비거주용으로 산입함.

주택유형별로 온수목욕시설 설치여부를 살펴본 결과 1995년에 비해 2010년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온수목욕시설 설치비율이 2010년 각각 94.4%,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주택유형별 목욕시설 상태

(단위: %)

	1995	2000	2005	2010
단독주택	온수(62.0) 없음(33.0)/공동(1.0)	온수(77.2) 없음(19.6)/공동(1.0)	온수(91.3) 없음(0.8)/공동(0.7)	온수(94.4) 없음(3.9)/공동(0.8)
아파트	온수(99.0) 없음(1.0)/공동(1.0)	온수(99.9) 없음(-)/공동(0.3)	온수(100) 없음(-)/공동(0.1)	온수(100) 없음(-)/공동(0.1)
연립주택	온수(95.0) 없음(4.0)/공동(3.0)	온수(98.0) 없음(1.8)/공동(1.6)	온수(99.3) 없음(0.6)/공동(0.3)	온수(99.9) 없음(-)/공동(0.3)
다세대주택	온수(98.0) 없음(2.0)/공동(3.0)	온수(99.1) 없음(0.7)/공동(1.4)	온수(99.8) 없음(0.2)/공동(0.2)	온수(100) 없음(-)/공동(0.2)
비거주용	온수(61.0) 없음(35.0)/공동(3.0)	온수(78.2) 없음(19.8)/공동(1.7)	온수(91.5) 없음(8.1)/공동(4.3)	온수(94.7) 없음(3.8)/공동(4.2)
주택이외의 거처	온수(41.0) 없음(54.0)/공동(4.0)	온수(62.3) 없음(33.6)/공동(3.9)	온수(91.9) 없음(7.4)/공동(3.4)	온수(96.3) 없음(2.5)/공동(7.1)
총 합	온수(74.8) 없음(22.0)/공동(1.5)	온수(87.4) 없음(10.9)/공동(0.8)	온수(95.8) 없음(3.8)/공동(0.5)	온수(97.6) 없음(1.6)/공동(0.6)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_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

※ 2000년도의 경우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비거주용으로 산입함.



V. 주택유형별 가구특성분석

1. 주택유형별 가구특성

주택유형별로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일반가족가구는 83.4%에서 74.9%로 감소하였고, 1인 가구는 15.6%에서 23.9%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주택유형별 일반가족가구의 비율은 높았으나,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1인가구의 거주비율이 35.9%와 32.5%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혈연가구의 평균 비율은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와서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주택유형별 가구유형

(%)

	2000	2005	2010
단독주택	가족(76.6) 1인(22.0)비혈연(1.4)	가족(69.1) 1인(29.1) 비혈연(1.8)	가족(62.6) 1인(35.9) 비혈연(1.6)
아파트	가족(91.6) 1인(7.7) 비혈연(0.7)	가족(89.1) 1인(10.1) 비혈연(0.8)	가족(86.4) 1인(12.9) 비혈연(0.7)
연립주택	가족(90.5) 1인(8.8)비혈연(0.7)	가족(86.9) 1인(12.1) 비혈연(1.0)	가족(82.7) 1인(16.4) 비혈연(0.9)
다세대주택	가족(89.5) 1인(9.7) 비혈연(0.8)	가족(84.4) 1인(14.5) 비혈연(1.2)	가족(80.0) 1인(18.9) 비혈연(1.0)
비거주용	가족(80.8) 1인(17.2)비혈연(0.2)	가족(69.7) 1인(26.6) 비혈연(3.8)	가족(65.1) 1인(32.5) 비혈연(2.4)
오피스텔	가족(23.2) 1인(71.6)비혈연(5.3)	-	-
주거이외의 거처	가족(45.8) 1인(47.7)비혈연(6.5)	가족(30.2) 1인(63.9) 비혈연(5.9)	가족(28.5) 1인(67.5) 비혈연(4.0)
평균	가족(83.4) 1인(15.6)비혈연(1.1)	가족(78.6) 1인(20.0) 비혈연(1.4)	가족(74.9) 1인(23.9) 비혈연(1.2)

※ 통계청 인구/가구부문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별 가구

※ 2000년도의 경우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비거주용으로 산입함.

2. 주택유형별 가구원수

통계청에서 제공한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0% 표본 데이터로 주택유형별 가구원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1995년과 2000년 자료는 1인 가구가 아닌 1-3인 가구를 조사한 자료이고, 1995년의 평균가구원수는 정확하지 않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2005년과 2010년 데이터 파일이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2005년 2.9인에서 2010년 2.7인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1-2인 가구수의 평균 비율은 32.5%에서 38.4%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 평균 가구원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파트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표 11〉 주택유형별 가구원수

(단위: %)

	1995	2000	2005	2010
단독주택	1~3(38.0) 4(14.8) 5~9(31.5) 10이상(15.6) / 평균(3.14인)	1~3(46.2) 4(14.4) 5~9(27.0) 10이상(12.5) / 평균(2.9인)	1(15.4) 2(24.2) 3(14.0) 4(12.8) 5~9(23.4) 10이상(10.1)/평균(2.5인)	1(19.2) 2(26.6) 3(13.9) 4(11.0) 5~6(12.0) 7이상(17.3) / 평균(2.3인)
아파트	1~3(38.1) 4(43.4) 5~9(18.5) 10이상(-) / 평균(3.6인)	1~3(44.8) 4(41.8) 5~9(13.4) 10이상(-) / 평균(3.4인)	1(10.0) 2(17.9) 3(23.9) 4(37.3) 5~9(10.9) 10이상(-) / 평균(3.2인)	1(12.9) 2(21.1) 3(25.4) 4(31.1) 5~6(9.1) 7이상(0.4) / 평균(3.1인)
연립주택	1~3(35.6) 4(37.6) 5~9(26.4) 10이상(0.4) / 평균(3.61인)	1~3(45.2) 4(37.2) 5~9(17.6) 10이상(0.1) / 평균(3.4인)	1(11.4) 2(20.7) 3(23.8) 4(31.4) 5~9(12.7) 10이상(-) / 평균(3.1인)	1(16.3) 2(25.2) 3(24.3) 4(24.6) 5~6(9.1) 7이상(0.5) / 평균(2.9인)
다세대주택	1~3(40.1) 4(37.9) 5~9(26.1) 10이상(0.4) / 평균(3.55인)	1~3(48.5) 4(36.4) 5~9(15.1) 10이상(-) / 평균(3.3인)	1(14.2) 2(19.9) 3(24.2) 4(30.6) 5~9(11.1) 10이상(-) / 평균(3.1인)	1(19.0) 2(23.8) 3(24.5) 4(24.2) 5~6(8.1) 7이상(0.5) / 평균(2.8인)
비거주용	1~3(32.3) 4(20.8) 5~9(32.9) 10이상(14.0) / 평균(3.3인)	1~3(40.0) 4(21.7) 5~9(30.1) 10이상(8.2) / 평균(3.1인)	1(14.1) 2(21.1) 3(17.6) 4(19.7) 5~9(23.2) 10이상(4.3) / 평균(2.7인)	1(18.3) 2(23.4) 3(17.3) 4(24.6) 5~6(13.3) 7이상(11.8) / 평균(2.4인)
총 합	1~3(37.7) 4(28.4) 5~9(25.9) 10이상(7.9) / 평균(3.31인)	1~3(45.3) 4(30.3) 5~9(19.4) 10이상(4.9) / 평균(3.1인)	1(12.2) 2(20.3) 3(20.7) 4(28.3) 5~9(15.2) 10이상(3.3) / 평균(2.9인)	1(15.4) 2(23.0) 3(22.0) 4(20.5) 5~6(9.9) 7이상(5.2) / 평균(2.7인)

※ 통계청_주택/건설부문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거주인수별 주택

※ 2000년도의 경우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비거주용으로 산입함.

VI. 지역별 주거환경분석

1. 지역별 아파트의 주택규모, 자가율 변화

지역별 아파트의 주거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의 각 주택수와 주택규모 그리고 자가율은 전체적으로 면부 < 읍부 < 동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부와 읍부의 경우 1995년에 비해서는 2010년 주택수와 주택규모, 자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면부의 경우 주택수와 주택규모는 증가했지만 자가율은 51.1%에서 46.7%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지역별 아파트의 주거환경 변화

		1995	2000	2005	2010
전국	주택수 (가구)	3,454,508	5,231,319	6,962,689	8,576,013
	주택규모 (㎡)	-	69.63	73.26	75.1
	자 가 울 (%)	2,230,282(64.6)	3,238,637(61.9)	4,298,428(64.8)	5,182,211(63.4)
동부	주택수 (가구)	3,163,939	4,671,005	6,122,716	7,487,900
	주택규모 (㎡)	-	69.96	73.92	75.8
	자 가 울 (%)	2,059,449(65.1)	2,972,408(63.6)	3,910,896(66.6)	4,645,256(64.7)
읍부	주택수 (가구)	184,431	369,728	585,636	765,456
	주택규모 (㎡)	-	68.64	69.96	70.6
	자 가 울 (%)	116,611(63.2)	191206(51.7)	302,721(55.8)	406,813(57.2)
면부	주택수 (가구)	106,138	190,586	254,337	322,657
	주택규모 (㎡)	-	64.35	65.34	67.5
	자 가 울 (%)	54,222(51.1)	75,023(39.4)	84,811(39.4)	130,142(46.7)

- ※ 통계청_주택/건설부문 주택의 종류별 주택
-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 주택의 종류 및 주거면적별 가구
-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

2. 지역별 식사용 방수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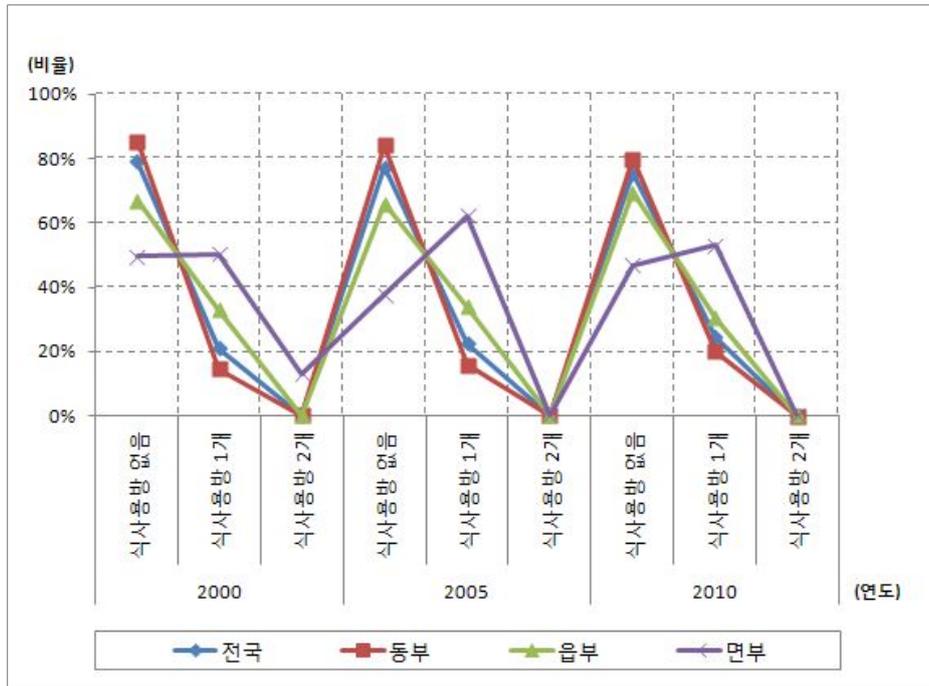
2000년, 2005년, 2010년의 식사용 방수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주거내 식사용방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면부의 경우 식사용방 없음보다 식사용방 1개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바라 본 식사용방이 식사를 하기 위한 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 일반주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실과 연결된 식사공간은 식사용방에서 제외하여 식사용방 없음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 식사용 방수별 가구수

(단위: 가구)

	2000			2005			2010		
	식사용방 없음	식사용방 1개	식사용방 2개 이상	식사용방 없음	식사용방 1개	식사용방 2개 이상	식사용방 없음	식사용방 1개	식사용방 2개 이상
전국	11,302,821 (78.98%)	2,996,428 (20.94%)	12,558 (0.09%)	12,277,016 (77.28%)	3,596,540 (22.64%)	13,572 (0.09%)	13,079,296 (75.43%)	4,247,676 (24.5%)	12,450 (0.07%)
동부	9,572,835 (85.25%)	1,648,095 (14.68%)	8,546 (0.08%)	10,721,629 (84.12%)	2,014,543 (15.81%)	8,768 (0.07%)	11,196,816 (79.80)	2,825,953 (20.14%)	8,300 (0.06%)
읍부	775,293 (66.82%)	383,462 (33.05%)	1,577 (0.14%)	868,409 (65.84%)	448,737 (34.02%)	1,793 (0.14%)	1,031,389 (69.34%)	454,534 (30.56%)	1,567 (0.11%)
면부	954,693 (49.67%)	964,871 (50.20%)	2,435 (0.13)	686,978 (37.68%)	1,133,260 (62.16%)	3,011 (0.17%)	851,091 (46.74%)	967,189 (53.12%)	2,583 (0.14%)

-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 가구원수 및 방, 거실, 식사용 방수별 가구



〈그림 4〉 식사용 방수별 가구를

3. 지역별 단독주택의 반지하 가구수

지역별 단독주택의 반지하 가구수를 살펴보면, 서울 8.81%, 인천 4.48%, 경기 3.72%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반지하 가구수가 월등하게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10년 일반가구수는 8,425,038가구에서 9,085,141가구로 증가했지만, 반지하 가구수는 27,234가구에서 25,286가구로 감소했다. 전국의 반지하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69%에 비해 2010년 2.99%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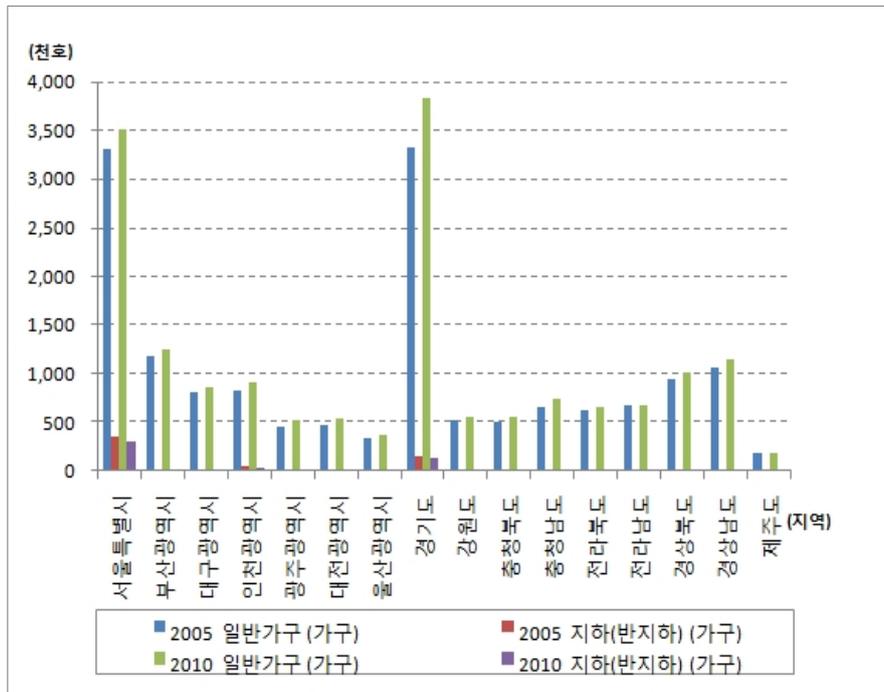


〈표 14〉 단독주택의 반지하 가구수

(단위: 가구)

행정구역별	2005		2010	
	일반가구	지하(반지하)	일반가구	지하(반지하)
서울특별시	3,309,890	355,427(10.74%)	3,504,297	308,660(8.81%)
부산광역시	1,186,378	6,385(0.54%)	1,243,880	6,016(0.48%)
대구광역시	814,585	3,607(0.44%)	868,327	2,837(0.33%)
인천광역시	823,023	44,707(5.43%)	918,850	41,187(4.48%)
광주광역시	460,090	390(0.08%)	515,855	335(0.06%)
대전광역시	478,865	5,976(1.25%)	532,643	5,268(0.99%)
울산광역시	339,095	515(0.15%)	373,633	489(0.13%)
경기도	3,329,177	159,281(4.78%)	3,831,134	142,556(3.72%)
강원도	520,628	2,057(0.4%)	557,751	1,832(0.33%)
충청북도	505,203	1,883(0.37%)	558,796	1,583(0.28%)
충청남도	659,871	2,013(0.31%)	749,035	1,987(0.27%)
전라북도	619,958	671(0.11%)	659,946	812(0.12%)
전라남도	666,319	201(0.03%)	681,431	521(0.08%)
경상북도	938,840	588 (0.06%)	1,005,349	770(0.08%)
경상남도	1,056,007	2,255(0.21%)	1,151,172	2,087(0.18%)
제주특별자치도	179,199	693(0.39%)	187,323	749(0.4%)
총 합	15,887,128	586,649(3.69%)	17,339,422	517,689(2.99%)

※ 통계청_인구/가구부문 거주총별 가구



〈그림 5〉 단독주택의 반지하 가구수



제8주제 :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주택 보급 방향

| 박 신 영 |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규모, 저출산, 고령화, 주택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사항, 정책시사점 등을 발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수립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분석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 중 이 장에서는 가구원수의 감소현상을 심층분석하고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택보급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가구원수 및 가구의 연령, 성별, 구성상의 특징이 종전과 달라졌다면 주택의 공급도 달라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가구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주택의 규모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도 저출산 고령화의 세태에 따라 고령세대주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전통적인 주거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택유형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가구원수의 감소 추이, 둘째, 가구원수별 가구특성, 셋째, 가구원수별 주거상황과 임대료, 자가용 보유, 넷째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섯째 지역별 주거사용 실태와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새로운 주택유형의 보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가구원수의 감소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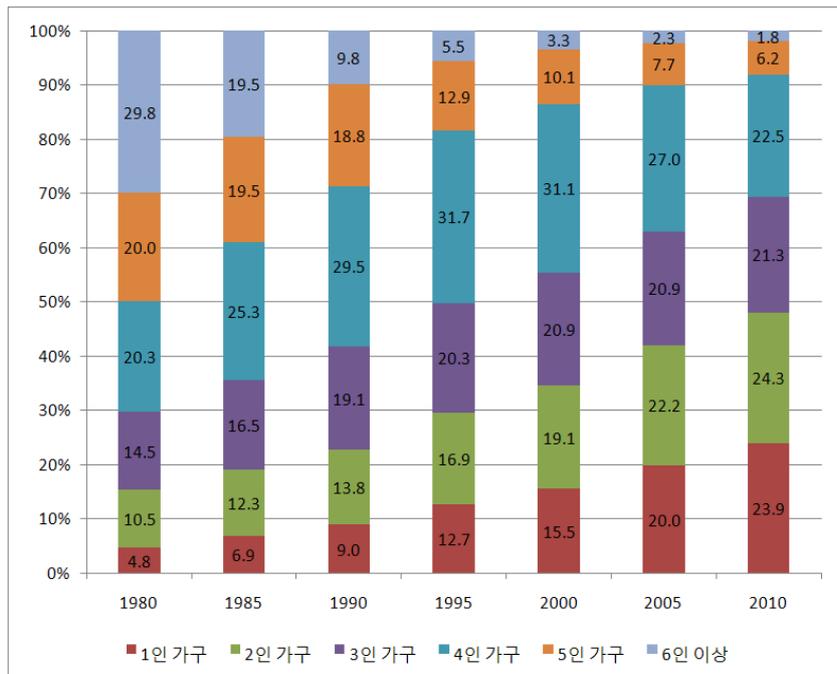
1980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원수의 변화추세를 보면, 1980년에는 5인 이하중 가구원수가 많은 비율로 순서를 정하면 4인 → 5인 → 3인 → 2인 → 1인이었으며 이 체제는 1985년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에는 4인 이하 가구와 5인 이하 가구수의 차이는 2만여 가구에 불과하였다. 1990년이 되면 4인 → 3인 → 5인 → 2인 → 1인으로 변화되며, 1995년까지는 유지된다. 2000년이 되면 4인 → 3인 → 2인 → 1인 → 5인 순서로 변화된다. 2005년 힘겹게 4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나, 4인 → 2인 → 3인 → 1인 → 5인 순서가 되면서 2인 가구가 3인 가구보다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2인 → 1인 → 4인 → 3인 → 5인 순서로 변화된다. 그런데 2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숫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증가속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순서도



증가세를 감안할 때,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가구원 수별 일반가구 수 변화 추이(1980~2010)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인 가구	382,743	660,941	1,021,481	1,642,406	2,224,433	3,170,675	4,142,165
2인 가구	839,839	1,175,532	1,565,713	2,184,626	2,730,548	3,520,245	4,205,052
3인 가구	1,152,569	1,579,668	2,163,272	2,636,254	2,987,405	3,325,162	3,695,765
4인 가구	1,619,742	2,421,627	3,350,728	4,110,359	4,447,170	4,289,035	3,898,035
5인 가구	1,597,002	1,862,908	2,140,073	1,666,981	1,442,895	1,222,126	1,078,444
6인 이상	2,377,306	1,870,685	1,113,273	717,555	479,356	359,585	319,957
합계	7,969,201	9,571,361	11,354,540	12,958,181	14,311,807	15,887,128	17,339,422



〈그림 1〉 해당연도의 가구원 수별 비율 (1980~2010)

1인가구가 2인가구보다 많아지는 것은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일본의 경우 2인가구의 비율이 29.1%, 1인가구의 비율이 24.9%로 2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 2009년 미국의 경우 2인 가구의 비율이 33.2%인 반면, 1인 가구의 비율은 26.9%이다. 또한 2010년 영국의 경우도 2인 가구의 비율이 35.2%인 반면 1인가구의 비율은 29.0%였기 때문이다.

가구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1980년 4.62인이었던 평균가구원수가 30년이 지난 2010년에는 2.69인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1인가구와 2인 가구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1인과 2인 가구를



합한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아직은 선진국의 평균가구원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다. 2008년 일본의 평균 가구원수는 2.55인, 미국의 2009년 주택내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53인, 영국은 2010년 2.36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평균 가구원수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평균가구원수의 변화는 획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인구구조변화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평균가구원수가 4.28인에서 2.55인까지 줄어드는데 걸린 기간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의 45년이였다. 우리나라의 4.62인에서 2.69인까지 줄어드는데 소요된 기간은 30년이였다.

〈표 2〉 가구 수 및 평균 가구원 수(1980~2010)

(단위 : 천가구, 명)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A)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일반가구원(B)	36,843	39,773	42,783	44,028	44,712	45,737	46,651	
평균 가구원수	전국(B/A)	4.62	4.16	3.77	3.40	3.12	2.88	2.69

출처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가구주택)결과 보도자료

Ⅲ. 가구원수별 가구특성

1. 가구원수별 가구구성형태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형태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가구의 가구구성 형태를 통계청의 2010년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1980년 이후 20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첫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친족가구의 비율이 1980년 93.7%에서 2010년 74.9%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변화가 주로 부부로 구성되는 1세대 가구의 비율이 1980년 8.3%에서 2010년 17.5%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세 번째 변화는 1인 가구와 부부가구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감소비율이 2000년대에 들어 더욱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변화는 3세대 가구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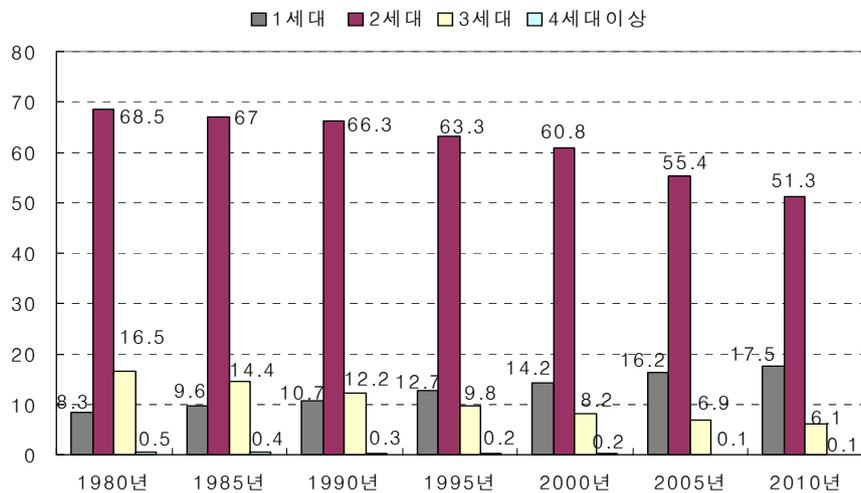


〈표 3〉 세대구성(1980~2010)

(단위 : 천가구,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친족가구	7,470 (93.7)	8,751 (91.4)	10,167 (89.5)	11,133 (85.9)	11,928 (83.3)	12,491 (78.6)	12,995 (74.9)
1세대	658 (8.3)	916 (9.6)	1,220 (10.7)	1,640 (12.7)	2,034 (14.2)	2,575 (16.2)	3,027 (17.5)
2세대	5,457 (68.5)	6,412 (67.0)	7,529 (66.3)	8,200 (63.3)	8,696 (60.8)	8,807 (55.4)	8,892 (51.3)
3세대	1,312 (16.5)	1,383 (14.4)	1,383 (12.2)	1,266 (9.8)	1,176 (8.2)	1,093 (6.9)	1,063 (6.1)
4세대이상	42 (0.5)	40 (0.4)	35 (0.3)	26 (0.2)	22 (0.2)	16 (0.1)	13 (0.1)
1인가구	383 (4.8)	661 (6.9)	1,021 (9.0)	1,642 (12.7)	2,224 (15.5)	3,171 (20.0)	4,142 (23.9)
비친족가구	117 (1.5)	160 (1.7)	166 (1.5)	183 (1.4)	159 (1.1)	226 (1.4)	202 (1.2)

출처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가구주택)결과 보도자료, 2011.7



〈그림 2〉 친족가구 중 세대구성별 분포(1980~2010)

다음으로 1995년부터 2010년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2인 가구의 경우 1세대 가구의 비율이 1995년 70.8%에서 2010년 69.4%로 약간 줄어든 반면, 2세대 가구의 비율은 1995년 24.3%에서 2010년 26.9%로 약간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의 비율이 1995년 4.9%에서 2010년 3.6%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1세대 가구의 비율이 1995



년 2.8%에서 2010년 2.4%로 약간 줄어든 반면, 2세대 가구의 비율은 1995년 93.36에서 2010년 94.4%로 약간 증가하였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3세대 가구의 비율이 1995년 1.8%에서 2010년 2.3%로 늘어났으며, 비혈연가구의 비율이 1995년 1.7%에서 2010년 0.9%로 감소하였다. 4인 가구의 경우 1세대 가구의 비율이 1995년 0.4%로 2010년 0.4%로 같으나, 2세대 가구의 비율은 1995년 94.2%에서 2010년 91.1%로 약간 감소하였고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1995년 6.0%에서 2010년 8.2%로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의 비율은 1995년 0.4%에서 2010년 0.3%로 감소하였다. 5인 가구의 경우 1세대 가구의 비율이 1995년 0.2%에서 2010년 0.3%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2세대 가구의 비율은 1995년 67.4%에서 2010년 59.4%로 약간 감소하였고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1995년 31.7%에서 2010년 39.7%로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의 비율은 1995년 0.7%에서 2010년 0.6%로 감소하였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세대 가구의 비율이 1995년 0.1%에서 2010년 0.6%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2세대 가구의 비율은 1995년 34.2%에서 2010년 24.2%로 크게 감소하였고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1995년 65.5%에서 2010년 75.4%로 증가하였다.

가구원수별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로 흥미로운 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비혈연 가구가 감소한 것과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가 감소하였지만 가구원 3인 이상 가구에서는 3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 4〉 가구원수별 가구유형

(단위 : %)

		1995	2000	2005	2010
1인	1인가구	1,642,406(100)	2,224,433(100)	3,170,675(100)	4,142,165(100)
2인	1세대가구	1,546,772(70.8)	1,932,987(70.8)	2,470,893(70.2)	2,919,856(69.4)
	2세대가구	531,834(24.3)	684,420(25.1)	886,361(25.2)	1,133,071(26.9)
	비혈연가구	106,020(4.9)	113,141(4.1)	163,291(4.6)	152,125(3.6)
3인	1세대가구	74,302(2.8)	81,585(2.7)	86,704(2.6)	87,995(2.4)
	2세대가구	2,468,331(93.6)	2,818,196(94.3)	3,126,173(94.0)	3,489,027(94.4)
	3세대이상가구	47,725(1.8)	59,423(2.0)	73,630(2.2)	86,650(2.3)
	비혈연가구	45,896(1.7)	28,201(0.9)	38,655(1.2)	32,093(0.9)
4인	1세대가구	15,097(0.4)	14,582(0.3)	13,096(0.3)	14,742(0.4)
	2세대가구	3,830,974(93.2)	4,152,590(93.4)	3,960,279(92.3)	3,551,996(91.1)
	3세대이상가구	246,374(6.0)	269,262(6.1)	300,570(7.0)	319,665(8.2)
	비혈연가구	17,914(0.4)	10,736(0.2)	15,090(0.4)	11,634(0.3)
5인	1세대가구	3,512(0.2)	3,694(0.3)	3,082(0.3)	3,589(0.3)
	2세대가구	1,124,180(67.4)	914,579(63.4)	748,943(61.3)	640,615(59.4)
	3세대이상가구	528,055(31.7)	517,476(35.9)	461,191(37.7)	427,829(39.7)
	비혈연가구	11,234(0.7)	7,146(0.5)	8,910(0.7)	6,411(0.6)
6인 이상	1세대가구	751(0.1)	915(0.2)	942(0.3)	1,212(0.4)
	2세대가구	245,168(34.2)	126,297(26.3)	85,570(23.8)	77,513(24.2)
	3세대이상가구	469,710(65.5)	352,137(73.5)	273,073(75.9)	241,232(75.4)
	비혈연가구	1,926(0.3)	-	-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가구원수까지 파악할 수는 없으나 혼자 사는지 부부로 파악되는 1세대 가구로 사는지,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사는지를 KOSIS 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1990년 65세 이상 고령자중 1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8.9%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이 비율이 26.2%로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인 가구의 비율이 급등한 것에는 2005년까지 부부로 거주하던 가구중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1인 가구가 된 가구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고령자 1세대가구(주로 부부가구)의 비율이 2005년 33.0%였다가 2010년 27.1%로 하락한 점과 2005년에 비해서 2010년 70세 이상 여성과 남성 1인 가구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¹⁾ 종전에는 고령자가 혼자 살게 되면, 자식과 합치고 싶다고 했지만²⁾ 이제는 부부만 거주하다가 배우자를 상실하면 혼자 사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단위 : %)

	1990	2000	2005				2010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가구	8.9	16.2	18.1	14.1	20.8	20.4	26.2	22.5	27.7	27.8
1세대가구	16.9	28.7	33.0	39.6	33.1	15.9	27.1	32.0	28.8	15.5
2세대가구	23.4	23.9	24.9	28.6	21.2	27.0	25.7	30.4	22.4	26.7
3세대이상가구	49.6	30.8	23.4	17.3	24.5	36.1	20.7	14.6	20.7	29.5
비혈연가구	1.2	0.4	0.5	0.4	0.4	0.5	0.5	0.4	0.4	0.5

자료 : KOSIS 1990년은 고령자 통계, 2000년, 2005년, 2010년 고령자 표본 10% 자료 활용하여 작성

2. 가구원수별 가구주 연령 특성

가구원수별 가구주 연령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2010년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소개된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 자료를 소개하면 2010년 기준 30대 미만 가구주는 1인, 30~40대 가구주는 4인, 50대 가구주는 3인, 60대 이상 가구주는 2인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가족형성단계(life stage)에 따라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수가 달라지는 현상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가구증가율을 보면 2005년 1,588만 7천 가구가 2010년 1,733만 9천 가구로 1.09배 늘어났다. 70세 이상 1인 남성과 여성 가구의 증가율은 각각 1.70배, 1.41배로 다른 연령층의 가구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

2) 보건복지부의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배우자만 있으면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부끼리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반면,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와의 동거나 노인요양시설 이용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5: 313).



〈표 6〉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 수(2010)

(단위 : 천가구, %)

	합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합 계	17,339 (100.0)	4,142 (23.9)	4,205 (24.3)	3,696 (21.3)	3,898 (22.5)	1,398 (8.1)
20세미만	68 (100.0)	49 (71.3)	15 (21.8)	3 (4.6)	1 (1.6)	1 (0.8)
20~29세	1,302 (100.0)	763 (58.6)	329 (25.3)	144 (11.1)	52 (4.0)	15 (1.1)
30~39세	3,368 (100.0)	791 (23.5)	596 (17.7)	796 (23.6)	915 (27.2)	270 (8.0)
40~49세	4,432 (100.0)	628 (14.2)	566 (12.8)	954 (21.5)	1,706 (38.5)	577 (13.0)
50~59세	3,773 (100.0)	591 (15.7)	933 (24.7)	1,055 (28.0)	899 (23.8)	295 (7.8)
60~69세	2,364 (100.0)	527 (22.3)	936 (39.6)	521 (22.0)	237 (10.0)	143 (6.1)
70세이상	2,033 (100.0)	793 (39.0)	832 (40.9)	223 (11.0)	88 (4.3)	97 (4.8)

출처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가구주택)결과 보도자료, 2011.7 참조된 고령자통계 발표자료

다음으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가구원수별 가구주 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2005년까지만 해도 1인 가구중에는 20세 ~ 29세 사이가 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1인 가구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70세 이상인 고령자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과 2010년 고령자 부부가구가 감소한 반면 고령 1인 가구가 급증했음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고령 부부가구가 혼자된 경우 종전에는 자식과 합치는 등 혼자 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배우자를 사별하면 고령자 혼자 사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짐작된다. 1인 가구의 또 다른 변화는 50세 ~ 5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11.1%에서 2005년 11.5%로 증가, 2010년 14.3%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50대가 자녀 출가 연령대 이기는 하지만 50대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가족구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유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2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만 해도 60세~6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50세 ~ 5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2.2%로 60세~69세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3인가구의 경우도 2000년에는 30세~39세의 세대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5년에는 30세~39세, 50~5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4.9%로 가장 높았음. 하지만 2010년에는 50세~5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4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40세~49세의 비율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은 시기별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40세~49세의 가구주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구주중 가장 연령대가 많은 집단이 40세~49세이다.



〈표 7〉 가구원수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	2000	2005	2010
1인	20세미만 / 20~29	46,576(2.1) / 514,200(23.1)	44,439(1.4) / 678,816(21.4)	97,124(2.3) / 763,073(18.4)
	30~39 / 40~49	415,284(18.7) / 295,010(13.3)	629,448(19.9) / 474,100(15.0)	790,842(19.1) / 628,315(15.2)
	50~59 / 60~69	246,105(11.1) / 351,574(15.8)	366,035(11.5) / 430,030(13.6)	590,721(14.3) / 527,249(12.7)
	70세 이상	355,008(16.0)	547,807(17.3)	793,381(19.2)
2인	20세미만 / 20~29	24,162(0.9) / 401,972(14.7)	19,875(0.6) / 382,243(10.9)	29,636(0.7) / 328,868(7.8)
	30~39 / 40~49	418,793(15.3) / 343,410(12.6)	529,576(15.0) / 501,645(14.2)	595,736(14.2) / 565,891(13.5)
	50~59 / 60~69	492,288(18.0) / 673,829(24.7)	678,613(19.3) / 821,026(23.3)	932,582(22.2) / 935,512(22.2)
	70세 이상	376,028(13.8)	587,567(16.7)	831,620(19.8)
3인	20세미만 / 20~29	6,182(0.2) / 286,824(9.6)	4,341(0.1) / 175,705(5.3)	6,191(0.2) / 143,897(3.9)
	30~39 / 40~49	838,975(28.1) / 718,420(24.0)	828,093(24.9) / 869,193(26.1)	795,810(21.5) / 954,297(25.8)
	50~59 / 60~69	641,890(21.5) / 393,414(13.2)	827,584(24.9) / 461,511(13.9)	1,055,387(28.6) / 520,589(14.1)
	70세 이상	101,688(3.4)	158,735(4.8)	222,684(6.0)
4인	20세미만 / 20~29	1,799(0.0) / 118,249(2.7)	1,352(0.0) / 62,368(1.5)	2,177(0.1) / 51,700(1.3)
	30~39 / 40~49	1,635,088(36.8) / 1,752,042(39.4)	1,254,593(29.3) / 1,883,903(43.9)	915,299(23.5) / 1,705,829(43.8)
	50~59 / 60~69	691,427(15.5) / 204,685(4.6)	791,412(18.5) / 227,400(5.3)	898,533(23.1) / 237,496(6.1)
	70세 이상	43,866(1.0)	68,007(1.6)	88,092(2.3)
5인	20세미만 / 20~29	1,135(0.1) / 26,634(1.8)	757(0.1) / 15,001(1.2)	1,007(0.1) / 11,990(1.1)
	30~39 / 40~49	383,691(26.6) / 554,785(38.4)	280,338(22.9) / 526,468(43.1)	217,887(20.2) / 470,933(43.7)
	50~59 / 60~69	329,819(22.9) / 111,201(7.7)	247,371(20.2) / 102,912(8.4)	233,966(21.7) / 89,044(8.3)
	70세 이상	35,625(2.5)	49,281(4.0)	54,118(5.0)
6인 이상	20세미만 / 20~29	62(0.0) / 7,353(1.5)	26(0.0) / 3,519(1.0)	52(0.0) / 2,700(0.8) 52,570(16.4)
	30~39 / 40~49	96,353(20.1) / 143,181(29.9)	64,070(17.8) / 114,020(31.7)	/106,479(33.3)
	50~59 / 60~69	109,723(22.9) / 85,600(17.9)	67,724(18.8) / 68,385(19.0)	61,439(19.2) / 54,108(16.9)
	70세 이상	37,084(7.7)	41,841(11.6)	42,635(13.3)
계	20세미만 / 20~29	79,916(0.6) / 1,355,232(9.5)	70,790(0.4) / 1,317,652(8.3)	136,187(0.8) / 1,302,228(7.5)
	30~39 / 40~49	3,788,164(26.5) / 3,806,848(26.6)	3,586,116(22.6) / 4,369,329(27.5)	3,368,144(19.4) / 4,431,744(25.6)
	50~59 / 60~69	2,511,252(17.5) / 1,820,303(12.7)	2,978,739(18.7) / 2,111,264(13.3)	3,772,628(21.8) / 2,363,998(13.6)
	70세 이상	949,299(6.6)	1,453,238(9.1)	2,032,530(11.7)

IV. 가구원수별 주거특성

1. 가구원수별 주택점유형태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구원수별 주거점유형태를 보면, 가구원수별로 임차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에 숫자가 소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가율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 4-5인 가구의 자가거주율이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월세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1인 가구를 보면 1995년 이미 월세 거주자의 비율이 21.9%로 매우 높으며 이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해서 2010년에는 36.3%로 상승하였다. 반면 4인 가구의 월세 거주율은 1995년 8.9%였으며, 2010년에는 약간 상승했으나 10.8% 수준을 나타냈다. 월세 거주가구가 증가한 반면 감소한 것은 사글세 거주가구로 1995년 7.2%였던 1인 가구중 사글세 거주가구 비율이 2010년에는 2.6%로 감소하였다. 2010년 사글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2%에 불과하다.

〈표 8〉 가구원수별 임차형태

(단위 : 가구수(%))

		1995	2000	2005	2010
1인	전세	458,796(27.9)	629,491(28.3)	702,318(22.2)	874,514(21.1)
	월세	359,438(21.9)	573,319(25.8)	1,055,467(33.3)	1,501,649(36.3)
	사글세	119,053(7.2)	109,544(4.9)	104,090(3.3)	108,398(2.6)
2인	전세	582,998(26.7)	662,378(24.3)	642,527(18.3)	785,323(18.7)
	월세	292,246(13.4)	366,978(13.4)	583,470(16.6)	712,930(17.0)
	사글세	69,299(3.2)	54,676(2.0)	44,178(1.3)	43,473(1.0)
3인	전세	858,941(32.6)	881,546(29.5)	721,234(21.7)	840,345(22.7)
	월세	303,465(13.9)	332,496(11.1)	450,224(13.5)	509,404(13.8)
	사글세	49,933(1.9)	40,537(1.4)	26,976(0.8)	28,576(0.8)
4인	전세	1,174,819(28.6)	1,256,527(28.3)	933,740(21.8)	894,584(22.5)
	월세	367,285(8.9)	373,393(8.4)	442,026(10.3)	421,309(10.8)
	사글세	50,734(1.2)	40,044(0.9)	25,017(0.6)	22,982(0.6)
5인	전세	330,150(19.8)	293,595(20.3)	200,626(16.4)	213,584(19.7)
	월세	109,037(6.5)	98,665(6.8)	115,826(9.5)	117,015(10.8)
	사글세	14,927(0.9)	13,113(0.9)	7,661(0.6)	7,905(0.7)
6인 이상	전세	95,365(12.7)	59,934(12.5)	37,770(10.5)	46,546(14.7)
	월세	27,030(3.8)	21,224(4.4)	24,813(6.9)	27,288(8.6)
	사글세	4,296(0.6)	3,188(0.7)	1,723(0.5)	2,248(0.7)
계	전세	3,497,069(27.0)	3,783,471(26.4)	3,238,215(20.4)	3,654,896(21.1)
	월세	1,460,790(11.3)	1,766,115(12.3)	2,671,826(16.8)	3,289,595(19.0)
	사글세	308,242(2.4)	261,102(1.8)	209,645(1.3)	213,582(1.2)

※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임차료(10% 표본)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점유형태를 전체가구주 연령대별 점유형태와 비교하면, 29세 미만 1인 가구는 29세 미만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세부터 49세 미만의 1인 가구는 여전히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



지만 30세부터 49세 미만의 일반가구는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다른 점유형태보다 상승하기 시작한다. 50세 이상인 가구주의 경우는 1인 가구와 일반 가구 전부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점유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 1인가구의 연령별 주택 소유형태(2010년)

(단위: 가구(%))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20세 미만	1인가구	1,982(4.1)	5,209(10.7)	29,129(60.0)	6,066(12.5)	5,224(10.8)	974(2.0)
	전체	3,915(5.7)	7,969(11.7)	39,159(57.5)	7,802(11.4)	6,801(10.0)	2,504(3.7)
20~29세	1인가구	45,850(6.0)	184,972(24.2)	426,261(55.9)	48,798(6.4)	35,798(4.7)	21,394(2.8)
	전체	154,877(11.9)	370,865(28.5)	618,338(47.5)	60,460(4.6)	46,869(3.6)	50,819(3.9)
30~39세	1인가구	123,641(15.6)	240,915(30.5)	348,601(44.1)	33,870(4.3)	13,888(1.8)	29,927(3.8)
	전체	1,238,884(36.8)	1,153,758(34.3)	762,034(22.6)	55,543(1.6)	30,664(0.9)	127,261(3.8)
40~49세	1인가구	139,157(22.1)	147,932(23.5)	252,717(40.2)	40,599(6.5)	19,311(3.1)	28,599(4.6)
	전체	2,319,295(52.3)	1,069,611(24.1)	791,828(17.9)	81,942(1.8)	51,684(1.2)	117,388(2.6)
50~59세	1인가구	204,729(34.7)	114,394(19.4)	183,573(31.1)	39,159(6.6)	20,422(3.5)	28,445(4.8)
	전체	2,406,209(63.8)	631,254(16.7)	540,183(14.3)	71,140(1.9)	45,367(1.2)	78,475(2.1)
60~69세	1인가구	292,001(55.4)	89,022(16.9)	94,861(18.0)	21,223(4.0)	13,235(2.5)	16,907(3.2)
	전체	1,750,401(74.0)	288,723(12.2)	228,085(9.6)	34,984(1.5)	24,324(1.0)	37,481(1.6)
70세 이상	1인가구	515,277(64.9)1,51	120,461(15.2)	91,155(11.5)	20,344(2.6)	15,849(2.0)	30,295(3.8)
	전체	6,274(74.6)	244,210(12.0)	168,584(8.3)	29,712(1.5)	24,015(1.2)	49,734(2.4)

※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1인가구(10% 표본)

2. 가구원수별 주택(거처)의 유형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원수별 거처의 종류를 살펴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가구원수별로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거처종류의 변화에는 아파트 거주가구가 해가 갈수록 많아졌다는 것이다. 가구원수별 차이로는 1995년과 2000년이 가구원수를 1-3인을 묶어서 집계하고 있어 2005년과 2010년 사이의 변화로 언급하면 단독주택 거주가구가 감소한 반면, 아파트거주가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이회의 거처 에 거주하는 가구도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경우 1995년에 비해 단독 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줄어든 반면 오피스텔과 기타(고시원, 기숙사 등) 거주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 현재 1인 가구에서 접하는 비율이 25.3%³⁾가 되는 60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이 단독에서 아파트로 감소된 것과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이 최근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30쪽 자료 참고



〈표 10〉 가구원수별 거주하는 거처 유형

(단위 : %)

	거처종류	1995	2000	2005	2010
1인	단독주택			2,056,036(64.8)	2,459,701(59.4)
	아파트			668,061(21.1)	1,056,822(25.5)
	연립주택			63,861(2.0)	82,651(2.0)
	다세대주택			169,210(5.3)	235,070(5.7)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74,848(2.4)	69,015(1.7)
			138,661(4.4)	238,906(5.8)	
2인	단독주택	<1~3인 가구> 1,650,112(47.5)	<1~3인 가구> 1,878,545(37.8)	1,882,800(53.5)	1,945,064(46.3)
	아파트	1,314,522(37.9)	2,344,661(47.2)	1,184,205(33.6)	1,721,065(40.9)
	연립주택	261,381(7.5)	367,012(7.4)	109,797(3.1)	126,583(3.0)
	다세대주택	134,902(3.9)	219,649(4.4)	233,210(6.6)	294,772(7.0)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110,717(3.2)	157,164(3.2)	66,693(1.9)	54,431(1.3)
		-	-	43,840(1.2)	63,137(1.5)
3인	단독주택			1,263,515(38.0)	1,132,112(30.6)
	아파트			1,584,453(47.7)	2,072,440(56.1)
	연립주택			125,444(3.8)	121,973(3.3)
	다세대주택			282,006(8.5)	304,451(8.2)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52,556(1.6)	38,186(1.0)
				17,188(0.5)	26,603(0.7)
4인	단독주택	643,364(24.6)	585,038(17.6)	1,224,887(28.6)	876,716(22.5)
	아파트	1,499,586(57.3)	2,186,631(65.8)	2,474,472(57.6)	2,545,177(65.3)
	연립주택	276,230(10.6)	302,610(9.1)	164,653(3.8)	123,369(3.2)
	다세대주택	126,610(4.9)	164,961(5.0)	356,414(8.3)	301,008(7.7)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71,208(2.7)	85,027(2.6)	58,141(1.4)	33,540(0.9)
		-	-	12,468(0.3)	18,229(0.5)
5인	단독주택	512,755(42.2)	413,423(34.7)	450,765(36.9)	315,160(29.2)
	아파트	487,643(40.1)	574,328(48.2)	596,754(48.8)	626,130(58.1)
	연립주택	123,603(10.2)	104,220(8.8)	49,694(4.1)	36,871(3.4)
	다세대주택	50,619(4.2)	52,022(4.4)	99,797(8.2)	82,603(7.7)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41,389(3.4)	46,585(3.9)	21,437(1.8)	12,308(1.1)
		-	-	3,679(0.3)	5,372(0.5)
6인 이상	단독주택	1,530,874(80.6)	1,192,459(80.7)	186,125(51.8)	130,941(40.9)
	아파트	152,757(8.0)	125,700(8.5)	123,048(34.2)	147,715(46.2)
	연립주택	72,958(3.8)	39,030(2.6)	13,499(3.8)	11,041(3.5)
	다세대주택	23,225(1.2)	16,485(1.1)	27,844(7.7)	23,686(7.4)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119,474(6.3)	103,794(7.0)	8,048(2.2)	4,879(1.5)
		-	-	1,021(0.3)	1,695(0.5)
계	단독주택	4,337,105(47.1)	4,069,463(37.1)	7,064,128(44.4)	6,859,694(39.6)
	아파트	3,454,508(37.5)	5,231,319(47.7)	6,628,993(41.7)	8,169,349(47.1)
	연립주택	734,172(8.0)	812,872(7.4)	526,948(3.3)	502,488(2.9)
	다세대주택	336,356(3.7)	453,117(4.1)	1,168,481(7.4)	1,241,590(7.2)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342,788(3.7)	392,571(3.6)	281,721(1.8)	212,359(1.2)
		-	-	216,857(1.4)	353,942(2.0)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거처유형과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이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29세 이하보다 30세-39세 1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2010년 이 비율은 50.6%였다.



〈표 11〉 1인가구의 연령별 거처유형

	거처종류	2000	2005	2010
20세 미만	단독주택	36,342(82.3)	34,583(77.8)	36,528(75.2)
	아파트	3,911(8.9)	3,613(8.1)	3,748(7.7)
	연립주택	872(2.0)	386(0.9)	284(0.6)
	다세대주택	452(1.0)	1,797(4.0)	1,665(3.4)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1,788(4.1)	1,407(3.2)	1,104(2.3)
			769(1.7)	2,653(6.0)
20~29	단독주택	371,232(73.2)	464,728(68.5)	503,790(66.0)
	아파트	83,283(16.4)	96,141(14.0)	108,339(14.2)
	연립주택	13,609(2.7)	8,137(1.2)	7,329(1.0)
	다세대주택	10,316(2.0)	41,087(6.1)	41,158(5.4)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20,281(4.0)	15,381(2.3)	13,486(1.8)
		8,228(1.6)	54,342(8.0)	88,891(11.7)
30~39	단독주택	250,318(61.4)	349,358(55.5)	400,394(50.6)
	아파트	102,537(25.2)	165,513(26.3)	234,373(29.6)
	연립주택	15,335(3.8)	11,744(1.9)	13,044(1.6)
	다세대주택	11,648(2.9)	44,557(7.1)	57,664(7.3)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20,073(4.9)	15,011(2.4)	12,535(1.6)
		7,601(1.0)	43,265(6.9)	72,832(9.2)
40~49	단독주택	175,143(59.7)	276,209(58.3)	335,528(53.4)
	아파트	69,717(23.8)	123,946(26.1)	192,252(30.6)
	연립주택	12,735(4.3)	11,214(2.4)	13,183(2.1)
	다세대주택	7,174(2.4)	27,863(5.9)	39,599(6.3)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21,909(7.5)	15,609(3.3)	12,580(2.0)
		6,692(2.3)	19,259(4.1)	35,173(5.6)
50~59	단독주택	164,976(65.0)	219,791(60.0)	323,553(54.8)
	아파트	49,556(19.5)	93,920(25.7)	183,310(31.0)
	연립주택	11,098(4.4)	10,487(2.9)	15,575(2.6)
	다세대주택	5,508(2.2)	19,272(5.3)	34,786(5.9)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18,332(7.2)	13,032(3.6)	13,330(2.3)
		4,428(1.7)	9,533(2.6)	20,167(3.4)
60~64 (2000) 60~69 (2005) 60~69 (2010)	단독주택	120,984(73.1)	292,772(68.1)	309,622(58.7)
	아파트	26,712(16.1)	91,887(21.4)	153,337(29.1)
	연립주택	5,981(3.6)	11,554(2.7)	15,660(3.0)
	다세대주택	2,810(1.7)	19,412(4.5)	30,583(5.8)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7,266(4.4)	8,797(2.0)	8,899(1.7)
		1,817(1.1)	5,608(1.3)	9,148(1.7)
65세이상 (2000) 70세이상 (2005) 70세이상 (2010)	단독주택	443,686(80.4)	418,595(76.4)	550,286(68.4)
	아파트	71,002(12.9)	94,041(17.2)	181,463(22.9)
	연립주택	13,961(2.5)	10,339(1.9)	17,576(2.2)
	다세대주택	6,403(1.2)	15,222(2.8)	29,615(3.7)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13,127(2.4)	5,609(1.0)	7,081(0.9)
		3,898(0.7)	4,001(0.7)	7,360(0.9)
계	단독주택	1,563,367(70.3)	2,056,036(64.8)	2,459,701(59.4)
	아파트	406,810(18.3)	668,061(21.1)	1,056,822(25.5)
	연립주택	73,613(3.3)	63,861(2.0)	82,651(2.0)
	다세대주택	44,332(2.0)	169,210(5.3)	235,070(5.7)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이외의거처	102,878(4.6)	74,846(2.4)	69,015(1.7)
		33,433(1.5)	138,661(4.4)	238,906(5.8)

※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1인가구



3. 가구원수별 주택 사용면적 및 방수

가구원수별 주택사용면적과 방수를 1995년부터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 보고자 하였으나 2000년까지는 가구원수가 1~3인으로 묶여 있고, 면적은 구간 자료로 제시되어 있어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었다. 먼저 1995년에는 4인 이상 가구중 7명 미만(20㎡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일부 있었으나 2010년에는 이러한 가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조차 2010년 7명 미만(20㎡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대폭 줄어들어 0.8%에 불과하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은 40㎡~60㎡ 구간으로 전체 가구의 36.0%가 거주하고 있었다. 2인 가구 역시 2010년 7명 미만(20㎡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대폭 줄어들어 0.2%에 불과하며,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60㎡~85㎡ 구간으로 전체 가구의 35.4%가 거주하고 있었다. 3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도 60㎡~85㎡ 구간으로 전체 가구의 39.1%가 거주하고 있으며, 4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도 60㎡~85㎡ 구간으로 전체 가구의 43.4%가 거주하고 있었다.

〈표 12〉 거주인수별 주택면적

(단위: %)

	주택면적	1995	2000	2005	주택면적	2010
1인	7평미만/7~9/9~14평	<1~3인> 1.0/4.2/19.3	<1~3인> 0.6/3.3/16.4	1.4/6.2/24.8	20㎡이하/20~40/40~60㎡	0.8/26.4/36.0
	14~19/19~29/29~39평			33.0/27.0/5.2	60~85/85~100/100~130㎡	25.4/5.9/3.3
	39~49/49~69/69평이상			1.4/0.7/0.2	130~165/165~230/230㎡초과	1.6/0.4/0.1
2인	7평미만/7~9/9~14평	<1~3인> 31.9/33.8/6.4	<1~3인> 2.5/1.1/0.2	0.4/2.4/12.6	20㎡이하/20~40/40~60㎡	0.2/10.6/32.6
	14~19/19~29/29~39평			30.5/38.4/10.2	60~85/85~100/100~130㎡	35.4/9.3/6.7
	39~49/49~69/69평이상			2.1/1.0/0.3	130~165/165~230/230㎡초과	4.1/0.9/0.2
3인	7평미만/7~9/9~14평	0.3/1.9/13.3	0.1/1.0/8.8	0.1/1.3/9.3	20㎡이하/20~40/40~60㎡	0.0/6.2/32.6
	14~19/19~29/29~39평			32.0/41.1/10.2	60~85/85~100/100~130㎡	39.1/7.2/8.7
	39~49/49~69/69평이상			3.9/1.7/0.4	130~165/165~230/230㎡초과	4.9/1.1/0.2
4인	7평미만/7~9/9~14평	0.2/1.3/10.1	0.1/0.7/6.3	0.1/0.5/0.1	20㎡이하/20~40/40~60㎡	0.0/3.4/29.6
	14~19/19~29/29~39평			30.3/41.3/8.4	60~85/85~100/100~130㎡	43.4/6.4/10.4
	39~49/49~69/69평이상			3.1/1.2/0.3	130~165/165~230/230㎡초과	5.5/1.2/0.2
5인	7평미만/7~9/9~14평	0.2/1.3/10.1	0.1/0.7/6.3	0.1/0.4/4.5	20㎡이하/20~40/40~60㎡	0.0/2.5/21.4
	14~19/19~29/29~39평			25.5/43.9/11.7	60~85/85~100/100~130㎡	38.9/8.9/14.1
	39~49/49~69/69평이상			4.6/2.1/0.5	130~165/165~230/230㎡초과	10.1/3.3/0.8
6인 이상	7평미만/7~9/9~14평	0.0/0.3/3.0	0.0/0.1/1.6	0.0/0.1/1.1	20㎡이하/20~40/40~60㎡	0.0/0.6/4.4
	14~19/19~29/29~39평			10.3/28.6/18.3	60~85/85~100/100~130㎡	12.6/6.3/14.6
	39~49/49~69/69평이상			14.0/15.3/10.1	130~165/165~230/230㎡초과	20.7/19.8/21.0
계	7평미만/7~9/9~14평	0.5/2.4/13.0	0.4/1.9/11.0	0.3/1.7/9.7	20㎡이하/20~40/40~60㎡	0.2/8.9/29.4
	14~19/19~29/29~39평			26.1/36.2/10.1	60~85/85~100/100~130㎡	35.2/7.3/8.7
	39~49/49~69/69평이상			5.2/4.1/2.3	130~165/165~230/230㎡초과	6.0/2.6/1.8

※ 인구주택총조사 주택총조사



가구원수별 사용방수는 가구원수에 따라 사용방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95년에 비해 2010년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4인 이하인 경우 평균 방수만 보면 과밀은 해소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방이 남아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으며, 단독주택의 방수는 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방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3〉 가구원수별 사용방수

(단위: %)

	1995	2000	2005	2010
1인	1(45.7) 2(28.5) 3(16.6) 4(7.7) 5개 이상(1.5)	1(65.3) 2(25.1) 3(8.8) 4(0.7), 5개 이상(0.1)	1(49.9) 2(31.4) 3(16.8) 4(1.6) 5개 이상(0.3)	1(43.2) 2(32.4) 3(21.6) 4(2.3) 5개 이상(0.4)
2인	1(16.0) 2(27.3) 3(31.1) 4(20.0) 5개 이상(5.6)	1(28.7) 2(43.9) 3(24.2) 4(2.8) 5개 이상(0.5)	1(15.0) 2(38.2) 3(40.1) 4(5.5) 5개 이상(1.1)	1(9.5) 2(34.7) 3(47.2) 4(7.3) 5개 이상(1.4)
3인	1(7.7) 2(19.6) 3(35.7) 4(29.4) 5개 이상(7.6)	1(7.1) 2(47.4) 3(40.8) 4(4.1) 5개 이상(0.6)	1(3.6) 2(34.1) 3(54.0) 4(7.0) 5개 이상(1.2)	1(2.3) 2(26.7) 3(59.7) 4(9.7) 5개 이상(1.6)
4인	1(4.0) 2(14.5) 3(32.4) 4(39.0) 5개 이상(10.1)	1(3.1) 2(35.0) 3(54.8) 4(6.3) 5개 이상(0.8)	1(0.8) 2(25.4) 3(63.8) 4(8.8) 5개 이상(1.3)	1(0.9) 2(18.3) 3(66.5) 4(12.5) 5개 이상(1.9)
5인	1(1.4) 2(10.0) 3(28.7) 4(42.9) 5개 이상(17.0)	1(1.5) 2(24.9) 3(59.5) 4(12.0) 5개 이상(2.1)	1(0.4) 2(18.3) 3(63.9) 4(14.4) 5개 이상(2.9)	1(0.6) 2(13.9) 3(63.6) 4(17.7) 5개 이상(4.2)
6인 이상	1(0.2) 2(5.6) 3(23.4) 4(43.0) 5개 이상(27.9)	1(0.1) 2(14.5) 3(59.4) 4(20.4) 5개 이상(5.7)	1(0.1) 2(10.5) 3(59.2) 4(22.4) 5개 이상(7.8)	1(0.1) 2(8.7) 3(56.9) 4(24.8) 5개 이상(9.6)
총 합	1(11.7) 2(18.6) 3(29.9) 4(30.4) 5개 이상(9.5)	1(18.2) 2(36.0) 3(39.5) 4(5.3) 5개 이상(0.9)	1(14.3) 2(30.4) 3(47.0) 4(7.0) 5개 이상(1.3)	1(13.3) 2(27.0) 3(49.3) 4(8.8) 5개 이상(1.6)

※ 1995년(2% 표본조사), 2000/2005/2010년(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전수조사)

4. 가구원수별 교통수단 보유특성

가구원수별 가구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안으로 자동차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자동차 보유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자동차 보유율이 24.5%에서 29.3%, 2인 가구는 47.7%에서 55.9%, 3인 가구는 71.2%에서 77.0%, 4인가구는 84.0%에서 86.9%, 5인 가구는 84.4%에서 97.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84.9%에서 88.6%로 늘어 2010년 5인 가구의 자동차 보유비율에 비해 낮았다.



〈표 14〉 가구원수별 자동차 보유현황

가구원수	2005	2010
1인	775,416(24.5)	1,214,935(29.3)
2인	1,681,183(47.7)	2,349,141(55.9)
3인	2,369,689(71.2)	2,844,356(77.0)
4인	3,604,505(84.0)	3,387,284(86.9)
5인	1,026,838(84.4)	948,591(97.5)
6인이상	303,711(84.9)	280,292(88.6)
계	9,761,342(61.4)	11,024,599(63.6)

*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주거실태(10% 표본)

5. 가구원수별 임대료

가구원수별 전세금 규모에서 특징적인 것은 가구원수별로 가장 많은 가구의 전세금 규모가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는 점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가구의 비율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2인 가구도 전세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가구의 비율이 33.7%로 가장 많았다. 3인 가구도 전세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가구의 비율이 35.0%로 가장 많았다. 4인 가구도 전세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가구의 비율이 33.0%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는 5인 가구도 전세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가구의 비율이 31.5%로 가장 많았다. 6인 이상 가구는 전세금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인 가구의 비율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28.7%였다.

〈표 15〉 가구원수별 전세금 규모(2010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계
1000만원 미만	19,573(2.2)	8,020(1.0)	4,832(0.6)	4,165(0.5)	949(0.4)	254(0.5)	37,793(1.0)
1000~2000만원	113,496(13.0)	46,242(5.9)	28,991(3.4)	23,291(2.6)	5,901(2.7)	961(2.1)	218,782(6.0)
2000~3000만원	175,507(20.1)	97,238(12.4)	72,463(8.6)	61,748(6.9)	15,727(7.4)	2,800(6.0)	425,483(11.6)
3000~4000만원	151,096(17.3)	98,317(12.5)	83,588(9.9)	78,470(8.8)	18,467(8.6)	3,793(8.1)	433,731(11.9)
4000~5000만원	97,069(11.1)	74,970(9.5)	69,825(8.3)	65,020(7.3)	14,928(7.0)	3,084(6.6)	324,896(8.9)
5000만원~1억	222,186(25.4)	264,527(33.7)	294,280(35.0)	295,000(33.0)	67,206(31.5)	13,365(28.7)	1,156,564(31.6)
1~2억	80,450(9.2)	161,645(20.6)	225,419(26.8)	274,091(30.6)	66,021(30.9)	16,265(34.9)	823,891(22.5)
2~3억	11,026(1.3)	25,038(3.2)	43,779(5.2)	65,165(7.3)	16,649(7.8)	4,230(9.1)	165,887(4.5)
3억이상	4,111(0.5)	9,326(1.2)	17,168(2.0)	27,634(3.1)	7,836(3.7)	1,794(3.9)	67,869(1.9)
평균(만원)	4,987	7,322	8,875	10,092	10,363	11,070	8,024

*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임차료(10% 표본)



V. 주택보급 방향

1. 1-2인 가구를 위한 검토사항

1~2인 가구로 생각되는 1인가구와 1세대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이들의 비율이 2000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주된 세대 유형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도시 지역인 농촌의 경우는 1세대와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에는 41.4%였으나 2010년에는 52.7%로 증가함으로써 주된 가족 구성형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가구구성별 지역별 분포

		2000	2005	2010
도시	1세대가구	1,351,917(12.0)	1,793,328(14.1)	2,181,814(15.5)
	2세대가구	7,231,085(64.4)	7,482,096(58.7)	7,598,530(54.2)
	3세대 이상가구	870,796(7.8)	852,417(6.7)	850,504(6.1)
	1인가구	1,642,618(14.6)	2,439,761(19.1)	3,244,064(23.1)
	비혈연가구	127,060(1.1)	177,340(1.4)	156,157(1.1)
	도시 가구수	11,229,476(78.5)	12,744,940(80.2)	14,031,069(80.9)
비도시	1세대가구	681,846(22.5)	781,391(24.9)	845,580(25.6)
	2세대가구	1,458,997(47.3)	1,325,230(42.2)	1,293,694(39.1)
	3세대 이상가구	327,502(10.6)	256,047(8.1)	224,872(6.8)
	1인가구	581,815(18.9)	730,914(23.3)	898,101(27.1)
	비혈연가구	32,171(1.0)	48,606(1.5)	46,106(1.4)
	비도시 가구수	3,082,331(21.5)	3,142,188(19.8)	3,308,353(19.1)
합계	1세대가구	2,033,763(14.2)	2,574,717(16.2)	3,027,394(17.5)
	2세대가구	8,696,082(60.8)	8,807,326(55.4)	8,892,224(51.3)
	3세대 이상가구	1,198,298(8.4)	1,108,464(7.0)	1,075,376(6.2)
	1인가구	2,224,433(15.5)	3,170,675(20.0)	4,142,155(23.9)
	비혈연가구	159,231(1.1)	225,946(1.4)	202,263(1.2)
	합계	14,311,807	15,887,128	17,339,422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1~2인 가구의 거주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1세대 가구를 보면 2000년에는 단독 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48.9%로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는 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조차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0년 54.9%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2000년 65.7%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아파트나 연립 등의 거주비율이 낮은 것은 그 만큼 1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열악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나 1세대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75.5%로 매우 높다. 단독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



〈표 17〉 지역별 가구구성별 거처유형

		2000	2005	2010
도시	1세대가구	단독(48.9), 아파트(37.0) 연립(5.7), 다세대(3.5) 영업용건물내주택(4.3) 주택 이외의 거처(0.5)	단독(42.2), 아파트(42.7) 연립(3.4), 다세대(8.3) 영업용건물내주택(2.0) 주택 이외의 거처(1.4)	단독(36.0), 아파트(49.6) 연립(3.1), 다세대(8.2) 영업용건물내주택(1.4) 주택 이외의 거처(1.7)
	2세대가구	단독(37.3), 아파트(47.8) 연립(7.0), 다세대(4.1) 영업용건물내주택(3.5) 주택 이외의 거처(0.2)	단독(30.4), 아파트(54.7) 연립(3.7), 다세대(9.4) 영업용건물내주택(1.4) 주택 이외의 거처(0.4)	단독(24.8), 아파트(61.5) 연립(3.2), 다세대(8.9) 영업용건물내주택(0.9) 주택 이외의 거처(0.6)
	3세대 이상가구	단독(45.1), 아파트(39.1) 연립(7.6), 다세대(4.0) 영업용건물내주택(4.0) 주택 이외의 거처(0.2)	단독(37.4), 아파트(47.1) 연립(4.1), 다세대(9.4) 영업용건물내주택(1.7) 주택 이외의 거처(0.3)	단독(29.3), 아파트(56.8) 연립(3.5), 다세대(8.7) 영업용건물내주택(1.2) 주택 이외의 거처(0.4)
	1인가구	단독(65.7), 아파트(21.3) 연립(3.8), 다세대(2.5) 영업용건물내주택(4.8) 주택 이외의 거처(2.0)	단독(60.3), 아파트(23.4) 연립(2.0), 다세대(6.5) 영업용건물내주택(2.5) 주택 이외의 거처(5.3)	단독(54.9), 아파트(27.7) 연립(1.9), 다세대(6.8) 영업용건물내주택(1.7) 주택 이외의 거처(6.9)
	비혈연가구	단독(64.0), 아파트(21.1) 연립(3.8), 다세대(2.3) 영업용건물내주택(5.9) 주택 이외의 거처(2.7)	단독(59.6), 아파트(21.7) 연립(2.0), 다세대(7.0) 영업용건물내주택(3.8) 주택 이외의 거처(5.9)	단독(55.1), 아파트(25.8) 연립(2.0), 다세대(7.5) 영업용건물내주택(2.2) 주택 이외의 거처(7.4)
	합계	단독(43.8), 아파트(41.6) 연립(6.4), 다세대(3.8) 영업용건물내주택(3.9) 주택 이외의 거처(0.6)	단독(38.7), 아파트(46.1) 연립(3.3), 다세대(8.7) 영업용건물내주택(1.7) 주택 이외의 거처(1.5)	단독(34.1), 아파트(51.2) 연립(2.9), 다세대(8.3) 영업용건물내주택(1.2) 주택 이외의 거처(2.3)
비도시	1세대가구	단독(82.7), 아파트(9.7) 연립(2.2), 다세대(0.6) 영업용건물내주택(4.4) 주택 이외의 거처(0.5)	단독(80.8), 아파트(13.5) 연립(2.1), 다세대(1.2) 영업용건물내주택(1.9) 주택 이외의 거처(0.5)	단독(75.5), 아파트(18.7) 연립(2.3), 다세대(1.6) 영업용건물내주택(1.3) 주택 이외의 거처(0.6)
	2세대가구	단독(58.7), 아파트(27.6) 연립(5.8), 다세대(1.6) 영업용건물내주택(5.8) 주택 이외의 거처(0.5)	단독(52.5), 아파트(37.5) 연립(4.6), 다세대(3.0) 영업용건물내주택(2.0) 주택 이외의 거처(0.4)	단독(44.6), 아파트(46.4) 연립(4.0), 다세대(3.3) 영업용건물내주택(1.2) 주택 이외의 거처(0.5)
	3세대 이상가구	단독(82.4), 아파트(9.7) 연립(2.7), 다세대(0.7) 영업용건물내주택(4.2) 주택 이외의 거처(0.2)	단독(78.1), 아파트(15.9) 연립(2.6), 다세대(1.7) 영업용건물내주택(1.5) 주택 이외의 거처(0.2)	단독(69.3), 아파트(24.6) 연립(2.6), 다세대(2.0) 영업용건물내주택(1.1) 주택 이외의 거처(0.4)
	1인가구	단독(83.0), 아파트(9.0) 연립(2.0), 다세대(0.7) 영업용건물내주택(4.1) 주택 이외의 거처(1.2)	단독(79.8), 아파트(13.4) 연립(2.0), 다세대(1.3) 영업용건물내주택(1.9) 주택 이외의 거처(1.4)	단독(75.5), 아파트(17.6) 연립(2.2), 다세대(1.8) 영업용건물내주택(1.4) 주택 이외의 거처(1.6)
	비혈연가구	단독(50.0), 아파트(25.1) 연립(4.3), 다세대(1.7) 영업용건물내주택(12.6) 주택 이외의 거처(6.2)	단독(46.8), 아파트(34.4) 연립(3.7), 다세대(2.5) 영업용건물내주택(8.0) 주택 이외의 거처(4.5)	단독(46.3), 아파트(38.5) 연립(2.9), 다세대(2.8) 영업용건물내주택(3.9) 주택 이외의 거처(5.7)
	합계	단독(71.0), 아파트(18.2) 연립(3.9), 다세대(1.1) 영업용건물내주택(5.1) 주택 이외의 거처(0.7)	단독(67.9), 아파트(24.1) 연립(3.2), 다세대(2.1) 영업용건물내주택(1.9) 주택 이외의 거처(0.5)	단독(62.6), 아파트(29.9) 연립(3.0), 다세대(2.4) 영업용건물내주택(1.8) 주택 이외의 거처(0.9)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주거점유형태를 다른 형태 가구와 비교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25.3%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2세대가구의 자가점유율 58.35와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도시 거주 가구의 경우는 1인 가구의 자가거주율이 83.6%로 1세대의 자가거주율 82.6%보다 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지역별 가구구성별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금 월세	사글세	무상
도시	1세대가구	1,268,387(58.0)	502,604(23.0)	336,757(15.4)	22,497(1.0)	18,756(0.9)	34,813(1.6)
	2세대가구	4,426,356(58.3)	1,895,639(24.9)	1,024,366(13.5)	64,709(0.9)	53,178(0.7)	134,282(1.8)
	3세대 이상	590,832(69.5)	159,874(18.8)	78,994(9.3)	5,245(0.6)	4,557(0.5)	11,002(1.3)
	1인가구	757,025(23.3)	820,178(25.3)	1,300,759(40.1)	177,085(6.5)	95,405(2.9)	93,612(2.9)
	비혈연가구	17,168(11.0)	27,130(17.4)	78,402(50.2)	8,559(5.5)	5,404(3.5)	19,494(12.5)
	계	7,057,768(50.3)	3,405,425(24.3)	2,819,278(20.1)	278,095(2.0)	177,300(1.3)	293,203(2.1)
비도시	1세대가구	698,532(82.6)	61,390(7.3)	45,589(5.4)	8,605(1.0)	6,960(0.8)	24,504(2.9)
	2세대가구	873,194(67.5)	194,296(15.0)	134,767(10.4)	17,473(1.4)	12,844(1.0)	61,120(4.7)
	3세대 이상	187,970(83.6)	17,276(7.7)	11,092(4.9)	1,771(0.8)	1,271(0.6)	5,492(2.4)
	1인가구	565,612(63.0)	82,727(9.2)	125,537(14.0)	32,974(3.7)	28,322(3.2)	62,929(7.0)
	비혈연가구	6,779(14.7)	5,276(11.4)	11,946(14.0)	2,665(5.8)	3,028(6.6)	16,412(35.6)
	계	2,332,087(70.5)	360,965(10.9)	328,931(9.9)	63,488(1.9)	52,425(1.6)	170,457(5.2)
합계	1세대가구	1,964,919(64.9)	563,994(18.6)	382,346(12.6)	31,102(1.0)	25,716(0.8)	59,317(2.0)
	2세대가구	5,299,550(59.6)	2,089,935(23.5)	1,159,133(13.0)	82,182(0.9)	66,022(0.7)	195,402(2.2)
	3세대 이상	778,802(72.4)	177,150(16.5)	90,086(8.4)	7,016(0.7)	5,828(0.5)	16,494(1.5)
	1인가구	1,322,637(31.9)	902,905(21.6)	1,426,296(34.4)	210,059(5.1)	123,727(3.0)	156,541(3.8)
	비혈연가구	23,947(11.8)	32,406(16.0)	90,348(44.7)	11,224(5.5)	8,432(4.2)	35,906(17.8)
	계	9,389,856(54.2)	3,766,390(21.7)	3,148,209(18.2)	341,583(2.0)	229,725(1.3)	463,660(2.7)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도시와 농촌의 1~2인가구를 위한 주택보급 형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1세대 가구의 경우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세대 차가가구의 경우는 1인 차가 가구와 비슷한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을 보면, 29세 이하 1인 가구의 절대 다수(20세 미만 75.2%, 20세~29세 66.0%)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주택공급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주택의 점유형태이다. 39세 이하 1인 가구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40세 이상 1인 가구는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별/세대별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방향

도시의 경우 연령대별 차이는 있지만 1~2인 가구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가 많은 특성이 있다. 젊은 연령층에게도 매월 월세를 내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아직 생활비 수준의 연금제도⁴⁾가 정착되지 않아 고령자에게는 더욱 부담스럽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역세권에 저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고, 고령자를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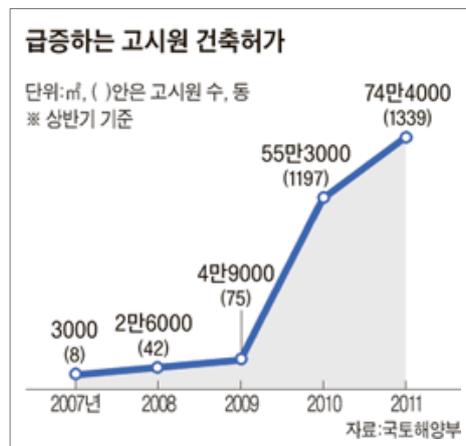
농촌에서는 1~2인 가구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자가거주율이 높은 점에서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농촌에서도 고령 1인 가구를 위해서는 공동생활주택이 공급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표 19〉 젊은 세대와 고령자를 위한 지역별 주택공급 방향

	도시	농촌
젊은 세대	저가의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개조
고령자	고령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와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택

1) 도시 1~2인 차가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내부마감재를 고급화함으로써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젊은 1~2인가구를 위해서는 고급화보다는 실비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임대료 지급방법도 전세형을 병행하는 것도 젊은 1~2인 가구의 저축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

4) 2010년 전체 고령자의 30%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적다. 보건복지부는 생활비 수준의 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에 불과하며 이들의 비율은 고령자 전체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 1~2인 고령자 가구를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을 개발하여 입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4년 국민임대주택 453호를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⁵⁾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고령자 전용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2010년말까지 총 7,953호의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표 18〉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2,201	569	497	685	680	2,868

자료: 고령자전용사업승인실적은 국토부 내부자료

2011년부터는 국토부 지침으로 보금자리주택중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은 3%)를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 앞으로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농촌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농촌의 경우 1-2인 가구 모두 자가거주율이 높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주택개조는 주택공급은 아니지만 농촌 주택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농촌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주택개량자금을 용자하는 정책을 197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자에 의한 주택개량은 성과가 크지 않으며, 특히 1-2인 가구의 이용률이 낮은 점에서 1-2인 가구중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는 공적인 주택개조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부부로 거주하다가 배우자를 상실하고 1인이 된 가구의 경우 외상상태가 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노후화되고, 설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1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가정봉사원의 도움을 받아 청소, 빨래, 밑반찬 등이 제공되는 재가 서비스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점에서 이들을 노인복지관 인근이나 고령자가 거주하는 부락내에 공동생활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생활하도록 한다면, 비용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고령자 역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농지를 인근 읍내거주 젊은 세대에게 경작토록 하는 대리경작제도 활성화 방안도 모색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고령자 소유의 주택 및 농지의 이용비용을 통해 고령자의 공동생활주택의 거주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노후생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고령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농촌형 공동생활주택의 성공적인 보급은 농촌 거주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어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한 정체상태를 변화시키는 역할로 정책의 신뢰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은 지자체와 LH가 건설하며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일반가구용과 함께 건설되거나 독립단지로 건설되고 있다.



제9주제 : 지역별 고령화, 저출산, 연령 구조의 변화

(서울시 강남구와 전라북도 진안군을 중심으로)

| 엮 지 혜 |

I. 서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큰 변화 추이를 보여줬다.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명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8명으로 인구 대체수준까지 감소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내외를 유지했으나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래 1998년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1.2명 미만으로 더욱 낮아지기에 이르렀으며,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전래 없이 최저수준인 1.08로 떨어졌다(이삼식·유계숙·박종서·이성용·조영태, 2008).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다 2009년에 1.15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으나 다행히 2010년 합계출산율은 1.22로 회복세를 보였다(통계청, 2011).

다행스럽게도 2010년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시도에서 고르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향후 이러한 상승추세를 이어갈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이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지고 나서 정부가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1차 기본계획 시기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합계출산율 감소 추이를 역전시키기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추해 볼 때 올해부터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되고 있지만 2010년의 합계출산율 상승추이를 앞으로 이어갈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함께 또 다른 이슈는 급속한 고령화이다. 1960년 전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9%만이 65세를 넘는 노인인구였으나, 2000년 전국 인구센서스는 전체 인구의 7.1%, 2005년에는 9.1%가 노인인구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통계청, 1960; 2000; 2005).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2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7%이지만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게 되어 불과 20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했다(통계청, 2011). 또한 50년 뒤인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배 이상인 1천762만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0.1%에 해당한다. 즉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국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통계청, 2011).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두 배에 도달하는 데 25년이 걸림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이면 두 배까지 되는 데 단지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국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기간 초저출산이 유지되고 급속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에 정점을 찍은 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 노동력이 노령화되는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11). 그 결과로 초저출산과 더불어 고령자 부양부담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초저출산 기조와 인구노령화가 전국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적 편차가 존재한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 중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곳도 눈에 띄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특정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더 낮은 혹은 더 높은 합계출산율이 나타난다면 이 지역의 연령구조의 변화 및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합계출산율의 지역적 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의 시군구 합계출산율을 일별해 보면 대도시인 서울·부산·대구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충북·전북·전남 등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곳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의 합계출산율로만 보면 서울의 강남구가 종로구의 0.84명에 이어 0.86명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 평균치인 1.02명 보다 0.16명 낮고, 전국 평균치인 1.23명보다는 0.37명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강남구의 낮은 합계출산율은 2009년 합계출산율 서울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2010년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인 곳은 전북의 진안군으로 2.41명으로 나타났으며 진안군의 경우 2005년의 1.03명으로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 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지역인 서울의 강남구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인 전라북도 진안군의 성별에 따른 고령화 추세, 연령구조의 변화 및 혼인상태, 초혼연령, 출산 자녀수, 교육 수준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들에 대해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1인 가구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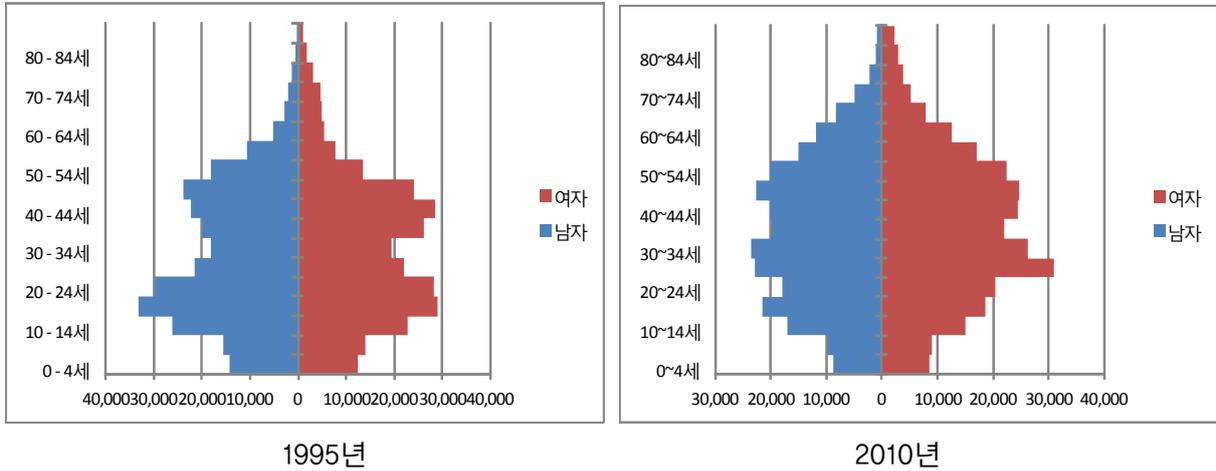
II.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0년까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된 인구센서스를 사용하였다. 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인구·가구의 인구총조사를 이용했으며, 혼인 및 출생부분은 인구·가구의 인구총조사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인구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수치를 산출하였다. 세대수에 관련해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일인가구 부분은 가구조사 10%표본을 이용하였다. 대부분 기술적인 통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의 주제에 따라 그래프와 요약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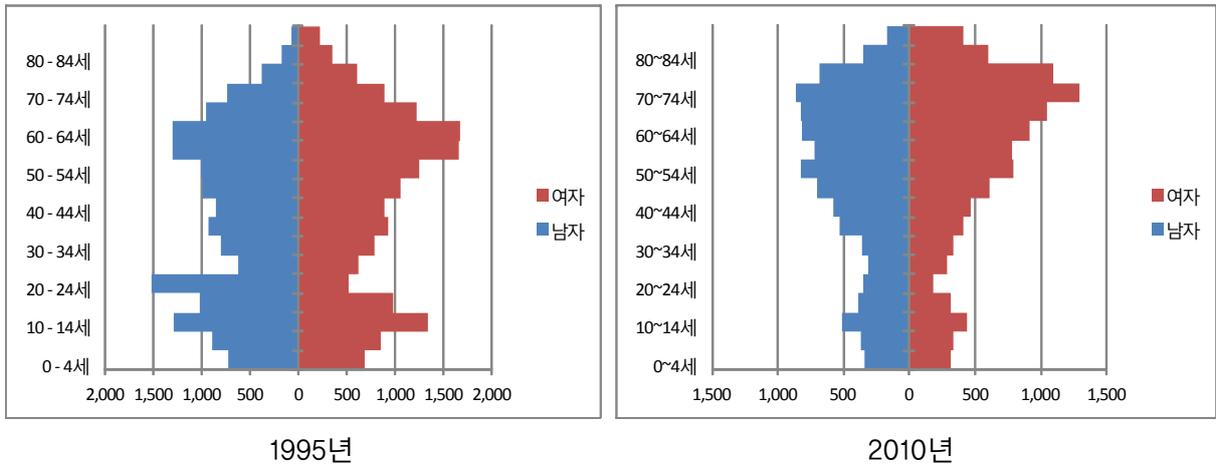


Ⅲ. 분석결과

1. 연령에 따른 인구구조, 성별 비율, 교육수준



〈그림 1〉 서울시 강남구 연령별 인구구조: 1995년, 2010년(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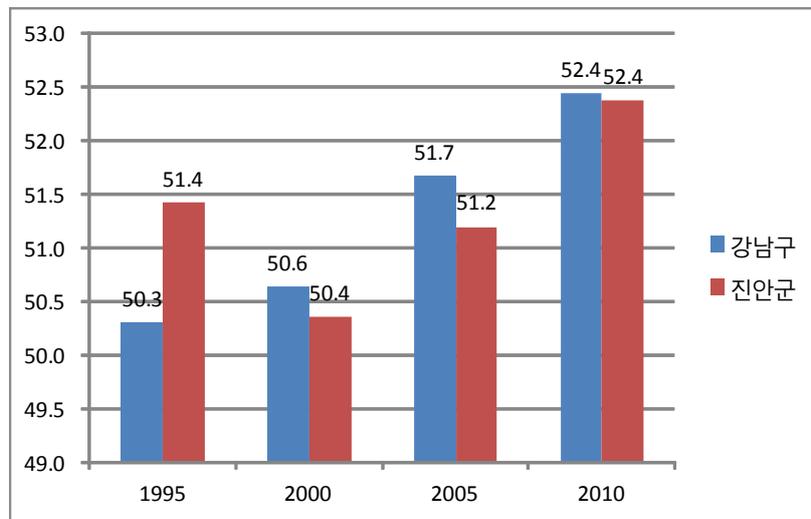
〈그림 2〉 전북 진안군 연령별 인구구조: 1995년, 2010년(단위: 명)

〈그림 1〉은 1995년과 2010년의 서울시 강남구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는 같은 년도의 전라북도 진안군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나타낸다. 강남구의 경우 1995년에 이미 저출산으로 인하여 0-10세의 인구가 적고 10세에서 24세에 이르는 학령기 인구가 많지만 청년기 생산인구는 이에 비해 적은 불완전한 중형이었다. 그러나 2010년의 강남구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초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인구가 더 적어졌으며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은 방추형을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와 비교해 보면 1995년의 진안군은 1995년의 강남구처럼 10대와 20대는 많으나 25세 이후부터 55세 까지의 인구는 도시로 빠져나가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특히 여성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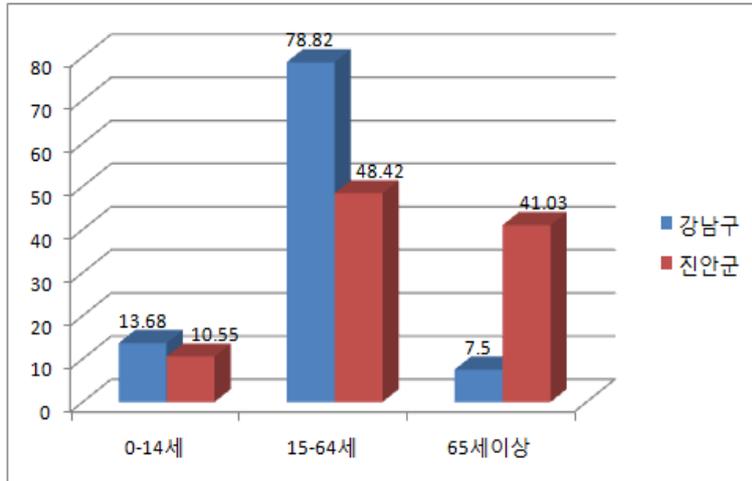
우 20-24세의 인구가 전체 여성인구에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을 위해 여성들이 도시로 나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55세에서 64세까지의 장년층 인구수는 오히려 많아 전형적인 농촌의 인구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0년 전북 진안군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995년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가 훨씬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지속된 저출산으로 유년 인구 및 학령기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청장년 층인 20-49세까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낮은 사망률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995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농촌형 인구구조로 유소년인구가 적고 노인 인구층이 많은 표주박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강남구와 진안군 인구 중 여성의 비율: 1995-2010년(%)

〈그림 3〉은 강남구와 진안군 각각의 전체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99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의 여성의 비율은 두 지역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강남구의 경우 1995년부터 점차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 왔으며 진안군의 경우 1995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그림 1〉과 〈그림 2〉로부터 유추해 보건데 결과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 온 것은 비슷하나 그 이유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52.4%까지 증가한 것은 〈그림 1〉 2010년의 인구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25-34세의 여성의 대량 전입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진안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0년에 52.4%까지 증가한 것은 낮은 사망률로 인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특히 여성 노인인구 층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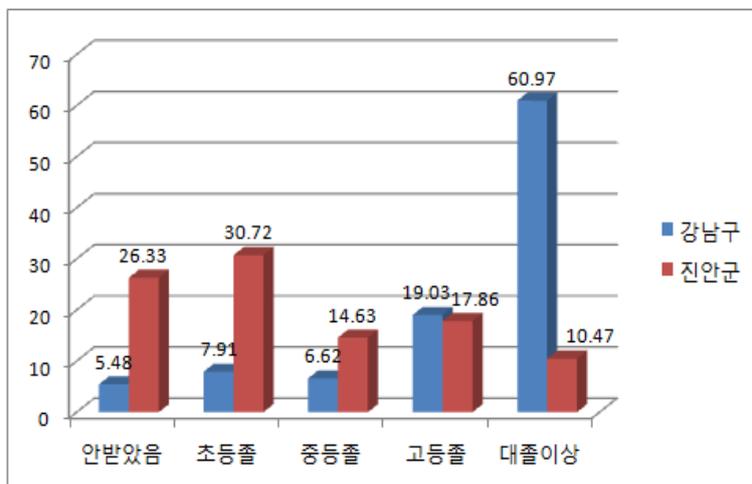
따라서 여초현상이 두 지역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나 강남구의 경우, 사업체 및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미혼의 여성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진안군의 경우는 젊은 여성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갔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여성의 높아진 수명으로 여초현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2010년 강남구와 진안군의 연령대별 구성비(%)

〈그림 4〉는 위에서 말한 연령대별 구성비를 좀 더 극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두 지역의 2010년 인구를 유소년인구(0-14세), 경제활동가능인구(15-64세), 노인인구(65세 이상)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지역의 연령별 구성 비율은 눈에 띄게 대별되었다. 진안군의 유소년 인구는 10.6%로 강남구에 비해 약 3%가 낮은 반면 15-64세 인구는 전체의 50%에 채 미치지 못하여 강남구의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약 30%가 낮았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진안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03%로 강남구의 7.5%에 비해 약 6배에 달하였다. 강남구는 전형적인 도시형 인구구조를 그리고 진안군은 고령화된 농촌형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2010년에 강남구와 진안군의 교육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강남구 경우 대졸이 약 61%, 고졸이 약 19%로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 약 반 이상이 무학 혹은 초등학교 졸업인 진안군과 비교해 매우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남구의 연령대별 구성비가 청장년이 많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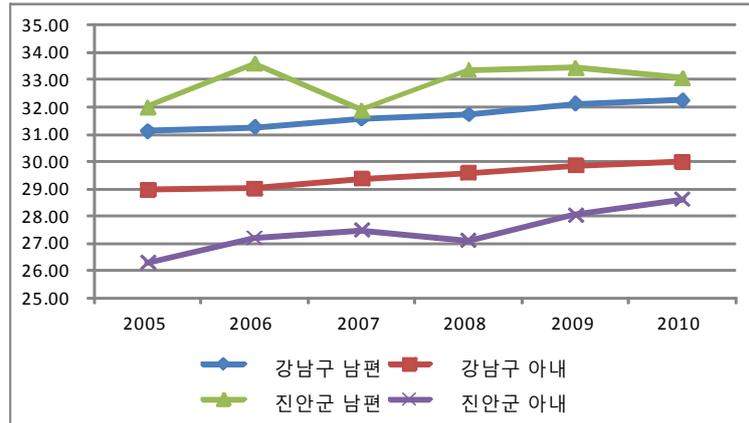


〈그림 5〉 강남구와 진안군의 교육정도 비교(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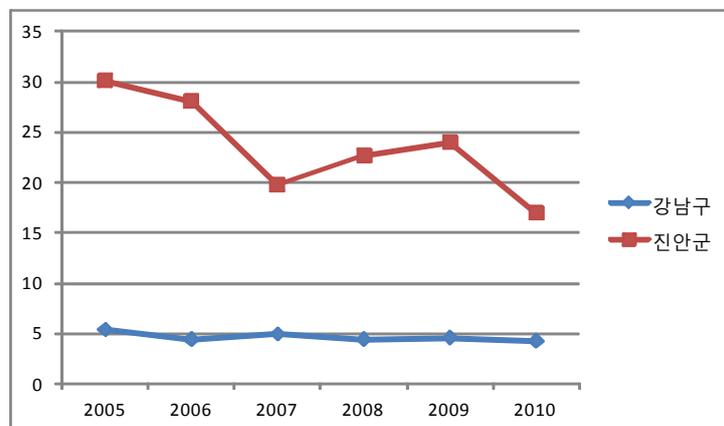
2. 혼인

우리나라의 경우 혼외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관념이 강하여 혼인상태가 전제되어야만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높은 교육수준과 경기불황으로 대학교육을 마친 후에도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만혼화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는 낮은 합계출산율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 2009).



〈그림 6〉 강남구와 진안군의 평균 초혼연령 비교: 2005-2010년(연령)

〈그림 6〉는 강남구와 진안군의 평균 초혼연령을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6년에 걸쳐 비교한 것으로 농촌지역 남성인 진안군의 남편 초혼연령이 대부분 32세를 웃돌았으며 그다음은 강남구 남편, 강남구 아내, 그리고 가장 낮은 초혼연령을 보여준 집단은 진안군 아내였다. 〈그림 6〉에서 특이한 점은 진안군의 남편 초혼연령이 가장 높았지만 더 이상 초혼연령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여성과의 혼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일반화되어 나이 많은 농촌총각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 강남구의 남편과 아내의 초혼연령은 약 2살 차이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진안군의 아내 초혼연령도 200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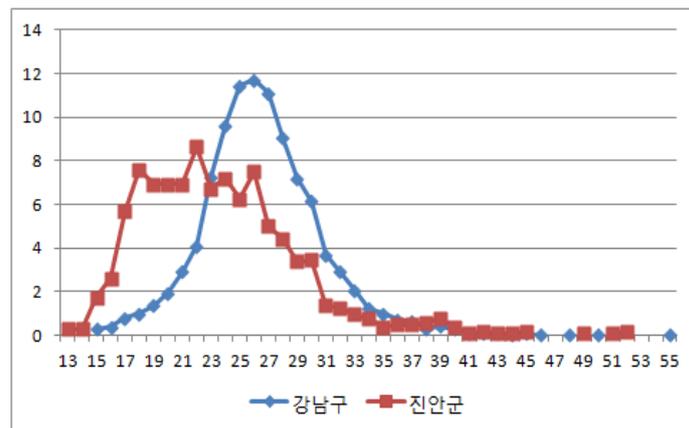


〈그림 7〉 남편의 혼인건수 중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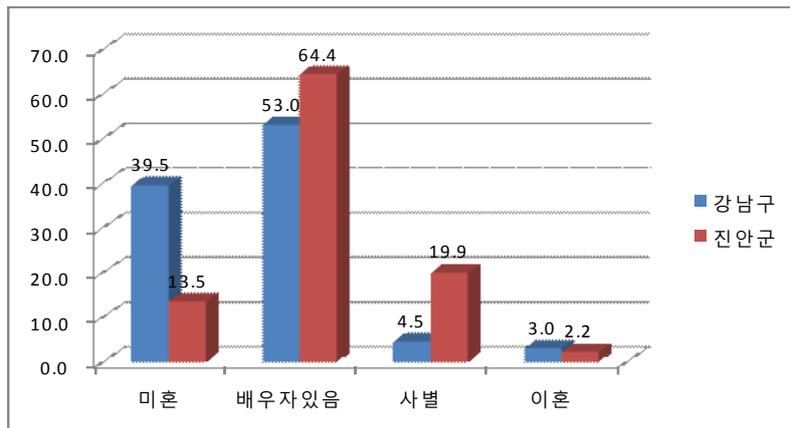
〈그림 7〉은 강남구와 진안군 각 지역 전체 남편의 혼인건수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혼인 건수의 비율을 보여준다. 강남구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혼인 건수 비율이 연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이 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진안군의 경우 2005년에는 30%에 이르렀으나 연도에 따른 오르내림이 있기는 했지만 2010년에는 약 17% 대로 낮아졌다. 이는 앞서 〈그림 6〉에 대한 설명에서 명시했듯이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강남구와 진안군의 각 초혼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8〉은 아내와 남편의 초혼연령을 나누지 않고 지역별 초혼연령의 비율을 살펴본 것인데 강남구와 진안군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강남구는 대부분 20대 후반에 몰려있고 그래프의 폭이 좁으나, 진안군의 경우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넓게 퍼져있음을 볼 수 있다. 아마도 10대 후반과 20대의 경우 아내의 초혼연령 비율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30대 이후는 남편의 초혼연령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림 8〉 2010년 강남구와 진안군의 초혼연령(% , 연령)

〈그림 9〉는 2010년 현재 강남구와 진안군 15세 이상 내국인의 혼인상태별 비율을 제시한다. 강남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인구가 많아 미혼의 비율이 전체의 약 4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 반면 진안군의 경우 미혼은 13.5%에 불과하지만 유배우자의 비율이 64.4%를 차지하고 있고 사별의 경우도 약 20%에 달하는데 이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즉 청년인구 층이 적고 노인인구 층이 다수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혼인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강남구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혼인상태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내외국인 모두에 대한 혼인상태는 살펴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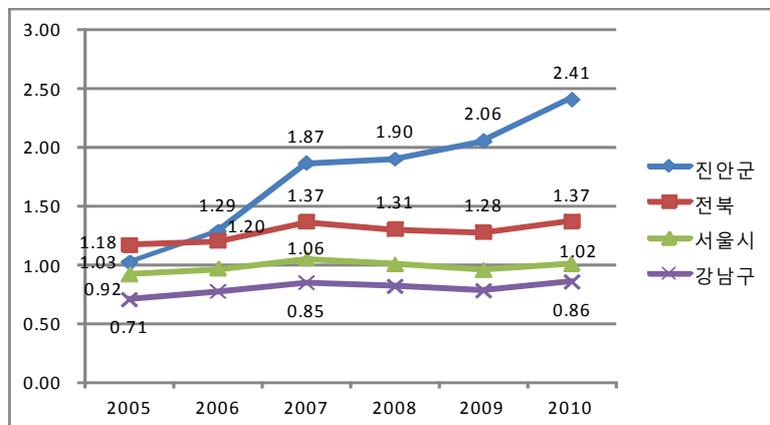


〈그림 9〉 2010년 강남구와 진안군의 15세 이상 내국인 혼인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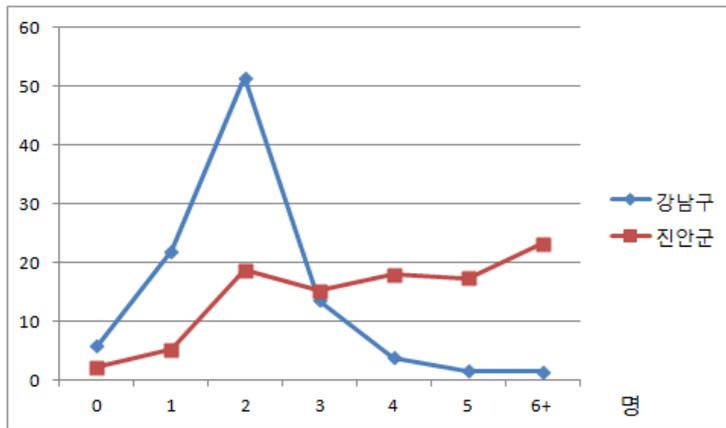
3. 출산

최근 6년간(2005-2010)의 강남구와 진안군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강남구의 경우 2007년 황금돼지띠를 맞이하여 합계출산율이 약간 상승하였으나(그 후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2010년 다시 약간 상승해 2007년 수준에 도달했다. 2009년의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강남구가 속해있는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의 평균치인 1.15명에도 못 미치는 0.96명으로 16개 시도 지역 중에서도 부산(0.94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0년에는 서울시 내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났으나 서울시 평균 합계출산율 1.02명에 도달하려면 아직 그 시점이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 진안군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2005년의 1.03명은 전라북도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18명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에 전라북도 평균 합계출산율을 추월해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2.41명으로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2006년 평균 합계출산율이 1.37명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4명이나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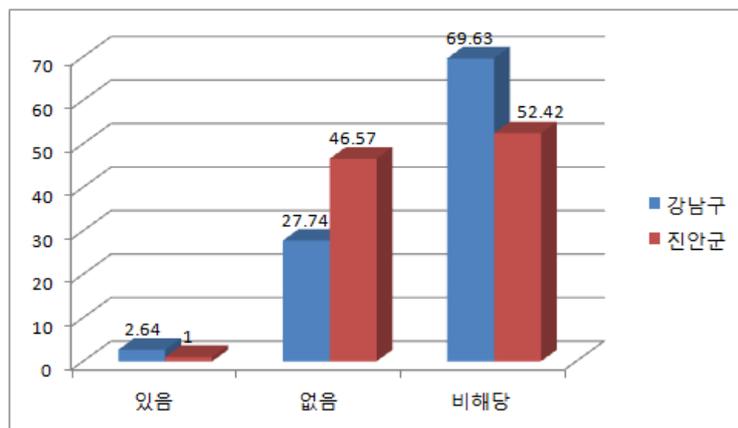
〈그림 10〉 강남구와 진안군의 합계출산율: 2005-2010년(명)



〈그림 11〉 기혼여성이 낳은 총 자녀수: 남녀합계 (2010년)(%,명)

〈그림 11〉에서는 2010년 당시 강남구와 진안군의 기혼여성이 낳은 총 자녀수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진안군의 합계출산율이 강남구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전국 최고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두 자녀 이상을 낳은 기혼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3자녀 이상 다자녀의 비율도 높아 대부분 두 자녀를 낳은 강남구와 대비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두 지역의 기혼여성들의 추가자녀 계획은 어떨까?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림 12〉에 나타나 있다. 2010년 기혼여성에게 추가 자녀 계획이 있냐고 물었을 때 강남구의 경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6%에 달했고, 진안군의 경우 진안군의 기혼여성 중 추가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에 불과했는데 총 13명이었다. 아마도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진안군에는 기혼여성들이 낳은 총 자녀수가 이미 두 자녀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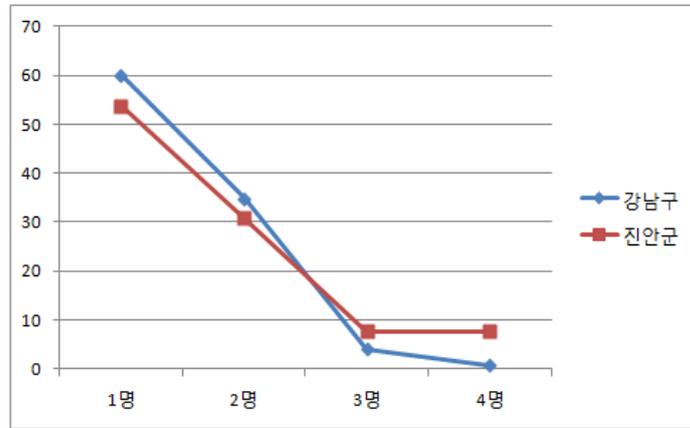


〈그림 12〉 강남구와 진안군의 기혼여성의 추가 자녀 계획: 2010년(%)

강남구과 진안군의 기혼 여성 중 추가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더 낳기 원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그림 13〉에 나타나 있다. 두 지역 모두 한 명 혹은 두 명의 추가 자녀 계획을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진안군의 경우 세 명 혹은 네 명의 추가 자녀를 계획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안군에서 추가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수 자체가 적어 계획하고 있는 추가 자녀의 수가 향후 전체 인구 구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림 13〉 기혼여성의 추가 자녀 계획 시 자녀수: 2010년(%)

〈표 1〉 과 〈표 2〉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강남구와 진안군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를 보여 준다. 강남구의 경우 20대의 출생아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 가장 많은 출산을 하는 연령대는 30-34세로 2010년에는 강남구 여성 천 명당 출생아 수가 90.9명에 달했다.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만혼화가 일반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30대 초반의 출산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35-39세까지의 출산도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 35.1명에 달했다. 〈표 1〉에서 강남구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향후에도 30대 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표 2〉는 진안군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데 20-24세의 출생아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여성 천 명당 60.2명에 달했으며 25-29세의 경우 2007년에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여성 천 명당 176.7명이 되었으며, 30-34세의 경우 2005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하여 185.6명에 달했다. 35-39세의 출생아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아수 증가추세가 둔해진다고 할지라도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안군의 가임여성인구는 5세 연령 별로 볼 때 실제 천명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출산의 경향이 전체 인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표 1〉 강남구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

구분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0.7	4.5	43.8	70.2	20.1	2.6	0.2
2006	0.7	4.4	44.3	78.7	25.0	2.1	0.3
2007	0.8	4.8	46.0	87.0	28.9	2.5	0.1
2008	0.2	3.9	41.2	87.7	28.7	3.0	0.0
2009	0.1	3.4	37.8	82.9	30.3	3.6	0.2
2010	0.6	3.7	39.3	90.9	35.1	4.0	0.2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출생



〈표 2〉 진안군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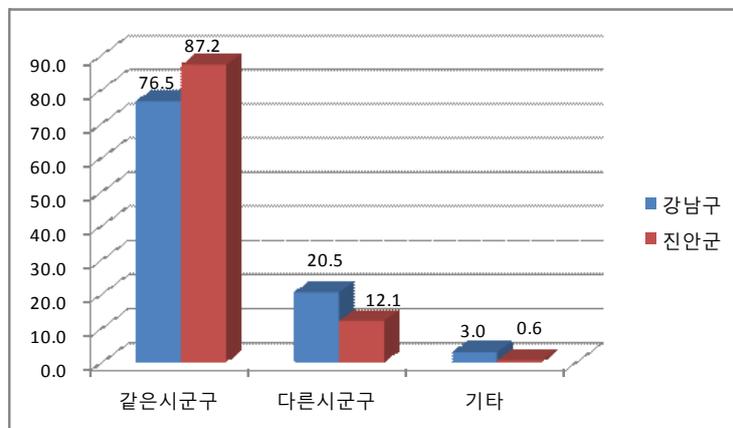
(단위: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

구분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2.6	28.1	93.6	55.2	20.3	5.0	0.0
2006	6.1	33.9	80.3	95.6	32.4	5.7	0.0
2007	5.9	39.7	156.7	124.4	33.7	2.8	1.0
2008	1.5	54.5	150.1	126.6	40.9	4.3	0.0
2009	8.5	51.2	145.5	158.1	44.1	4.7	1.1
2010	3.4	60.2	176.7	185.6	51.1	9.0	1.2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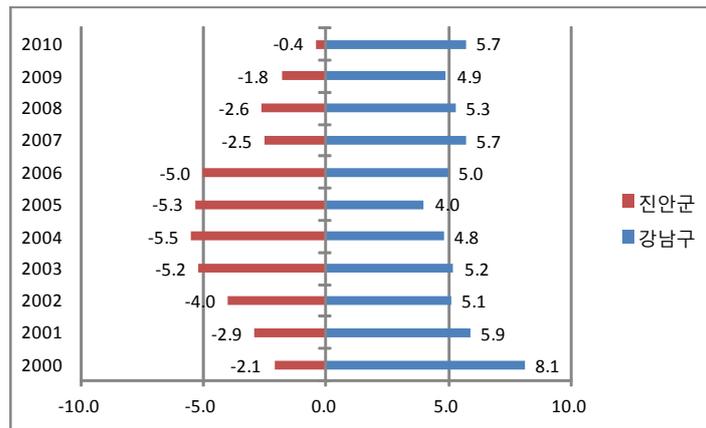
3. 거주지 변화와 인구증가율

〈그림 14〉는 강남구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5년 전과 비교해 거주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질문했을 때 나온 응답비율이다. 5년 전과 같은 시군구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강남구 보다 진안군의 경우 약 10%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시군구에서 현재의 거주지로 옮긴 경우는 강남구 거주자의 경우 약 5명에 1명 꼴이었으며 진안군 거주자의 경우는 12%에 불과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이동의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4〉 강남구와 진안군 거주자의 5년 전 거주지: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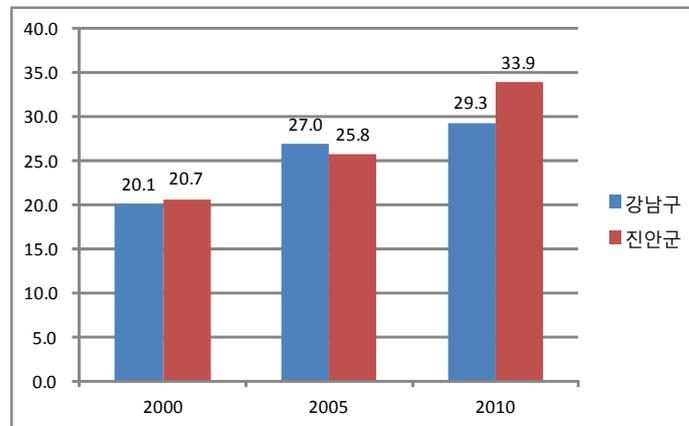
인구의 자연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혼인, 사망, 이혼, 이주 등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강남구의 경우는 2000년 천 명당 약 8명의 증가가 있었으나 증가율이 점차 줄어들어 현재 2010년에는 천 명당 약 5.7명의 증가가 있었다(그림 15 참조). 반면 진안군의 경우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커져 2000년에는 천 명당 약 2명의 감소가 있었는데 2004년에는 천 명당 약 5.5명의 감소가 있었다. 2007년 이후부터 감소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감소만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진안군의 인구증감은 정체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진안군과 강남구의 인구자연증가율(천명 당):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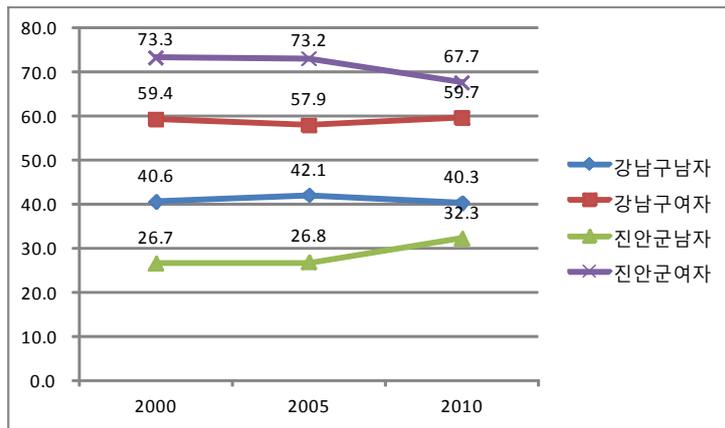
4. 1인 가구

〈그림 16〉는 강남구와 진안군의 총 가구 수에서 1인가구의 비율을 인구총조사의 가구부분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살펴본 것이다. 2000년에는 강남구와 진안군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으나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진안군의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진안군은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단독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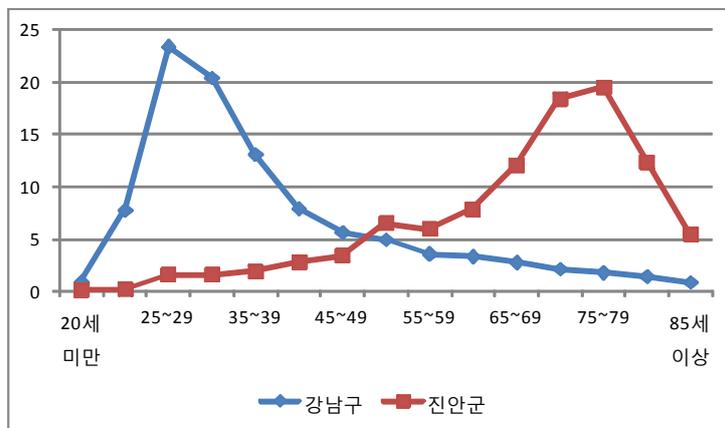
〈그림 16〉 총가구수에서 1인 가구의 비율: 2000-2010년(%)

〈그림 17〉는 두 지역에서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비율을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조사한 인구총조사의 가구부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했다. 강남구의 1인 가구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 차이는 약 15-20% 내외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진안군의 경우 여자의 1인 가구 비율이 남자에 비해 높다는 점은 강남구와 같지만 2000년과 2005년에는 약 3배, 2010년에는 약 2배 높아 압도적으로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진안군이 여성 고령자의 비율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17〉 강남구와 진안군의 성별 1인 가구 비율: 2000-2010년(%)

〈그림 18〉은 2010년 강남구와 진안군의 5세 단위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그림 18〉로부터 알 수 있듯이 두 지역의 1인 가구 연령별 비율이 대비되는데, 강남구의 경우 25-29세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진안군의 경우 75-79세의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색으로 강남구가 청장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은 반면 진안군의 경우 뚜렷한 인구고령화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림 18〉 강남구와 진안군의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10년(%)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구와 전라북도 진안군의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생, 인구이동, 1인 가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두 지역을 비교하였다.

강남구의 연령에 따른 인구구조는 1995년 불완전한 중형에서 2010년 초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인구가 적어지고 경제활동가능인구인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은 방추형으로 변화되었다. 진안군의 경우 2010년 인구구조를 보면 초저출산과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주, 그리고 낮은 사망률로



인해 심각한 인구 고령화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진안군의 인구구조의 고령화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강남구의 경우도 차츰 인구구조의 고령화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지역의 초혼 연령을 살펴보았을 때 농촌지역 남성인 진안군 남편의 초혼연령이 대부분 32세를 웃돌았으며 그다음은 강남구 남편, 강남구 아내, 그리고 가장 낮은 초혼연령을 보여준 집단은 진안군 아내였다. 진안군의 남편 초혼연령이 가장 높았지만 더 이상 초혼연령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외국여성과의 혼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일반화되어 나이 많은 농촌총각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은 남편의 혼인건수 중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비율로 부터도 도출 될 수 있는데 2005년 진안군의 경우 외국인 아내의 비율이 30%에 달했으나 이는 점차 감소하여 2010년 15%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강남구의 경우 2005년 이래로 전국 최저 그룹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강남구가 출산장려정책을 다각도로 실시해 오고 있다. 그 일례로 2010년 4월 기준으로 출산양육 지원금이 둘째자녀의 경우 100만원 이내, 셋째자녀의 경우 500만원이내, 넷째자녀 이상의 경우는 1,000만원 이내로 지급이 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박종서·염지혜·김나영·정혜은, 2010). 그러나 출산율 상승이란 제도의 뒷받침이 있더라도 인식의 변화가 함께 담보되어야 가능한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남구의 경우 향후 얼마간은 낮은 합계출산율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안군의 경우 2005년부터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2010년 2.41명으로 최고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 진안군 기혼여성이 낳은 총 자녀수를 살펴보면 이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많고 추가출산 계획이 거의 없어 향후 기존 부부의 추가출산으로 인한 합계출산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당시 강남구와 진안군의 5년 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진안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성상 다른 시군구였던 응답비율은 12%에 불과했다. 2007년 이후부터 감소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감소만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진안군의 인구증감은 정체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경우 진안군에서는 여성노인 비율의 압도적인 증가로 노인층의 비율, 특히 75-79세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 강남구의 경우 도시의 특성상 25-29세가 가장 높았다.

본 분석결과로 살펴 볼 때 향후 인구구조는 강남구의 경우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이 둔화되면서 점진적으로 고령화되어 갈 것으로 보이며 진안군의 경우는 인구증감은 정체기를 맞이하고 현재의 고령화추세는 당분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분석에서 진안군의 전체인구가 강남구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기혼여성의 수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진안군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이나 추가출산계획 시 몇 명을 더 낳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의 결과를 비교의 편의상 같은 그래프에서 제시하였다. 이런 분석결과는 향후 지역별 데이터가 축적되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결과로부터 유추해 보건데, 향후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저출산 기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인구구조 특색에 맞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고령화된 인구의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박종서·염지혜·김나영·정혜은 (2010) 『강남구 출산장려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강남구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유계숙·박종서·이성용·조영태 (2008)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1960; 2000; 2005) 『한국의 사회지표』, (<http://www.nso.go.kr/>).
-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 『KOSIS, 인구·가구, 인구총조사』, (www.kosis.kr)
- 통계청 (2005-2010) 『KOSIS,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www.kosis.kr)
- 통계청 (2010) 『KOSIS, 인구·가구, 주민등록인구통계』, (www.kosis.kr)



제10주제 : 부산시의 연도별, 도시별 인구구조 변화분석

| 이승욱 |

머리말

부산광역시是我们나라의 두 번째 도시이다. 2010년 인구총조사의 결과(통계청, 2010)에 의하면 부산시의 인구는 3,414,950명으로 집계되어 인구수에서 단연코 제2위의 도시이다. 부산은 선사시대로부터 연해주, 일본과의 교류의 중심지로서 시작되어왔다(강인욱, 2008). 해방이후 1949년에는 부산시로 개칭되어 오늘날의 도시가 되었다. 그 후 한국동란시에는 임시수도가 되기도 했고 피난민이 남으로 몰려오면서 상당한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즉, 1951년에는 부산시의 인구가 844,134명에 불과했으나 1955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였다. 1963년에는 부산직할시로 승격되었는데 이 때의 인구는 이미 136만명에 이르렀다. 1980년에는 316만명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게 되어 3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확대되었다. 그 후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왔고 급기야는 1995년도에 389만명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2010년에는 341만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사망률은 전국치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아래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이처럼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내용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 부산의 인구동향

부산시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부터 이다. 이 시점은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고 난 뒤가 된다. 그 당시의 인구는 144만명 정도였으며 그 이후의 인구의 동향을 살펴 보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부산시의 인구동향 (명)

연도	합계	남자	여자
1966	1,426,019	712,897	713,122
1970	1,876,391	940,836	935,555
1975	2,450,125	1,220,466	1,229,659
1980	3,156,931	1,568,629	1,588,302
1985	3,512,113	1,734,875	1,777,238
1990	3,795,892	1,880,724	1,915,168
1995	3,809,618	1,898,054	1,911,564
2000	3,655,437	1,822,539	1,832,898
2005	3,512,547	1,735,860	1,776,687
2010	3,414,950	1,676,689	1,738,261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시의 인구는 1995년을 기점으로 381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들어가 2010년에는 1995년 대비 39만 5천명 (10.4%) 이 감소하였다. 이를 다른 광역시의 인구변화와 비교하면 표2와 같다.

〈표 2〉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의 인구추이비교

행정구역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서울특별시	9,639	10,612	10,231	9,895	9,820	9,794
부산광역시	3,514	3,798	3,814	3,662	3,513	3,414
대구광역시	2,029	2,229	2,449	2,480	2,464	2,446
인천광역시	1,386	1,817	2,308	2,475	2,531	2,662
광주광역시	-	1,139	1,257	1,352	1,417	1,475
대전광역시	-	1,049	1,272	1,368	1,442	1,501
울산광역시	-	-	-	1,014	1,049	1,082

부산시 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과 일치하는 인구추이를 보이고 있는 곳은 서울, 대구이고 다른 지역은 의외로 증가하고 있다. 대체로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이 강한 법이나 부산은 서울 대구의 경우와 함께 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수도권인구유입억제책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한다면 부산은 대구와 더불어 인구가 감소하는 대도시에 속한다.

한편 통계청에서 2006년도에 실시한 인구추계의 결과를 보면 2030년까지 부산시의 인구는 29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통계청 2006). 이는 현재 인구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의 추계치가 285만명이면서 증가할 것으로 보는 추세와 비교하면 불과 4만5천명 안팎의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된다.



II. 인구감소의 원인추정 방법

인구의 증가는 출생에서부터 시작한다. 출생아의 숫자가 늘다는 것은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 있는 그 출생아의 부모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그 지역의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와 일치하게 된다.

두 번째의 증가의 경우는 인구이동에 의한 증가이다. 흔히 대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장소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대도시인 만큼 인구증가를 가져 올 것으로 간주되는 큰 이유가 된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로서는 사망을 들 수 있다. 사망은 생명체의 소멸로서 인구감소를 유발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도 사망수보다는 출생수가 많아 인구의 순증은 지속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출산력이 감소한다고 해도 아직 사망자수보다는 많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이유는 역시 인구이동이다. 이것은 인구가 부산지역으로부터 타 행정구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함의가 있다. 즉 거주요건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은 이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산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거주요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의미가 되므로 행정당국자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기한 사항들을 초점으로 인구의 감소현상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I. 출생율

2010년 우리나라에서는 47만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 중 부산에서 출생한 아이수는 27,414명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00명당 7.8명이 태어난 셈으로 전국치보다 1.6명이 적게, 서울보다는 1.4명이 적게 태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적게 태어나는 출생아수의 추세는 줄곧 유지해 오다가 2005년 25,464 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록한 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서 2007년에는 28,223명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그 후 다시 하강추세로 접어들어 2009년까지 25,110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 27,414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3은 부산의 출생수와 출생율 현황을 전국치와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부산시의 출생율은 전국치와 비교할 때 그 변화의 패턴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치가 오를 때 같이 오른다든가 하는 추세는 유사하나 원천적으로 부산지역인구의 출생율은 전국치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그림 1은 1990년 이후 출생율의 연도별 변화를 부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서울, 인근 지역인 경남과의 비교해 보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출생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동일하나 부산지역은 추세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특이한 것은 인근 지역인 경남이 비도시권임에도 출생율이 전국치를 상회하고 있거나 상위권에 속하여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지역의 출산기에 속한 젊은 층이 부산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발생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 서울의 경우 주거를 비롯한 각종 높은



생활비의 부담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정착하는 사례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일까의심해 볼 수 있다. 이는 인구이동부분에서 재차 논의해 보기로 한다.

한편 출생율이 감소하는 경향속에 최근 5년간씩의 출생아가 속한 인구집단인 0-4세 인구의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0-4세 인구군을 구성하는 아이들은 부산에서 출생하였거나 출생이후 부산으로 이주해온 인구의 집단이 되나 이는 이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젊은 층의 이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표 3〉 부산시 및 전국 연도별 출생아수 및 출생율

연도	전국		부산광역시	
	출생아수	출생율	출생아수	출생율
1990	649,738	15.2	56,023	14.7
1991	709,275	16.4	59,801	15.7
1992	730,678	16.7	59,714	15.6
1993	715,826	16.0	56,600	14.6
1994	721,185	16.0	54,446	14.1
1995	715,020	15.7	52,615	13.5
1996	691,226	15.0	50,139	12.9
1997	668,344	14.4	45,797	11.9
1998	634,790	13.6	42,772	11.1
1999	614,233	13.0	40,818	10.7
2000	634,501	13.3	40,877	10.7
2001	554,895	11.6	35,481	9.4
2002	492,111	10.2	30,472	8.1
2003	490,543	10.2	29,839	8.0
2004	472,761	9.8	27,993	7.6
2005	435,031	8.9	25,464	7.0
2006	448,153	9.2	25,678	7.1
2007	493,189	10.0	28,223	7.8
2008	465,892	9.4	26,670	7.5
2009	444,849	9.0	25,110	7.1
2010	470,171	9.4	27,414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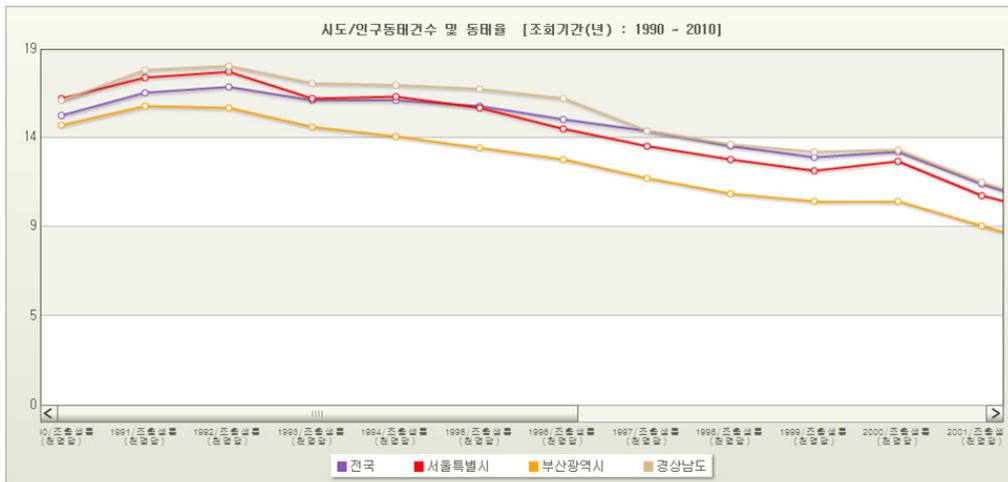


그림 1 : 전국, 서울, 부산, 경남지역의 출생율변화



〈표 4〉 0-4세 인구의 연도별 추이

(단위 : 1,000명)

행정구역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국	4,316	4,227	3,794	3,702	3,279	3,427	3,130	2,382	2,219
서울특별시	682	815	821	837	784	725	588	440	397
부산광역시	247	309	342	330	268	256	203	141	124
경상남도	427	393	345	346	294	320	210	161	154

부산 및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그리고 전국지역의 0-4세 인구추이를 표4에서 보면 부산의 경우 1995년도에 인구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0-4세 인구는 1980년도에 34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그 후 감소하고 있다. 1995년에는 이미 25만6천명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것은 1980년 이후 0-4세 인구의 감소추세로 보아 1995년까지 업치락 뒤치락 하던 출산력이 그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예고하고 있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0-4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연효과가 15년 뒤에 나타난 셈이 된다. 한편 경남의 경우 1970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0-4세 인구가 부산시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해 온 것은 흥미롭다.

출생율이 부산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0-4세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분모의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출생율은 다소 높게 나온 것일 수 있다. 0-4세 인구군의 감소율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2005년도 인구총조사결과 대비 감소현상을 보면 전국은 93.2%로 감소하였는데 비하여 부산은 87.9%로 감소하여 부산지방의 감소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그러나 경남은 다소 완화되어 95.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경남은 농촌지역이 많아 노인인구도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력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유사한 조건을 지닌 지역과 비슷하다.

IV. 사망률

인구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으로서 사망률을 비교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가 많이 사는 농촌지역은 사망률이 높다. 시도단위의 관찰할 경우 대도시지역의 사망률은 각 도지역보다 젊은 연령층이 많아 사망률이 낮다. 그러나 대도시 중에서 부산의 사망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표준화사망율을 보면 전국 평균 인구 1,000명당 4.1 인데 반해 부산은 4.5로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인 강원도의 4.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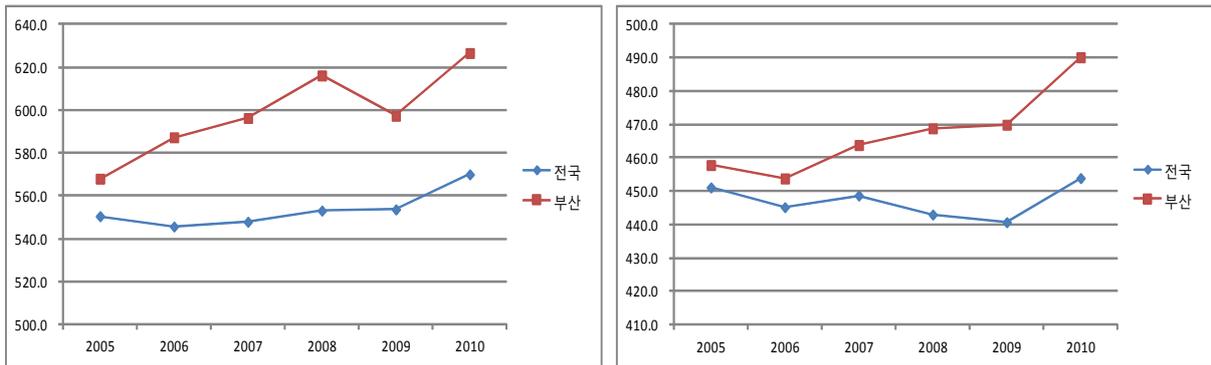


그림 2 : 보통사망율의 연도별 추이 (남자 및 여자)

그림 2는 부산의 보통사망율을 전국치와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남녀의 사망률은 공히 전국치보다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특별시 및 전체광역시와 비교할 때 그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10년도 연령표준화사망율로 보았을 때 (통계청, 2011) 전국이 4.1인데 반하여 부산시는 4.5로 높은 편이고 가장 높은 강원 4.6보다 약간 낮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울산 4.5와 같을 뿐 모두가 부산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2005년도만 해도 부산의 남녀간의 사망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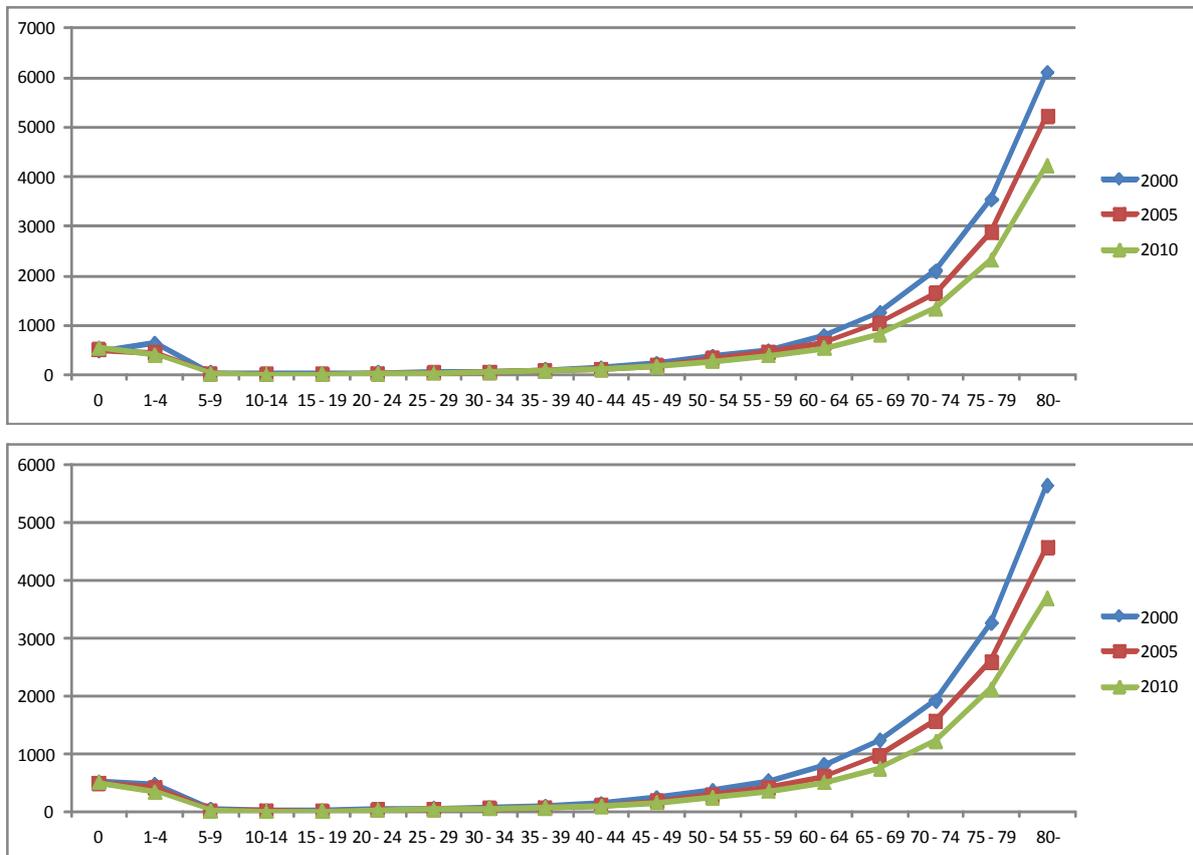


그림 3 : 연령별 사망률 (부산, 전국) (단위 : 100,000명당)



그림3은 2000년, 2005년, 2010년 등 3개년의 연령별 사망률 및 사망수이다. 부산시에서는 2000년 18,177명이 사망하였고 2010년에는 19,709명이 사망하는 등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2000년에 40,877명, 2005년에 25,464명, 2010년에 27,414명이 태어난 것에 비하면 출생이 사망보다 비록 많으나 사망이 증가하고 출생이 줄어들면서 그 차이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보통사망율을 살펴 보면 사망자수의 증가와 함께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에서의 연령별 사망률이 최근에 이를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지역의 보통사망율이 높은 상황과 달라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도별 인구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아진다. 부산시의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전국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사망율로 비교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편 사망자수를 단순 비교하여 보면 젊은 층에서의 사망자수는 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고연령층으로 감에 따라 그 현상은 줄다가 70세 이후부터는 사망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표 5 : 고연령층 사망률의 추이 (단위 : 100,000명 당)

연령	부산						전국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사망율	사망수	사망율	사망수	사망율	사망수	사망율		
65 - 69세	2,099.30	1,979	1,648.40	2,067	1,338.30	2,054	1,924.50	1,568.30	1,227.30
70 - 74세	3,537.80	2,213	2,876.30	2,319	2,315.80	2,574	3,266.00	2,593.40	2,117.10
75 - 79세	6,104.60	2,324	5,229.20	2,585	4,226.20	2,833	5,646.40	4,576.30	3,700.20
80세이상	13,406.70	3,728	11,791.60	4,578	10,135.00	5,715	12,572.50	10,956.50	9,423.90
전체연령	477.5	18,177	512.7	18,727	557.9	19,709	517.9	501.0	512.0

따라서 사망자의 수는 출생수보다 적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작으나 최근에 이를수록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의 인구감소현상을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과 연계하여 보면 사망수의 증가는 과거보다 부산지역의 인구감소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V. 인구이동

인구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변화가 당연한 것이나 이보다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이동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이동은 부산시 관내에서의 이동과 부산시의 관내를 벗어 나는 이동의 경우가 있다.

우선 부산시에서 타지역으로 인구유출과 타지역에서 부산지역으로 들어오는 인구유입의 경우를 2010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살펴 보면 다음과 요약된다. 부산시는 2010년 1년동안 54만8천명이 전출이동을 했다. 그 중 부산시 관내에서의 이동이 39만4천명으로 71.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8.2%에 해당하는 154,270명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한 것이다. 한편 부산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수는 125,804명이 되어 전체적으로 28,466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년 총출생수의 1.038배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총사망수의 1.44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즉, 인구이동이 출생과 사망보다도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부산에서 전출한 사람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출한 지역은 경남지역이다. 총 61,882명으로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사람들 중 40.1%를 차지한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사람들은 125,804명이다. 그 중 부산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온 곳은 경남으로 49,798명으로서 39.6%를 차지한다. 결국 부산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비해 경남으로 이동해간 사람들이 12,084명 더 많은 셈이다.

〈표 6〉 부산시의 전입자 및 전출자 수, 2010년 (단위 : 명)

	전입자수	전출자수	순증
전국	519,334	547,800	-28,466
서울특별시	17,418	23,116	-5,698
부산광역시	393,530	393,530	0
대구광역시	5,050	5,066	-16
인천광역시	2,738	3,230	-492
광주광역시	1,283	1,338	-55
대전광역시	1,976	2,266	-290
울산광역시	10,242	11,106	-864
경기도	15,121	19,961	-4,840
강원도	2,333	2,569	-236
충청북도	1,618	1,986	-368
충청남도	2,683	3,893	-1,210
전라북도	1,518	1,695	-177
전라남도	3,184	3,545	-361
경상북도	9,135	10,837	-1,702
경상남도	49,798	61,882	-12,084
제주특별자치도	1,707	1,780	-73

부산지역이 전출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해 가는가? 전국을 대상으로 볼 때 경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전입해간 곳은 서울이다. 순증으로 따질 때 5,698명의 인구감소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은 경기도로서 4,940명의 인구감소가 발생하여 총 10,638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주를 한 것이다.

한편 이를 연도별로 이동의 추이를 살펴 보면 표 7과 같다. 경남으로의 이주와 수도권으로의 이주 편중현상은 지난 10년간 동일한 추세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남과의 인구이동이다. 전체관외 인구이동의 40%정도를 차지하는 이동의 동기가 부산시의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행정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입전출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단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은 부산시의 주거와 취업등의 현황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인구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즉 부산시에 거주하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하여 통근이 가증한 부산에 접한 인근 경남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의 취업상황과 자녀교육등을 위해 부산지역으로 전입을 해 온다든지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표 7 : 부산시와 전국 타행정구역간의 순인구이동자수 (단위 : 명)

전입지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특별시	-12,238	-11,317	-10,201	-8,707	-9,026	-9,752	-9,769	-7,896	-6,721	-5,698
대구광역시	-76	-131	81	57	427	-75	237	144	422	-16
인천광역시	-1,033	-1,199	-827	-817	-838	-690	-885	-702	-579	-492
광주광역시	-238	-33	29	-5	29	-25	-183	-75	64	-55
대전광역시	-707	-677	-615	-588	-349	-621	-1,098	-508	-241	-290
울산광역시	-3,710	-3,074	-3,137	-3,301	-2,201	-1,474	-1,453	-2,849	114	-864
경기도	-8,050	-8,447	-7,553	-7,422	-7,523	-6,698	-6,817	-4,370	-4,138	-4,840
강원도	-273	-49	-338	-452	-120	-213	-150	-169	-123	-236
충청북도	-308	-475	-503	-334	-326	-217	-529	-283	-364	-368
충청남도	-534	-1,064	-1,158	-2,172	-1,045	-1,042	-994	-959	-997	-1,210
전라북도	-624	614	-830	712	-128	99	-323	90	-149	-177
전라남도	-66	456	-23	-14	-34	-17	-246	-321	-433	-361
경상북도	-739	-169	458	-448	-1,323	-2,803	-1,124	-965	-1,586	-1,702
경상남도	-12,153	-23,139	-17,274	-9,319	-14,311	-11,189	-12,679	-15,781	-14,932	-12,084
제주도	-439	-738	-372	-419	-207	31	-63	40	-121	-73

부산의 인구가 경남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함께 경남의 인구추이를 부산 및 서울, 전국으로의 이동상황과 함께 비교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부산 및 경남의 전체인구 및 0-4세 인구추이

(단위 : 1,000명)

행정구역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인구									
부산광역시	1,879	2,453	3,159	3,514	3,798	3,814	3,662	3,523	3,414
경상남도	3,119	3,280	3,322	3,516	3,672	3,845	2,978	3,056	3,160
0-4세 인구									
부산광역시	247	309	342	330	268	256	203	141	124
경상남도	427	393	345	346	294	320	210	161	154

표 8에 따르면 부산의 인구가 1995년까지 느는 동안 경남의 인구도 늘었다. 1995년 이후 부산의 인구는 감소하였는데 경상남도는 2000년 조사에서는 줄어들다가 그 이후는 증가하였다. 즉, 부산의 인구가 주는 동안 경남의 인구는 늘어난 것이다. 이는 부산의 인구가 경남으로 유입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0-4세 인구의 경우는 다르다. 1980년 이후 부산의 0-4세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경남은 이미 1970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감소폭은 부산의 경우보다는 완만하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인구구성비를 살펴 보았다. 부산의 인구를 전국의 인구구성과 비교하여 인구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그림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부산 남자인구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는 14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가 전국보다 낮으며 반대로 60세 이상의 인구비는 부산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의 인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4의 밑의 그림은 여자의 구성비인데 남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가 전국에 비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30세 이하의 인구구성비는 여자의 경우가 남자보다 더 낮다. 이는 향후 부산의 출생은 가임여성들의 인구유입이 진행되지 않는 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다. 45세 이상의 인구구성비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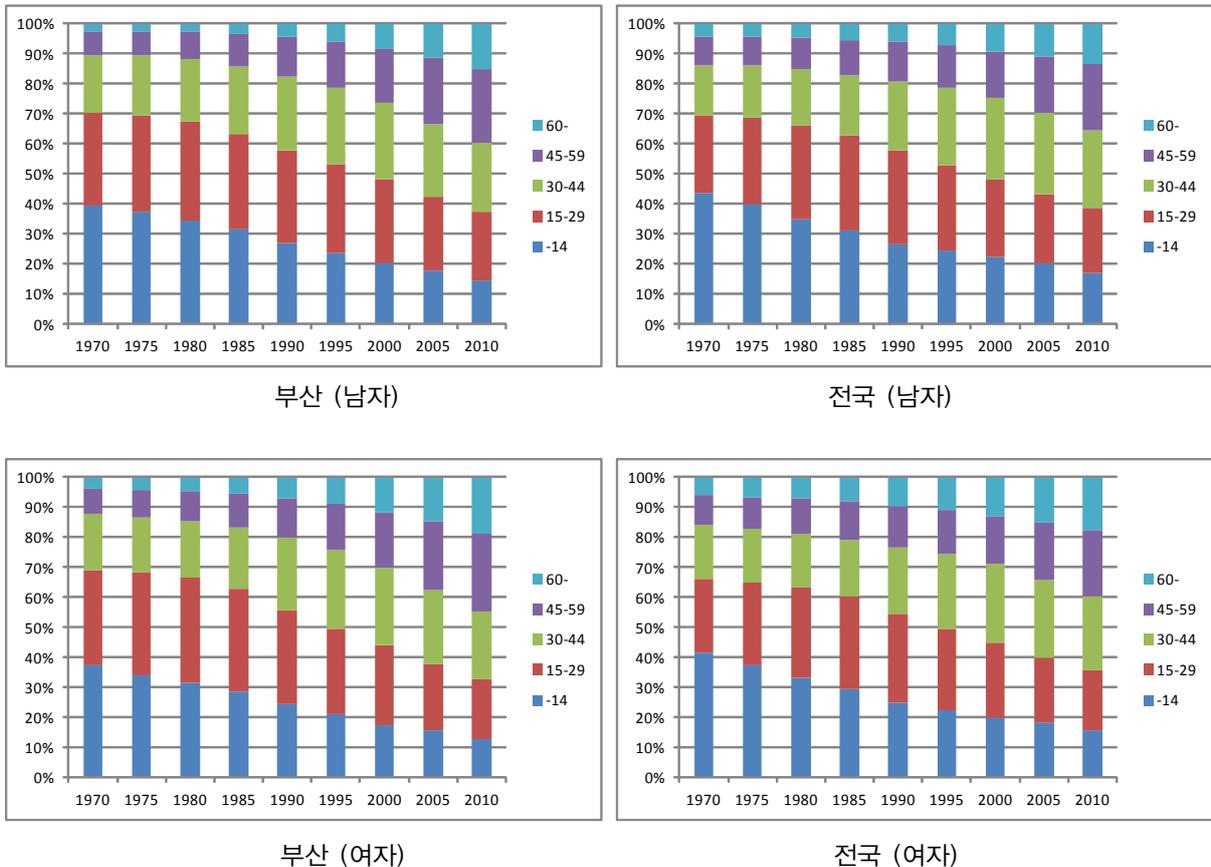


그림 4 : 부산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의 구성비, 2010

표 9는 현재 출산력이 가장 왕성할 수 있는 부산 및 경남의 20-39세 인구군의 규모를 연도별로 측정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지역구분없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던 시기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이다. 부산시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5년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부산의 경우 20-24세 구간에서 16만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의 연령군에서는 10만명 정도 규모에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경남의 경우는 20-24세 구간에서 16만명정도가 감소하였으나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35-39세의 경우는 부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가 줄었다.



〈표 9〉 부산 및 경남의 20-39세 인구추이

연령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부산광역시									
20 - 24세	182,149	264,357	380,622	380,777	392,783	391,449	341,852	301,177	227,742
25 - 29세	167,962	225,982	316,504	383,657	374,301	339,248	314,205	275,532	247,229
30 - 34세	152,921	189,063	254,567	308,772	386,225	335,660	289,342	270,403	239,936
35 - 39세	118,874	164,394	205,620	251,712	314,478	366,612	312,263	275,313	256,860
경상남도									
20 - 24세	231,014	285,707	337,328	336,860	337,927	327,121	217,082	200,196	163,021
25 - 29세	188,579	216,016	270,739	354,261	366,215	347,677	236,889	206,375	202,144
30 - 34세	196,445	188,172	214,349	276,585	362,023	381,709	260,009	255,693	229,358
35 - 39세	180,126	193,476	181,849	215,524	273,059	364,195	270,276	270,807	264,987

부산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산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될지를 알 수 있다면 부산시의 장래 인구의 규모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도의 인구총조사에서 부산시의 거주민으로서 응답했던 특정연령계층의 인구수가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변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5는 5-9세, 25-29세, 40-44세, 60-64세 인구군으로서 전년도 인구총조사시에는 0-4세, 20-24세, 25-39세, 55-59세 였던 사람들로서 5년 뒤 어느 정도 인구가 남아 있는가 하는 지표를 인구총조사시에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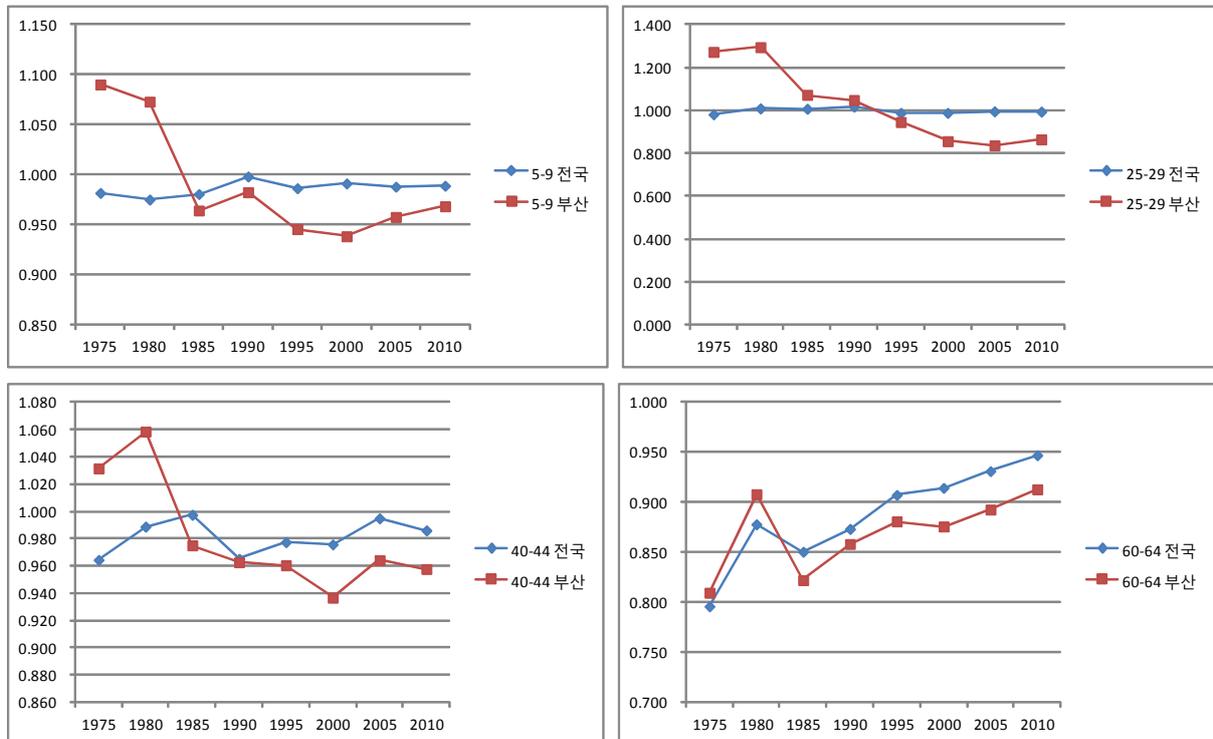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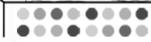


그림 5 : 5-9세, 25-29세, 40-44세, 60-64세 남자 인구군의 생잔율



여기에서 생산율이 1을 넘는다는 것은 오히려 인구가 늘어 났음을 의미한다. 5-6세 군에서는 1975년도에는 유입이 이루어졌으나 1985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지표에는 해가 지나면서 사망의 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주된 예측이나 인구의 유입은 생산율을 1 이상으로 올려준다. 기타 25-29세군과 40-44세군은 5-9세 군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인구가 감소해 감을 볼 수 있으나 60-64세의 경우는 생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령층은 사망률이 높아서 생산율이 1 이상을 유지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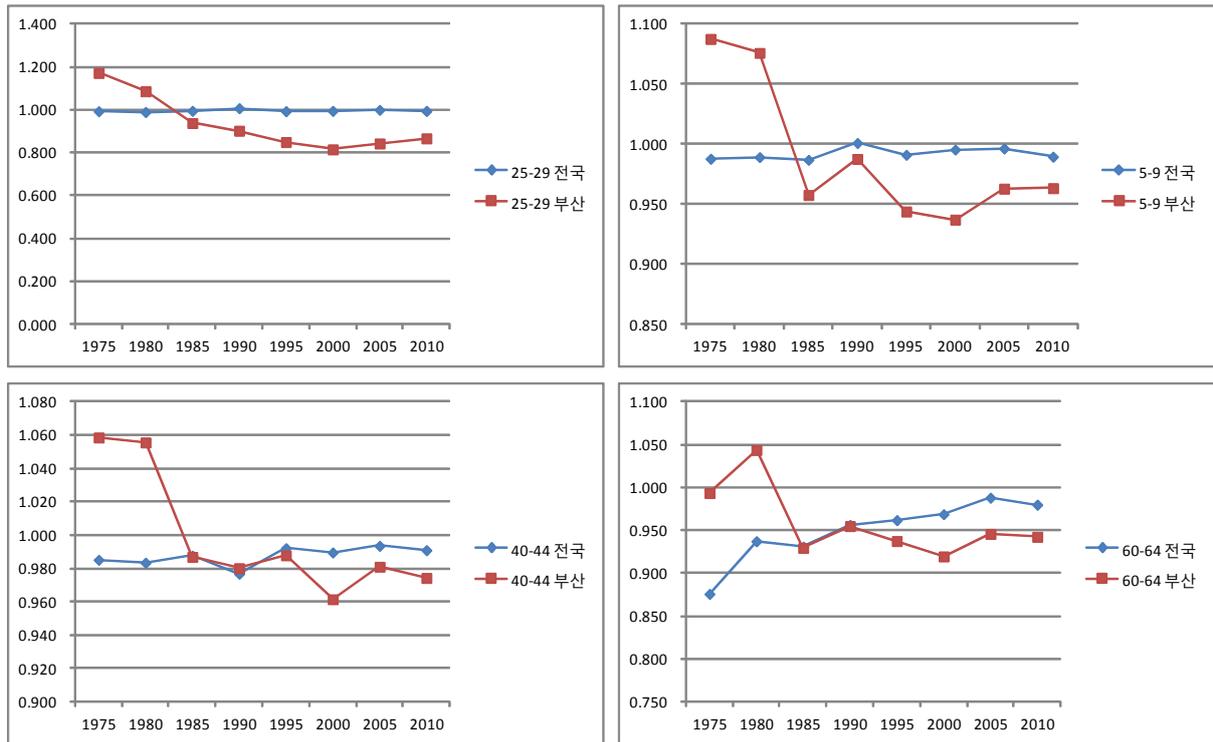


그림 6 : 5-9세, 25-29세, 40-44세, 60-64세 여자 인구군의 생산율

한편 여자의 경우는 그림 6의 경우처럼 나타나 결국 전체적인 유형은 남자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 같은 유형을 보여준다.

II. 맺음말

부산지역의 인구구조의 특성은 전체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출산율이 국내에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낮다. 부산지역은 지난 13년간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인 지역으로서 2009년 합계출산율 0.94명에 비해 2010년에는 0.1명이 상승함으로써 약간의 기대감은 있으나 역시 부산의 인구는 감소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부산시의 인구구조는 낮은 출산력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가임여성군이 부산시외 지역으로 이탈함으로써 인구의 감소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직할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인구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산지역의 인구변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995년까지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고 있었다. 서울과 대구 그리고 부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광역시는 증가추세에 있다.

부산에서 출생한 아이수는 27,414명으로 집계. 인구 1,000명당 7.8명이 태어나 전국치보다 1.6명이 적게, 서울보다는 1.4명이 적게 태어났다. 0-4세 인구는 198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2005년 인구총조사대비 감소율은 87.9%로서 전국 93.2% 보다 낮다. 부산지역의 사망률은 전국치보다 높은 편이다. 연령표준화사망율역시 전국은 4.1이나 부산지역은 4.5로서 꽤 높다. 그러나 근래에 이룰수록 그 차이는 벌어지고 70세이상의 사망률은 근래에 이룰수록 높아짐. 그러나 사망수는 줄고 있다.

통상적으로 출생이 사망보다 많으니 출생수가 줄면서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어 2010년에는 27,414명이 태어났으나 19,709명이 사망하였다. 부산지역에서 2010년 1년간 거주지 이동을 한 사람은 54만8천명이다. 중 71.8%는 관내이동이며 나머지 29.2%는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였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한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총이동자수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한 사람도 12만5천명치고 경남지역에서 이동을 한 사람들은 39.6%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28,466명이 결국 부산을 빠져 나간 셈임. 이는 총출생의 1.038배가 되었으며 총사망수의 1.444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된다. 경남으로의 이동은 12,084명으로서 경남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발생하였음.

참고문헌

- 통계청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전수조사결과』.
- 강인욱 2008. “선사시대 국제교류의 중심지 부산 동남동”. 『국제신문』 2008. 5. 22.
- 박경숙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제1차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4. 11
- 조성남. 2004. 『에이지붐 시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06. 『전국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07.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제11주제 :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미혼실태

| 김 한 곤 |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문화적 격차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이농과 농업의 경시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 그 결과 농촌지역의 결혼적령기 남성들은 결혼상대자로서 기피되어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80년대 이후 농촌총각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농촌지역의 결혼적령기 남성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졌다. 즉,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남성들이 낮은 경제적 수준과 열악한 문화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결혼 적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농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경쟁적으로 추진하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마저도 실적 부진 및 각종 부작용으로 차츰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현재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추진 중인 시·군은 6개 시·군에 불과하며, 2011년 현재 시·군별 실적은 봉화군 10명(1인당 지원액 600만원), 울진군 5명(1인당 지원액 600만원), 영덕군 16명(1인당 지원액 500만원), 영양군 5명(1인당 지원액 500만원), 청도군 4명(1인당 지원액 500만원), 청송군 2명(1인당 지원액 500만원) 등이다. 농촌 총각 42명이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제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인권 침해·불법 중개 행위 및 다문화가정의 불화로 인해 살인과 자살 등 극단적인 사건·사고, 가정 폭력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어 농촌 지역 자치단체들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

2010년 경북지역의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은 전체 남성의 65.5%를 차지하는데 반해 같은 연령의 미혼여성은 4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북지역 미혼남녀의 성비 불균형과 함께 농촌총각에 대한 여성들의 결혼기피로 미루어볼 때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은 경북지역의 결혼적령기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사회의 문제이자,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혼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농촌총각들이 혼인을 하기위해 부득이하게 이농하여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는 농촌사회가 고령사회가 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농촌총각들의 이농은 농촌사회의 영농후계세대 확보를 어렵게 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 대한 논의는 농업과 농촌이 제 기능을 하고, 농촌사회가 유지·발전하는데 기초적이며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 자료의 2%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전국과 경북지역의 미혼남녀 성비차이,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시·군, 동·읍면별 비율 등을 살펴본다. 둘째,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알아본다. 셋째,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결혼문제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미혼실태

1. 전국과 경북지역의 연령별 미혼남녀 인구비율

전국의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0년, 연령군별 미혼남성의 비율을 보면 25~29세 85.2%, 30~34세 49.8%, 35~39세 26.9%, 40~44세 14.8%, 45~49세 8.2%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군별 미혼여성의 비율은 25~29세 67.8%, 30~34세 28.5%, 35~39세 12.4%, 40~44세 5.9%, 45~49세 3.3%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표 1> 연령별 미혼남녀 인구비율 (1995 ~ 2010) - 전국

구분	1995		2000		2005		2010		
	N	%	N	%	N	%	N	%	
남	18세 미만	132,473	99.9	121,342	99.8	107,816	100.0	97,916	100.0
	18~24세	41,453	96.0	37,929	97.2	33,079	98.4	30,499	98.9
	25~29세	24,735	62.6	26,372	69.9	26,242	81.3	26,972	85.2
	30~34세	8,004	18.6	10,762	27.1	15,271	40.9	17,048	49.8
	35~39세	2,577	6.1	4,219	10.2	6,877	18.1	10,361	26.9
	40~44세	808	2.6	1,790	4.5	3,429	8.8	5,822	14.8
	45~49세	296	1.2	658	2.2	1,719	4.6	3,229	8.2
	50~54세	143	0.7	242	1.0	727	2.6	1,726	4.6
	55세 이상	130	0.3	293	0.5	552	0.7	1,264	1.2
전국	18세 미만	108,036	99.8	109,096	99.8	91,804	99.9	89,613	100.0
	18~24세	31,570	85.8	43,702	91.5	38,031	94.8	33,956	95.6
	25~29세	7,355	28.5	15,590	39.4	19,076	58.1	22,017	67.8
	30~34세	1,484	6.2	4,068	10.2	6,909	18.3	9,738	28.5
	35~39세	767	3.1	1,745	4.3	,813	7.3	4,786	12.4
	40~44세	319	1.8	974	2.5	1,368	3.5	2,333	5.9
	45~49세	138	1.1	473	1.6	887	2.3	1,314	3.3
	50~54세	55	0.6	230	1.0	497	1.7	869	2.3
	55세 이상	100	0.3	403	0.5	661	0.6	1,279	1.0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2010).



나타났으며, 특히나 남성의 경우 30~34세와 35~39세의 미혼남성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경우 25~29세와 30~34세의 미혼여성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에는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점차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지역의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경북지역의 경우, 2010년 연령군별 미혼남성의 비율은 25~29세 83.2%, 30~34세 48.7%, 35~39세 29.2%, 40~44세 16.6%, 45~49세 8.3%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군별 미혼여성의 비율은 25~29세 60.4%, 30~34세 23.1%, 35~39세 9.8%, 40~44세 4.8%, 45~49세 2.9%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전국의 미혼여성 비율에 비하여 미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35세 이상의 미혼남성 비율이 전국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 읍면부의 경우, 2010년 미혼남성의 비율은 25~29세 85.8%, 30~34세 52.6%, 35~39세 35.5%, 40~44세 21.1%, 45~49세 10.9%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혼여성의 비율은 25~29세 57.1%, 30~34세 22.1%, 35~39세 10.3%, 40~44세 5.0%, 45~49세 3.7%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혼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북지역 전체와 비교해 보면, 35세 이상의 미혼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전국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전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혼남성의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결혼을 하는데 있어 농촌지역 총각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향후 결혼적령기의 농촌지역 남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북지역에서 미혼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혼남녀의 성비 불균형은 신부감 부족으로 이어져, 결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농촌지역 총각들의 결혼성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결혼적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남녀의 비율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미혼여성보다는 미혼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경북지역의 미혼남성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성과의 만남 또는 결혼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결혼으로 성립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결혼적령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혼상태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적령기의 미혼남녀가 증대되고 있는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혼인구의 증가는 결혼에 대한 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미혼 또는 출생시 성비 불균형, 여성의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미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북지역 미혼남성의 경우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 신부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미혼일 가능성이 높다.



〈표 2〉 연령별 미혼남녀 인구비율 (1995 ~ 2010) - 경북·읍면부

구분	1995		2000		2005		2010			
	N	%	N	%	N	%	N	%		
경북 지역 전체	18세 미만	7,427	99.9	6,952	100.0	5,920	100.0	5,118	100.0	
	18-24세	2,005	95.6	1,897	96.8	1,686	98.1	1,595	99.2	
	25-29세	1,103	58.3	1,194	64.3	1,236	79.6	1,311	83.2	
	30-34세	339	15.6	491	23.4	719	38.3	804	48.7	
	남	35-39세	153	7.1	209	9.3	366	17.8	575	29.2
	40-44세	50	2.9	87	4.0	172	8.2	358	16.6	
	45-49세	15	1.0	34	2.0	99	4.5	194	8.3	
	50-54세	15	1.2	19	1.3	50	2.8	145	5.8	
	55세 이상	6	0.1	11	0.2	47	0.6	98	1.0	
	여	18세 미만	5,943	99.8	5,043	99.8	5,149	99.9	4,696	100.0
	18-24세	1,614	83.1	2,059	88.7	1,578	92.2	1,459	91.7	
	25-29세	277	20.4	580	29.3	718	47.5	911	60.4	
	30-34세	60	4.0	124	6.1	217	11.7	369	23.1	
	35-39세	32	2.1	88	4.1	103	5.3	177	9.8	
	40-44세	26	1.7	55	2.6	80	3.8	97	4.8	
	45-49세	10	0.9	26	1.5	42	1.9	69	2.9	
	50-54세	3	0.2	13	0.9	32	1.7	53	2.1	
	55세 이상	6	0.2	23	0.3	42	0.4	65	0.5	
경북 지역 읍면부	18세 미만	3,330	99.8	3,067	100.0	2,607	100.0	2,400	100.0	
	18-24세	965	95.5	906	97.0	745	98.3	698	99.3	
	25-29세	539	65.2	606	70.3	525	80.0	622	85.8	
	30-34세	193	20.4	272	29.2	373	43.8	407	52.6	
	남	35-39세	97	9.8	130	12.1	201	21.1	345	35.5
	40-44세	32	4.0	58	5.9	104	10.8	240	21.1	
	45-49세	11	1.4	24	2.9	71	6.0	145	10.9	
	50-54세	9	1.1	15	1.9	40	3.9	109	7.1	
	55세 이상	4	0.1	6	0.2	39	0.7	66	0.9	
	여	18세 미만	2,820	99.7	2,593	99.6	2,309	100.0	2,223	100.0
	18-24세	782	84.0	794	87.5	623	90.6	570	87.0	
	25-29세	120	20.4	215	27.6	264	43.3	356	57.1	
	30-34세	22	3.0	52	5.8	76	10.0	158	22.1	
	35-39세	11	1.8	41	4.4	49	5.9	81	10.3	
	40-44세	12	1.7	24	2.5	42	4.3	49	5.0	
	45-49세	3	0.4	15	1.7	24	2.0	48	3.7	
	50-54세	1	0.1	8	0.9	17	1.5	33	2.1	
	55세 이상	5	0.2	10	0.2	29	0.4	38	0.4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2010).



2.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인구비율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남성의 시·군별 미혼율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 가운데 군지역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시지역에서는 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주시, 경산시, 영주시, 안동시, 김천시, 포항시, 구미시 순으로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지역에서는 영양군,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청도군, 청송군, 군위군·고령군, 영덕군, 칠곡군, 울릉군, 울진군, 성주군 순으로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시·군별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율은 시지역에 비하여 군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봉화군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령군, 상주시, 영천시, 청도군 등의 순으로 결혼적령기 미혼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남성의 인구비율 (1995 ~ 2010) - 시·군별

구분	1995		2000		2005		2010	
	N	%	N	%	N	%	N	%
포항시	299	33.4	273	37.8	348	56.0	351	63.5
경주시	165	37.7	228	49.6	204	62.6	181	71.3
김천시	69	36.3	78	41.9	75	48.7	124	69.3
안동시	73	36.5	107	48.6	111	58.4	113	68.9
구미시	195	27.8	212	32.5	395	55.4	367	58.3
영주시	60	36.6	67	42.7	87	60.0	80	70.8
영천시	65	39.6	73	51.4	60	63.8	79	76.0
상주시	70	51.5	65	50.4	60	57.1	70	76.1
문경시	35	38.0	61	55.0	35	53.8	89	73.6
경산시	137	37.5	167	40.7	195	56.7	227	66.0
군위군	2	38.6	23	48.9	22	69.4	24	71.6
의성군	25	47.2	21	42.9	28	65.1	34	66.7
청송군	18	40.9	19	45.2	17	53.1	23	54.8
영양군	13	48.1	13	48.1	26	76.5	13	59.1
영덕군	16	38.1	29	60.4	23	74.2	26	70.3
청도군	22	41.5	18	48.6	15	55.6	35	74.5
고령군	17	38.6	23	32.9	23	62.2	37	84.1
성주군	17	28.8	22	47.8	25	56.8	32	66.7
칠곡군	65	37.8	99	45.0	110	49.3	101	53.2
예천군	24	45.3	25	73.5	30	56.6	29	70.7
봉화군	23	45.1	20	48.8	15	48.4	42	85.7
울진군	26	29.5	33	42.3	43	57.3	32	57.1
울릉군	6	35.3	9	32.1	8	66.7	6	35.3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남성의 동·읍면별 미혼율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전체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 가운데 동부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중은 2005년에 증가한 후 2010년에는 감소하였으며, 읍면부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중은 2000년에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 감소한 후 201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읍면부의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하여 2.8%p나 증가하였다.

<표 4>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 남성의 인구비율 (1995 ~ 2010) - 동·읍면별

구분	1995		2000		2005		2010	
	N	%	N	%	N	%	N	%
동부	710	49.2	807	47.9	1,057	54.1	1,086	51.3
읍면부	732	50.8	878	52.1	898	45.9	1,029	48.7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2010).

Ⅲ.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사회·경제적 특징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 신부부족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미혼일 경우 남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여성의 결혼결심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의 남성들의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가구주와의 관계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표 5>에서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33.0%가 가구주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5.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56.6%가 가구주의 자녀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구주라고 보았을 때,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들 가운데 가구주의 증가는 지역사회의 1인가족화 현상 및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중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징은 농촌총각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26.5%가 가구주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63.6%가 가구주의 자녀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5.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북지역 가운데서도 농촌총각의 경우 가구주인 비율의 증가와 가구주의 자녀인 비율의 감소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농촌총각에게서 1인 가족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5〉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남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구분	1995		2000		2005		2010		
	N	%	N	%	N	%	N	%	
경북지역 전체	가구주	401	27.8	447	26.5	584	29.9	697	33.0
	자녀	843	58.5	1,005	59.6	1,065	54.5	1,197	56.6
	손자녀	6	0.4	12	0.7	16	0.8	35	1.7
	형제자매	75	5.2	82	4.9	80	4.1	58	2.7
	형제자매의 자녀	7	0.5	3	0.2	-	-	5	0.2
	기타 친인척	18	1.2	17	1.0	18	0.9	17	0.8
	기타 동거인	92	6.4	119	7.1	192	9.8	106	5.0
경북지역 읍면부	가구주	141	19.3	182	20.7	207	23.1	273	26.5
	자녀	505	69.0	583	66.4	575	64.0	654	63.6
	손자녀	3	0.4	5	0.6	11	1.2	27	2.6
	형제자매	39	4.0	36	4.1	35	3.9	16	1.6
	형제자매의 자녀	2	0.3	1	0.6	-	-	1	0.1
	기타 친인척	4	0.5	7	0.3	8	0.9	10	1.0
	기타 동거인	38	5.2	64	7.3	62	6.9	48	4.7

* 2005년의 경우 '손자녀'에 '증손자녀' 포함. '형제자매의 자녀' 제외.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2010).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표 6〉에서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60.8%가 가구주의 자녀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30.3%가 가구주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72.2%가 가구주의 자녀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19.1%가 가구주인 것으로 1995년에 비해 8.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구주의 증가폭에 있어 미혼여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표 6〉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여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구분	1995		2000		2005		2010		
	N	%	N	%	N	%	N	%	
경북지역 전체	가구주	58	17.2	143	20.3	234	25.0	388	30.3
	자녀	233	69.1	454	64.5	581	62.1	778	60.8
	손자녀	1	0.3	2	0.2	9	1.0	22	1.7
	형제자매	24	7.1	47	6.7	42	4.5	38	3.0
	형제자매의 자녀	-	-	3	0.4	-	-	4	0.3
	기타 친인척	-	-	4	0.6	10	1.1	7	0.5
	기타 동거인	21	6.2	51	7.2	59	6.3	43	3.4
경북지역 읍면부	가구주	8	5.6	27	10.1	50	14.7	98	19.1
	자녀	119	83.8	207	77.5	250	73.5	371	72.2
	손자녀	-	-	-	-	5	1.5	10	1.9
	형제자매	8	5.6	13	4.9	15	4.4	10	1.9
	형제자매의 자녀	-	-	1	0.4	-	-	3	0.6
	기타 친인척	-	-	2	0.7	4	1.2	4	0.8
	기타 동거인	7	4.9	17	6.4	16	4.7	18	3.5

* 2005년의 경우 '손자녀'에 '증손자녀' 포함. '형제자매의 자녀' 제외.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2010).

2.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교육수준

〈표 7〉에서와 같이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미혼남성들이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우, 2010년 대학교 과정 70.3%, 고등학교 과정 24.8%, 대학원 과정 2.5%, 중학교 과정 1.5%, 초등학교 과정 0.6%, 무학 0.3%의 순으로 교육수준이 나타났다. 특히, 1995년에 비해 대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비중은 약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우, 2010년 대학교 과정 66.9%, 고등학교 과정 27.2%, 대학원 과정 2.3%, 중학교 과정 1.9%, 초등학교 과정 1.2%, 무학 0.5%의 순으로 교육수준이 나타났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교육수준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경북지역 전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총각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점차 교육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총각의 향상된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 등이 농촌총각의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7〉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남성의 교육수준

구분	1995		2000		2005		2010		
	N	%	N	%	N	%	N	%	
경북지역 전체	무학	15	1.0	4	0.2	6	0.3	6	0.3
	초등학교	57	4.0	23	1.4	9	0.5	13	0.6
	중학교	143	9.9	90	5.3	46	2.4	31	1.5
	고등학교	692	48.0	734	43.6	665	34.0	525	24.8
	대학교	517	35.8	806	47.9	1179	60.3	1,487	70.3
	대학원	18	1.2	27	1.6	50	2.6	53	2.5
경북지역 읍면부	무학	12	1.6	2	0.2	5	0.6	5	0.5
	초등학교	39	5.3	16	1.8	7	0.8	12	1.2
	중학교	96	13.1	58	6.6	26	2.9	20	1.9
	고등학교	376	51.4	424	48.3	348	38.8	280	27.2
	대학교	203	27.8	365	41.6	493	54.9	688	66.9
	대학원	6	0.8	12	1.4	19	2.1	24	2.3

* 각각의 교육정도에는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모두 포함

* 대학교 = 4년제 미만 + 4년제 이상

* 대학원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2010).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혼남성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미혼여성들이 미혼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미혼여성의 비율이 미혼남성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경우, 2010년 대학교 과정 69.9%, 고등학교 과정 25.0%, 대학원 과정 3.6%, 중학교 과정 0.9%, 초등학교 과정 0.4%, 무학 0.2%의 순으로 교육수준이 나타났으며,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경우, 2010년 대학교 과정 71.6%, 고등학교 과정 23.2%, 대학원 과정 3.1%, 중학교 과정 1.2%, 초등학교 과정 0.8%, 무학 0.2%의 순으로 교육수준이 나타났다.

즉,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은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뿐만 아니라 미혼여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촌총각의 낮은 교육수준은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 신부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미혼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여성의 교육수준

구분	1995		2000		2005		2010		
	N	%	N	%	N	%	N	%	
경북지역 전체	무학	3	0.6	5	0.7	5	0.5	2	0.2
	초등학교	10	2.1	7	1.0	5	0.5	5	0.4
	중학교	16	4.9	16	2.3	19	2.0	12	0.9
	고등학교	170	50.4	259	36.8	287	30.7	320	25.0
	대학교	131	39.8	401	57.0	582	62.2	894	69.9
	대학원	7	2.1	16	2.2	37	4.0	47	3.6
경북지역 읍면부	무학	3	1.7	4	1.5	4	1.2	1	0.2
	초등학교	9	5.1	5	1.9	3	0.9	4	0.8
	중학교	7	5.1	7	2.6	9	2.6	6	1.2
	고등학교	76	54.2	107	40.1	99	29.1	119	23.2
	대학교	44	32.2	139	52.0	215	63.2	368	71.6
	대학원	3	1.7	5	1.9	10	2.9	16	3.1

* 각각의 교육정도에는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모두 포함

* 대학교 = 4년제 미만 + 4년제 이상

* 대학원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2010).

3.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경제활동상태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경제활동상태 분석에 있어,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 자료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 자료의 2%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북지역 미혼남녀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였다.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제활동상태는 〈표 9〉와 같다.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취업률은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지역 전체 미혼남성의 취업률에 비해 경북지역 읍면부 미혼남성의 취업률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005년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취업률은 70.9%인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취업률은 73.0%로 상대적으로 경북지역 전체 미혼남성의 취업률보다 읍면부 미혼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농촌총각이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보다 결혼을 성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배우자의 취업 여부만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와 연관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9〉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남성의 경제활동상태 - 취업여부

	구분	1995		2000		2005	
		N	%	N	%	N	%
경북지역 전체	취업	1,107	76.8	1218	72.3	1,385	70.9
	미취업	335	23.2	467	27.7	569	29.1
경북지역 읍면부	취업	586	77.2	674	76.5	665	73.0
	미취업	146	22.8	204	23.5	242	27.0

* '취업'에는 '일하고있는상태'와 '일시휴직상태'를 모두 포함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반면에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취업률은 미혼남성과는 달리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북지역 읍면부 미혼여성의 취업률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경북지역 전체 미혼여성의 취업률과 대등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미혼남성과 비교해 보아도 더 이상 낮은 취업률의 상태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혼여성들의 높아진 경제력은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더 나은 배우자의 경제적 조건을 찾게 하고, 상대적으로 결혼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농촌총각들은 더욱 더 결혼상대자의 조건에서 멀어지게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0〉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 취업여부

	구분	1995		2000		2005	
		N	%	N	%	N	%
경북지역 전체	취업	225	64.8	485	68.9	644	68.9
	미취업	112	35.2	219	31.1	291	31.1
경북지역 읍면부	취업	85	58.2	176	65.9	234	68.8
	미취업	57	41.8	91	34.1	106	31.2

* '취업'에는 '일하고있는상태'와 '일시휴직상태'를 모두 포함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직업적 성격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이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업, 임업, 어업'이 10.3%를 차지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농업, 임업, 어업'의 경우 1995년에 비해 5.6%p 감소하였고, 반면에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의 경우 1995년에 비해 7.8%p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업, 임업, 어업'의 감소는 '농업, 임업, 어업' 분야 종사자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이 3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업, 임업, 어업'이 20.8%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농업, 임업,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지역 전체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



로 나타난다. 즉, 산업화로 인하여 ‘농업, 임업, 어업’의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북지역 읍면부의 산업적 성격은 ‘농업, 임업, 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총각이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배우자로서 좋은 조건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취업자의 약 20%가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11〉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남성의 경제활동상태 - 산업

구분	1995		2000		2005		
	N	%	N	%	N	%	
경북지역 전체	농업, 임업, 어업	176	15.9	143	11.7	142	10.3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389	35.1	446	36.7	594	42.9
	건설업	116	10.5	97	7.9	121	8.7
	도매 및 소매업	151	13.7	141	11.6	120	8.7
	숙박 및 음식점업	31	2.8	48	3.9	57	4.1
	운수 및 통신업	68	6.1	72	6.0	67	4.8
	금융 및 보험업	32	2.9	36	2.9	31	2.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9	1.7	49	4.0	66	4.8
	공공행정	47	4.3	52	4.3	36	2.6
	교육서비스업	40	3.6	34	2.8	43	3.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	1.4	18	1.5	20	1.4
	오락문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2	2.0	81	6.6	88	6.3
	분류불능	-	-	1	0.1	-	-
	경북읍면부	농업, 임업, 어업	166	22.1	139	15.2	136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165	32.0	249	35.7	233	35.6
건설업		54	8.9	37	7.5	67	10.2
도매 및 소매업		70	10.7	65	11.0	53	8.1
숙박 및 음식점업		11	2.4	26	4.6	24	3.7
운수 및 통신업		41	6.8	40	5.6	19	2.9
금융 및 보험업		19	2.4	16	2.3	17	2.6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4	1.9	17	3.2	24	3.7
공공행정		32	7.3	26	4.1	20	3.1
교육서비스업		11	2.7	12	3.1	18	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1.1	6	1.5	9	1.4
오락문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	1.6	40	6.4	35	5.3
분류불능		-	-	1	0.1	-	-

* ‘분류불능’에는 ‘가사서비스업’과 ‘국제및외국기관’ 포함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직업적 성격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이 2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이 18.0%를 차지하였다. 또한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



기 미혼여성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교육서비스업’이 2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이 11.5%를 차지하였다.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농업, 임업, 어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혼남성에 비하여 좀 더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업적 성격의 차이는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농촌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의 특성상 가족단위의 노동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러한 농촌생활은 ‘농업, 임업, 어업’과 같은 산업적 특성과 거리가 멀었던 직업을 가졌던 여성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어주게 되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

〈표 12〉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 산업

구분	1995		2000		2005		
	N	%	N	%	N	%	
경 북 지 역 전 체	농업, 임업, 어업	12	3.6	8	1.6	13	2.0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40	16.6	68	14.1	116	18.0
	건설업	4	1.9	17	3.5	33	5.1
	도매 및 소매업	26	12.9	84	17.3	76	11.8
	숙박 및 음식점업	24	12.7	46	9.5	44	6.8
	운수 및 통신업	5	1.8	10	2.0	12	1.9
	금융 및 보험업	11	4.9	26	5.4	29	4.5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8	3.0	19	3.9	31	4.8
	공공행정	17	7.3	18	3.7	39	6.1
	교육서비스업	44	20.5	99	20.4	145	22.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	6.9	61	12.6	71	11.0
	오락문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	7.9	29	6.0	31	4.8
	분류불능	-	-	-	-	4	0.6
	경 북 지 역 읍 면 부	농업, 임업, 어업	10	8.8	8	4.5	12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12	12.3	29	16.5	27	11.5
건설업		3	2.6	8	4.6	17	7.3
도매 및 소매업		8	11.4	27	15.3	20	8.5
숙박 및 음식점업		3	7.0	12	6.8	16	6.8
운수 및 통신업		2	2.6	2	1.2	2	0.8
금융 및 보험업		6	7.1	12	6.8	13	5.6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	2.6	4	2.3	16	6.9
공공행정		10	12.3	8	4.5	23	9.8
교육서비스업		15	17.5	39	22.2	53	2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7.0	17	9.6	25	10.7
오락문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	8.8	10	5.7	10	4.3
분류불능		-	-	-	-	-	-

* ‘분류불능’에는 ‘가사서비스업’과 ‘국제및외국기관’ 포함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남성들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81.9%,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6.1%, 고용원을 둔 사업주가 1.4%, 무급 가족 종사자가 10.5%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들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71.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7.8%, 고용원을 둔 사업주가 1.8%, 무급 가족 종사자가 19.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본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산업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북지역 읍면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2005년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이 1995년에 비해 7.2%p 증가하였고, 2000년에 비해 9.3%p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 미혼남성의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큰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농촌총각은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더 높은 반면에, 산업적 특성이나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미혼남성에 비해 결혼상대자로서 기피되어 결혼적령기가 넘어서도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표 13>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 남성의 경제활동상태 - 종사상지위

구분	1995		2000		2005		
	N	%	N	%	N	%	
경북지역 전체	임금 근로자	823	74.3	970	79.6	1,134	81.9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06	9.6	91	7.5	85	6.1
	고용원을 둔 사업주	32	2.9	26	2.1	20	1.4
	무급 가족 종사자	146	13.2	131	10.8	146	10.5
경북지역 읍면부	임금 근로자	376	65.5	490	70.3	465	71.0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67	18.5	55	15.3	51	7.8
	고용원을 둔 사업주	11	3.8	12	4.4	12	1.8
	무급 가족 종사자	132	12.2	117	10.1	127	19.4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종사상지위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경북지역 전체 결혼적령기 미혼여성들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89.6%,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5.4%, 고용원을 둔 사업주가 1.4%, 무급 가족 종사자가 3.6%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지역 읍면부 결혼적령기 미혼여성들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84.6%,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6.4%, 고용원을 둔 사업주가 1.7%, 무급 가족 종사자가 7.3%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종사상지위는 앞에서 살펴본 경북지역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종사상지위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경북지역 미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농업, 임



업,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으며, 이러한 요인은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종사상지위에 있어 농촌총각보다 우위에 있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농촌총각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소득불안은 미혼여성에게 있어 배우자로서 기피할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농촌총각의 종사상지위는 상대적으로 결혼성립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표 14〉 경북지역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 종사상지위

구분	1995		2000		2005		
	N	%	N	%	N	%	
경북지역 전체	임금 근로자	189	84.3	440	90.7	577	89.6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5	6.9	23	4.7	35	5.4
	고용원을 둔 사업주	6	3.3	6	1.2	9	1.4
	무급 가족 종사자	15	5.4	16	3.3	23	3.6
경북지역 읍면부	임금 근로자	68	81.6	161	91.5	198	84.6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5	6.1	3	1.7	15	6.4
	고용원을 둔 사업주	1	0.9	1	0.6	4	1.7
	무급 가족 종사자	11	11.4	11	6.3	17	7.3

*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이상의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한 결과,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과 '농업, 임업, 어업'이 여타의 산업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산업적 특성은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결혼결심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업' 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여성에게 있어 경북지역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의 경제력은 더욱 낮은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취업률은 경제적 수입 및 장래성에 영향을 주어, 비자발적인 미혼남성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원인 및 해결방안

1. 경북지역 농촌총각 결혼문제의 원인

1) 성비 불균형

현재 경북지역에서 25~34세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비율을 보면, 미혼남성은 65.5%를 차지하고, 같은 연령의 미혼여성은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남녀간에 24.3%p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단순



히 출생시 성비 불균형에서 기인되기 보다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농현상이 더 높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공업화는 농촌의 노동력을 도시로 대량 유출시켰다. 이러한 농촌의 노동력 유출은 특히, 청장년층 인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었다. 농촌지역의 청장년층 인구감소는 농업경제를 약화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미혼여성의 도시로의 진출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도시로의 젊은층 인구이동이 잦았으며, 농촌지역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이농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현재 결혼적령기 미혼 남녀의 성비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은 남성에게 있어 결혼상대자의 부족을 초래하고, 이는 결혼적령기 남성들의 정상적인 혼인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이러한 신부부족현상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시집가기를 꺼려하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는 곧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2) 농촌의 사회·경제·문화적 낙후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농촌지역의 경제·문화적 낙후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의 발전 상태에 있어 도시의 성장수준과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이 있어 농촌지역의 소외로 인해 상대적으로 농촌의 소득수준은 낮아지고, 사회적 지위 또한 저하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농촌총각에 대한 여성들의 결혼기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농촌총각 대부분의 교육수준은 도시지역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이러한 교육수준의 차이는 이후의 경제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취업상태에 있다는 것이 배우자의 조건에서 경제력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농촌총각의 경우 취업률은 도시의 미혼남성에 못지않지만 직업의 성격에 있어서 결혼적령기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지어 종사상의 지위 또한 무급가족 종사자인 경우가 많이 있어 결혼적령기 여성에게 호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 의료, 복지 등 농촌생활전반에 걸쳐 도시에 비해서 양적·질적으로 성장수준이 낮은 편에 있어 이 또한 여성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데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부가적인 서비스·문화시설에 대한 낙후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충족마저 어려운 경우가 농촌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농촌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생활을 위해 이농하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의 경제 및 생활전반에 걸친 낙후는 농촌의 발전을 더욱 더 저해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3) 농촌총각에 대한 여성의 결혼기피

농촌총각에 대한 여성의 결혼기피는 농촌의 경제·문화적 낙후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심증욱(1988)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총각과의 결혼기피 이유로 '농가주부는 고생을 많



이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노동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적어서', '장래성이 없어서', '여성 및 부모의 사고방식', '문화적인 혜택이 적어서', '농사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여', '매스컴의 도시위주의 홍보' 등을 이유로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농촌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과중한 노동력의 요구, 사고방식의 차이, 농촌지역 삶의 질에 대한 불신 등은 농촌총각에 대한 여성들의 결혼기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농촌총각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도시의 미혼여성은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은 전통적인 특성이 더 많이 잔존해 있다고 생각하여, 도시적 사고 및 생활습관에 익숙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촌으로 시집가는 경우 도시로 시집을 가는 경우에 비해 시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의 미혼여성만이 아니라 농촌의 미혼여성 역시, 도시생활을 동경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언젠가는 농촌의 생활에서 벗어나 도시의 생활을 누리보고자 한다. 이러한 탈출구가 바로 도시로의 취업 또는 도시로의 결혼인 것이다. 여성의 농촌생활에 대한 기피는 결국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기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4) 이성교제의 어려움

농촌총각의 경우 이성교제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교제 대상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하여 이성교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는 농촌이라는 사회의 특성상 전통적 사고방식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입소문'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의 특성상 가족 단위의 노동이 잦아 만남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자유로운 이성교제보다는 소개, 주선 등에 의한 만남이 보편화되어 있다.

여기에 미혼여성들의 농촌총각에 대한 편견도 농촌총각의 이성교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기인할 것이다. '농촌총각은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도시의 미혼남성에 비하여 떨어질 것이다', '농촌총각은 도시의 미혼남성에 비하여 세련되지 못할 것이다' 등과 같은 농촌총각에 대한 편견은 농촌총각의 자유로운 이성교제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교제 대상의 부족과 자유로운 이성교제의 어려움 등은 농촌총각의 결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농촌총각이 적극적으로 여성을 찾으려하여도 결혼정보회사의 대부분은 농촌총각을 외면하고 있으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시작된 국제결혼주선 또한 오히려 농촌총각에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안기는 등 농촌총각 스스로가 결혼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2. 경북지역 농촌총각 결혼문제의 해결방안

1)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촌생활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



됨으로써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농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 농촌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고 농촌지역의 사회 및 경제발전을 통하여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저해하는 지역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은 자녀세대로까지 이어져 지속적으로 농촌사회가 유지·발전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2) 농촌지역의 지위향상

농촌과 도시의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농촌지역 남성의 지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중요한 개선점이지만 이는 농촌지역의 경제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농촌의 성장은 자연스레 농촌지역 남성의 지위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실제 여성의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농촌지역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농촌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과중한 노동력의 요구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사고방식 등은 미혼여성과 그 부모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도시로의 결혼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을 통해 농촌지역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면 농촌남성의 아내, 농가의 며느리로서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농촌총각에 대한 인식 제고

농촌총각에게 이성교제 및 결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반면에 미혼여성들에게는 농촌과 농촌총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촌생활의 긍정적 사례와 농촌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 각처에서 농촌과 농촌총각에 대한 기존의 배타적인 태도에서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과 농촌총각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농촌총각의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여타의 결혼주선활동이 없어도 이성교제 및 결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V. 맺는말

결혼적령기의 농촌지역 미혼남성들은 미혼여성들로부터 결혼상대자로서 기피되어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나 정부에서 시행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정책



은 국제결혼주선의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농촌총각들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더 이상 농촌총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외면은 농촌의 미혼남성들이 단지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결혼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이농현상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저발전은 초래하게 된다. 결국 농촌총각의 결혼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현재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농촌의 사회·경제·문화적 낙후, 농촌총각에 대한 미혼여성의 결혼기피, 이성교제의 어려움 등은 농촌지역의 미혼남성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농촌총각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북지역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농촌지역 여성들의 지위향상, 농촌총각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수반될 때 해소될 수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하(1988). 농촌미혼여성의 결혼관,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서울신문. 2011.11.04.
- 심증욱(1988). 한국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명지논단, 127-141.
- 윤순덕(2000). 2000년도 시험연구사업 보고서, 농촌생활연구소.
- 이영대(1989). 농촌미혼남녀 인구수 분석과 농촌청년 결혼문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1권 제1호, 49-56.
- 이정화 박공주(2003).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현실과 대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4권 제2호, 217-222.
- 이지훈(2005).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우려, 열린전북, 7월호, 166-169.
- 최민호·김성수·서규선(1985). 농촌청년의 결혼문제 실태와 대책, 서울대 농학연구 제10권 제1호, 79-89.
- 최민호(1986). 농촌청년의 결혼문제 실태와 대책, 서울대 농학연구, 제10권 제1호.
- 최민호·김성수·안상근(1990).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발생배경과 대책, 서울대 농학연구 제15권 제1호, 63-73.
- 통계청. 1995.
2000.
2005.
2010.